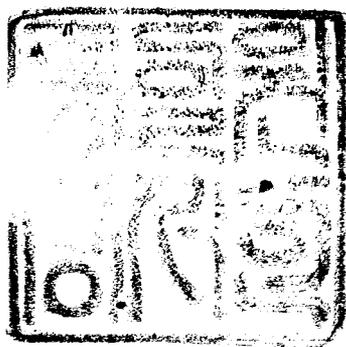


# 北韓·統一研究論文集(Ⅳ)

—北韓의 政策 및 社會變化 趨勢分野—

1991



統 一 院



이 논문집은 當院이 年例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北韓 및 統一問題에 관한 新進學者들의 '91年度 研究 結果를 綜合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45個의 課題를 設定하여 研究委囑을 하였는바 便宜上 報告書를 ①南北韓 統合 및 統一政策 ②南北 交流協力 ③北韓의 體制變化 ④北韓의 政策 및 社會 變化 趨勢 ⑤韓半島 軍事問題 및 北韓의 行政·法制 ⑥北韓의 經濟·社會·人權實態 分野 등 6卷으로 나누어 發刊하였습니다.

여기에 收錄된 論文들은 蕪新한 아이디어와 銳利한 論證등 力作들이 많았다고 評價되나 그 內容들이 모두 當院의 見解와 一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冊子가 北韓 및 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거나 政策을 樹立하는데 參考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1991年 12月

統 一 院 情 報 分 析 室



# 目 次

## ◆ 北韓의 權力엘리트에 대한 構造分析和 그 政策的 展望 — 勞動黨과 最高人民會議, 政務院을 中心으로 —

崔 星

〈要約文〉 .....	1
序論：社會主義圈 改革과 北韓社會, 그리고 權力構造의 變化 .....	6
I. 比較社會主義的 北韓研究方法論 .....	7
1. 北韓研究現況 및 問題點 .....	7
2. 比較社會主義的 北韓研究方法論 .....	9
3. 研究內容 및 時期 그리고 意味와 限界 .....	12
II. 北韓의 權力엘리트의 構造分析 .....	15
— 勞動黨, 最高人民會議, 政務院을 中心으로	
1. 北韓社會 權力構造의 變化에 대한 概括的 理解 .....	15
2. 勞動黨內의 權力엘리트의 性格變化 .....	23
3. 國家機構의 性格과 權力엘리트의 性格變化 .....	35
III. 社會主義圈 改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 .....	52
1. 社會主義圈 改革의 本質 .....	52
2. 社會主義圈 改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變化 .....	59
3. 社會主義圈의 北韓認識 .....	62
— 東歐 및 中國訪問과 北韓學者와의 學術討論의 結果를 中心으로	
IV. 北韓의 政策變化와 權力承繼問題 .....	68
1. 北韓社會의 政策變化의 可能性과 그 內容 .....	68
2. 安定的 權力承繼與否와 體制變化의 可能性 .....	74
3. 北韓의 政策變化와 體制變化모델 .....	80

V.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統一展望 .....	84
: 南北韓 統一方案의 몇가지 原則	
1. UN同時加入 以後의 南北關係의 展望 .....	84
2. 結論을 대신하여 .....	87
: 韓半島統一에 있어 몇가지 原則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鄭 圭 燮

〈要約文〉 .....	94
I. 序 論 .....	97
II. 北韓 對外政策의 變遷過程 .....	100
III.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動因 .....	111
1. 國際環境要因 .....	111
2. 國內環境要因 .....	118
IV. 變化方向 .....	125
1. 中國과의 關係緊密化와 對蘇關係 維持 .....	125
2. 對美·日 關係改善 .....	126
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關係增進 加速化 .....	128
4. 二重的 對南政策 .....	129
5. 統制된 開放政策 .....	131
V. 結論：韓國의 對應方案 .....	133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許 文 寧

〈要約文〉 .....	138
I. 序 論 .....	141

1. 研究의 目的	141
2. 研究現況과 問題點	142
3. 理論의 背景	143
II. 北韓 對外政策의 特徵	149
1.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性格	149
2. 北韓 對外政策의 決定構造	153
3. 北韓 對外政策의 主要特徵	155
III. 197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 特徵	159
1. 197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	159
2. 北韓 對外政策의 特徵	166
IV. 198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 特徵	173
1. 198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	173
2. 北韓 對外政策의 特徵	177
V. 1990年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變化 展望	182
1. 199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 展望	182
2.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展望	191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北韓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 分析—	
	林 順 姬
〈要約文〉	198
I. 序 論	202
II. 理論的 背景	204
1. 外交政策의 概念	204
2. 外交政策 決定要因	206

III. 北韓 外交政策 目標와 基本路線 .....	212
1. 北韓 外交政策 目標 .....	212
2. 北韓 外交政策 基本路線 .....	216
3. 北韓의 對美政策 目標 .....	221
4. 北韓의 對日政策 目標 .....	222
IV. 北韓의 對美·日政策 變遷過程 .....	224
1. 北韓의 對美政策 變遷過程 .....	224
2. 北韓 對日政策 變遷過程 .....	240
V. 北韓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 分析 .....	250
1. 國內要因 .....	250
2. 國際環境要因 .....	290
VI. 結 論：向後 北韓의 對美·日政策 展望 .....	309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 蘇聯 및 中國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金 德 重

〈要約文〉 .....	321
I. 問題의 提起 .....	325
II. 研究範圍 및 方法 .....	329
1. 研究範圍 .....	329
2. 研究方法 .....	329
III. 北韓의 對蘇政策 .....	331
1. 蘇聯의 變化에 대한 反應 .....	331
2. 韓蘇修交에 대한 非難 .....	332
3. 蘇聯쿠데타에 대한 反應 .....	335

IV. 北韓의 對中國政策 .....	339
1. 血盟關係 維持 .....	339
2. 유엔加入 決定과 中國 .....	342
V. 北韓의 對蘇, 對中國政策의 變化 方向 .....	346
1. 情勢 變化에 대한 伸縮 對應 .....	346
2. 親蘇, 親中國政策 持續 .....	349
3. 對南協商에서 中蘇의 支持 獲得 .....	352
VI. 結論 및 對應方案 .....	355
1. 結 論 .....	355
2. 對應方案 .....	356

#### ◆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社會變化 趨勢 研究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李 炳 澈

〈要約文〉 .....	360
I. 序 論 .....	366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	366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367
II. 社會變化의 概念과 理論的 變遷 .....	368
1. 古典主義의 視角에서 본 社會變化의 概念과 理論 .....	368
2. 古典主義에  대한 批判視角：共產圈에의 適用限界 .....	371
3. 社會變化理論의 收斂化：問題點의 解消的 接近 .....	374
III. 北韓社會變化에  대한 質的 分析：文獻分析을 中心으로 .....	379
1. 政治的 變化趨勢分析 .....	380
2. 經濟的 變化趨勢分析 .....	384
3. 社會的 變化趨勢分析 .....	388

IV. 北韓社會變化에 대한 量的 分析：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392
1. 內容分析의 意義 및 節次 .....	392
2. 內容分析의 研究分析 體系設定 .....	394
3. 一般分析 .....	401
4. 深層分析 .....	419
5. 分析結果 및 評價 .....	430
V. 結論 및 政策提言 .....	433

### ◆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社會變化 趨勢 研究

吳 有 錫

〈要約文〉 .....	448
I. 序 論 .....	450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	450
2. 研究의 對象과 方法 .....	451
II. 北韓雜誌의 性格과 現況 .....	454
: 北韓社會의 體制的 性格과 關聯하여 -	
1. 北韓雜誌의 性格과 機能 .....	454
2. 北韓雜誌의 類型別 分類 및 主要雜誌 現況 .....	456
III.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 社會의 變化 趨勢 .....	461
1. 雜誌의 統計分析 - 次例構成을 中心으로 .....	461
2. 雜誌의 內容分析 - 北韓社會의 變化 內容과 그 性格 .....	469
IV. 結 論 .....	479
- 北韓社會 變化가 南·北韓 同質性 回復과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중심으로 -	

## ◆ 北韓의 權力엘리트에 대한 構造分析과 그 政策的 展望

— 勞動黨과 最高人民會議, 政務院을 中心으로 —

崔 星(高麗大)

(要約文)

### 1. 序論: 社會主義圈 改革과 北韓社會, 그리고 權力構造의 變化

中國의 천안문사건을 시발로 한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요구는 결국 東獨의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진전되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蘇聯의 '보수 쿠데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심대한 위기와 진통은 결국 사회주의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면적 제기했던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하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總體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권의 위기와정속에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인식과 대응 역시 북한이 사회주의권 일반의 공통된 문제점에서 완전히 예외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즉 소련보수쿠데타로 인한 蘇聯 共產黨의 해체이후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통일조국의 대상인 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사회는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問題點이 얼마나 존재하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극복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권력구조' 특히 後繼者問題를 둘러싼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싶이 현존 사회주의권의 위기는 '스탈린주의적 官僚主義'가 혁명초기의 열악한 국내외적 조건속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된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民主主義의 결핍'을 초래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이며 과연 북한사회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규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토대위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모델이 '소련식 개혁' 혹은 '루마니아식 변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問題意識을 해명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權力엘리트에 대한 構造分析'을 시도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일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북한사회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比較社會主義的 視覺'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主體思想과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전일적인 지배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상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제공해준다면,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령론과 후계자문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의 준거를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사상적-이론적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북한내의 권력구조분석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한반도의 통일적 전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2. 研究內容 및 時期 그리고 限界

현재 韓半島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은 '北韓도 變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현재의 주요한 문제의식속에서 그간의 연구성과 (北韓40年 全般에 대한 1차 자료의 分析)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정당 (勞動黨), 국회 (最高會議), 행정부 (政務院)내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범위는 우선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의 구성변화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의 노동당과 최고회의 그리고 정무원등의 권력엘리트들의 성격변화를 社會的, 教育的 背景과 主要 經歷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 권력엘리트의 범위는 黨 中央委員 以上, 최고회의의 간부級 인사, 정무원의 部長 및 副部長이상, 그리고 주요국가기구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장)

그 밖의 권력엘리트의 구성변화를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권의 정치개혁과 북한의 '수령의 일원적 영도'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比較 社會主義的 視覺'(Comparative Socialistic Approach)에서 접근하였다. (1장) 왜냐하면 중국의 천안문사건과 소련의 보수쿠데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주의국가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대단히 추상적인 이해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때문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일반의 권력투쟁이 북한과는 어떠한 상관성과 차별성을 지니는가 역시 비교하면서 '북한사회의 권력구조 변화모델'을 예견하였다. (3장)

研究時期는 원칙적으로 1948년 북한정권수립이후를 대상으로 하나 특히 중점적인 분석대상은 1972년 新憲法이후 최근까지의 권력구조 분석을 하였다. (필요한 경우 소급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권력구조변화의 뿌리를 이해하였다.) 이를 토대로 권력엘리트들의 구성변화가 北韓의 政策變化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그 함의를 추출해내고 부차적으로는 金正日에로의 權力承繼의 가능성과 이후 北韓의 權力構造의 變化를 예상해 보았다. 특히 韓半島 統一과 北韓의 變化 그리고 權力承繼이후의 政治的 展望과 관련하여 主體思想과 後繼者論의 형성 및 공고화과정등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갖는 상관성을 추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國內政治와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나타난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의 양상을 북한의 원자료를 통해 접근하고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

또한 유엔동시가입을 전후해서 南北關係의 진전에 따른 북한내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변화된 정세속에서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한반도 통일방안의 몇가지 원칙'을 시론적이거나 제시하였다. (5장) 이 과정에서 勞動新聞과 民主朝鮮,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 문건등에 나타난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특히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의 권력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가능성과 체제개혁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즉 이러한 權力構造的 接

近(Power-Elite Approach)을 통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北韓-日本관계의 개선, 그리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정치체제적 안정성 여부를 전망하였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소련사회주의의 붕괴와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엄청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한반도의 통일방안에 있어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작업은 韓半島 統一과 관련하여 그리고 北韓研究의 客觀的 接近을 위해서 보다 진일보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 3. 北韓의 權力構造와 政策變化의 展望

소련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권의 심대한 위기는 사회주의권 전역에서의 '스탈린주의의 폐기'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 문제의 원천과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改革型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수령의 영도하에 노동당 중심의 제한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가능케 하는 북한내의 권력구조를 분석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主體思想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는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퇴조추세속에서 과도기적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는 천안문사건이후 중국이 모택동사상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역시 다방면의 '政治思想教育'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首領의 唯一的 領導體系 역시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후계자인 김정일로의 승계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수령론은 북한의 표현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속에서도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간주하는 '首領에 대한 忠實性'이 사회주의권 개혁으로 쉽게 포기되어 질 수 없고 동시에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수령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집체적 의견을 수용한 '최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든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의 차원에서든-- 大衆路線(북한식 표현으로는 혁명적 軍중노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셋째 '革命的 群衆路線'의 강조속에서 북한의 대중들의 생활상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강구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정세의 압력속에서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인민대중의 생활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민중들의 통일적 열망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과 그의 측근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신진관료계층은 '3大革命的 持續'을 통해서 특히 조일수교나 유엔동시가입등의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국내의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넷째 革命1世代인 빨찌산그룹이 대거 퇴진하고 新進技術官僚과 知識人계층의 참

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권력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들이 향후 북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책임맡고 있다. 물론 원로정치세력인 혁명1세대가 아직도 주요한 정치권력에 남아있지만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전실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老中齊의 결합'(3結合)의 형태로 원로세대의 경험과 신진세대의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이종욱, 박성철, 김중린, 오진우 등 조선노동당이나 주요한 국가기구 내의 혁명1세대가 중요한 정치적 위기나 후계자로의 안정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後繼者로의 安定的 權力承繼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대간의 교체를 비롯한 정치권력 전반에 '엘리트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교체는 자본주의 진영이나 여타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식대로 권력엘리트내부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보다 빈번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나 '보다 효율적인 경제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관료의 교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든 과거보다 뚜렷해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관료와 지식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섯째 地方의 分權化 즉 중앙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인민정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계위원회의 설치나 최고인민회의 대표자격에 지방인민위원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면방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주의판 지방자치'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관료봉치가 지방의 대중들로부터 이반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적으로 말해서 현상만을 바라보고 설블리 북한의 모델을 '루마니아식 민중봉기모델'로 논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식 개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형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북한 및 사회주의권의 자료물 원용하여 입증하였다.

#### 4. 結論을 대신하여:

##### 韓半島 統一에 있어 몇가지 原則

노태우노대통령은 유엔 同時加入의 언설에서 '북한의 聯邦제도 긍정적으로 재검토 할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였고, 미국 역시 소련사태이후 '남한의 핵무기 철수의 가능성'을 비중있게 언급하였다. 반면 북한 역시 아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탈냉전의 기류'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남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경제-문화교류'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과거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던 '평화협정의 체결'을 비롯한 각종 통일방안의 핵심적 사안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방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장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몇가지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남북한 당국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통일방안의

내용까지도 포괄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원칙적인 수준의 제기이고 당장에 현실화 할 수 없는 여러가지 국내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통일 방안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그 기본원칙의 대강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원칙에다가 '民主主義의 원칙' 과 '民間參與의 原則'을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序論：社會主義圈 改革과 北韓社會, 그리고 權力構造의 變化

中國의 천안문사건을 시발로 한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요구는 결국 東獨의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진전되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蘇聯의 '보수 쿠데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심대한 위기와 진풍은 결국 사회주의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면적 제기했던 '페레스트로이카의 政治經濟學'과 '社會主義下的 權力構造'에 대해서 總體的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권의 위기와정속에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인식과 대응 역시 북한이 사회주의권 일반의 공통된 문제점에서 완전히 예외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켜 주었다. 즉 소련보수쿠데타로 인한 蘇聯 共產黨의 해체이후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통일조국의 대상인 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사회는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問題點이 얼마나 존재하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극복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권력구조' 특히 後繼者問題를 둘러싼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싶이 현존 사회주의권의 위기는 '스탈린주의적 官僚主義'가 혁명초기의 열악한 국내외적 조건속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된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民主主義의 결핍'을 초래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는 마르크시즘에서 의미하는 '民主集中制'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관리'를 비롯한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면 보장,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이며 과연 북한사회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규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sup> 이러한 구체적인 토대위에서 북한사회의 변화 모델이 '소련식 개혁' 혹은 '투마니아식 변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問題意識을 해명하기 위해서 걸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權力엘리트에 대한 구조분석'을 시도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1)어떻든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은 동구의 사회민주주의적 지향(동독은 이미 자본주의적 민주를 수용했고 여타의 동구국가도 그러한 정향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에서부터 북한처럼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는 '주체형 혹은 정통사회주의형'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들 보이고 있다. 게다가 소련과 중국등의 개별국가의 내부에서는 사회주의의 진로를 둘러싸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용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노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북한사회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比較社會主義的’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主體思想과 北韓의 權力構造’에 대한 이해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전일적인 지배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상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제공해준다면,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령론과 후계자문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의 준거를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사상적-이론적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북한내의 권력구조분석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한반도의 통일적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 比較社會主義的 北韓研究方法論

### 1. 北韓研究現況 및 問題點

패러스트로이카에 의해서 국제관계의 혁명적 재편이 시도되기 이전까지 국내의 북한연구의 현황은 주로 반공적 관점의 접근과 서구적 시각의 자유주의적 접근이 진행되었다. 이를 테면 ‘共產主義體制 研究를 위한 여러 접근법’(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 1986)을 보면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전체주의적 접근법, 복합조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집단갈등 접근법, 엘리트 접근법, 자유화 접근법, 체계론적 접근법과 기능분석 및 통일-통합과정과 연관된 두 발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반 분류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연구가 사회주의의 내적 논리를 어느정도 인정한 전제속에서 ‘內在的 批判’을 시도하는 비교사회주의적 연구는 금기시되거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체계적인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형적으로 비판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존의 반공적 시각과 편향된 서구시각으로부터 맹목되어 ‘북한사회의 건강성’이 전혀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一人獨裁國家論’ ‘個人崇拜國家’ 등의 ‘全體主義的 北韓觀’만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었다.<sup>2)</sup> 이러한 왜곡된 북한인식의 허상을 과감하게 깨면서 등장한 것이 학생운동을 비롯한 변혁운동진영내의 진보적인 인텔리들이었다. 이들은 ‘科學’으로서의 ‘마르크시즘’과 ‘平等的 社會主義國家’의 모델을 일정하게 지향하면서 ‘반공-반북이데올로

2)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자체의 내적 논리에 대한 이해없이 사회주의권 전체를 ‘악의 제국’으로 묘사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감정적 비난’의 수준에서 ‘김일성 새습체제의 타도’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결코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재 존재하는 북한내의 일정한 건강성과 역사성을 복원시키면서 ‘내재적 비판’을 시도하는 학문적 균형감과 사실성도 결여되어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의 타파'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鬭爭은 사실의 객관성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적어도 '북한사회연구의 지평'을 여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울퉁퉁을 전후로 6共和國의 '北方統一政策'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권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어느정도 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운동진영내의 사회주의권 인식 역시 몇가지 점에서 限界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논의가 革命過程의 노선투쟁이나, 사상적인 측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즉 '레닌의 혁명전략과 주체사상의 한국적 수용을 위해 남한내의 사회구성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투쟁전략을 실천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부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절박성과 사회주의권에 대한 정보부재현상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상부분에 천착하면서,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상의 제반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는 상대적으로 소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스탈린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나, 동구에 대한 소련의 개입현상, 중소분쟁등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결과 페레스트로이카를 시발로 한 사회주의진영의 개혁과 민주화시위가 확산되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였고 급기야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등에 대해서는 교조적인 편향을 노출하거나, 판단유보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sup>3)</sup> 따라서 기존의 反共主義的 論理에 대한 억반응으로서 민중운동진영의 일부에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없이 '인민대중의 주체형 사회주의국가'라는 형태의 '북한승배론'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방정책의 추진이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연구의 현황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분석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연구 수준도 향상되어 북한사회의 독특성을 감안하면서 '統一的 觀點'과 '比較社會主義的 觀點'에서 균형적인 연구작업이 시도되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북한 연구현황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그 연구수준이나 자료의 정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어서 결국 '진정한 북한사회의 이해'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sup>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연구는 政策的 水準에서 1차문건을 皮相的으로 검토하는 등의 이론적인 작업에 치우쳐왔다. 따라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심적 權力엘리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은 채 진행되지 않았다. 즉 과거의 연구경향은 '金日成'과 '主體思想'의 연구가 북한연구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작업은 그간에 진행된 '北韓-中國40年 研究'등의 몇가지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된 북한의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1차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比較社會主義的 接近'과 '經驗的統計資

3)이에 대해서는 최 성 '중국사태의 재인식, (월간 다리, 89년 10월호) 참조

4)이 방면에서 중요한 작업으로는 북한을 다녀 온 사회주의권의 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북한연구자료로서 Rainer Werning "Nordkorea, (Frankfurt 1988)가 있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자료가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논문이거나 기행문의 형태를 띠어 체계적인 연구서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料分析' 그리고 '社會主義圈 資料蒐集' 등의 진일보한 연구작업을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권력엘리트의 구성변화를 중심으로)에 집중하고자 한다.

## 2. 比較社會主義的 北韓研究方法論

따라서 본고에서 시도하고 있는 '비교사회주의적 접근법'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결합시키고 이론과 현실수준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적 입장에서 북한의 소위 '주체노선'을 일방 매도하는 것도, 主體思想的 입장에서 개혁노선을 '修正主義'로 일축하는 것도 사회주의국가의 다양성을 놓치는 自足的 接近임에 틀림없다. 동구국가내의 사회주의국가가 보편성속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담지하듯이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노선이 일치될 수는 없다. 더욱이 모택동의 혁명적 사상이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으로 변화하고 급기야는 '천안문의 비극'을 초래한 역사의 反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국제정치적 특수성을 예리하게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는 '북한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구조분석을 포함한 모든 북한연구에 있어 예외일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社會主義的 民主'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내부 문건에 대한 批判的 接近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건강성과 문제점을 '사회주의적 틀'속에서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내재적 비판과 동시에 統一的 觀點이 일관되게 견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사회주의의 일반성과 차별성을 비교추출하는데 있어 몇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소위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의 北韓研究方法論의 제시이다. 이는 올바른 방법론 없이는 올바른 연구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론의 확인이기도 하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교사회주의적 북한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별국가의 혁명과정상의 경험이 갖는 歷史性和 特殊性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상부구조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제국주의세력의 침탈정도, 나아가서는 혁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각 정치세력과 계급간의 기여도(변혁주체와 동맹의 대상)등이 선행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혁명정권 수립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상의 차별적인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각 국가가 갖는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동시에 생산력의 발전정도와 착취계급의 일소라는 생산관계의 재정립등의 측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자본주의 진영의 경험적 자료와 현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독자적인 원리를 무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북한사회의 경우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에서부터 주체사상의 형성 그리고 수령에 의한 유일적 영도체계라는 북한사회주의건설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5) 이러한 문제제기속에서 그간의 제도권과 운동진영의 사회주의연구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올바른 북한연구방법론을 위해서 현대사회주의비교연구방법론을 시론적으로나마 제시한 논문은 최성편, 『현대사회주의비교연구』 (학민사, 1990)

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비판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한반도는 그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철저히 받았고 해방정국을 거치면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여 아직도 분단의 장벽이 높이 드리워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혁명정권 수립이후 社會主義 建設過程상의 經驗과 구체적 성과부분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혁명전통의 유산과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성이 결합하여 상이한 발전전략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유교가 '티토식 자주노선'을 시도하고, 북한이 '주체형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물론 공공의 과제를 안고 유사한 노선을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는 경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의 지양태'로서 등장했고 나아가 '참된 인민 정권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지향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평등'과 제반 사회주의가치를 실현했는가 하는 점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비교연구하여야 한다. '버마식 사회주의'가 참된 사회주의 일 수 없듯이 이론과 사상보다는 현실수준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구체적 자료에 입각한 '社會主義的 平等性'에 대한 평가는 현재 사회주의권의 위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기존의 사회주의혁명이 '민중정권'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생활수준이 결코 향상되지 못했던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오늘날 북한 연구도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대한 연구못지 않게 북한사회의 민중성과 평등성의 구체적 지표(경험적 자료)연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주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民主集中制'의 원칙이 각 정치구조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장치가 얼마만큼 실현 됐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현대사회주의권의 일반적현상의 하나가 권력구조의 '社會主義的 民主化'라고 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통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위당의 지도성'이 '민중대중의 자발성'을 보다 고양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민주집중제가 '부르조아적 민주원리'와 질적으로 다른 '참된 인민정권의 실현'에 그 목표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북한사회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일반의 공통된 문제의식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북한의 정치체계속에서 해소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강조되는 북한사회에서 대중들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불만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는 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개혁형 사회주의 일반의 '관료주의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넷째, 현대사회주의, 특히 80년대 중반이후의 개혁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마

6)그런 점에서 송두율의 『소련과 중국』(한길사, 1990)와 서진영의 『현대 중국과 북한40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의 연구는 진일보한 연구성과이다.

르크시즘에 대한 재해석'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상-이론적 수준의 개혁(중국식으로 표현하면 '思想解放')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시대의 문제의식과 재반이론이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각국마다 재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이론이 정통마르크시즘을 어떻게 수정, 혹은 발전시키고 있으며 소위 '개혁형 사회주의'와 '주체형 사회주의'간의 논리가 어떤점에서 다른지가 '사회주의의 다양성'이라는 틀속에서 비교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주체사상이 '주체시대의 새로운 철학'으로서 마르크시즘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치사상적 기반에 대한 비교분석의 차원에서는 물론 '북한사회주의의 발전노선'으로서 주체사상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이 선행될 때 북한사회의 변화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首領論'에 대한 평가와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끝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부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르크시즘의 출발과 주요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이며 이는 民族主義를 결합한 형태라는 것이 그동안의 내적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에서는 역시 소수 민족문제가 아직도 갈등의 소재로 남아있고 급기야는 '중소분쟁'과 같은 사회주의 대국간의 장기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국가간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분업화가 논의되고 이를 자본주의진영의 이론가들은 '사회주의적 종속'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소련에서의 연방해체와 유고의 민족분규의 심각한 양상은 이러한 논리를 실제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브레지네프시대 '制限主權論'에서 부터 최근 고르바초프의 '新베오그라드선언'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국가간의 언대는 얼마만큼 이루어졌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 가를 구명해야 한다.

바로 50년대 중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비판 시기에 '脫蘇自主路線'이 동구권과 북한에 파장을 미칠 때 북한의 주체사상도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과 '민족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비단 이론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국제관계의 재편속에서 북한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일수교협상과 유엔동시가입의 현실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몇가지 수준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비로소 현대사회주의국가의 이론과 현실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북한 사회주의'의 진실된 모습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北韓社會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權力엘리트에 대한 性格變化'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속에서 본 연구작업은 북한의 자료뿐만아니라 社會主義圈의 北韓研究資料까지 수집, 비교분석함으로써 객관적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日本의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아지켄 연구소의 북한자료, 西獨의 자유베를린대학의 동북아연구소, 東獨의 훔볼트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헝가리의 동구권 연구소, 체코의 프라하대학 부설 연구소, 中國의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변대학 조선학 연구소등을 방문하여 본 연구작업의 내용을 대폭보강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북한방문의 경험을 지닌 연구소 소장이나 교수등을 만나 부족한

자료부문을 인터뷰등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연변에서 지난 7월말 개최된 'KOREA 學 소장학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북한의 김일성대학 교수, 주체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평화 및 군축연구소 연구원 등 12명의 북한연구자와 함께 '사회주의권 개혁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한 토론내용과 개인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사회주의국의 기초자료는 이 연구작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작업은 북한의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사회주의권의 자료, 그리고 개인적 인터뷰나 학술토론을 통해 확인된 2차분석자료를 근거로 로동당과 최고회의, 정부원등에 있어서 권력엘리트의 성격변화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 3. 研究內容 및 時期 그리고 意味와 限界

현재 韓半島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은 '北韓도 變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하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현재의 주요한 문제의식속에서 그간의 연구성과 (北韓40年 全般에 대한 1차 자료의 分析)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정당(勞動黨), 국회(最高會議), 행정부(政務院)내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범위는 우선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의 구성변화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의 로동당과 최고회의 그리고 정부원등의 권력엘리트들의 성격변화를 社會的, 教育的 背景과 主要 經歷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 권력엘리트의 범위는 黨 中央委員 以上, 최고회의의 간부級 인사, 정부원의 部長 및 副部長이상, 그리고 주요국가기구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2장)

그 밖의 권력엘리트의 구성변화를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권의 정치개혁과 북한의 '수령의 일원적 영도'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比較 社會主義的 視覺'(Comparative Socialistic Approach)에서 접근하였다.(3장) 왜냐하면 중국의 천안문사건과 소련의 보수쿠데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주의국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대단히 추상적인 이해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때문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일반의 권력투쟁이 북한과는 어떠한 상관성과 차별성을 지니는가 역시 비교하면서 '북한사회의 권력구조 변화모델'을 예견하였다.(3장)

研究時期는 원칙적으로 1948년 북한정권수립이후를 대상으로 하나 특히 중점적인 분석대상은 1972년 新憲法이후 최근까지의 권력구조 분석을 하였다.(필요한 경우 소급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권력구조변화의 뿌리를 이해하였다.) 이를 토대로 권력엘리트들의 구성변화가 北韓의 政策變化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그 함의를 추출해내고 부차적으로는 金正日에로의 權力承繼의 가능성과 이후 北韓의 權力構造의 變化를 예상해 보았다. 특히 韓半島 統一과 北韓의 變化 그리고 權力承繼이후의 政治的 展望과 관련하여 主體思想과 後繼者論의 형성 및 공고화과정등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갖는 상관성을 추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國內政治와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나타난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의 양상을 북한의 원자료를 통해

접근하고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4장)

또한 유엔동시가입을 전후해서 南北關係의 진전에 따른 북한내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변화된 정세속에서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한반도 통일방안의 몇가지 원칙'을 시론적이거나 제시하였다.(5장) 이 과정에서 勞動新聞과 民主朝鮮,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 문건등에 나타난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특히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의 권력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가능성과 체제개혁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즉 이러한 權力構造的 接近(Power-Elite Approach)을 통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北韓-日本關係의 개선, 그리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정치체제적 안정성 여부를 전망하였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소련사회주의의 붕괴와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엄청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한반도의 통일방안에 있어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작업은 韓半島 統一과 관련하여 그리고 北韓研究의 客觀的 接近을 위해서 보다 진일보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限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북한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스스로가 권력구조와 관련한 자체 자료를 만족할 만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북한내부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분석'은 적지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국내의 자료나 권력구조 분석 역시 객관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sup>7)</sup> 동시에 사회주의 자체의 내적 논리나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분석을 자본주의적 틀속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권력엘리트'라고 했을 때 계급간의 차별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당간부나 주요 국가기구내의 지도급 인사들 '권력엘리트'의 범주에서 기계적으로 단순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노멘클라투라 계급'(特權階級)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북한내의 권력엘리트의 성격과 그 구성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7) 이런 상황속에서 양 성철의 '북한정치론'(박영사, 1990)은 경험적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북한내의 권력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자료의 한계와 해석상의 일정한 편향을 감안하면 아직도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분류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사회주의적 독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분류하거나 분석함으로써 '주관주의적 해석'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차자료의 제시나 그 경험적 자료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수용하되, 그 해석은 '비교사회주의적 방법론'을 병행하여 새롭게 재해석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의 한계는 1차자료의 분류 및 그 결과추출을 기존의 자료중심으로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도 객관성을 확인할 사회주의권의 자료수집의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40여일에 걸친 사회주의권의 방문으로 제한적이거나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권 자료물 수집, 기존의 1차 자료와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었다. 또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사회주의권의 연구자와 북한의 김일성대학의 교수들 비롯한 북한의 사회과학자 12인과의 학술토론회와 개인적인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의 결과나 수기, 그리고 추체험적인 논리적 분석에 따른 비교연구의 한계는 뚜렷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의 추가된 작업을 통해서 극복할 예정이다.

## II. 北韓의 權力엘리트의 構造分析

: 勞動黨, 最高人民會議, 政務院 中心으로

### 1. 北韓社會 權力構造의 變化에 대한 概括的 理解

현재 북한의 정치구조는 크게 黨과 國家機構로 나누어 진다. 여기에서 당은 조선노동당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구에는 헌법상 제도화된 기구들로서 최고인민회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내각 그리고 재판 및 검찰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은 권력구조의 변천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勞動黨은 창당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의한 集團指導體制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주요 당간부진의 구성에 있어서도 김일성파, 연안파, 소련파 및 국내파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 말에 걸친 黨內 權力鬭爭에서 金日成이 승리하게 되는 제4차 당대회 이후에는 종래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총비서를 정점으로 한 일원적 지도체제인 '비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1948년 국가수립당시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구로는 중앙에 최고주권기관인 最高人民會議, 국가주권의 행정기관인 내각 그리고 재판기관이 있었고, 지방기관에는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채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기구는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헌법의 부분개정과 1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기구의 성격과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1954년에는 지방기구의 체계화가 시도되어 기존의 地方人民委員會를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와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분리하였으며, 1962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 의한 내각구성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각의 독립성을 증대시켰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를 인구 5만명당 1인에서 3만명당 1인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72년에는 5차에 걸쳐 부분 개정해오던 憲法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에 있어 일대 혁신을 단행하였다. 즉 社會主義憲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구헌법에 비해 크게 약화된 반면에 국가의 수반이자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주석이 수위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은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으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의 변화는 최근에 사회주의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인 정치구조의 개편과는 다소의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改革形 社會主義國家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당정분리를 통해 점진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을 추진해 왔던 데 반해서 北韓은 점차적으로 '수명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의 영도성'과 '黨政一致를 통한 당의 지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적 성격은 현재 북한사회의 정책 변화를 추적,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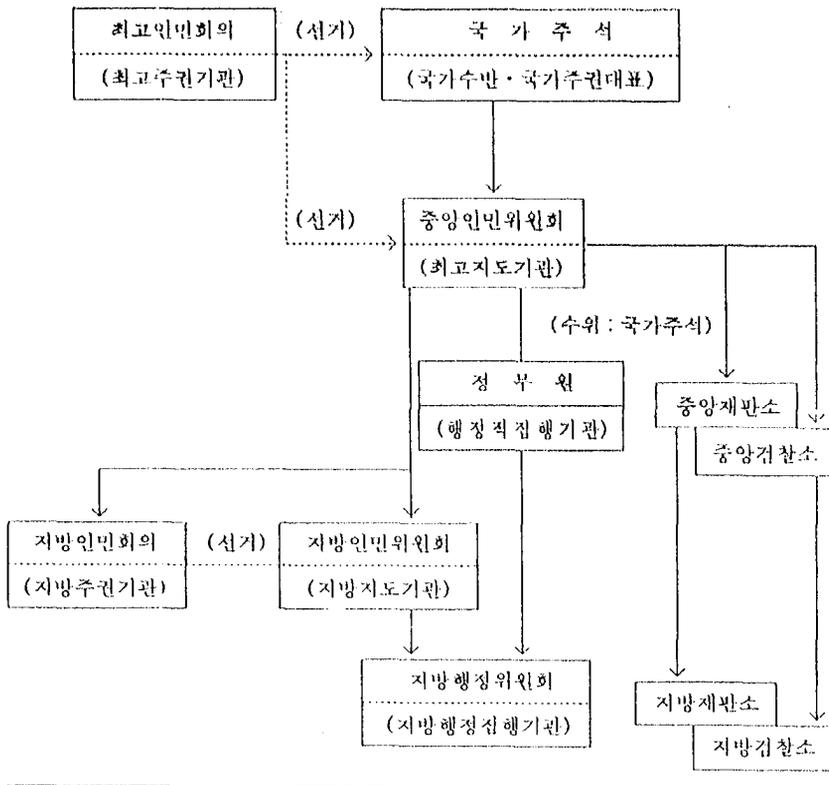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당 및 국가기구의 확대와 체계화 과정은 당 및 국가기구의 권력구조를 일원화하여 당은 총비서에게, 국가기구는 주석에게 권력을 집중

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이 당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맡게됨으로써 북한의 정치권력은 김주석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물론 당·국가체제의 강화나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스탈린시기의 소련이나 모택동시기의 중국의 정치과정에서도 보이며, 이는 사회주의적 정치과정의 일반적인 현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정은 주체사상과 그 사상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령론'이 북한정치의 지도원리로서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정치과정과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 즉 주체사상은 1955년 김일성에 의해 최초로 언급된 이래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공식화되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국가기구를 포함한 북한 정치의 모든 영역에 걸친 지도원리로서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40여년에 걸친 북한정치는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首領을 頂點으로한 黨-國家體制의 制度化 過程'으로 표현될 수 있다.

헌법 헌법에 나타난 북한의 권력구조를 도표화(당 및 정권기관)하면 <표1>과 같다.

<표1> 북한의 권력구조



자료: 신헌법에 의거함

## 1) 朝鮮勞動黨의 形成過程과 初期 權力構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0여년간 북한정치에서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최고지도조직으로서 정치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과정에서도 북한정치의 핵심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한의 政治理論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인민의 지도적 및 항도적 역량”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인민주권이 나아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국가주권은 조선노동당의 총토선을 견결히 집행하고 그 정책을 충실히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된다”는 것이다.<sup>2)</sup> 실질적으로 국가기구의 요직에 임명된 역대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당간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간부들의 국가기구에 대한 중첩적 인물구성은 북한정치의 실제적 과정이 당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도,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당의 역할과 그 권력구조의 성격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정에서의 초기의 권력투쟁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전개된 反宗派鬭爭의 결과,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單一的指導體系’가 강고히 구축되어 이후에 어떠한 반대세력의 정치적 저항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좀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직후 한국공산주의운동 내부에는 김일성중심의 항일빨치산세력(소위 甲山派)이외에도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으로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당시 북한에서 독자적인 당건설을 주도한 세력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파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파의 오기섭, 정달현 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상 당중앙의 지부적인 분국으로 결성되었다.<sup>3)</sup>

이후 北朝鮮 分局은 연안파가 주축인 新民黨과 통합하여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을 수립하게 되는데, 통합 당대회(북한은 이를 조선노동당 1차대회로 간주함)에서도 역시 권력은 각 정치세력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즉 연안파의 김두봉이

1) 서진영 ‘북한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II,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조선노동당은 1946년 신민당과 공산당의 합당을 통해 북조선노동당으로 창당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의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조직의 확대 및 체계화를 이루어 왔다. 창당 당시 조선노동당은 당세포수 12,000개에 30여만명의 당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세포수 30여만개에 300만명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북한인구 7명당 1명이 노동당원일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2) 『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 강좌』 p.17, 양호민의, 『북한사회재인식 1』 (한울, 1987) p.201에서 재인용.

3) 김주환, “서북5도당대회의 대미인식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조직적 위상”,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p.171.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김일성은 국내파의 주영하와 함께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5명의 정치위원은 연안파의 김두봉과 최창익, 소련파의 허가이, 국내파의 주영하 그리고 김일성으로 구성되었다.<sup>4)</sup>

한편 남한의 朝鮮共產黨은 1946년 11월 인민당 및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하게 되지만, 미군정 당국의 탄압과 모험주의적인 노선등으로 인해 당세의 악화를 겪어 오다가 결국 1948년 8월 중앙간부들이 대거 월북함으로써 사실상 남한내 당적 기반을 상실하기에 이른다.<sup>5)</sup>

남북노동당의 합당대회에서 김두봉을 대신하여 김일성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는데, 이는 당내에서 김일성의 입지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간부진의 구성에서 보여지듯 아직까지 북한 노동당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集團指導體制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과 초기에 각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초기 권력형성과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기반한 공산주의운동진영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일제식민통치와 해방정국에 있어 미군정의 역할 등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부과되어 해외의 공산주의 운동세력이 지도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 만주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조직적인 공산주의운동이었지만 엄밀하게 말하여 소련-만주국경지역에서 주도 운동을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국내적 기반이 여타 사회주의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갑산파세력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심적인 지도 그룹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특히 반대파와의 심각한 사상투쟁이 '반종파투쟁'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논쟁의 가능성이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급기야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의 정치적 토대'로서 구축하는 독특한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혁명초기의 집단지도체적 성격은 72년 주석제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國家主席과 首領에 의한 일원적 領導體系'로 전환하게 된다.

## 2) '反宗派鬭爭'과 單一的 指導體系의 成立

앞에서 살펴본 조선노동당의 초기 권력구조는 이후 10여년간에 걸친 당내 권력투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승리함으로써 60년대 이후 조선노

4) 서대숙, "정권의 수립과 변천과정",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p. 63.

5) 서대숙, "위의 급", 『위의 책』 p. 65. 이처럼 북노당의 안정적 성장과 남노당의 악화는 결국 북노당에 의한 남노당의 흡수통합을 초래케 하는데, 이는 1948년 8월 25일 남북노동당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 1949년 6월 30일 합당대회의 개최로 완료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현재의 당명칭인 조선노동당을 정식 당명으로 채택하고,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김일성, 제1부위원장 박헌영, 제2부위원장 허가이를 선출되었고 9명의 정치위원에는 김일성, 박헌영, 허가이를 포함하여 남로당계열의 이승업, 김삼룡, 허헌, 연안파의 김두봉과 박일우 그리고 김일성의 측근인 김책이 선출되었다.

동당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우선 김일성세력에 대한 도전과 숙청은 1948년 제2차 당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차 당대회에서 일어난 권력구조의 주요변화는 오기섭, 최용달, 정달헌 등 원산 함남에 기반을 둔 국내파 세력의 탈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분국 설치 당시 김일성세력에 맞서 '중앙에의 복종'을 강력히 주장하던 인물들인데, 물론 이들의 반발로 인해 분국의 위상이 형식적으로나마 서울의 중앙당에 종속된 지부적으로 격하되긴 하였지만, 이로인해 국내파는 김일성파의 강력한 경쟁세력으로 주목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宗派主義的 행동으로 비판받아왔다. 결국 제2차 당대회에서 이들에 대한 종파주의 문제가 집중 성토되었으며 오기섭, 정달헌, 최용달 등은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3년간은 조선노동당의 권력구조 변화에 있어 획기적인 대변혁의 시기였다. 전쟁의 초반기인 1950년 1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연안파의 무정과 김한중을 비롯하여 소련파의 김일 등이 전쟁초반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당했다.<sup>6)</sup> 또한 1951년 11월 당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소련파의 핵심세력인 허가이가 責罰主義와 關門主義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받고 出黨당하였다.<sup>7)</sup>

그러나 무엇보다 치열한 권력투쟁은 김일성파와 남토당의 국내파 사이의 다툼이었는데, 무정, 허가이 등의 숙청이 정책상의 과오나 직무상의 중대한 실수였다면, 남토당 세력에 대한 숙청은 김일성세력에 대한 집단적 도전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었다.<sup>8)</sup> 이와같은 당내 세력관계의 변화는 1956년 4월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지도부의 구성에서 잘 보여진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5명의 부위원장에는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이 선출되었다.<sup>9)</sup> 따라서 3차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 부위원장 5인은 모두 김일성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또한 이때 선출된 정치위원회 위원 11명을 출신별로 보면, 김일성파 6명(김일성, 최용건, 박정애, 김일, 김광협, 박금철), 연안파 2명(김두봉, 최창익), 소련파 2명(남일, 임해, 그리고 국

6) 『조선중앙년감』 (1951 - 52) 『조선중앙통신사, 1953) p.29.

7) 이후 허가이는 1953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 1989) p.111.

8)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의 권력구조의 형성", 『역사비평』 (1989년 가을호) (역사비평사) p.255. 남토당 세력의 숙청은 1차적으로 박헌영의 핵심 측근들을 제거한 후 당수인 박헌영을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1차 숙청에서는 이승업, 조일명, 임화, 이강국 등 10명이 숙청 재판판을 통해 사형언도를 받았다. 북한에서 주장한 이들의 죄목은 첫째 미국의 스파이, 둘째 남한내 혁명역량의 파괴와 학살행위, 셋째, 무력으로 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한 행위 등 3가지였다. 결국 이승업 일파에 대한 숙청은 전 남노당 당수 박헌영에게 여파가 미쳐 박헌영은 동일한 죄목으로 기소되었으며, 1955년 12월 사형언도를 받았다.

9) 이들중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은 김일성의 측근들이며, 정일룡은 국내파로 알려져 있지만 박헌영의 남토당계열이 아니라 일본에서 교육받은 기술관료로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김창만은 원래 연안파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이때에 이르러 김일성에게 충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 출신의 정일용이었다.

이러한 3차대회의 당지도부 구성은 북한의 당내권력이 이때에 이르러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그룹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보여지듯 연안파 및 소련파의 세력은 약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당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연안파와 소련파는 1950년대 중반 북한사회주의건설의 방법을 놓고 김일성파에 강력히 도전하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1953년 8월 당중앙위 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세력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노선으로 ‘農業協同化 推進 및 重工業 優先 / 輕工業, 農業의 同時發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연안파와 소련파는 ‘농업협동화 시기상조론’을 제시하고 소비상품을 희생시키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의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대립은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데, 설상가상으로 1956년 2월 개최된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 個人崇拜가 비판되면서, 노선대립은 反김일성운동으로 비화되게 되었다.

결국 갈등은 1956년 8월 30 - 31일에 열린 당중앙위 8월 전원회의에서 윤공흠, 박창욱 등의 연안, 소련파들이 공개적으로 김일성 개인숭배와 당내 노선문제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폭발되었다. 이러한 당내의 정책논쟁 및 권력투쟁은 당시 소련공산당내에서 전개되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소련내에 울뿐이고 동구권의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킴으로써 북한내에서도 반김일성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인민대중의 소비재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논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sup>10)</sup>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修正主義 사상의 유포가능성’과 ‘소련 및 중국 등 大國主義的 종파사상의 해독’을 이유로 하여 ‘반종파투쟁’을 가일차게 전개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장기간의 ‘전면적인 반종파투쟁’을 통해 일원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소위 ‘8월 宗派事件’으로 알려진 이들의 반김일성 운동은 또 한번의 대규모 숙청으로 연결되면서 연안, 소련파의 대거 축출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숙청된 인물들로는 소련파의 박창욱 (당서열 7위), 김승화 (서열 35위), 연안파의 김두봉 (서열 6위), 최창익 (서열 8위), 윤공흠 (서열 68위), 이필규 (서열 97위) 등이 있었다.<sup>11)</sup> 이로써 창당후 10여년간에 걸친 조선노동당내 파벌투쟁은 김일성중심의 갑산파의 승리로 종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구조 형성과정은 이후에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건강한 노선투쟁과 정책논쟁의 기반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그후 북한내에서는 당의 정책이나 지도부의 사회주의 발전노선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10)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기섭이나 서취 같은 인물들은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권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으며, 소련파의 허가이는 당의 성격을 대중중심의 노동당보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엘리트 중심의 공산당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공흠이나 최창익과 같은 연안파들은 권력구조에 있어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며,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중공업위주의 발전전략보다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공업의 우선 발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1) 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이론과 실천, 1987) p.140.

‘사회주의적 내용성’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어되게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 경험이 현재 사회주의권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면서도 북한의 지도부가 ‘공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추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내 파벌투쟁과 권력구조의 변화는 ‘당내 파벌이 해소되었다’고 선언한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지도부의 구성변화에서 알 수 있는데, 1956년 3차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71명중 43명과 후보위원 45명중 32명이 당지도부에서 대거 축출당했으며 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11명의 정치위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5명의 부위원장은 모두 김일성의 측근들로 구성되었다.<sup>12)</sup>

이와같이 제4차 당대회를 통해 당내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김일성과 그 측근들은 1960년대 전반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강화 및 제도화하게 된다.<sup>13)</sup>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62년에는 당내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인민군의 조직, 지휘를 총책임지는 당군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장에 김일성이 취임함으로써 김은 군사력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이어서 1966년 10월 중앙위 4기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당의 최고실력자인 총비서(1인)와 비서(10명내외)로 구성되는 비서국을 신설하고, 총비서에 김일성이 추대되었다. 총비서제의 채택은 조선노동당의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개편되었음을 의미하며, 김일성의 총비서직 취임은 당내에 김일성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 3) 後繼體制의 構築과 金正日의 浮上

한편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완비된 1970년 이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이후 권력승계를 염두에 둔 인물 및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3大 革命小組運動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함으로써 혁명 2세대라 할 수 있는 전문기술관료의 당내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이들을 기반으로 한 김정일의 권력부상을 가능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3대혁명소조운동은 1960년대말 급격히 가시화된 북한 경제·사회발전의 정체에 직면하여 김일성이 주창한 思想, 技術, 文化전반에 걸친 쇄신운동을 소조원들의 파견을 통해 진행한 人民改造運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임무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장에서 간부들에 대해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도록 지도하는 정치사상적 지도와 아울러 근로자들에

12) 제 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5인 부 위원장으로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이며, 11인 정치위원 들은 이철6인과 김광협, 정일룡, 남일, 이종욱, 박정애 등이었다.

13) 우선 김일성 권력기반의 정통성 확보란 차원에서 1950년대 말 이후부터 항일혁명전봉이 공개적으로 강조되고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관한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1958년에 김일성의 항일혁명전봉이 강조된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발간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이 엮은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이 공식간행되었다.

계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과학 기술지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었다.<sup>14</sup> 소조원들의 임무에서 보어지듯 3대혁명 소조운동은 이른바 북한 지도층의 일대 쇄신 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sup>15</sup>, 이는 조선 노동당내 권력구성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케 했다. 그러한 변화의 양상은 다음의 두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권력부상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 1세대를 대신한 革命 2世代의 당내 권력중심으로의 대거 진출이었다.

우선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직접 관장하게 됨으로써 당내 권력의 핵심에 등장하였으며, 1975년 가을부터는 김정일이 인민들 사이에서 ‘黨中央’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서열 4위의 정치국위원 겸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당군사위원회에서는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서열 3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또한 3대혁명운동의 결과 나타난 당지도부의 세대교체 현상은 1980년 6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의 당지도부 구성에서 알 수 있다.

6차 당대회 개최결정서가 채택된 1979년 12월의 제5기 19차 중앙위 전원회의 당시 정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위원 26명중 12명이 혁명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중 전문직을 제외한 전원이 서열 1위에서 11위까지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 2세대인 전문기술관료 출신 또한 9명이나 포함 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은 후보위원 11명중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6</sup>

이것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당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혁명 2세대의 현격한 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차당대회에서는 1979년대 비해 世代交替를 의미하는 특별한 구성상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김정일이 당서열 4위로 급부상하고 총참모장이며 김정일의 측근인 오규열이 16위를 차지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혁명 2세대인 기술전문관료들의 정치국 진출은 계속 확대되게 되는데, 6차 당대회시 정치국 정위원 19명중 6명, 후보위원 15명중 8명을 차지하던 기술전문관료들은 1984년 2월에 가서는 정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후보위원 18명중 12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986년 12월 제6기 12차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정위원 15명중 7명, 후보위원 10명중 7명이 각각 선출됨으로써 기술전문관료들이 정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 50%와 70%로 증가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서열 2위인 비서국의 경우는 전원이 전문기술관료 중심인 혁명 2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1970년대 이후 3大革命小組運動의 전개와 당지도부 구성의 변화는 혁명

14) 양호민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I』 (한울, 1987) p.78. 소조원들은 당중앙의 직접관장하에 당성이 강한 청년·학생 및 과학·기술자 당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 - 30명 혹은 50명으로 조직되어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었다.

15)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백산, 1990) p.275.

16) 이우정, “최근 북한권력엘리트 변화와 정책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권 2호) (국토통일원, 1989) p.48.

1세대에서 혁명 2세대로의 세대교체와 아울러 혁명 2세대인 기술전문관료들을 세력기반으로 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 2. 勞動黨內의 權力엘리트의 性格變化

### 1) 黨組織 改編의 歷史와 그 意味

당지도이념의 변화와 더불어 지난 40여년에 걸쳐 조선노동당은 매 당대회시마다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다. 1946년 창당 당시 조선노동당은 중앙조직으로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대회, 당대회사이에 당무를 총괄하는 당중앙위원회 그리고 당대회의 직속기관인 중앙검사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지역당 조직으로는 행정구역에 따라 도·시·군·면 당위원회가 지역당 대표회를 두고 있었다.

창당 이후 당조직은 1948년 2차 당대회에서 몇가지 조직상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종래의 규약에서 당대회 직속기관이던 중앙검열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당내의 사상통일과 당규율 강화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급 당지도기관의 정원수를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종래의 당규약에 정위원으로만 구성되던 당중앙위원회에 후보위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결원에 대한 신속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후 4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주요한 조직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당 차원에서 당원에 대한 사상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래에 중앙에만 존재하던 검열위원회를 도·시(군) 당위원회까지 확대 조직하였으며, 둘째, 군내부의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민군 당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하였다.

이러한 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내의 유일적 지도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대 전반에 걸친 강화기를 거쳐 1970년 5차 당대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1970년 5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당규약에 명시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몇가지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군사에 관한 전권을 관할하는 군당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고, 종래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비서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군사위원회와 비서제는 이미 1962년과 1966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黨軍事委員會와 비서제의 신설 그리고 신설된 군사위원장과 총비서에 김일성이 선출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권력구조에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제도화된 김일성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10년 후인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커다란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당의 조직적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표2>와 같다.

<표2> 노동당 조직변천 상황 \*

때	당원수	당세보수	대의원수	인구비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1) 3차 확대집행위원회 (1945년 12월 17일)	4,530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2) (1946년 8월 28 - 30일)	366,000 (366,339)	12,000	801명→ 노동자 : 183 농민 : 157 사무원 : 385 기타 : 76	4%
조선노동당 2차대회 (1948년 3월 27 - 30일)	725,762	28,000 (29,763)	999명→ (9명불참) 노동자 : 466 농민 : 270 사무원 : 234 기타 : 29	8%
조선노동당 3차대회 (1956년 4월 23 - 29일)	1,164,945	58,259	916명→ (2명불참) 노동자 : 439 농민 : 192 사무원 : 246 기타 : 39	10%
조선노동당 4차대회 (1961년 9월 11 - 18일)	1,311,563	65,000	(1,657)→ (3명불참) 노동자 : 944 농민 : 451 사무원 : 191 기타 : 71	12.2%
조선노동당 5차대회 (1970년 11월 2 - 13일)	1,600,000	12,000	(1,734) 137 *	13%
조선노동당 6차대회 (1980년 10월 10 - 14일)	2,000,000 (3,000,000)	200,000 (300,000)	(3,220) 158 *	17%
1988년 현재	2,500,000(3)			

2) 朝鮮勞動黨의 組織과 權力構造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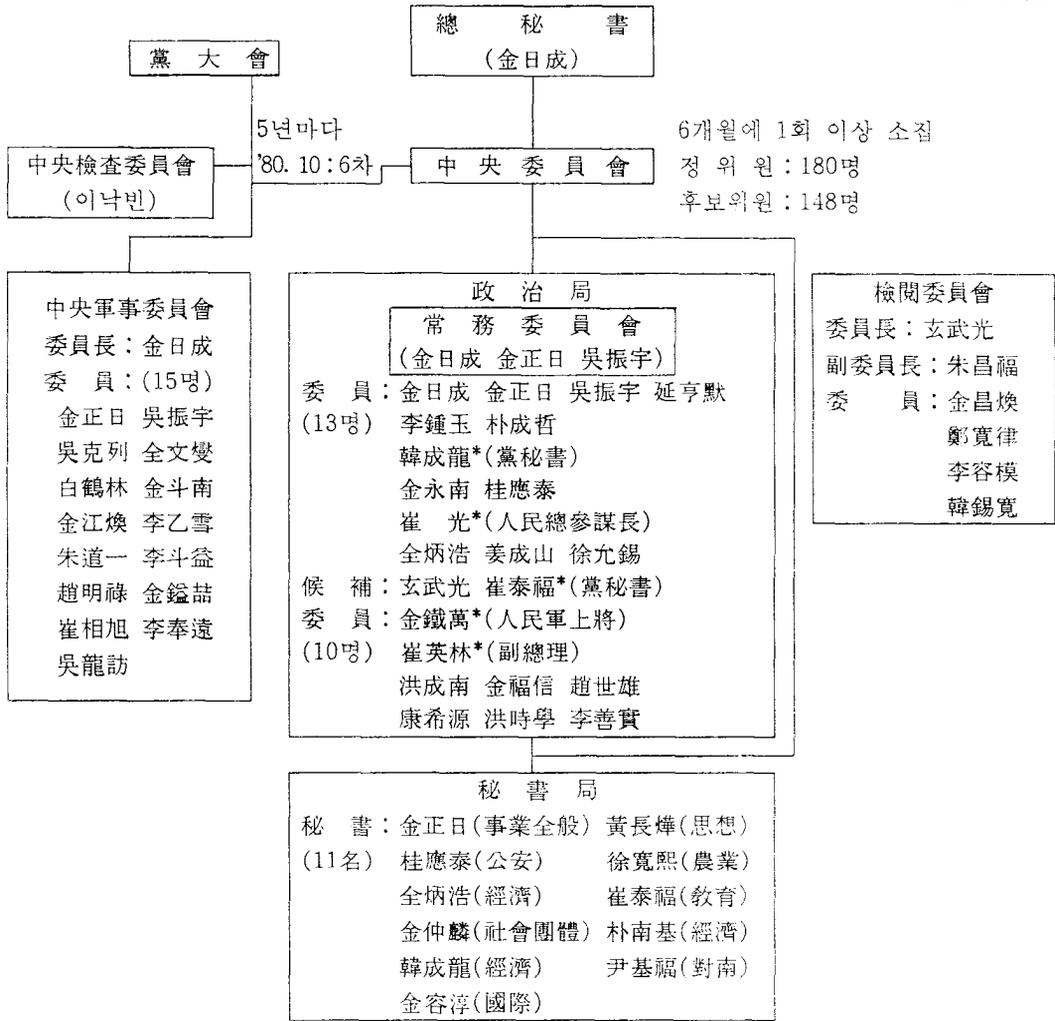
91년 현재 북한노동당의 기구표 및 그 핵심적인 권력엘리트의 구성을 도표화해 보면 <표3>과 같다.<sup>19)</sup>

그리고 최근의 노동당내의 핵심적인 권력엘리트의 성격변화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9) 이하의 분석에서 \* 표시가 있는 도표는 양성철의 『북한정치론』(앞의 책)에서 분석한 일차자료를 재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선택이나 분석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재해석하였다.

〈표3〉 북한노동당의 기구표 및 권력엘리트\*

(\*은 선임)



27個 專門部署

組織指導部 ( )	宣傳煽動部 (金基南)	國際部 (金容淳)	軍事部 (金江煥)	統一戰線部 (尹基福)	社會文化部 (李昌善)	作戰部 (林好君)
總務部 ( )	幹部部 (金國泰)	民防衛部 (吳克列)	經濟企劃部 ( )	重工業部 (朴南基)	輕工業部 ( )	財政經理部 (盧明根)
科學教育部 (朴松奉)	保健部 ( )	文化藝術部 (李相泰)	青年團體部 (張成澤)	農業部 (徐寬熙)	機械工業部 ( )	計劃財政部 ( )
化學部 ( )	建設運輸部 ( )	勤勞團體部 ( )	行政部 (金時學)	3大革命小組部 ( )	對外情報調查部 (李容赫)	

道(直轄市)黨委員會 責任秘書

平壤市	開城市	南浦市	咸南	咸北	平南	平北	黃南	黃北	慈江	兩江	江原
崔文善	金基善	朴勝日	玄哲奎	姜成山	徐允錫	金學奉	白範守	康賢洙	李奉吉	廉起淳	林亨九

3) 黨中央委員會

중앙위원의 교육수준을 보면 소련 유학생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일본과 중국유학생과 국내 중앙대학교, 김일성대학, 군관학교의 순이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련유학과 특히 모스크바대학 출신이 많다는 사실이다. 모스크바 유학파로 알려진 6차 당대회 중앙당위원 7명은 김영남, 김희련, 서관희, 원동구, 이찬선, 정준기, 허담 등이다. 이 밖에 소련유학파로는 계응태, 김일, 양형섭, 윤기복, 이원범, 전창철, 천세봉, 황장업등이다. 이러한 중앙위원의 교육적 배경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노선으로 인하여 소련의 정치, 군사적 간섭의 여지가 최소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사회주의 종주국가로서의 소련과의 경제적 원조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던 근거를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蘇聯사태로 인해서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중국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권력엘리트의 학력별 배경은 중국유학파나 중국과의 유대관계가 강한 인사가 대거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조일수교협상등으로 인하여 일본 유학파의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서 커질 전망이다. 한편 당중앙위원의 소속별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5 참조>

<표4> 당중앙위원 교육별 분류 \*

( )는 %임

교육학교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합 계
모 스킨 바 대	2 (11)	3 (12)	3 (7)	2 (8)	8 (24)	7 (24)	25
레 닌 그 라 드 대	1 (5.5)						1
타 시 켄 트 대	1 (5.5)	1 (4)	1 (2)	2 (8)	2 (6)	1 (3)	8
기 타	1 (5.5)		7 (16)	6 (23)	7 (21)	8 (28)	29
소 련 유 학 (합)	5 (28)	4 (16)	11 (25)	10 (38)	17 (52)	16 (55)	63
동 경 대				1 (4)	1 (3)		2
명 치 대		1 (4)	1 (2)	1 (4)	1 (3)	1 (3)	5
경 도 대							
기 타	2 (11)	2 (8)	2 (4)	2 (8)	3 (9)	3 (10)	14
일 본 유 학 (합)	2 (11)	3 (12)	3 (7)	4 (15)	5 (15)	4 (14)	21
하 르 빈 대			1 (2)	1 (4)		1 (3)	3
인 민 경 제 대							
기 타	2 (5.5)	1 (4)	12 (27)	1 (4)			16
중 국 유 학 (합)	2 (5.5)	1 (4)	13 (29)	2 (8)		1 (3)	19
경 성 대			1 (2)	1 (4)	1 (3)		3
김 일 성 대						2 (7)	2
중 당 당 학 교				1 (4)	3 (9)	2 (7)	6
군 관 학 교	1 (5.5)	4 (16)	5 (11)	3 (12)	2 (6)		15
전 문 학 교	3 (17)	5 (20)	1 (2)		1 (3)		10
중 졸	2 (11)	2 (8)	2 (4)	4 (15)	2 (6)	2 (7)	14
고 졸	3 (17)	4 (16)	4 (9)	1 (4)	1 (3)		13
대 졸		2 (8)	4 (9)		1 (3)	1 (3)	8
자 료 유	18 (43)	25 (38)	44 (63)	26 (31)	33 (28)	29 (29)	33.5%
총 합	42	66	70	83	118	144	523

〈표5〉 당중앙위원 소속별 분류 \*

( )는 %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합 계
노동당중앙위	29(100)	51(96)	62(94)	79(100)	115(100)	143(100)	470
군 출 신	3 (10)	11(21)	12(18)	23 (29)	26 (23)	37 (26)	112
정 무 원	18 (62)	29(55)	32(48)	48 (61)	54 (47)	65 (45)	246
군 당 정	2 (7)	7(13)	6 (9)	16 (20)	12 (10)	11 (8)	54
군 당	1 (3)	3 (6)	5 (7)	7 (9)	15 (13)	29 (20)	60
군 정		1 (2)					1
당 정 (정 당)	17 (59)	20(38)	24(36)	33 (42)	40 (35)	55 (38)	189
당	9 (31)	20(38)	27(41)	23 (29)	45 (39)	49 (34)	173
집		2 (4)	2 (3)				4
군			1 (2)				1
자 료 유	29 (69)	53(80)	66(94)	79 (95)	115 (97)	143 (99)	92.7%
총 합	42	66	70	83	118	144	523

한편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중앙위원 가운데 軍출신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당과 정무원에 동시 소속된 의원들도 1/3이 훨씬 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여타 조직에서 軍출신의 정치참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달리 중앙위원에서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사실은 핵심적인 당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중앙위원과 같은 요직은 아직도 기존의 軍출신등 핵심 당관료가 장악하면서 제한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한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정통사회주의국가 일반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의 절대적 우위속에서 軍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무장력을 지닌 軍이 자칫 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국가적 지도력이 마비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軍내부의 김정일 반대세력의 가능성이나 軍부 자체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일반적인 현상인 '軍에 대한 黨의 絶對的 優位'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더욱이 북한처럼 '수령과 노동당의 전일적 지도'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당중앙위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당중앙위원 직업별 분류 \*

( )는 %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합 계
노동자	1 (5)	2 (6)	3 (8)	1 (2)	1 (2)		8
관리직	1 (5)	1 (3)	1 (3)	3 (5)	3 (5)	9(14)	18
교육	1 (5)	5(16)	4(11)	2(4)		2 (3)	14
교수	1 (5)		1 (3)		4 (7)	10(15)	16
외교관	2 (9)	2 (6)	3 (8)	13(24)	8(14)	19(14)	47
언론인	1 (5)	2 (6)		1 (2)	1 (2)	2 (3)	7
작가	1 (5)	1 (3)	1 (3)	1 (2)	1 (2)	2 (3)	7
예술인					1 (2)	1 (2)	2
체육인		2	2	1 (2)			5
차익운동			1 (3)	1 (2)	5 (9)	2 (3)	9
독립운동	6(27)	6(19)	9(26)	5 (9)	1 (2)	2 (3)	29
농민운동	2 (9)	2 (6)	2 (6)		1 (2)	2 (3)	9
노동운동	1 (5)	1 (3)	1 (3)	1 (2)			4
유격대	4(18)	7(22)	9(26)	25(46)	30(52)	25(33)	100
종교인					1 (2)		1
연구원							
팔로군	1 (5)	3 (9)					4
자료유	22(52)	32(48)	35(50)	54(65)	57(48)	76(46)	50.9%
총 합	42	66	70	83	118	144	523

523명 가운데 절반인 266명(50.9%)의 직업배경이 밝혀졌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보면 항일유격대 출신이 가장 많고, 노동자, 농민 출신은 오히려 그렇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이른바 직업인, 지식계급출신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것이 특징적이다. 6차 당대회 중앙위원의 경우 유격대 출신, 공산주의운동이나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을 한 인물을 모두 합해도 총 144명 가운데 직업배경이 밝혀진 76명 가운데 31명(47%)이고 관리직, 교육계, 외교관, 작가 등은 45명(53%)을 차지한다.

이는 최근 고트바흐프에 의해서 해체명령이 내려진 소련공산당의 계급별 구성을 보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소련 역시 지식인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간의 분화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문기술관료 등 지식인텔리계층이 상당수 배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내의 정치세력의 출신성분, 혹은 파벌분류틀 보면 1차당대회까지만 해도 연안파가 우세하였고, 한동안 각 정치세력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다가 4차 당대회에 이르면 소위 '김일성중심의 갑산파'가 체계모니적 지도그룹으로 등장한다.<표7>참조

〈표7〉 당중앙위원 파벌분류 \*

( )는 %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합 계
김 일 성 (K)	6(21)	12(23)	12(27)	24(77)	18(78)	16(94)	88
소 련 파 (S)	6(21)	13(25)	8(18)	1 (3)	1 (4)	1 (6)	30
남 로 파 (D)	6(21)	9(18)	9 (2)	3(10)	3(13)		30
연 안 파 (Y)	11(38)	13(25)	14(31)	2 (6)			40
김 일 성 파 기 술 관 료		4 (8)	2 (4)	1 (3)	1 (4)		
차 료 유	29(69)	51(77)	45(64)	31(37)	23(19)	17(12)	(37.5)
총 합	42	66	70	83	118	144	523

6차 당대회에서 갑산파로 분리될 수 있는 인물을 보면 김일(사망) 김정일, 박성철, 박영순(사망), 오진우, 이근모, 이종욱, 임계철, 임춘추(사망), 전문섭, 정동철, 최광, 최용진, 최인덕, 황순희 등으로 거의 일제시대에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혁명1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소련파'로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학세로서 72년부터 중앙재판소장을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권력의 핵심요직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72년 주석제의 도입과 동시에 김일성의 유일한 영도체계가 완성되어 어떠한 정치세력도 '批判的 政治勢力'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잃게 되었다.

한편 당중앙위원 가운데 女性委員의 비율을 보면 6차당대회에서는 3%이고 그 전후 당대회도 3%-7%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여성위원보다도 그 정치적 위상이 중요하다. 특히 6차 당대회의 경우에는 허정숙, 황순희 등과는 달리 당 중앙위 연락부장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까지 급부상한 60대의 정경희의 등장이 주목된다. 또하나 특기할 사실은 북한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정치위원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여성총일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 박정애라는 점이다.

그리고 〈표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당 중앙위원장, 총비서, 부위원장, 비서의 면면을 보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인물은 이상의 13정도인데(생존자에 국한), 이 중에서 6차당대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물은 김일성과 김중틴뿐이다.

<표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 총비서, 부위원장, 비서

당 내 회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金東奎(1915- )					비서(5)	
金科奉(1890-?)	위원장	위원장				
金一(1912-1984)				부위원장(2)	비서(2)	
*金日成(1912- )	부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장	위원장	총비서	총비서
*金正日(1942- )						비서(1)
*金永南						비서(3)
*金英柱(1922- )					비서(3)	
*金仲麟					비서(6)	비서(2)
金昌滿(1907-死)			부위원장(5)	부위원장(4)		
*金 洙						비서(4)
朴金喆(1912-?)			부위원장(3)	부위원장(3)		
*朴孝東						비서(9)
*朴正愛(1907- )			부위원장(2)			
*楊亨燮					비서(9)	
*延亨默(1925- )						비서(5)
*吳振宇(1910- )					비서(4)	
*尹基福(1926- )						비서(6)
李孝淳(1896-?)				부위원장(5)		
鄭一龍(1902- )			부위원장(4)			
朱寧河	부위원장(2)					
崔庸健(1900~1976)			부위원장(1)	부위원장(1)	비서(1)	
韓益洙(1918~1978)					비서(7)	
玄武光(1913- )					비서(8)	
洪時學						비서(7)
*黃長燁						비서(8)

\*생존자

#괄호 안의 숫자는 서열

이중에서 6회를 연임한 사람은 김일과 김일성뿐이다. 그리고 박정애가 4회를 연임했으며, 2회이상 연임자는 15명으로 파악되나 이중 김중린, 오진우, 박성철, 서철, 이종욱 등 북한의 정치원로들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용건, 김창만, 박금철, 김두봉등이 연임을 하였을 정도이다.

#### 4) 政治局 常務委員會

'80년 10월 설치당시에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김정일의 서열은 혁명세대들인 오진우 다음인 4위였다. 그 이후 1981년 10월에 개최된 사회주의 노동청년 7차대회에서부터 김정일이 김일성 다음의 순위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그리고는 83년 9월(9.9절 행사)에는 이종욱의 탈락이 확인되었으며, 84년 3월에 김일의 사망으로 상무위원회의 성원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 3인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현재 북한의 권력층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계속적으로 2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어 이후 '김정일애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보다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신설 자체가 '수령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당의 책임자로 그의 역할을 제고시키자'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무위원회에서 오진우만이 계속 유임되고 있는 것은 그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는데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군부의 핵심적인 인물인 오진우와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강고한 결합은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김주석이외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두 사람이 장기간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만을 보더라도 적어도 북한내 권력층의 반발가능성 특히 군부의 이탈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은 속단이기도 쉽다.

따라서 7차당대회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사항(1980-1991)을 보면 <표9>와 같다.

<표9>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사항

1980. 10. (6차당대회)	1981. 10. (사로청 7차대회)	1983. 9. (9. 9절 행사)	1984. 3. (김일 사망 후~현재)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정 일
오 진 우	김 일	김 일	오 진 우
김 정 일	오 진 우	오 진 우	
이 종 옥	이 종 옥		
5명	5명	4명	3명

## 5) 政治局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은 종래의 정치위원회를 개칭한 것으로 정회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항일무장투쟁세력들이 상당수 사망함으로써 정치국에서 차지하는 혁명1세대의 비율이 53%에서 33%로 저하되었으며, 현재는 김일성, 오진우, 박성철, 서철, 최광 등 5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사람중에서 주요한 인물을 보면 최 현(82년 4월) 오백봉(84년 3월) 임춘추(88년 4월) 등이다. 80년 이후 정치국 정위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표10>과 같다.

&lt;표10&gt; 정치국 정위원 변동사항

1980. 10.	1984. 2.	1986. 12.	1990. 12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성
김 일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정 일
오 진 우	김 일	오 진 우	오 진 우
김 정 일	오 진 우	강 성 산	이 종 옥
이 종 옥	박 성 철	박 성 철	박 성 철
박 성 철	임 춘 추	임 춘 추	서 철
최 현	이 종 옥	이 종 옥	연 형 목
임 춘 추	강 성 산	서 철	김 영 남
서 철	서 철	김 영 남	최 광
오 백 용	허 담	허 담	계 응 태
김 중 린	김 영 남	연 형 목	한 성 룡
김 영 남	연 형 목	오 극 렬	허 담(사망)
전 문 섭	오 백 용	전 문 섭	전 병 호
김 환	오 극 렬	최 영 립	강 성 산
연 형 목	전 문 섭	백 학 립	서 윤 석
오 극 렬	김 환	서 윤 석	
계 응 태	백 학 립	이 근 보	
강 성 산	최 영 립	홍 성 남	
백 학 립	서 윤 석		
19명	19명	18명	18명

탈락위원 5명중 백학림, 김환등은 정무원의 책임자로 이동이 되었고, 대남공작 책임자였던 김중린은 83년 10월 버마 맹군사건을 계기로 그 자리를 허담과 교체한 바 있으며 그 후 당비서로서 재기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오극렬은 총참모총장에서의 해임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이들은 정치국 정회원에서는 탈락했으나 권력의 핵심권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6차 당대회이후 계속 유입되고 있는 10명(그 중에서 계응태는 일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다가 재기용됨)은 명실공히 당의 중핵멤버라고 볼 수 있으며, 권력의 핵심부서를 겸직하고 있다.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박성철, 이종옥, 서철, 연형목, 김영남, 계응태, 강성산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신진인물 5명중 서윤석, 허담, 최광은 후보위원중에서 정회원으로 기용되었고, 전병호는 6차당대회후 후보위원으로 기용되었다가 정회원으로 승진, 한성룡은 90년 5월 23일에 개최된 바 있는 당6기 18차 전원회의에서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표11〉 정치국 후보위원 변동사항

1980. 10.	1984. 2.	1986. 12.	1990. 12
허 담	현 무 광	김 중 린	현 무 광
윤 기 복	전 병 호	전 병 호	최 태 복
최 광	공 진 태	조 세 응	김 철 만
조 세 응	최 광	김 복 신	최 영 립
최 재 우	김 두 남	현 무 광	홍 성 남
공 진 태	정 경 회	이 근 모	김 복 신
김 철 만	계 응 태	계 응 태	강 회 원
정 경 회	이 근 모	강 회 원	조 세 응
최 영 립	조 세 응	김 두 남	홍 시 학
서 윤 석	강 회 원	정 경 회	이 선 실
이 근 모	김 강 환	최 광	
현 무 광	이 선 실	김 강 환	
김 강 환	홍 성 남	홍 시 학	
이 선 실	안 승 학	홍 성 남	
정 준 기	김 중 린		
	홍 성 룡		
	김 복 신		
15명	17명	14명	10명

이러한 정치국의 변동사항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군부의 비중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6차 당대회시에는 19명중 군부가 7명으로서 당 및 기술관료 6명보다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으나, 오늘에 있어서는 15명중 군부가 2명(오진우, 최광)에 불과하다. 그 대신 당관료와 기술관료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

또한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보위원의 유입은 5명(33%) 신진 5명(33%) 탈락은 7명(47%) 그리고 정위원으로의 승진이 3명(20%)이다. 즉 유입보다 탈락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시 권력엘리트의 순환이 제도적인 메카니즘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지위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 성과에 따라 점차 중심적인 권력을 맡게되는 '북한식 권력층원의 방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후보위원들의 구성에는 군부가 1명이고 나머지는 경제, 기술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탈락된 후보위원들중 윤기복은 당비서, 공진태는 인민봉사위원회 위원장, 정준기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강환은 당군사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6차 당대회이후 계속 유입되고 있는 후보는 현무광, 김철만, 최영립, 조세응, 이선실 등인데, 그 중 김철만은 국방위 위원, 최영립은 정무원 부총리, 조세응은 중앙인민위

원 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신진 후보위원들 가운데 최 태복은 당비서국 비서, 그리고 홍성남, 김복신, 강희원, 홍시학은 정무원 부총리를 맡고 있다.

6) 秘書局

1966년까지 위원장제였던 것을 비서제로 바꾼 것이다. 6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이 김정일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정일과 황장엽만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김중린과 윤기복이 일시 탈락되었다가 다시 기용되었다.

이들중 정치국의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비서가 김정일, 계응태, 한성룡, 전병호, 최태복(후보위원) 등 5명이나 된다. 따라서 비서국은 당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권력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 기용된 비서에는 계응태, 한성룡, 전병호, 최태복, 박남기, 서관희, 허정숙, 김용순이며 탈락된 비서는 김영남, 김환, 연형묵, 홍시학, 박수동등인데, 이들은 정무원 총리 또는 부총리, 농업근로자동맹위원장직으로 전보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지위로 부터의 탈락이 반드시 권력 투쟁에서의 패배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위간의 수평적 이동이나 수직적 이동이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치국 성원은 6차 당대회이후 그 수가 축소된 반면, 비서국은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비서국은 6차당대회시부터 빨치산세대가 완전히 퇴진 되게 되었는데, 이는 김정일비서에 의한 당의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비서국 성원들의 변동사항은 <표12>와 같다.

<표12> 비서국 변동사항

1980. 10.	1984. 2.	1986. 12.	1990. 12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중 린	허 담	허 담	계 응 태
김 영 남	현 무 광	김 환	한 성 룡
김 환	황 장 엽	황 장 엽	전 병 호
연 형 묵	허 정 숙	이 근 모	최 태 복
윤 기 복	서 관 희	계 응 태	박 남 기
홍 시 학	채 희 정	허 정 숙	서 관 희
황 장 엽	안 승 학	서 관 희	황 장 엽
박 수 동	김 용 순	채 희 정	김 중 린
	연 형 묵	박 남 기	허 정 숙
			윤 기 복
			김 용 순
9명	10명	10명	12명

### 3. 國家機構의 性格과 權力엘리트의 性格變化

#### 1) 社會主義憲法과 國家機構의 體系化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의 채택으로 제정된 이래 5차에 걸쳐 부분개정되었으며, 1972년 12월 28일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 기구별 관계를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의 정상기구로서 내각 및 재판기관을 구성하며,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60조) 또한 지방주권기관인 각급인민위원회는 내각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국가기구별 관계는 북한의 통치구조가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임을 말해준다.

1948년 헌법과 이에 따른 국가기구체계는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5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을 하게 되는데 1962년까지도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성격이 1948년 국가수립당시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북한의 국가기구는 보다 분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기구별 관계의 전차적인 변화를 시사해 주고 있다. 즉 2차개정에서 보여지듯 기존의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와 그 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도 분리됨으로써 지방기구의 분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3차 개정에서 내각을 지시기관에서 명령기관으로 변경한 점과 5차 개정에서 내각의 구성에 관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삭제한 것 등은 국가기구체계내에서 최고인민위원회에 대한 내각의 상대적 독립성과 지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5차 개정 시기인 1962년은 이미 내각 수상 김일성이 조선노동당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내 단일지도체제가 형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내각의 지위 강화는 당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에 있어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체계에 있어 신헌법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단일권력구조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의 권한을 신설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배분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석이 지도·통제하는 체계를 이룬다. 또한 종래의 내각은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바뀌었고, 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는 중앙재판소로 바꾸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지휘·감독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당의 지위와 당에 의한 국가기구의 지도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당 우위의 黨-國家體制의 制度化이며, 다른한편 주권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면에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제도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 2) 最高人民會議의 權力엘리트 構造分析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평등, 직접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1948년 헌법에 규정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37조)

-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 (2) 국내 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수립
-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 (4) 내각의 조직
- (5) 법령채택 및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의 승인
-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 (7) 국가예산의 승인
- (8) 도·시·군·면·리구역의 신설 및 변경
- (9) 대사권의 행사
- (10) 최고재판소 선거
- (11) 감사총장임명

그러나 이러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1972년 신헌법이 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되는데, 기존 헌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 내각조직권, 대사권 및 행정구역 개편권등이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에 이관되었다. 권한의 이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더욱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구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중 법령 및 법령의 공포권, 특사권, 조약비준과 폐기권, 그리고 외국사신의 신임 및 해임권 등이 국가주석에게 이관되었고, 훈장 또는 명예칭호 수여권, 대사와 공사의 임명·소환권 등은 중앙인민위원회에 이관되었다.

이와같이 구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신헌법에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로 대폭 이양된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헌법상 지위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권력 행사에 있어서 약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위와같은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기벌대의원의 구성을 정당 및 사회단체별, 사회계층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40여년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되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권력의 구조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sup>20</sup> 최고인민회의의 기구표(90.5.24일 현재)를 보면 <표12>와 같다.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의 몇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초기(1기와 2기)에는 100% 투표에 100% 찬성율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62년 3기대회부터는 인

20) 기벌대의원의 정당별, 사회성분별, 연령별 구성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274-277.

구 3만명당 1인 대의원으로 대의원 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세째 대의원의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기간보다 장기간 보장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기간동안의 1기는 9년, 그 뒤도 8기까지는 4년 임기인데도 평균 5년 임기를 채운 것이다.

<표12> 최고인민회의 기구표\*

(1990. 5. 24 현재 : 제9기1차회의)(\*은 신입, 신설)



#1: 91. 4 이문호로 교체

이러한 특징적 성격은 헌법상 예외조항이 있어 그 임기와 선거시기가 연장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 헌법상의 시기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일단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도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약한 결정체'이고 특별한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없는 경우 그 법규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이슈중의 하나가 '사회주의적 법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단일후보에 100% 투표, 100% 지지라는 기존의 선거의 일반적 정향 역시 사회주의국가의 특수한 내적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인민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의 폭과 참여의 수준, 그리고 기존의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사회주의적 틀속에서도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표13>

<표13>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개요 \*

기번	선거일	대의원수	투표율/천성률	임 기 (실제존속기간)	비 고
1	1948. 8. 25	572 (360+212)	99.97/98.49	3(9년)	인구 5만 명당 1인(조직된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 포함, 흑백합 투표)
2	1957. 8. 27	215	99.99/99.92	4(5년 2개월)	흑백합 투표
3	1962. 10. 8	383	100/100	4(5년 1개월)	인구 3만 명당 1인 단일합 투표
4	1967. 11. 25	457	100/100	4(5년 1개월)	"
5	1972. 12. 12	541	100/100	4(5년)	"
6	1977. 11. 11	579	100/100	4(4년 3개월)	"
7	1982. 2. 28	615	100/100	4(4년 3개월)	"
8	1986. 11. 2	635	100/100	4(3년 5개월)	"
9	1990. 4. 22	687	99.78/100	4	"

출처 : 「북한개요」(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6), p. 49 ; 「북한개요」(서울 : 국토통일원, 1979), p. 35 등에서 필자가 재구성함. 9기 자료는 「로동신문」, 1990년 4월 20일자, 4월 24일자를 기초로 함.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91년 4월 22일 실시된 제9기 선거에서는 지난 날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만료되기전에 대의원을 해산하고 100%투표율관행을 깨트린 것이다. 이는 북한의 선거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상의 문제점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수용한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제7기(82년 4월) 제8기(86년 12월) 제9

기(90년 5월)등 3차에 걸쳐 새로 구성되었으며, 의원과 함께 의장, 부의장, 사무장 등의 인물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의 간부에는 혁명1세대가 한 명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치구조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표 14>참조

<표1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 명단

구분 \ 시기	7기 1차 (82. 4.)	8기 1차 (86. 12)	9기 1차 (90. 5.)
의 장	황 장 업	양 형 섭	양 형 섭
부 의 장	허 정 숙	손 성 필	여 연 구
	홍 기 문	여 연 구	백 인 준
사 무 장	김 이 훈	김 봉 주	김 경 봉

동시에 1기에서 8기까지의 대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동당원이거나 노동당 중앙위원의 지위를 맡고 있다. 그리고 다수는 정무원출신, 군출신이 다수 검직하고 있다. 8기의 경우 소속이 밝혀진 대의원 가운데(총 655명의 대의원 중)자료가 밝혀진 204명중 199명이 노동당 중앙위원이며, 정무원을 검직한 인물이 99명, 군출신 40명, 군, 당, 정 3부 검직자가 9명, 군과 당 검직자가 25명이고 당과 정무원 동시에 소속된 대의원 수도 76명,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정무원에 속하지 않은 대의원은 89명이다.<표15>참조

<표15> 대의원 소속별 분류

( )는 %임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7 기	8 기	합 계
노동당	85(82)	83(80)	147(87)	149(84)	172(83)	202(88)	199(98)	1,037
군출신	11(10)	17(16)	32(19)	42(24)	39(19)	40(17)	40(20)	221
정무원	55(53)	59(57)	84(49)	96(54)	95(46)	107(47)	99(49)	595
군정당	5 (5)	11(11)	17(10)	20(11)	13 (6)	11(5)	9 (4)	86
군 당	1 (1)	4 (4)	15 (9)	16 (9)	23(11)	28(12)	25(12)	112
군 정	2 (2)	1 (1)		1	2 (1)			6
당 정	33(31)	33(32)	43(25)	54(31)	64(31)	70(30)	76(37)	373
당	45(43)	39(38)	72(42)	60(34)	70(34)	91(40)	89(44)	504
정	14(13)	14(13)	24(14)	21(12)	31(15)	23(10)	14 (7)	141
군	3 (3)	1 (1)		5 (3)	3 (1)	3 (1)	6 (3)	21
자료유	104(18)	103(48)	171(45)	176(39)	206(38)	228(37)	204(31)	1,192
총 합	572	215	383	457	541	615	655	3,438

이러한 대의원의 중복적인 역할수행은 黨政一致, 黨의 領導性 強化라는 차원에서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당, 정, 군의 일치속에 당의 정책을 비판, 견제하면서 대중들의 민주적 요구를 집약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중요한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실제 중국과 동구사회주의의 현실적 운용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직업별 공식분류<표16>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직업별 공식분류

( )는 %임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7 기	8 기	합 계
노동자 2 (3)	6 (7)	53(24)	43(19)	18 (7)	13 (6)	11 (6)	146
관리직 5 (8)	17(21)	52(24)	77(25)	96(40)	86(40)	66(25)	399
교육 7(11)	5 (6)	8 (4)	7 (3)	5 (2)	6 (3)	4 (2)	42
교수 6 (9)	9(11)	21(10)	13 (6)	33(14)	25(12)	23(12)	130
외교관 7(11)	6 (7)	21(10)	18 (8)	20 (8)	18 (9)	22(12)	112
언론인 2 (3)	2 (2)	3 (1)	2 (1)	9 (4)	8 (4)	7 (4)	33
작가 7(11)	5 (6)	4 (2)	2 (1)	2 (1)	3 (1)	5 (3)	28
예술인 3 (5)	2 (2)	1	4 (2)	3 (1)	3 (1)	6 (3)	22
체육인 1 (2)	1 (1)				1	1	4
차익운동 5 (8)	3 (4)	5 (2)	5 (2)	4 (2)	2 (1)	3 (1)	27
복합운동 8(13)	5 (6)	3 (1)	3 (1)	2 (1)	2 (1)		23
농민운동 2 (3)	1 (1)		1	2 (1)	1 (2)		7
노동운동 1 (2)	2 (2)		1	1			5
유격대 6 (9)	10(12)	41(19)	40(18)	30(12)	27(13)	22(12)	177
종교인 2 (3)	5 (6)	6 (3)	5 (2)	8 (3)	3 (1)	2 (1)	31
연구직	2 (2)	1	2 (1)	8 (3)	10 (5)	14 (7)	37
자료유 64(11)	81(38)	219(57)	223(49)	241(45)	209(34)	191(29)	35.7%
총 합 572	215	383	457	541	615	655	3,438

또한 <표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기에서 8기까지의 중복을 감안한 연인원 수를 보면 적어도 전직이 관리직인 대의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항일유격대 출신, 노동자, 교수순이다. 특히 전문직 출신(관리직, 교수, 외교관, 언론인, 작가, 예술인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노동당의 인텔리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黨員의 教育水準이 사회주의권의 일반적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력에 있어서도 대학졸업자가 7기에서는 50.4%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9기에 와서는 68.2%로 대폭 증가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당과 행정, 그리고 주요 국가기구 내의 권력엘리트의 지식수준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로동신문>의 한 논설에서 '인텔리들은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91년 9월 13일)이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성분구성에서도 몇가지 특징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노동자와 협동농장의 성분비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등 인텔리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7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서는 인텔리의 비율이 49.4%였는데 비해서 9기에 와서는 64.5%로 15%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역시 로동당의 인텔리정책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성분변화상황을 보면 <표17>과 같다.

<표1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성분변화상황(1982-1990)

내용 \ 시기	7기 (1982. 4.)	8기 (1986. 12)	9기 (1990. 5.)
대의원 수	615명	655명	687명
노동자	34.6%	36.4%	37.0%
협동농장원	10.2%	12.0%	10.4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49.4%	(미발표)	64.5%
기타	5.8%	5.8%	(미발표)
35세 이하	3.9%	2.7%	2.9%
36세~55세	71.2%	68.7%	56.8%
55세 이상	24.9%	28.6%	40.3%
대 줄	50.4%	56.7%	68.2%
전문줄	12.8%	19.1%	31.8%
중 줄	36.8%	24.2%	(중줄포함)
여 성	19.6%	21.1%	20.1%
비 고			※사회민주당 7.4% 친도교청우당 3.2% 무 소 속 1.9%

그러나 <표17>에서 나타나듯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연령은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7기 대의원 구성에서는 35세 이하가 3.9%인데 반해, 9기에 와서는 2.7%로 감소되었고 36세에서 55세까지의 대의원들도 71.2%에서 56.8%로 적었는데, 55세 이상의 대의원수는 24.9%에서 40.3%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중년화에서 고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연임자의 수자가 많아 혁명1세대의 인사가 아직까지 대의원으로 남아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별 분석은 아직도 전체적인 체제내적인 개혁이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점진적인 당영도하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의 연임을 1회 이상 한 대의원은 자료가 있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255명, 2회 연임한 대의원은 266명, 8회를 거친사람은 2명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기 부터 9기까지 계속 대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김주석 한 사람뿐이다. 이는 그의 지도적 위치를 다시금 확인케 하는 한 자료이기도 하다.

7기까지 연임한 사람은 김일성외에 강양육, 김일등이나 모두 사망했다. 5기를 연임한 사람은 9명이나 김일성, 김득만, 백남운을 제외하고는 역시 모두 사망했다. 또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최고인민회의 절대수가 1기 212명에서 9기에 이르면 687명으로 3배가 훨씬 넘었고 더구나 혁명1세대가 사망과 권력투쟁과정에서의 숙청등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져가고 세대교체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우당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당 출신이 7.4%, 천도교 청우당 출신이 3.2%, 그리고 무소속이 1.9%를 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종래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 출신이 극소수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제 9기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소속이 1.9%인 13명이나 선출된 것이다. <표18> 참조.

이는 정책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걸과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중심적 내용으로서 다당제의 보장과 각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결성등이 요구되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추세에서 북한 역시 이러한 '사회민주적 요구'를 북한의 정치체제속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다당제의 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인민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각 대중단체나 정치세력—그것이 당적 수준이든 그렇지 않든—이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냐 하는 '민주적 요구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볼 때 그 개혁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천안문사태가 일어났던 중국사회주의도 정치협상회의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나 대중들의 '사회민주적 요구'의 수준은 드 높았고 결국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표출된 사례를 보더라도 이후 북한사회주의의 정치개혁은 보다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특징은 <표18>에도 나타나듯이 대의원에서 女性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대의원 중 연인원 3438명 가운데 적어도 남자가 2,952명, 여자는 486명으로 평균 14.1%가 된다. 이는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여성 비율보다도 오히려 높은 여성의 참여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박정애(1907-)의 경우 노동당 중앙위원을 역임하고 13명의 상임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위원이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옥순(현 군참모장인 최광의 부인)이 중앙위원이며, 김성애(김일성의 부인)와 정경희등이 있다. 그 밖에 김득만, 허정숙(허현의 장녀) 러연구(러운형의 딸)등이 있으며 특히 러연구씨는 제7기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부의장직을 맡았고 8기와 9기에서도 계속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높은 참여는 사회주의 일반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남성의 역할과 정치적 지위만큼 그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가는 현재의 자료로서 평가하기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본 최고인민회의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표를 정리해 보면 <표18>과 같다.

3) 國家主席 및 副主席

국가주석제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신설된 국가기구이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새 주석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그리고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 수령을 가장 높이 추대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

<표1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종합분석 평가표 \*

회 기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6 기	7기*	8기*	9기*	비 고	
합계 대의원수	572	215	383	457	541	579	615	655	687		
출신	노동자(1)	120	84	215	292	347	218	213	238	254	
	농민(2)	194	68	62	70	72	64	63	79	71	
	사무원(3)	152	60	101	95	122	267	339	338	362	
연령	기타	106	3	5							
	20 - 30	73	5	12				24	18	20	35세 이하
	31 - 40	223	34	99	64	96	32	438	450	390	36 - 55세
	41 - 50	174	99	181	220	280	457	153	187	277	56세 이상
	51 - 60	77	51	71	136	126	90				
	61 - 70	21	23	20	37	39					
70 이상	4										
교육	초 등	198	95					226	159	218	중학교등학교
	중 등	147	43	256	200	101	176	79	125		전문학교
	대 학	227	60	127	257	323	403	310	371	469	
	대 학 원		17			117					
성별	남	503	188	348	384	428	459	491	517	519	
	여	69	27	35	73	113	120	121	138	138	

자료출처 : Dae-Sook Suh, 위의 책, p.442 ; 『북한전사 1945 - 1980』(서울 : 통일문제 연구소, 1980), 7 기 이후 및 기타 자료조사는 필자의 것임.

(1) 1 기는 노동자, 2 기부터 4 기까지 노동자대표, 5 기는 농민 출신대표, 6 기부터는 노동자로 칭함.

(2) 1 기부터 4 기는 농민대표, 5 기는 농민 출신대표, 6 기부터는 협동농장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함.

(3) 1 기는 사무원, 2 기 사무원-인텔리대표, 3 기, 4 기는 사무원-직사원대표, 5 기는 사무원 출신대표, 6 기부터는 사무원 구분이 빠짐.

\* 7 기부터 9 기는 대의원수가 아니고 비공민 발표되어 비율을 근거로 대의원수를 사정 오입기중으로 필자가 산출한 것임을 밝힘.

\* \* 여성의 경우 1 기부터 5 기까지는 숫자가 발표되었고 6 기부터 9 기까지는 비율만 발표되어 역산한 것임을 밝힘.

으로서 그것은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전반적인 혁명사업과 건설사업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우월한 국가정치제도"라고 한다. 즉 북한은 주식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가장 우월하고 독창적인 국가정치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주식제의 제도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식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의 대표자이다. 주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국가주식의 권한은 절대적인데, 우선 조직적으로 주식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정무원회의를 소집,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군사력의 최고사령관과, 동시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이는 주식이 국가권력 및 군사력의 유일적 지배자임을 의미한다. 또한 주식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을 공포하며 주식의 명령권, 특사권, 조약의 비준, 폐기권 및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의 접수권 등을 가진다.

특히 主席의 權限은 구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및 상설회의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은 것인데, 이는 주식제의 신설이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지도체제로의 전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을 지지만 주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될 뿐 소환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상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가 선거 혹은 소환할 경우에 주식의 제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국가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주식의 사업을 돕는다'고 규정된 부주석은 강양욱, 김일, 임춘추의 사망으로 오늘날에는 박성철과 이종욱 등 2명으로 되어있다. '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양욱, 김일, 박성철 등 3명이 있었는데, 강양욱의 사망(83년 1월)으로 임춘추가 기용되었다. 그후 김일이 사망(84년 3월)하고 이종욱이 정무원 총리에서 부주석으로 추대되었다. 그후 86년에 박성철, 임춘추, 이종욱이 선출되고 88년 임춘추의 사망으로 박성철과 이종욱 등 2명으로 되었는데 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9기 1차회의에서는 이들 2명이 다시 부주석으로 유입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한 48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상(48-72)과 주석(72-현재)자리를 계속 유지해 온 인물은 물론 김일성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수상을 지낸 사람은 23명이며 그 가운데 4차례나 부수상을 지낸 사람은 김일, 정준택은 사망했고, 3차례 부수상을 지낸 현존하는 인물은 이종욱뿐이다. 지금까지 부주석에는 김일성의 측근인물로서 혁명1세대의 동지들로 주로 구성되어 왔었다. 부주석의 명단은 <표20>참조

#### 4)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주석제와 함께 신설된 기관으로 그 지위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수위는 주석이다. 구성은 국가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사회주의헌법 103조)

- (1)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 (2) 사법.검찰기관의 사업지도
- (3) 정무원.지방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사업지도
-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 지도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가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
- (6) 정무원 각부의 신설.폐지
-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한 부총리, 각 부장 기타 정무원 성원의 임면
- (8) 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
- (9)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장령군사칭호 수여
- (10) 훈장.명예칭호.군사칭호.외교직급의 제정, 훈장.명예칭호의 수여
- (11) 대사의 실시
- (12) 행정구역의 신설.폐지
- (13)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중앙위원회가 가지는 위 권한들중 (1) (6) (7) (11) (12)는 종래의 최고인민회가 가지는 권한에서, (5) (8) (10)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3) (9)는 내각에서 각각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며, 여기에 사법.검찰기관 및 국방, 국가보위사업기관에 대한 지도권 등은 새로이 부여된 것인데, 이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입법.행정.사법의 3권 뿐만 아니라 軍權의 指導까지도 포함하는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수위가 주석이고, 주석의 직접 지도를 받으며 중앙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선출 및 소환을 주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석의 보조 혹은 자문기관으로 역할.기능하고 있다. 82년이래 중앙인민위원회의 역대 구성은 <표19>와 같다.

국가주석에 의해 직접 지도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와 같은 역대 위원들은 대부분이 조선노동당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인민위원회 설치의 근본목적이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노동당의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지도성 관철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성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창설 당시인 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5기 1차회의에서는 25명이었는데, 그후부터는 15명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7기까지는 거의가 정치국 위원 혹은 후보위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9기 1차회의에서는 정치국위원 및 후보위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대신 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들 모두가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인민위원회는 평양시, 직할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거리를 없애는 한편, 지방대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인 관료봉치로 인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지역수준의 이해와 참여가 부재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탈중앙화' '지역대중의 중앙정치 참여'라는 형태로 일종의 정치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표19〉 역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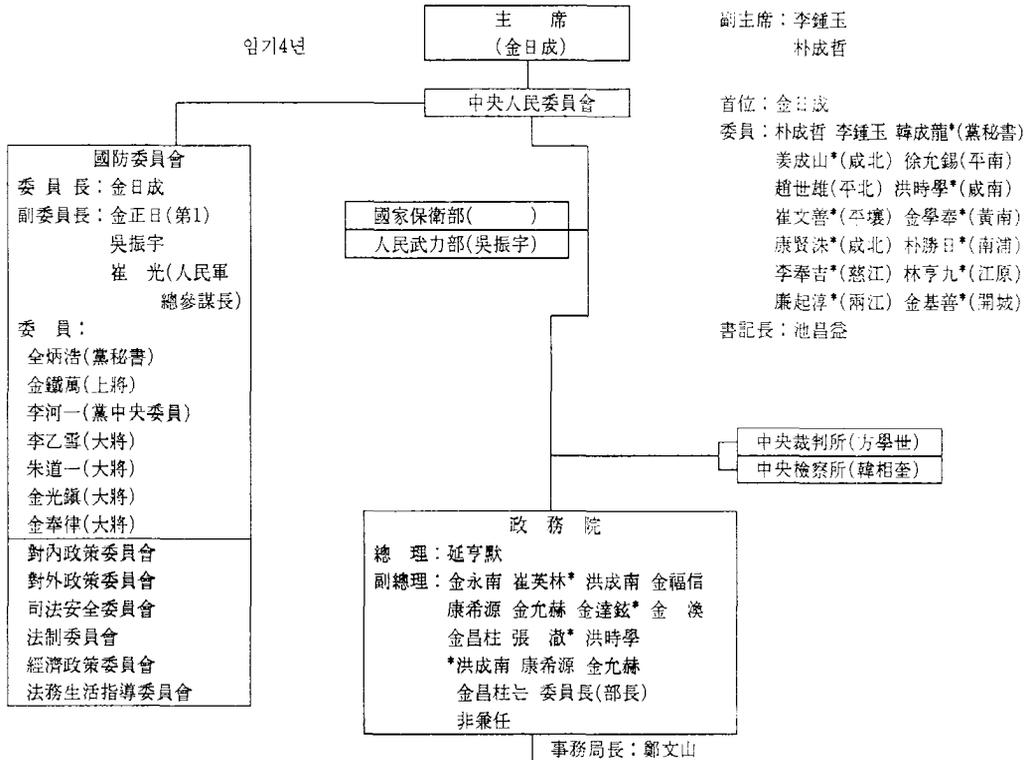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의 7기 1차회의('82. 4)	최고인민회의의 8기 1차회의('86. 12)	최고인민회의의 9기 1차회의('90. 5)
김일성(정치국위원)	김일성(정치국위원)	김일성(정치국위원)
김 일( // )	오진우( // )	박성철( // )
강양옥	박성철( // )	이종옥( // )
박성철(정치국위원)	임춘추( // )	한성룡( // )
최 현( // )	이종옥( // )	강성산( // )
이종옥( // )	이근모( // )	서윤석( // )
오진우( // )	홍성남( // )	조세웅(후 보 위 원)
임춘추( // )	서윤석( // )	홍시학( // )
서 철( // )	현무광(후 보 위 원)	최문선
김 환( // )	강희원( // )	김학봉
오백봉( // )	조세웅( // )	강현수
현무광(후 보 위 원)	윤기복	박승일
윤기복( // )	지창익( // )	임형구
이근모( // )	김병을	염기순
강희원( // )	백범수	김기순
		지창익
15명	15명	16명

수 있다. 따라서 정치구조 전반에서 페레스트로이카식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정의 분리, 검직현상의 축소, 지방정부의 정치참여 확장 등 제한적이거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리를 북한식대로 수용하고 있는 작은 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소련사태이후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각 주권공화국 대표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主權共和國 聯合'도 비록 기형적인 형태지만 각 자치공화국이나 지방정부의 권능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政務院

정무원은 舊헌법상의 내각이 바뀐 것으로 구헌법상 내각의 지위는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었으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정무원의 권한도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에 대부분이 이양되고 단순한 정책 집행권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총리는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표20〉 북한의 행정기구표 및 주요 권력엘리트\*  
 (1990. 5. 24 현재 : 최고인민위 제9기1차회의)(\*은 신입, 신설)



外交部 (金榮南)	社會安全部 (白學林)	國家計劃委員會 (崔英林*)	輕工業委員會 (金福信)	化學工業部 (金漢)
對外經濟委員會 (金達鉉)	國家檢閱委員會* (李勇武)	交通委員會 (李吉松)	電力工業委員會 (李智燦)	農業委員會 (金元鎮)
水產委員會 (崔福淵)	國家建設委員會 (金應相)	人民奉仕委員會 (孔鎮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李資方)	電子自動化委員會 (金昌虎)
金屬工業部 (崔萬鉉)	機械工業部 (桂亨淳)	鑛業部 (金弼煥)	石炭工業部 (石昌亨)	資源開發部 (金世炎)*
船舶工業部 (李爽)	建設部 (趙哲俊)	建材工業部 (朱英勳)	林業部 (金載律)	地方工業部 (김성구)
原子力工業部 (崔學根)	都市經營部 (李哲奉)	遞信部 (金學燮)	勞動行政部 (李載九)	財政部 (尹基貞)
教育委員會 (崔基龍)	文化藝術部 (張澈)	保健部 (李鍾律)	鐵道部 (朴容錫)	海運部* (吳成烈)*
貿易部 (金達鉉)	對外經濟事業部 (鄭松南)	商業部 (韓將根)	科學院 (金璟原)	國家體育委員會 (金俞順)

中央銀行總裁(정성택)\* 13委員會 25部 1院 → 14委員會 25部 1院  
 中央統計局(申景植)  
 中央資材總聯合商社(채규빈)  
 (\* 90년달 金學奎(平北), 玄哲奎(咸南), 白範守(黃南)으로 교체에 따라 91. 4. 12, 9기 2차 중앙인민위원회에서 洪時學(副總理), 趙世雄(당정치국후보위원)을 소환하고, 玄哲奎(咸南), 白範守(黃南) 선출)

최고인민회의에서 피선되거나 소환되며, 그 밖의 성원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따라서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기능한다. 이와 아울러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지며,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진다. 신헌법에 의거하여 현재 행정기구내의 주요한 권력엘리트의 구성을 보면 <표20>과 같다.

정무원 總理는 최고인민회의 7기 1차회의에서 이종욱이 6기(77년 12월)에 이어 재기용되었는데 84년에는 재1부총리였던 강성산이 총리로, 그리고 이종욱이 부주석으로 기용되었다. 86년 12월에 개좌된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에서는 이근모가 총리로 발탁되고 강성산은 탈락되었는데, 88년에는 언형목을 총리로 교체시켰다. (현재까지 유임) 현행법에 따른 북한의 행정기구표와 권력엘리트를 살펴보면 <표20>과 같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6기(77년 12월)부터 이종욱, 강성산, 이근모, 언형목등 경제관료들로 교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대중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오래전 부터 가져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동시에 당은 물론 정부기구내에서도 기술관료와 지식인의 역할이 새롭게 재평가됨은 물론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7기 내각부터 부총리를 계속 역임하고 있는 인물은 김창주, 김복신 등 2명뿐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새인물로 교체되었다. 그동안 정무원 부총리는 33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네 번 연임자는 정준기 한 사람이고, 세번 연임자는 홍성남, 공진태, 계응태, 강희원, 김복신, 김창주, 허담, 최재익 등 8명이다. (2회 연임자는 9명이며, 1회 부총리가운데 박성철이 3,4차 내각 부수상을, 이종욱은 2,3,4차 내각 부수상을 지낸 사람이다.) 하나 특기할 사항은 적어도 정부봉치권 차원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물은 홍성남, 강희원, 김복신, 김영남, 김윤혁, 김환, 최영택, 김달현, 장철 등 9명이다.

그 밖에 다섯차례나 내각 및 정무원에서 자리를 지켜 온 계형순, 오진우, 박용숙, 이지찬, 정송남, 김유순등이다. 이러한 자료분석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부총리급의 인사이동이 심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수행능력과 성공여부에 따라 그 지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부총리의 역할이 경제분야를 비롯한 국가의 실질적인 업무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라 할 때 북한 역시 여러가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통해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역대 내각 및 정무원의 구성(총리 및 부총리급)은 <표21>과 같다.

<표21> 정부원 총리 및 부총리 변동사항(주석 및 부주석 포함) \*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주석					(김일성) (72.12-77.12)	(김일성) (77.12-84.4)	(김일성) (82.4-86.12)	(김일성) (86.12-90.5)	(김일성) (90.5- )
부주석					최용건 (72.12-76.9) 강양욱 (72.12-77.12) 김동규 (74.11-77.12) 김 일** (76.4-81.35)	강양욱 (77.12-82.4) (박성철) (77.12-84.4) 김 일 (77.12-82.4)	김 일 (82.4-83.3) 강양욱 (82.4-83.15) 박성철 (82.4-86.12) 이종욱 (84.1-86.12) 임춘추 (83.4-84.15)	이종욱 (86.12-90.5) 박성철 (86.12-90.5) 김춘추 (86.12-88.4)	이종욱 (90.5- ) 박성철 (90.5- )
총리 (수상)	김일성 (48.9-57.9)	김일성 (57.9-62.10)	김일성 (62.10-67.12)	김일성 (67.12-72.12)	김 일 (72.2-76.4) (박성철) (76.4-77.12)	이종욱 (77.12-82.4)	이종욱 (82.1-84.11) 강성헌 (84.1-86.12)	이종욱 (86.12-88.12) 변승득 (88.12-90.5)	이종욱 (90.5- )
부총리 (부수상)	박희영 (48.9-53.3) 홍명희 (48.9-57.9) 허가익 (51.11-53.3) 최창익 (52.11-57.9) 정일용 (52.11-57.9) 최용건 (53.7-57.9) 박희환 (53.7-57.9) 박정우 (54.3-57.9) 김 일 (54.3-57.9)	김 일 (57.9-62.10) 박희환 (57.9-58.3) 홍명희 (57.9-62.10) 정일용 (57.9-62.10) 남 일 (57.9-62.10) 이주연 (58.3-62.10) 이종욱 (60.1-62.10)	김 일* (62.10-72.12) 정준택 (62.10-67.12) 정일용 (62.10-63.12) 이종욱 (62.10-67.12) 김경철 (62.10-67.12) 남 일 (62.10-67.12) 이주연 (62.10-67.12) 최용건 (61.7-67.12)	김 일* (67.12-72.12) 박성철 (67.12-72.12) 정준택 (67.12-72.12) 김관급 (67.12-72.12) 이종욱 (67.12-69.9) 김경철? (67.12-69.6) 남 일 (67.12-72.12) 이주연 (67.12-69.85) 최용건? (67.12-72.12) 김창현? (67.12-68.12)	박성철 (72.12-77.12) 정준택 (72.12-73.1) 김관급 (72.12-73.9) 최해우 (72.12-77.12) 남 일 (72.12-76.3) 홍원길 (72.12-76.5) 이근모 (73.9-77.12) 최 달 (73.2-77.12) 정준기 (73.9-77.12)	(계승태) (77.12-82.4) (학 담) (77.12-82.4) (강성환) (77.12-82.4) (정준기) (77.12-82.4) (공진태) (82.4-86.12) 김득형 (77.12-82.4) 공진태 (82.4-86.12) 최 달 (82.4-86.12) 노재희 (79.6-82.4) 노재희 (79.6-82.4)	강성헌 (82.4-84.11) 백승희 (82.4-86.12) 최 달 (82.4-86.12) 정준기 (82.4-86.12) 이종욱 (82.4-86.12) 최해우 (82.4-86.12) 김춘추 (82.4-86.12) 홍성환 (82.4-86.12)	김경남 (86.12-90.5) 김춘추 (86.12-90.5) 조영길 (86.12-90.5) 조영길 (86.12-90.5) 홍성환 (86.12-90.5) 김춘추 (86.12-90.5) 김경철 (86.12-90.5) 김춘추 (86.12-90.5) 김경철 (86.12-90.5) 김춘추 (86.12-90.5)	김경남 (90.5- ) 조영길 (90.5- ) 홍성환 (90.5- ) 김춘추 (90.5- ) 김경철 (90.5- ) 김춘추 (90.5- ) 김경철 (90.5- ) 김춘추 (90.5- ) 김경철 (90.5- ) 김춘추 (90.5- )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정준택 (54. 3-57. 9)		고 각? (66. 9-67. 3) (김철복) (66.10-67.12) (백성철) (66.11-67.12)	석 신? (68. 5-69.10) 김민금 (69. 7-72.12) 홍원길 (69. 7-72.12) (최세우) (70. 3-73.12)	(홍성남) (73. 9-75. 9) 김영주? (74. 2-77.12) (공진내) (75. 6-77.12) (이종옥) (76.12-77.12) (개응내) (76.12-77.12)	(최 령) (81. 3-82. 4) (홍시학) (82. 2-82. 4) (서권희) (80.10-82. 4) (김희일) (81. 9-82. 4) (홍성룡) (81.10-82. 4) 김경린? (80. 1-82. 4)	(김희일) (82. 4-86.12) (김두영)** (82. 4-86.12) (김복선) (82. 4-86.12) (김창주) (82. 4-86.12)		(양철) (90. 5- )

\*제 1 부수상직은 1959년 1월 20일 신설.  
 \*\*김일을 1976년 4월 제 1 부주식에 임명.  
 \*\*\*김두영은 1985년 9월 12일 사망.  
 ( )는 생존자.  
 ?는 행방 및 생존 미확인.

6) 地方國家機構

1972년 헌법을 근거로 각 지방국가기구의 조직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는 보통, 평등, 직접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도인민회의는 4년, 시, 군 인민회의는 2년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지방예산의 승인, 인민위원회 간부의 선거 및 소환, 재판소의 판사, 인민 참심원의 선거 및 소환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의 폐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으로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여 지시를 내리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또한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해당 지역내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그릇된 결정, 지시의 폐지와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끝으로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지방행정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장과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임명 . 해임되는 부위원장, 사무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행정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지방행정사업의 조직과 집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

관의 결정. 지시의 집행,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대책의 수립, 지방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대책의 수립,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하급 행정위원회의 지도 등이다. 또한 지방행정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당 책임비서의 명단을 살펴보면 <표22>과 같다.

<표22>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명단\*

平壤市	開城市	南浦市	咸南	咸北	平南	平北	黃南	黃北	慈江	兩江	江原
崔文善	金基善	朴勝日	玄哲奎	姜成山	徐允錫	金學奉	白範守	康賢洙	李奉吉	廉起淳	林亨九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8차 전원회의 개최(1990. 5. 23) 및 90년말 교체

### III. 社會主義圈 改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

#### 1. 社會主義圈 改革의 本質

사회주의권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을 포함한 개혁형 사회주의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개된 소련사태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위기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보다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위한 '스탈린주의의 철폐'를 외치고 등장한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정책의 시기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년동안에 진행된 일련의 혁명적 변화속에서 현상화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은 대략 다음의 몇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社會主義的 民主의 確立이다.

중국과 동구의 정치적 민주화시위, 다당제 도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폐기선언, 그리고 언론개방(글라스노스트)과 사회주의적 법치(法治)의 확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구권 선거에서 우파세력의 압승과 소련대중들이 보여 준 소련공산당에 대한 강한 거부감등은 현존 사회주의권 민중들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둘째 社會主義的 市場經濟의 確立이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구의 높은 외채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선상의 갈등이 그 예이며, 중국사태 발생이전에 중국공산당내에서 진행된 정책논쟁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소련내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옐친등의 급진개혁파의 경제정책도 '전면적인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셋째 社會主義的 自治와 民族主義의 問題이다.

민족문제 중 하나는 소련과 유고 등 연방국가내에서 어떻게 소수민족이 자율성을 누리면서 민족주의적 독립성을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사회주의국가내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국가간의 자주성의 문제로서 '사회주의종주국'이었던 소련과 동구권의 국가,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이다. 리투아니아 사태의 심각성이 전자의 예라면, 북한과 쿠바등이 독자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연방의 실질적인 해체를 목전에 둔 소련의 현실이나 전면전의 양상을 띄면서 심각한 민족분규를 겪고 있는 유고의 현실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 민족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마르크시즘의 在解析의 問題이다.

스탈린주의의 극복과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기치에 내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떻게 마르크시즘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권의 정치경제적 개혁이 이론적 변화와 재해석(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사상해방)을 동반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존 개혁이 '사회주의적'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로의 복귀'인가 하는 중요한 가늠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논쟁점에 대해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침예한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존 개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와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주체형 사회주의국가'간의 논쟁이다.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그 형태는 '스탈린주의'의 여러 폐해등을 근본적으로 치유시켜야 한다는 전자의 논리 (소련과 동구의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와 현존 개혁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로 부터의 일탈'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위해 사회주의이념의 숭고함을 포기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후자의 논리이다. (북한, 쿠바, 중국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소련사태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개혁형 사회주의국가 내부에도 여러가지 입장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민중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창출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하에서 소련내의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의 권력투쟁의 양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현재 소련과 중국의 개혁정책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 그동안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 강한 언대를 보여왔던 소련과 중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예비적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소련 및 중국 그리고 동구권 방문을 통한 사회주의 실태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학자와 대중들이 보는 오늘의 북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대학교수를 비롯한 북한의 지식인들이 보는 사회주의 실태에 대한 접근도 개인적인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방식으로 별도의 절로 처리하여 접근하였다.

### 1)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大衆的 支持度 —與論調査의 結果를 中心으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권의 격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 대중들의 의식상태 즉 정치경제적 불만감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개혁을 원하고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소련내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소련대중을 상대로 직접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권 개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

해보고자 한다. 비록 이 작업은 이번 보수쿠데타가 발생하기 이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다소의 편차를 가질 수 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 내부의 자체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sup>1)</sup>

특히 이 여론조사는 全 聯邦 輿論研究센터(the All-Union Center for the Public Opinion)와 소련 사회과학아카데미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팀등에 의해서 소련대중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소련내 개혁파 신문인 MOSCOW NEWS에 수록된 것이다. 이상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진로 및 대중적 지지도와 관련한 몇가지 잠정적 결론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공산당과 당지도부, 그리고 국가기구의 대부분은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信賴性의 危機를 겪고 있는 반면, 각종 언론, 환경, 종교등의 대중단체는 보다 많은 신뢰를 확보해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가기구내에서도 군과 국가보안위원회(KGB)등은 서방의 보도보다 대중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오히려 지방소비에트와 국단적인 분리주의운동세력 그리고 법률집행기구가 현저히 낮은 대중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여론이 소련보수쿠데타의 실패로 급반전되어 소련내의 기존 국가기구는 절대적으로 불신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와 국가적 난국의 책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사회주의 자체'에 그 근본 원인을 두기 보다는 대부분 책임적 위치에 있는 당지도부와 정책운영 과정상의 官僚主義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비밀경제나 계급주의의 침투라는 보수적 논리에도 역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소련대중은 적어도 '代替 政治勢力의 合法化'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전망을 지니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불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치세력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독교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약한 정치적 지지를 보이는데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련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치세력도 확실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련 대중도 많은 부분에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정책별로 그 여론의 향배가 크게 변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련 개혁의 진로는 소련공산당이 어떻게 집중하는 대중들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현실화된 다당제'속에서 그 실질적 주체(헤게모니)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여타 정치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대중에 대한 일정한 무책임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네째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였던 '신데탕트'와 '보다 人間的 社會主義'라는 원칙은 이미 소련대중사이에 광범위하게 각인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도식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들의 현실화는 다른 한편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1)자세한 내용은 최 성 '여론조사를 통해 본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체' (동향과 전망, 백산서당 90년 겨울호) pp256-pp286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각 계층별로 그리고 민족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끝으로 소련사회주의의 진로는 소련공산당과 여타의 정치세력 그리고 소련대중도 획정된 어떤 원칙이나 이념보다는 구체적 정책과 당면한 현실정치적 문제점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노선투쟁과 정책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련 개혁의 최종적 성패와 그 귀결은 남은 기간동안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어떻게 다양하게 분출되는 정치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다음의 최고소비에트선거와 당대회선거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보수쿠데타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실정이다.

## 2) 中國改革의 進路和 路線鬭爭의 樣相

### — 常存하는 '天安門의 딜레마' —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안정과 단결'을 과시하고 있으나 권력승계가 내용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특히 대중들의 요구의 수준은 경제적으로는 急進改革派에 근접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천안문사태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관료주의 타도 와 부패척결"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해결되지 않아—이는 근본적인 세대교체와 더불어 기존 당간부의 전면적인 교체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진개혁파의 주장에 일반대중들이 동조하기 쉽다.<sup>2)</sup>

물론 현재의 당지도부는 대중노선의 강조와 더불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개혁의 열매를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sup>3)</sup> 그러나 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없이, 그리고 관료주의가 중국의 봉건주의와 결합하여 구조화된 현재의 당과 행정구조의 전면적 개편없이는 경제개혁도, 대중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도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천안문사태 이후 전개된 중국공산당 내외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강택민의 권력적 기반은 등소평의 절대적 지원없이 불가능하고, 등소평의 대중적 지도력도 당내부에서는 물론 일반 대중단체에서도 과거와 달리 현저히 퇴조한 상황이다. 여기에 양상곤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등소평이후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등소평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

2) 중국의 천안문사태에 대해서는 줄고 '천안문의 유혈 참극과 중국의 학생 운동(사회와 사상 89년 7월호) 중국사태의 재인식 (월간 다리지 89년 9월) 참조

3) 人民日報 (90년 1월 17일) 여기에서는 당면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정비정돈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하였다. 우선 사회수요의 계속적인 통제와 재정.여신의 건축방침을 견지하고 농업등 기초산업의 강화와 경제구조의 조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심화와 대외개방은 확대하고 동시에 경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기업관리의 강화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는 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는 '천안문의 후유증과 책임문제'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급진적인 개혁의 요구가 대중들과 결합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때문에 '보수파와 개혁진중파간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있으며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내 모순과 분열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붕과 강택민이 조자앙의 정치복귀문제 및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일정한 대립상이 그 한 예고, 당중앙 고문위원회 주임인 陳雲(85)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덩소평이 작년 북경의 '동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또다른 예이다. 특히 후자의 논쟁은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세력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 작업' 예를 들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폐해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현상과 당권위의 약화현상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사상투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대중들의 가중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논쟁이 노선투쟁 및 권력투쟁과 복합적으로 겹쳐져 중국 지도부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불가피하게 '조자앙없는 조자앙노선'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선투쟁의 형태와 폭은 이후에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sup>4)</sup>

이러한 점때문에 일부에서는 덩소평의 생존시기가 중국의 權力繼承의 安定性에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든 덩소평이후의 시대엔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한 가운데 권력구조의 재편과 이를 둘러싼 세력간의 투쟁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논쟁도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지도부내의 보수, 개혁파간의 갈등은 외부에 인지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이며 이는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이완기때마다 보다 증폭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도부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사상교육의 강조를 통해 현재의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점은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안고 있는 과제와 유사하다. 동시에 등구권 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해서도 '정보의 개방(글라스노스트)'이 이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급작스레히 주창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는 선언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망정 대중들이 요구하는 가시적인 정치개혁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한 정치적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4) 中國 經濟改革:趙紫陽路線復活 『日本經濟新聞』(1990.5.8)

중국정부는 새로운 개인의 도매업 경영을 인정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보류된 가격 개혁에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심천(深川), 상해(上海)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개설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작년 후반부터 불황으로 실업증대등에 고심하고 있는 지방정책 담당자의 중앙정부에 대한 공격에 기인한 면이 강하다.

5) 人民日報(5월4일) 강택민 5.4운동 기념보고회의에서의 연설.

그밖에도 대중노선을 강조한 내용은 기층조직으로 가자(人民日報 90년 2월15일) 施君玉 '13기 6중전회 黨群관계를 강조하다'(大公報 90년3월13일) 種繼文 '당과 인민군중의 혈육관계를 강화하자'(人民日報 90년3월 19일) 등 다수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지도부가 최근 일정한 유화조치속에서 안정속의 개혁을 취하려고 하지만 '천안문의 딜레마'는 아직도 심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혁명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정치개혁'을 중국의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였다가 '천안문사태의 책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보수파의 '사회주의 이념 강조와 개혁의 문제점 성토'속에서 천안문사태를 딛고 일어난 당지도부의 '안정속의 개혁파'—실은 정치개혁 반대 / 경제개혁 지지—는 어떻게 결합하게 잠재화되어 있는 대중들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해소할 지는 지금도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그 어떤 사회주의국가보다도 격렬한 노선투쟁을 거쳐왔으며 그때마다 대중들은 직접 '정치와 혁명의 장'으로 뛰어 들었다. 문화대혁명이 그렇고 천안문사태 이전의 민주화시위가 그렇다. 즉 과거의 경험과 같은 치열한 노선투쟁이 등소평이후의 중국공산당에 붙어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개혁의 진로는 지금도 불투명하다.

### 3) 比較社會主義的 視覺에서 본 蘇聯과 中國의 改革政治

먼저 소련과 중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서 우선 개혁이 가속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오랜동안 '스탈린주의적 발전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양산되어 대중들의 욕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분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소련에서 진행된 스탈린의 '外延的 成長路線'은 중국에 있어서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중공업위주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필품의 부족 등 소비재산업의 낙후성 2)지나친 평등주의적 정책과 계급정책의 강조로 인하여 인민들의 창발성 부재 3)시장과 상품등에 대한 교조적 관점으로 인하여 '計劃'과 '市場'의 결합을 효율적으로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침체 4) 당내외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관료주의를 양산하여 부정부패가 심각해졌던 경험등에 있어서 유사한 정치경제문화를 체제내에 배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상의 좌편향으로 인한 부정적 해악은 시기는 다르지만(중국은 70년대 후반 소련은 80년대 초반) 개혁정치의 심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상의 제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존 사회주의권의 위기현상에 상당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지리적 광역성과 소수민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계획과 중앙집권 그리고 자치와 자율권의 허용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소련과 중국내에서 일고 있는 분리주의운동과 민족문제는 자치제와 연방제를 둘러싼 양국가의 공통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산당의 신뢰성의 위기라든가 정치경제체제의 요구 그리고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등이 존재하는 현상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은 몇가지 점에서 본질적 차이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그 첫째는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유교적 전통과 봉건문화 그리고 농촌경제의 온존이라는 특성을 지닌 반면 소련은 유럽적 문화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혁명과 건설과정상의 경험 차이로서 중국은 혁명과정

에서 농촌혁명전략과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건이라는 좌우편향을 거치면서 ‘中國的 社會主義’의 실천을 위해서 격렬한 노선투쟁을 경험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하였다. 반면 소련은 노선투쟁이 존재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논쟁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스탈린의 숙청작업시기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혼동의 경험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적 공통성과 차별성속에서 현재 소련과 중국의 노선투쟁의 양상은 몇가지 특이점을 보여 준다.

그 첫째는 소련의 경우 개혁과정상의 노선투쟁의 범위와 깊이가 보다 심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조직체의 활성화로 당내에 물론 일반 대중들사이에서 정통마르크시즘에서 부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까지 폭넓고 심도있게 정책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소련사태이후 급진적인 반공산당시위로 연결되었다. 반면 중국은 그러한 노력의 태동이 보수적인 혁명1세대의 개입과 군부세력의 무장개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좌절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는 당내부에서 그리고 공산당의 영도성이라는 전제속에서 ‘대중적 요구와 정치적 참여’와는 동떨어져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소련이 정치개혁과 동시에 경제개혁 그리고 사회전반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정치사상적 보수와 경제개혁의 가속화라는 제한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의 경우 대안적 정치세력의 존재를 비롯하여 다당제의 문제등까지 포괄한 반면 중국은 경제개혁의 속도와 깊이를 논할 뿐 어떠한 가시적인 정치개혁과 사회문화적인 재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소련은 사회내의 대중단체와 대중들의 정치적 판단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중국은 당과 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혁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중적 신뢰가 소련이 보다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 반면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현상적 안정’을 유지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 대중들은 소외되고 불만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소련은 보수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당제가 조만간 현실화될 추세이고 그 과정에서 소련공산당에 대체할 만한 정치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책연합을 통해 부단히 자기정화작용을 해 나갈 여지가 존재하였다. 그 결과 대중들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단을 유보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유도해냄으로써 일정하게 대중적인 지지속에서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내용적으로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러한 시험이 완전히 좌절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단히 급속한 속도로 자본주의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서 ‘보다 실용주의적인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그 동안 진행되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이론적-실천적 기초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유보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안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원칙의 수호’라는 대명분은 포기할 수 없기에 ‘정치사상적 원칙의 고수’와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내적 모순을 유지한 채 진행될 것이다. 소련사태이후 중국의 대응은 더욱 뚜렷하다. 그런 점에서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본래적 의미의 사회주의와 어떻게 구별지을지는 현재로서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 2. 社會主義圈 改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變化

본 절에서는 80년대에 북한이 보여 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으며,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당면한 북한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국의 일반적 문제의식과 비교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과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팀은 <북한의 原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논의와 북한사회의 변화전망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구체적인 자료나 북한 내부의 토론이나 문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단순한 신문보도나 '근거없는 추론의 연장'선상에서 접근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자료나 기타 국내외의 자료와도 비교연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 주어지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앞서 살펴 보았던 제반 사회주의권의 개혁모델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에 대한 예상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페레스트로이카와 韓蘇國交樹立에 대한 立場

북한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는 개혁의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정치-경제개혁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서 제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과 소련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지 28년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사설<sup>6)</sup>을 통해 '개혁정책으로 소련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오늘 소련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사업이 심화발전되고 있으며 소비에트사회의 갱신과정이 적극 추진되고 인민들의 복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인식은 소련이 차지하는 사회주의권내부의 위치와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이 동북아에서 군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남한 당국의 탈냉전적 사고를 유도해 내 군비축소를 통해 그 비용을 국내의 경제발전비용으로 돌리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지지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동구권 국가보다는 적은 정도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소련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쉽게 소련의 개혁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진영과의 대립의 증식을 선포하면서 사회주의권내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유도해나가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와 자립경쟁의 경제메카니즘을 기본적으로 위협하는 부정적 측면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고, 더욱이 한국과의 수교를 전격적으로 추진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는 형태로 까지 비화하여 북한으로는 더이상 유보적인 견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6) 로동신문 89년 7월 6일자

따라서 한소정상화를 계기로 소련과 북한간의 관계는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여 외교각서를 공개하는 형태로 까지 비화되었고, 급기야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부담이 큰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기타 무역특혜조치도 폐지할 기세에서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소련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동구권에 한정하지 않고 소련에 까지 연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상당히 수세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련과의 점진적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성 또한 존재한다. 여하튼 북한은 소련공산당의 주도하에 정치체제의 개혁과 경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소련의 모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야합'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결코 소련식의 변화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사태이후 소련이 겪는 심각한 위기현상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2) 中國사태와 東歐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당정의 분리와 기업의 자주적 관리를 지향하면서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취하는 소련의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에 대한 반발은 개혁의 가속화과정에서 발생한 89년의 천안문사태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민주화요구'를 유혈진압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세력을 타파하자'고 역설하였다.<sup>7)</sup>

한편 사회주의권 특히 동구에서의 개혁을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부정적이고 해악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북한에 있어서 최근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운위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혹은 '사회주의적 다원주의'에 대한 입장은 너무도 확고하다. 북한은 <勞動新聞>을 통해 헝가리가 이른바 정치적 다원주의를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그에 합세한 반사회주의세력들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헝가리의 당명개칭과 더불어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sup>8)</sup>

“헝가리가 이른바 '정치적 다원주의'를 운운하며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여 반혁명, 반사회주의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 있다. (중략) 헝가리에서 다당제라는 이름 밑에 반혁명적 정당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심지어 반사회주의분자들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동구사회주의 개혁이 제국주의세력과 결탁한 국내의 반사회

7) 로동신문 89년 10월 1일

8) 로동신문 89년 6월 28일

주의적인 세력의 결합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으로 '반제국주의 투쟁과 사회주의의 보호'에 모든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의 해석과 입장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은 사회주의사회의 언론의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회주의권의 개혁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情報의 公開)라는 촉매제를 통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사회는 아직도 절대 다수의 대중들의 북한 내부는 물론 '혁신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외채를 완전청산하고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긍지감이 충만되어 있다'고 보도한 <로동신문>기자의 루마니아 방문기는 북한사회에서의 정보의 독점의 심각성을 증대하게 재기해 준다. 이밖에도 당의 사업과 자체의 노선에 대립되는 개혁형사회주의국가의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삼가고 있으며, 동시에 동독, 루마니아 등의 문제점과 내부 진통에 대해서도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크렌츠와 차우세스코의 서기장 임명은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 실각의 과정이나 민중봉기--그것이 설령 반사회주의적 폭거일지망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세계 특히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권과 통일조국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남한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혁신적 변화가능성(루마니아식 민중봉기를 포함)을 예측하는 입장을 거부케 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출발은 내적 욕구나 구조적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외부세계의 충격과 변화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일정한 지위상승의 욕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과정에서 동독주민들의 반응과 대응은 이러한 점을 여실히 입증해 준다. 결국 동독의 경우나 루마니아식의 '대중적 시위에 의한 민중봉기'의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 3) 東歐圈과의 修交와 交叉承認

북한 외교부는 이미 오래전(88년 10월 26일) 담화를 통해 헝가리가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2개의 조선음모를 떠버든 첫사회주의국가'로 이로인해 '남한의 반공기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주의 대일의 분파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9년 2월 외교부 각서는 '분열주의자들의 2개조선 조작음모에 가담한 결과이며, 명색이 사회주의나라인 헝가리가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들의 반 사회주의적 전략에 가담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전반적인 사회주의위업의 견지에서나 사회주의 벗들간의 도덕적 견지에 보나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폴란드와 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폴스카(폴란드)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로 부터의 출구를 제국주의자들에게 구원을 요청한데서 찾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북한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거듭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사회주의권 일반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인식,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수용이다.

### 3. 社會主義圈의 北韓認識

: 東歐 및 中國訪問과 北韓學者와의 學術討論의 結果를 中心으로

소련의 '보수쿠데타'가 3일천하로 끝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은 또다시 북한으로 쏠렸다. '과연 북한은?' 하는 물음과 함께 현안의 당면이슈로 등장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후의 한반도 통일전망을 저마다 예견하였다. 과연 북한은 천안문사태-루마니아 민중봉기-통일독일-소련보수쿠데타의 종말과 소련사회주의의 위기라는 세기적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그들의 대응논리는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낙관적 정세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절에서는 사회주의권 방문과정에서 북한을 다니 온 경험이 있는 사회주의권의 학자나 마르크시스트가 본 '對 북한인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8월 연변에서 끝난 'KOREA학 소장학술대회'에 참가한 12명의 북한학자들과의 토론 및 대화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인터뷰의 방식이나 사회주의권의 북한인식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연구접근이 북한내의 자료에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한계를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학자들과의 '북한사회에 대한 학술적 토론'은 그 내용이 갖는 객관성 여부를 떠나 그들의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비롯한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파악하는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 1) 社會主義圈의 北韓에 대한 認識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요구 시위로 인하여 커다란 내적 진통을 겪고 있는 '개혁형 사회주의국가'는 과연 '오늘의 북한사회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시말해서 기존의 반공주의적 관점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끼(동경대 교수:소련 및 북한전공)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의 입장을 정리했다.

"금년 봄에 평양을 다녀왔고, 얼마 전 소련에서 많은 개혁파인사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련내 개혁파나 한인(韓人)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동시에 소련내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역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이를 테면 전면 부정(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전체주의국가로 상정)하거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예를 들면 스탈린주의적 잔재)를 지닌 국가로 이해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천안문사태이후 중국공산당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반대중이나 인텔리의 경우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독의 훔볼트 대학 한국학 교수인 헤르만교수 역시 “ 나는 평양을 3번이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특히 조선어-독일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평양에 머물던 시절에 겪었던 북한사회의 '통제성'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과거 동독과 북한의 관계는 정치적인 외교관계때문에 현상적으로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수령론과 주체사상, 그 밖의 고지식한 내적 논리로 인하여 대단히 미묘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과거를 회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북한인식은 동구국가와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부분 공감할 수 있었던 평가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남한내의 북한인식과 그 연구현황의 수준은 어떠한가?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김주석과 특별대담까지 하고 돌아 온 송두율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송두율교수(독일 뮌스터대학:철학)는 “남한내의 북한연구현황 역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분석이나 내재적인 논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의 논문을 보니까 북한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테일러시스템에 비견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자의 자세는 솔직히 말씀드려 자기가 알고 있는 편협한 일부이론에 북한의 현실을 일방적으로 꺾 맞추는 대단히 비학문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면서 남한의 대북한인식이 갖는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 2) 民主主義 그리고 首領論에 대한 評價

그렇다면 북한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중국의 천안문사태부터 루마니아 민중봉기, 그리고 최근에 실패한 소련의 보수쿠데타에서 제기되었던 핵심적 문제였던 '민주주의의 문제'를 북한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언변에서 개최한 소장학자 학술토론에 참가한 북한의 소장학자인 김영복(주체과학원 철학 연구소 연구원)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한에서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것이며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나뉘어지는데 개인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며 이는 계급독재로 연결된다. 반면 집단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로 연결되어 진정한 인민정권 즉 참된 민주주의로 연결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언변학술대회 발제논문 '정치의 본질과 사회생활에서의 그 기능에 대한 연구'중에서)

이에 대해 필자는 발제자의 견해가 다소 2분법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도식으로 설명하는대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최근에 전개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은 1) 민중의 자주적 참여 2) 사회주의적 법치의 완성 3) 대중들의 물질적 욕구의 일정한 충족 4) 지나친 중앙집중적 경제의 지양을 통한 경제의 효율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의 민주주의도 자본주의진영의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긍정점을 수용하여 사회주의적 틀속에서 ‘민주주의의 발양’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진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식이 확산, 공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연변의 작가협회 회원등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대단한 논쟁이 되고 있는 ‘북한식 민주주의에 있어 수령과 인민대중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통합적 조정자이자 퇴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령의 시행착오가 있을 때 어떻게 수정되고, 문제점이 보강될 수 있는가” “아무리 북한정권이 인민대중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하더라도 김주석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불만이 대중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민중(인민)에 의한 정치개혁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는 식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복 연구원은 답변하기를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의 간섭자와 결합한 내부의 반란자가 있을 지 모르나 내부개혁불만세력은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 ‘더 많은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발제에 ‘이 북식 사고’ 혹은 ‘편협한 우리식 사고’가 있었다면 접수하겠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매개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동의한다. 다만 민식의 한계상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면 인민대중의 이익에 따라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예를 들면 평양에서 원산까지의 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인민정권기관을 통한 현지인의 문제제기가 있지 이를 수용하여 즉각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한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 일하는 인민대중의 경우도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이기주의를 지양한다. 따라서 집단주의는 군대식 집체주의와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급사회의 정치는 계급독재이지만 우리와 같은 무계급사회의 정치는 사람의 활동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에 찬 설명은 새미나 참석자의 갈증을 쉽게 풀어주지 못했다.

북경에서 만난 현명선(북경 기계공장 관리직노동자)씨 역시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3차례 평양방문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현재는 합작관계로 인하여 남한에도 한동안 머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연변의 조선족으로서 남북한의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인들의 부자유함은 아직도 여전하다. 예를 들면 평양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양 출입은 아직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내부적 불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일정한 수준의 평등과 자본주의적 부패를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숭배의 신격화문제, 내부의 특권층의 존재 그리고 경제적인 심각성등은 북한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당장의 현상적 문제이다. 북한주민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쌀을 가지고 중국의 잡곡을 대거 교환하는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편 송두율교수는 이와 상반된 평가를 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번 평양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는 수령과 당-대중들의 일체감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후계자의 문제 및 내부 경제의 문제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결코 심각치 않으며, 오히려 당 간부의 철저한 헌신성으로 인하여 대중노선이 관철되고 있었다. 특히 ‘수령과의 관계 역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대단한 존경심을 대중들로 부터 받고 있으며, 후계자인 김정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민주주의 구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상반되었다.

### 3) 北韓의 統一方案과 ‘聯邦制’

통일독일은 대단히 감상적으로 표현해서 그 대단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분단시대에 사는 한반도에 있어 대단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적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앞에서 한반도의 통일방안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김일성 대학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허오범(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교수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현재 통일을 촉진하는 민족적 공통성과 통일을 저애하는 지역적 특수성은 연방제수용의 두 변수입니다. 이러한 일반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민족의 단일성과 사상, 제도의 차이를 2대 변수로 하는 연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은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에 대한 지도적 권한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지도력이 없어지거나 약화된다면 연방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고 연방국가는 형식상의 <국가연합>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연변 학술대회 발제문)

필자는 발제자가 제기한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연방제안에 대해서 장기적 경로와 구체적 실천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동시에 과도기적 수준에서의 ‘국가연합’의 형태나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상정하지 않는가’는 문제 또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일단 연방의 형태로서 통일적 정부가 구성되어야 지 국가연합이라는 두 개의 국가형태는 반대한다. 따라서 연방중앙정부의 지도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된 형태속에서의 연방제가 이룩될 때만이 분단을 고정화시킬 우려를 탈피할 수 있다. 이왕에 연방제라는 이름의 통일정부를 구상할 바에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지역정부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도가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최소한 통일을 보장하는 정도의 권능을 갖는 초보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민족자주정부로서 누구의 지명에 움직여서는 안된다. 물론 지방정부 역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등 연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만 연방정부가 갖는 고유의 권한은 전민족적 이해를 담보해내는 통일적 권한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의 통일논의과정에서 연방국가의 권력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역은 정치협상회의등 실천가들의 토론과정등을 거쳐 완성되게 될 것이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다.

#### 4) 社會主義國의 危機와 오늘의 北韓

이처럼 소련공산당이 해체될 정도의 ‘심각한 사회주의권의 위기’앞에서 오늘의 북한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보다 세계사적 구조변화를 진단해 보고 이후 북한사회의 진로를 예상해 보았다.

소련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사회주의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작업을 한 와다 하루끼교수는 “ 제국주의 시대에는 전쟁과 강대국의 침탈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사회주의의 형태로써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등의 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는 군사주의적 색채가 더욱 강하다. 소위 ‘유격대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페레스트로이카이후에는 기존의 세계전쟁의 시대로부터 세계경제의 시대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는 이에 따른 체제내적 개혁을 시도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등의 제3세계 사회주의국가는 경제개발등의 형태를 통해서 당독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제 조일수교협상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가능성등이 열리면서 ‘유격대형 국가’로서의 성격은 점차 탈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이상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적이 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의 진보적인 좌파잡지인 뉴레프트(New Left Riview)의 편집장 역시 ‘베트남, 쿠바, 중국등 아시아 사회주의에 있어서 개혁파의 부상에 관심을 두면서 북한 역시 김정일로의 후계자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룩된 이후 개혁정책을 보다 가속화 하리라고 전망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일시적 패퇴현상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의 위대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회주의를 스탈린의 마르크시즘과 일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사회주의권의 북한인식은 전반적으로 ‘스탈린주의적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경제적 문제점과 사회주의적 민주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수령론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학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북한식 발전노선’에 대한 자신감과 ‘수령에 대한 대중들의 무한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결코 북한사회는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

서 나타난 재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고 과신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편차가 바로 오늘날 북한사회주의의 진로를 예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판단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북한의 정책은 결코 페레스트로이카식 개혁이나 루마니아식 민중봉기의 형태를 띤 '혁명적 변화가능성'보다는 '로동당 중심의 점진적 개혁'을 시도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중의 하나는 앞서 지적했듯이 <로동신문>을 통해서 보든 직접 북한의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든 북한의 대중들의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정보통제 혹은 정보부재)가 그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IV. 北韓의 政策變化와 權力承繼問題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권 개혁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국주의세력과 내부 수정주의자들의 복고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도높은 '主體形 社會主義 建設'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회주의 일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 위기의식때문에 제한적인 당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오랜 동안 형제국가로서 가장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우의 비극적 운명이나 동독의 호네커의 퇴임, 그리고 이 양국가의 '파국적 결과'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여기에 실상가상으로 심화되는 경제사정의 악화,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압력이 겹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북방정책을 통한 '통일논의의 주도권'등은 대표적인 한 예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내적 논리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과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여부와 관련하여 체제적 변혁의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 1. 北韓社會의 政策變化의 可能性과 그 內容

###### 1) '主體形 社會主義'의 強調와 黨 中心의 制限的 改革

북한의 내적 논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우선 86년의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라는 문건을 들 수 있다.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면한 투쟁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모두 로동계급화한 무계급사회이다. 따라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하면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넷째 인민정권과 3대혁명,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찰시켜야 하며

1) 『로동신문』, 86년 12월 30일

다섯째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3자 회담/평화협정/불가침선언/군사훈련 중지/비핵평화지대화/불력불가담운동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위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개혁의 진로'가 결코 기존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발전노선'과 '연방제 통일안'의 큰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최근 '大衆路線'을 강조함으로써 당과 대중의 일체감을 누누히 강조하고 통일문제와 대남관계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없으며 오히려 '사회주의권 개혁'과 '남한의 6공화국 북방·통일정책'으로 부터의 외적 압력'을 타개하고자 오히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더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수령인 김주석을 중심으로 확고한 사회주의적 원칙을 견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원칙의 천명은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담화, 86년)<sup>2)</sup>라는 문건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 문건에서 김정일은

첫째 력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은 인간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다.

둘째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의 다른 사상이 있을 수 없으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교양과 계급교양 그리고 혁명전통교양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최근의 주체사상교양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네째 이런 의미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자는 것이 아니며,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다섯째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최수인 수령이다.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강조하면서 패배주의와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갖는 의미는 후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면서 당내외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사상적 이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수령과 당의 영도성'을 재강조함으로써 이후 북한사회주의 건설노선의 기본원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권 개혁에서 나타난 당과 대중의 유리현상 및 그 결과로 나타난 '관료주의 문제' 등을 기존의 원칙에 입각에서 보다 내용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논리이다. 즉 변화의 대략적인 방향은 '대중노선의 철저한 관철' '주체사상의 재강조' '사회주의적 제도의 강화, 발전과 제국주의세력의 타파'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천명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북한사회의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부분은 '수령에 대

2) 『로동신문』, 86년 7월 15일

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당과 대중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는 대중들의 참여와 요구를 당 중심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수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이다'라는 김정일의 당 창건 45돐 기념논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 1) 당의 명도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 2)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당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작업은 당내 민주주의의 참다운 본질이다.
- 4) 현 시기 국제무대에는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 5)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전당이 군중속으로 들어가자>는 구호를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당내부 사업체계와 당적 명도체계중에서 특히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역점을 두어 강조하였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 2) 經濟改革의 必要性和 朝日修交協商의 效果

변화된 국제정세에 조용하면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로동당과 일본 자민당/사회당 공동선언'<sup>3)</sup>의 형태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주된 내용으로서 '식민통치를 보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수립을 추진하고 조선은 하나이며 양국간의 교류증진을 모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다가 최근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급진전원 관계개선의 부담등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화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외교적 고립감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전격적인 정책변화의 근거에는 사회주의권 일반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소비재 산업의 부족'과 전반적인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미 80년 중반 부터 일본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합영법'을 시행하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3) 『로동신문』 90년 9월 29일

커다란 변화이다. 경제적 개혁과 관련하여 북한은 오래전부터 기술혁명과 물질적 유인을 통해 인민복지의 증진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제도적 방침은 제시되었고 현실화되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군사비의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군비확산을 시도할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이다. 또한 혁명1세대가 정치일선으로 부터 물러나고 전후세대인 혁명2세대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어 현재는 김정일 당 비서중심의 '후계자체제'가 구축 '3대혁명'을 통해 북한나름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가중되는 외채문제의 해결, 생필품 및 소비재산업과 주요 기산산업의 육성등을 위해서 기존의 '정치사상적 동기 유발'의 방법이나 '계획경제'를 통해서만은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인민대중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일수교협상을 통해서 서방 자본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유입, 일정한 형태의 경제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구권의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델이 될 것이다.

### 3) 現實的인 統一政策과 유연 同時加入의 現實化

북한의 변화와 그 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는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통일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두 개의 조선'을 거부, '통일조국의 실현'을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가장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대책에 대하여」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핵심적인 골격은

첫째 통일의 선결조건은 두개 조선/분단고착화가 아닌 통일지향/북남군축/당사자 협정이어야 한다.

둘째 평화실현을 위한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 군축방안에 있어 '단계적 철수'와 '단계적 축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남한내 통일운동의 고양에 따라 보다 유연한 대미관계와 군축방안을 제시, 결국 변화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주도권과 미군철수의 진전을 가져오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북한의 언형목총리의 기본발언 에서도 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두개의 조선' 반대/ 단일의석가입 2)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방북인사석방/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은 거듭 제기된다. 또한 2차 총리회담 말미에 있던 김일성주석과 강총리의 면담에서 김일성주석이 " 정치군사 문제의 우선해결을 강조하면서 북남 고위급회담을 잘 진행시켜 하루빨리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은 이후 남북관계의 혁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와 현실적 접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감'과 '경제적 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남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정치적 규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 개혁으로 야기될 지도 모를 북한대중들의 동요나 민주화의 요구를 '통일조국의 실현'이라는 '북한 대중의 열망'에 부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통일독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동독의 몰락'과 '서독의 승리'가 한반도 정세의 상황속에서 실현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전격 수용'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 4) 蘇聯共產黨의 解體이후 北韓社會主義의 進路

소련쿠데타가 발발하였을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진영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 쿠바등의 제3세계 사회주의국가가 암묵적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들 국가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우경화정책' 혹은 '친자본주의적 노선'에 대해서 우려와 경계를 오랜동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개혁형 사회주의국가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진영이 보여 준 '소련 보수쿠데타'에 대한 맹목의 논리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려는 '주관적 열망'의 또다른 반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수쿠데타'가 실질적인 대중적 기반이 없이 너무도 쉽게 3일천하로 무너지자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사회주의권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들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가하였다. 그리고 자국 내부의 '사상적 동요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북한)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진영의 '주체형'사회주의국가의 포위, 압력에 대한 위기意識의 또다른 반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북한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부터 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고, 동구권 공산당의 붕괴과정에서는 노골적인 비판과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 즉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주의판 민주화현상'을 겪고 있을 즈음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발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한편으로는 '대중노선의 강조'를 통하여 인민대중과 당의 강고한 결합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소련보수쿠데타이후 그동안 강조해 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강조' '혁명전鋒의 교양' 및 '빨리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지방공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의 증진'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민족사회민주주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주제하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본질적으로 우수함을 역설하고 있다.<sup>4)</sup> 여기서 북한이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개혁형 사회주의국가내의 개혁파논리인 '다당제와 시장경제의 도입'의 맥락과는 전혀

4) 『조선사회민주당』 91년 2호

다른 것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어떻든 이러한 정책적 강조는 사회주의권의 심각한 문제점(자본주의적 위험성을 포함한 사상적 혼돈)이 국내 대중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북한내에 존재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문제, 경제적 발전의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제기되고 실천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충격은 천만문사태--루마니아 민중봉기--똥일독 일등의 엄청난 세기적 사건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급기야는 북한 역시 대내적으로는 사상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자'는 구호아래 제국주의의 침투를 경계하는 한편 '조일수교협상의 진전과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혁신적인 외교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로동신문의 한 사설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옳게 관리하기 위한 인민적 사업체제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정권과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세우는 것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어려운 창조사업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만의 사업체제의 본질적 우월성과 생활력은 당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있다."면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과 공산주의적 혁명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방법으로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현재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즉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혁명의 무기,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을 마비시켜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주석의 91년 신년사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처럼 人民經濟의 發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올해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된 과업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여 91년 북한 전체예산의 67.8%를 인민경제비에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경제비용의 증액과 대중들의 물질문화생활의 강조는 일정하게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의 개혁정책에 비하면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지만, 대외정책 즉 조일수교협상의 진전과 조미관계의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전환등을 통한 현실주의적 외교노선과 맞물려 북한을 국제정세의 '혁명적 재편'에 동참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핵안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핵사찰압력'을 수용하면서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주의의 진로는 당분간 소련사회주의의 붕괴과정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진영의 포위, 압력에 정면대응하는 형태보다는 '내부의 정치사상적

5) 『로동신문』 91년 8월 15일 사설

결속'을 통해서 우선 북한사회주의를 보위해내고 이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발전비용을 산출시켜 개혁형 사회주의국가의 문제점중의 하나였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국과 쿠바, 그리고 베트남등의 제3세계 사회주의국가와의 인대는 '정치적인 사회주의적 인대의 차원'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경제교류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安定的 權力承繼與否와 體制變化의 可能性

### 1) 安定的 權力承繼의 重要性

북한에 있어서 후계자의 문제가 다른 여타 사회주의국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리고 보다 치밀하게 전개되게 된 저변에는 몇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후 겪었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일대 혼란이 북한에 있어서는 50년대 중반 '反宗派鬭爭'의 형태로 당 지도체계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70년대로 중국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모택동 사후에 집권한 덩소핑은 과거의 모택동 추종자들을 '좌경 모험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계급주의자' 등의 형태로 비판하면서 기존의 혁명노선을 계승하기 보다는 과거의 노선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역사적 재해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아직까지 '대중들의 충성심'이 결코 불변하지만, 수령의 사망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주의국가보다도 후계자문제를 중요시하여 왔다. 더욱이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오던 차우셰스코의 몰락과 죽음'은 어떤 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후계자 문제'를 보다 강조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 밖의 다른 요인은 북한 스스로가 누누히 강조하는 것처럼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기존의 혁명적 전통과 경험을 체득한 위대한 새 지도자'가 권력을 승계하여 혁명과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후계자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후자의 논리가 갖는 결정적인 한계는 김정일애로의 권력승계가 당내의 합의와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구축되었다기 보다는 '수령에 의한 판단'에 의해 이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점에 있다.<sup>6)</sup>

6) 참고적으로 김정일의 이력을 살펴보면 1942년 출생/1948년 평양남산민학교(간부자녀 학교)입학/1950년 6.25로 중국 길림학원으로 전학/1952년 평양으로 돌아와 동교에서 고등반까지 졸업, 곧 동독의 항공군관학교에 유학/1963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1964년 로동당에 입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활동/1969년 동부부부장/1970년 로동당 문화예술부장/1972년 12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6차 전원회의 이후 당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석렬, "김정일의 대두와 정권승계", 『아세아연구』 제30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7) pp.73-80을 참조할 것. 위 논

따라서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후계자의 문제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김정일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이 '혁명 2세대'로서 주로 기술관료와 젊은 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혁명 1세대'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동시에 후계자의 권력적 기반이 아직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통성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물질적 욕구'와 '봉일의 열망'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내적인 '경제개혁'과 대남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김정일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후계자로서의 권력승계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의 촉발요인'보다는 '억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도 강하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권 개혁과 민주화 요구로 인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남한의 6공화국 정부에 의한 북방.봉일정책에 의해서 외교적인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감당할 수 없는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확보하고 있는 김일성이 이를 해결해 줄 때 본격적인 권력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북한에 있어서 권력승계와 체제변화의 상관성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2) 金正日의 權力的 基盤의 特性 및 變化

현재 북한정치에서 핵심적인 지위는 여전히 혁명1세대, 빨치산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179명 중 25명(13%), 당서열 50위에는 12명(24%), 당중앙위 정치국 25명중 6명(24%),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는 16명중 8명(50%), 정무원 부장급 이상 50명중 2명(4%), 국방위원회 11명중 6명(54%), 중앙인민위원회 17명중 3명(17%)이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활동을 한 인물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0년 현재 북한의 노동당 서열 50위에 속하는 인물들의 평균 연령은 약 68세로, 이는 1980년에 평균연령이 약 59세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의 세대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항일무장투쟁의 혁명1세대가 북한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관료와 지식인계층의 부각은 김정일로의 후계자계승을 위한 권력적-대중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김정일의 지지세력은 1) 노동당 조직 2) 군조직 3) 만경대혁명학원출신 4) 3대혁명소조출신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勞動黨組織으로서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조직, 선전 및 선동담당 비서직을 주로 당에서 활동해왔으며, 신진간부와 기술관료들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제6차 당대회에서는 제5차 당대회당시의 당중앙위원 172명을 248

문외에 월간중앙 1989년 9월호에 실린 유영규, "김정일 그는 누구인가", pp.436-451. 신상욱, 최은희, "우리가 만난 김정일"(자료), pp.452-469. "국내정치학자 45인 김정일을 이렇게 본다"(자료), pp.470-474, "김정일 최근일지"(자료) pp.475-479. 참고할 것.

명으로 대쪽 중원시었는데 그중 70.6%가 신진인물들로서 이들은 김정일승계체제 확립을 위한 포석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sup>7)</sup> 특히 당관료로서 김정일의 세력기반을 튼튼히 해준 허담, 리근모, 김종린, 김영남, 홍시학, 현무광, 김환, 강성산, 서윤석, 전병호, 안형욱, 계응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軍組織으로서 군조직에서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빨치산출신과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을 들 수 있다. 이에 오진우(당정치국원, 당중앙위군사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부력부장), 전문섭(당중앙위군사위원), 오백룡(당중앙위원), 김철만(당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오국렬(당중앙위 군사위원) 등이다.<sup>8)</sup>

그러나 김정일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군부에서의 지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 근거로 김정일은 군경력이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김정일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지도권이 상당정도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째 그룹은 만경대 革命學院 출신이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에 창설된 11년제 특수군사학교로 현재까지 20,000명이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김정일은 이 학원의 제1기 졸업생(1953년 졸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생들은 최우선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공군대학, 해군대학 등 국내 학교와 외국에 유학할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80년대 이후 김정일체제 등장으로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당서열 50위 내에는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1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김정일과 함께 성장한 인물들인데다가 김정일 처럼 김일성대 혹은 소련에 유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학원출신들은 1990년 현재, 당중앙위에 179명중 29명(16%), 당서열 50위내에서는 12명(24%), 당군사위원회에서는 16명중 8명(50%), 당중앙위 정치국에서는 총 25명 중 6명(24%),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17명 중 5명(29%), 국방위원회에서는 11명중 2명(18%), 정부원에서는 부장급이상 50명 중 7명(14%)을 차지하고 있다.<sup>9)</sup>

끝으로 3大革命小組 出身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2세대라 할 수 있는 전문기술관료의 등용을 확대하는 한편,

7) 「내외통신」 제198호 (1980, 10. 20) 유석렬, “김정일의 대두와 정권승계”, 『아세아연구』 제30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7) pp. 81. 에서 재인용.

8) 또한 북한은 1985년 4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하여 법정정원 3명을 훨씬 넘는 9명의 고위장성을 승진시켰다. 즉, 인민부력부장 오진우를 차수, 그리고 총참모장 오국렬, 인민부력부 부부장 백학립, 당군사부장 김두남, 제1부참모장 리을설, 제2군단장 주도일, 인민부력부 부부장 김봉철, 포병사령관 김광진, 제4군단장 리두익상장을 각 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들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옹호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다.

9) 이 학원출신들 중에서 주요인물로는 김정일과 함께 졸업한(1기), 백학립(당중앙위 군사위원, 사회안전부장,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회 부위원장), 김강환(당중앙위군사위원), 김두남(당중앙위군사위원), 율기정(女, 전 재무부장), 김봉철(당중앙위원), 오국렬(당중앙위군사위원), 김환(당중앙위원, 부총리, 화학공업부장), 박용석(당중앙위원, 철도부장), 이재툰(당중앙위원, 노동행정부장), 최문선(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김유선(女, 前자강도당 책임비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2세대인 전문기술관료를 당권력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를 직접 지도한 김정일의 권력을 강화하게 하였던 것이다. 1986년 12월 제6기 12차 당중앙위원회 정회원 15명 중 7명, 후보위원 10명 중 7명이 전문기술관료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구성에서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게 되었다.

앞장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72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노동자, 농민은 64.14%, 13.3%에서 1986년에는 36.4%, 12%로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무직, 전문가의 비율은 22.56%에서 51.6%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사무직, 전문가의 절대적, 상대적인 수가 산업과 교육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무직, 전문가의 비율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무직, 전문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혁명2세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김정일의 권력기반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3) 金正日體制에 대한 抵抗勢力의 存在可能性

이처럼 북한은 70년대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하여 각종 준비를 하여왔다. 따라서 김일성이 생존해있는 동안에 김정일로의 모든 권위가 공식적으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이양된다면, 김정일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세력은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김정일 예로의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위험한 상황은 김정일이 수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위를 질적 양적으로 완전히 물려받지 않은 채로 김일성의 유교가 발생할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권력교체--그것이 민중봉기의 형태이든 아니면 내부의 권력투쟁을 통한 평화적 이행이든-- 가능한 형태의 잠재적 저항세력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권력기구 내부의 반김정일세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김정일세력의 부상에 대한 권력내부의 반발로서, 일부원로세력 및 소외세력들의 불만이 결합되어, 여기에 신, 구세력간의 갈등현상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당내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식인의 불만 또한 크다는 점이 감안되어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로 탈락하게 될 세력 이들은 혁명2세대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군부내의 반 김정일그룹이 존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군부 자체가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에 의한 철저한 지도를 받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대단한 권력과 무력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 실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김일성과 노동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지휘가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일방적 지지로 환원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는 改革派 勢力의 제한적 존재여부이다. 북한은 소위 '주체형 사회주의'로 인하여 개혁파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애초부터 상실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국제정세와 사회주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혁신적 재편을 계기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당내외의 개혁파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세력으로는 오랫동안 경제건설을 주장해 왔던 경제관료와 친중국적 원로, 그리고 동구권등으로 부터 귀국한 외국유학생, 남북관계를 주도해 오던 민간 외교관등을 들 수 있다.

세계 기타 정치적 반대세력을 포함한 體制抵抗勢力의 존재가능성이다. 일부의 학자들은 수용소, 특별독재구역의 재소자, 망명세력 그리고 김성애, 김평일 등과 이북형제 및 지원세력, 성분분류에 따른 동요계층 및 적대계층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화된 조직력이 없으며 대개의 경우도 학자들의 추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북한사회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 대중들이 '수령론에 입각해서 절대적 충성'을 보이고 있고, 정보나 기타 모든 권력이 당의 통제하에 그리고 독점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의한 혁명적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적인 변화의 충격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확장되고 내부 주민이 대내외적인 정보로 부터 자유롭게 접근하는 글라스노스트(정보의 개방과 공개)가 이루어 진다면 상당한 폭과 깊이의 변화도 자의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김일성의 사망에 앞서 모든 권위의 공식적 승계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위양되고 충분한 시험을 거친다면 김정일체제가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도전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 4) 權力承繼의 展望과 體制變化可能性

우선 김정일체로의 권력승계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그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권승계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1)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해서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권력투쟁의 가능성 2) 김정일의 능력부족과 무리한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불안 3) 권력투쟁으로 인한 중앙의 통제기능의 약화를 뿔타, 김정일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날 가능성 4) 김정일중심의 신독재체제의 출현가능성문제 5) 對 중.소외교에서 오는 곤경을 들고 있다.

6차 당대회 직후인 1982년 7월 24일자 『로동신문』은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간의 알력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당면과제」라는 논문<sup>10)</sup>을 통하여 당내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당과 인민과의 연계강화, 만연된 관료주의의 시정, 자본주의와 결탁한 내부반항의 존재 등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내적 사상의식의 강조과정에서도 '당내 불만세력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김정일에 대한 내부적 불만세력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김정일 권력계승의 전망에 대하여 성공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sup>11)</sup>에

10) 『로동신문』 1982년 10월 17일자

11) 서대숙, 『북한권력엘리트 구조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국토봉일원, 1988.11)

서는 우선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내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밖에 반대자의 제거완수/ 세대교체/ 김정일이 승계자로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인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김정일로 권력승계가 기정사실화 됨으로써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대안을 택할 시 권력투쟁과 반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승계는 전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반대세력의 도전 가능성이 미약하며 군부의 경우도 당이 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반란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필자는 결론만을 상정한다면 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안정적인 권력승계 가능성의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승성을 대중들로부터 받고 있는 수령의 영도하에 후계자가 지명, 당내 외에서 확고한 입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당의 정보독占到 의해서 대중들의 정보인식의 상태가 대단히 취약하여 일반적인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의 '상대적 박탈감'의 여지가 매우 낮다는 점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권력승계후의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면 현재 남한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상황도 악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김정일이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것은 그가 주체사상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때문에 정당화되었던 측면이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소는 현재 체제의 안정성보다는 이후에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2</sup>

더욱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훼손함이 없이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적응하고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북한사회의 장기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김일성의 생존시기와 절대적 권위의 지속성 유무'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그 밖에도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영원한 이념적 동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도 남한과의 수교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를 볼 때 지극히 불투명한 점도 권력승계이후의 김정일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에로의 변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북한은 1)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대신할 김정일의

---

서교수는 권력승계의 실패와 관련한 전망에서도 1) 김일성의 변신 2) 김정일이 김일성을 제거하는 경우 3) 김일성사후에 인민봉기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김정일의 피살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실령 있다고 해도 후계자는 김일성 일가이거나 과도적 존재라고 서술한다.

12) Kuni Akira, "North Korea: In the 1980s and the 1990s", East Asian Review(국동문제연구소, 1990 봄) pp.81-97.

정통성의 문제 2)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시적인 성과물을 이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 3)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의 문제 4) 경제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적인 압력의 가중 등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3. 北韓의 政策變化와 體制變化모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89년말부터 90년초에 사회주의권을 강타한 개혁과 민주화의 바람, 그리고 이후 진전된 남한의 북방정책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국내외적 정책에서 수용하였다. 대표적인 문건으로서는 '90년도 김정일 신년사'를 보면 알 수 있다.

- 1) 지난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 2) 자력갱생, 증산절약운동을 통한 90년대속도를 창조하여야 하며, 보다 풍요한 물질생활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오직 당의 올바른 영도밑에 인민대중이 건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이며
- 4) 두개의 조선 합법화를 거부하며, 콘크리트 장벽 철거, 당국과 각 정당 수뇌가 참여하는 민족통일협상회를 마련한다.
- 5) 사회주의 근본원칙에서 리탈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지켜나갈 것이다. 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년사가 갖는 의미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독일통일이 진전되고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가 민주화요구라는 격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제국주의의 침투'를 경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하자고 역설하는데 초점지워져 있다. 특히 동구의 문제가 당과 대중의 괴리현상, 인민생활의 어려움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당의 영도성'(수령론 강조보다)과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 충족'을 강조한 측면이 매우 특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통일독일의 열기를 한반도에 결합시키고자 '콘크리트 장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촉구한 측면도 보다 전향적인 대남관계를 갖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이러한 적극적 측면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정세가 북남관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내적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중국의 천안문사태, 루마니아의 민중봉기, 동독의 몰락과 통일독일 그리고 소련사태 등)을 1)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자본주의세력의 제등장 2) '개혁형 국가'의 공산당 정책의 오류 3) 정치사상적 교육의 부재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현존 문제의 핵심도 '제국주의 세력의 공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적어도 표면적으로—주요한 해결방식 또한 1)주체사상의 제강조 2) 당과 대중의 일체성 강조 등의 형태로 본질과는 다른 '개혁의 내용'이 추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도 1)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주의와 경제적 문제점 2)대중들의 정치적 참여의 확대 3)당의 배타적인 권력독점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모델은 적어도 지나친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인하여 '천안문 사태'나 '동구식의 혼란'을 피하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인 '경제개혁의 형태'일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용인'하거나 광범위하게 민주제원리를 허용하고 있는 '소련식 페레스트로이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 중심의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외 정책과 통일정책'을 시도하는 범위에서의 개혁적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 사회주의를 전망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혁명적 균중노선'을 강조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3대혁명 특히 기술혁명의 강조를 통해 생산력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제관계가 신대탕트의 분위기속에서 양 진영간의 대립갈등이 잠재화되고(물론 한반도 주변정세는 역사적으로 국제정세의 호전과는 무관하게 냉전적 구조의 한복판이었지만) 북한 사회주의 내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남북관계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지금, 기존의 '주체의 정치경제학'만을 통해서 현대사회주의 일반의 공통의 고민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북한을 비롯한 쿠바 등의 주체형 사회주의국가는 아직 국민대중들로부터 개혁의 절박성을 요구할만큼 불만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운용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경제발전수준이 양적, 외연적 발전단계에서 질적, 내포적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일정한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정치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 그 형식과 내용은 보다 현재의 개혁형 사회주의와는 훨씬 완화된 형태일 것이다. 이를 테면 경제부문에선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기술개혁과 소비재공업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자의 형태가 일본의 재일교포를 주 대상으로 설정한 합영법의 추진과 조일수교의 급속한 진전이고 후자의 형태가 미국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유엔동시가입의 실현을 비롯한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수립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조만간 진행될 김 정일에로의 후계자체제 수립이후의 안정적인 권력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과 개방의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국내외적 조건을 미리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 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름의 개혁을 '주체적으로' 보다 폭넓게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정책변화와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黨政分離,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격하, 중앙집권으로부터의 지방분권화, 복수정당제의 허용을 비롯한 사회주의적 민주화, 선거의 복수추천제 그리고 계획경제의 탈피와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경제의 활성화'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사회 전 영역에서 '스탈린주의의 폐기'로 집약될 수있으

며 최근의 '소련 보수쿠데타'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 문제의 원천과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수령의 영도하에 로동당 중심의 제한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집약적으로 정리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의 향방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는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퇴조추세속에서 과도기적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는 천안문사건이후 중국이 모택동사상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역시 다방면의 '政治思想教育'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역시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후계자인 김정일의 승계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수령론은 북한의 표현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속에서도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간주하는 '首領에 대한 忠實性'이 사회주의권 개혁으로 쉽게 포기되어 질 수 없고 동시에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수령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집체적 의견을 수용한 '뇌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든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의 차원에서든--大衆路線(북한식 표현으로는 혁명적 균중노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셋째 '革命的 群衆路線'의 강조속에서 북한의 대중들의 생활상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강구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정세의 압력속에서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인민대중의 생활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민중들의 통일적 열망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과 그의 측근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신진관료계층은 '3대혁명의 지속'을 통해서 특히 조일수교나 유엔동시가입등의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국내의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넷째 혁명1세대인 빨찌산그룹이 대거 퇴진하고 신진기술관료와 지식인계층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권력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들이 향후 북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책임맡고 있다. 물론 원도정치세력인 혁명1세대가 아직도 주요한 정치권력에 남아있지만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중청의 결합'(3결합)의 형태로 원로세대의 경험과 신진세대의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이종욱, 박성철, 김중진, 오진우 등 조선노동당이나 주요한 국가기구 내의 혁명1세대가 중요한 정치적 위기나 후계자로의 안정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후계자로의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대간의 교체물 비롯한 정치권력 전반에 '엘리트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교체는 자본주의 진영이나 에타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식대로 권력엘리트내부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보다 빈번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나 '보다 효율적인 경제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관료의 교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든 과거보다 뚜렷해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관료와 지식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섯째 지방의 分權化 즉 중앙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인민정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계위원회의 설치나 최고인민회의 대표자격에 지방인민위원회를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연방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주의판 지방자치'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관료봉치가 지방의 대중들로부터 이반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적으로 말해서 현상만을 바라보고 선불리 북한의 모델을 '루마니아식 민중봉기모델'로 논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식 개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협적 판단일 뿐이며, 이러한 해석은 풍일을 사고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 V.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統一展望

### ：南北韓 統一方案의 몇가지 原則

#### 1. UN同時加入 以後의 南北關係의 展望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가 '혁신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성격이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완전히 뛰어 넘는 상당한 정도의 원칙적 수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한소수교와 연이은 한소정상회담의 개최 그리고 조일수교협상의 진전 등이 한 예이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적인 주변정세의 변화는 결국 '남북한 유엔동시기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동안 북한내의 권력구조분석과 그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유엔동시기임이후의 한반도 통일 방안'의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韓蘇修交」와 「朝日修交協商」의 構造的 本質

동북아의 재편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수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된 '한소국교수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페레스트로이카와 북방정책의 만남이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85년 이후 소련이 취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의 구도와 그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의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이론적으로 언급하면 헬싱키 체제와 같은 유럽 방식의 긴장완화방안(한반도판 2+4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형태는 지난 모스크바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1)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미군철수 2)국제적인 협의체를 통한 태평양지역의 공동협력과 평화모색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련은 현재 자국내의 정치경제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독일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소련의 국가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면서 '대상국가의 평화체제 구축'을 부차적으로 노력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남한과 소련 간의 밀월관계는 오히려 소련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북한의 대소 무역의존도와 소련의 동북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대내적 경제문제의 해결과 대외적 고립화의 탈피라는 현실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대소관계의 악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천안문사태와 소련쿠데타 이후 중국과의 관계강화 그리고 전격적인 일본과의 수교협상 그리고 베트남 등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강화 등을 통해서 남한의 북방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소위 남방외교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련과 남한 간의 국교수립, 그리고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

악화가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협상이라는 급진적인 관계 개선을 촉발한 하나의 주요한 계기라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에 있어서 또다른 주요한 변수는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한 부분이다.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 개혁을 지속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경제적 위기는 악화되었고 지난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개혁을 보다 가속화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유엔 동시가입, 나아가서는 단독가입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사전 정비작업을 오랜동안 하여왔다. 따라서 정경브리엔칙에 입각해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관계자는 한반도에 '두개의 조선'이 존재함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천안문사태 이후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을 두번이나 방문,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확실하고도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국 자체의 어려움과 국제정세의 혁신적 재편에 동참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중국과 유사하게 동북아에서 소련과 미국에 비해서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 열세하다는 불만감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래 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등거리외교'이다. 또한 이러한 외교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미국-소련-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정치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방정책에 의해서 소련 및 중국과 전격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가는 남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수동적인 대응을 하여 왔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의사를 표명, 조일수교협상이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이다.<sup>1)</sup>

## 2) 유엔 同時加入이후의 南北關係의 展望

어느 시기보다 한반도통일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90년이었다. 3차에 걸친 총리회담의 성사와 베이징 대회의 공동응원, 그밖의 문화적 교류 등은 바로 남한내의 북방통일정책의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중요한 추동력이었지만 북한의 대남(對南) 통일정책의 전향적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sup>2)</sup>

1) 참고적으로 조일수교협상 과정의 주요 의제를 보면 1)북한, 일본 관계 정상화 2)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3)국제 문제 등 기타 관심사항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있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문제'와 '북한의 원자력기구의 핵사찰문제'이다. 전자가 북한의 경제개발비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면 - 남한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 후자는 미국의 대북한 압력용 카드에 일본이 보조를 함께 하여야 하는 측면에서이다.

특히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북한의 연행목 총리의 기본발언<sup>2)</sup>에서 극명히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한반도통일과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들었다. 이는 ‘두개의 조선정책’ 반대와 유엔에 대한 단일의식의 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방북인사 석방과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리해진 동북아정세를 이용하여 남한정권이 은밀히 추진했던 유엔 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에 대한 문제제기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조응하면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로동당과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의 공동선언’의 형태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식민통치를 보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수립을 추진하고 조선은 하나이며 양국간의 교류증진을 모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다. 이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다가 최근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급진전원 관계 개선의 부담 등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화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감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90년도 북한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수세적 대응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사회주의권 개혁의 문제점을 ‘북한식’대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국과의 관계도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한반도통일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급회담을 지속시키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축은 3차총리회담에서 천명된 것처럼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 군사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 일성은 91년 신년사를 통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다시금 제안하면서 “불가침선언”과 “조미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아시아지역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혁신적 진전으로 이어져 결국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는 우선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냉전시대에 존재하던 기존의 원칙적인 통일방안과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大地殼變動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하였다. 나아가서는 서독에 흡수통합된 ‘東獨의 운命’이 현재 ‘미국과 남한정권’

2) 『로동신문』 90년 9월 22일 1차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북측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단독가입을 불사하겠다는 남조선 외무장관과 유엔 대사의 발언은 두개 조선 조작이며 남조선이 단독가입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북한측 유엔 대표연설에서도 ‘통일전 단일국호로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최근의 주장에서 보다 후퇴하여 ‘어떠한 방법도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었다.

3) 로동신문 90년 9월6일

에 의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北韓孤立化 政策에 의해서 북한에게도 완전히 예외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결과였다.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어느 한 체제가 서로 다른 체제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金主席의 신년사와, 남한의 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김주석과 김정일(아직 미확인된 사실이지만)의 급한 행보가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朝日수교에 대한 북한의 대단한 집착은 이러한 북한의 고민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朝日수교는 결국 현재적 의미는 韓蘇수교의 충격으로부터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이자, 내부의 경제발전비용을 산출해 내기위하여 선진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토대구축의 주요한 계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北韓의 外債規模와 상응하는 '500억불에 달하는 전후 보상금 문제'는 작금의 북한상황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 우선은 社會主義 友邦國家이던 소련과 중국이 자국내의 경제발전과 내적인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는데 여념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국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존재하는 냉혹한 동북아의 현실이 과거와 달리 91년도의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입지를 매우 악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미국과 남한의 강화되는 압력이다. '核安全協定の 加入'을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허용하겠다는 양국의 발상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朝日국교수립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남한의 北方政策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북한의 南方外交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계기로 東南亞의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 파장력이 크지 않다. 국제적인 회의로 國際議員聯盟(IPU) 총회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남북 체육회담을 진전시키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속시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동북아의 헤게모니투쟁에서 당면하고있는 문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國內經濟의 回復과 後繼者問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통일선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정착과 통일문제는 부차적인 과제로 놓여지게 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 2. 結論을 대신하여

### ：韓半島統一에 있어 몇가지 原則

노태우·대통령은 유엔동시가입의 연설에서 '북한의 연방제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였고, 미국 역시 소련사태이후 '남한의 핵무기 철수의 가능성'을 비중있게 언급하였다. 반면 북한 역시 아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탈냉전의 기류'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남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경제·문화교류'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과거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던 '평화협정의 체결'을 비롯한 각종 통일방안의 핵심적 사안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방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장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몇가지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남북한 당국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통일방안의 내용까지도 포괄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원칙적인 수준의 제기이고 당장에 현실화할 수 없는 여러가지 국내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통일방안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그 기본원칙의 대강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다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간참여의 원칙'을 추가하였다.

우선 自主의 原則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한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통일이 논의되고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남북한 공히 외세의 정치군사적 종속으로부터 탈피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군의 점진적 철수는 물론이고 각종 불평등한 조약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평등한 국제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 남북한 모두 '지립적 민족경제'를 확고히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국가나 여타의 사회주의 강대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여지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유엔동시가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가간의 각종 '기본조약 체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극적인 평화적 국제기구의 상설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수준을 포함한 것으로 공동안보 혹은 공동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평화기구의 설립이 포함된다.

둘째 平和의 原則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의 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남북한 정부에 의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내외적 평화선언과 상설적 기구의 설립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1. 군비축소를 위한 전문연구위원회의 상설적 운용과 구체적 대안 마련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반전반핵평화운동을 넘어선 보다 대중적인 반공해-생명운동이 전개되어 남북한 통일정부의 수립이후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民族大團結의 原則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남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절실하다. 양국의 국민 모두가 '통일지향적 자세'에서 서로의 건강성을 바라보기 보다는 '경쟁적 비판'에 앞서왔다. 이의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는 '통일교육'은 물론 '남북한의 진실을 복원시키는 작업'에 앞장 서야한다.

1.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가능한 통일의 경로와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사회 각 부문에서의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사상적인 수준에서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주의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통의 기반 마련에 양국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民主主義의 原則이 구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의 원칙'이 포함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다음과 같다.

1. '반통일적인 악법'은 양국 정부 스스로가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형법과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이산가족의 만남과 실현을 위해서 혁신적인 조치가 주각 마련되어야 한다.

1. 남북한 내부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의 동시적 구현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民間水準의 參與의 폭을 넓히고 특히 民衆優先의 參與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창구단일화 원칙을 지양하여 다양한 민간교류를 남북한당국이 전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1. 항상 통일논의에서 배제되어온 남북한의 민중, 특히 다양한 사회단체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의 배려가 시급하다.

1.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민중의 피해와 통일로 인한 민중복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통일조국의 건설'이 다수 국민대중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설득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이 이후에 남북한 당국과 국민대중 전체에 의해서 구현된다면 '통일조국'은 조만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分斷된 民族의 恨도 이제 歷史의 場에서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단행본〉

- 로동신문/민주조선/근로자(평양:근로자사)외 북한신문  
 김일성선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동, 1988  
 조선전사 1-33(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2)  
 조선중앙년감(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87  
 北朝鮮研究(동경, 국제관계공동연구소, 1974)  
 統一朝鮮年監(동경: 통일조선신문사, 1966, 1967)  
 朝鮮資料(동경, 조선문제연구소)  
 한국·북조선 요람(동경, 원서방, 1986)  
 북한정권기관의 조직적 변천과정(국토통일원, 1977)  
 조선노동당 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1-4(국토통일원, 1989)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1-4(국토통일원, 1989)  
 북한의 기관 및 단체별 인명집(국토통일원, 1977)  
 주체사상 총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백두연구소 (편), 백두, 1988  
 조선로동당력사교재  
 조선철학사  
 조선통사(상/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오월, 1988  
 북한경제개관, 국토통일원, 1989  
 북한경제자료집,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 1989  
 북한인명사전(중앙일보사 동아문제연구소 편 81년판?)  
 북한을 움직이는 100인(월간경향 89년 부록)  
 金哲英 朝鮮名士物語(동경, 조선청년사 1984)  
 서희수 북한엘리트구조의 변화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1983)  
 배환달, 『북한권력투쟁론』 (학문사, 1990)

## 〈논문〉

## 1) 국문

김봉천, 「김일성·김정일체제의 항배」, 『국제문제』 제21권 6호 (1990) pp.48-61.

권혁기,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2집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986.2)

김남익, 「북한의 권력구조」, 『사회과학연구』 제12집 (경희대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5-26.

김병진, 「김정일후계체제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 『통일안보논총』 제3집 (강릉대 통일문제연구소, 1986. 12) pp. 81-110.

서대숙, 「북한내정과 통일정책」, 『공산권연구』 (1986. 5)

신승권, 「소련과 한반도」, 『평화연구』 제10권 2호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86. 2) pp. 85-98.

유석렬, 「김정일의 대두와 정권승계」, 『아세아연구』 제30권 2호 (1987. 7) pp. 61-116.

유석렬, 「북한의 정치정세와 개방화정책」, 『동아연구』 제8집 (1986. 7) pp. 3-24.

윤병익, 「북한의 체제변화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1집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pp. 43-62.

이석호, 「군비통제와 정치경제: 북한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제26집 2호 (1986) pp. 107-130.

이정수, 「최근 북한의 정치동태분석 - 권력구조, 인물변동, 정책전망」, 『통일논총』 제6권 2호 (1986) pp. 151-170.

권정호, 「사회주의 국가론과 북한체제의 특성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2집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1988)

김남익, 「북한과 중국, 소련과의 체제발전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제8권 2호 (국토통일원, 1988)

도홍렬, 「북한의 사회구조와 체제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1989년 봄호 (국토통일원) pp. 193-325.

조영환,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북한의 개혁가능성」,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 (국토통일원, 1989) pp. 285-305.

배원달, 『북한권력투쟁론』 (학문사, 1990)

## 2) 영문

Chung Chong Wook, "China's Role in Two-Korea Relations in the 1980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7, No.3 (Autumn 1986) pp. 52-66.

Jo Yung-hwan,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Asian Survey* Vol.26, No.10 (October 1986) pp. 1092-1117.

Kim Gahb-choi, "The Style and Policies of the Post-Kim Il-Sung Regime in North Korea" *Vantage Point* Vol.10, No.1 (January 1987) pp. 1-12.

Kim Yu-nam, "Soviet Strategy under Gorbachev: Implications for Korea", *American & Soviet Studies* 1986, pp.3-22.

Park Han-Shik & Park Kyung Ae, "Bases of Regime Legitimacy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l.18, No.3 (Autumn 1987)

Pfaltzgraff Robert L., "Soviet Strategy and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80s", *Korea and World Affairs* Vol.10, No.2 (Summer 1986) pp.324-345.

Shlyk N., "Economic Ties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Far Eastern Affairs* 1986.2, pp.136-143.

Suh Dae-Sook, "Changes in North Korean Politics and the Unification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Vol.9, No.4 (Winter 1985) pp.684-706.

Suh Dae-Sook, "North Korea in 1985: A New Era After Forty Years", *Asian Survey* Vol.26, No.1 (January 1986) pp.78-85.

Suh Dae-Sook, "North Korea in 1986: Strengthening the Soviet Connection", *Asian Survey* Vol.27, No.1 (January 1987) pp.56-63.

Yu Suk Ryul,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5, No.1 (Spring-Summer 1986) pp.1-20.

Kim Young Nam, "A View from Pyongyang", *International Affairs* 1990.1. pp.141-145.

Oh Kong Dan, "North Korea in 1989: Touched by Winds of Change?" *Asian Survey* Vol.30, No.1 (January 1990) pp.74-80.

Kuni Akira, "North Korea: In the 1980s and 1990s", *East Asian Review* Vol.2, No.1 (Spring 1990) pp.81-98.

Back Jong-Chu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for Reunification: Hypotheses and Policies" *Korea and Affairs* vol.11, no.4 (Winter 1987) pp.769-784.

Choe Young, "Confidence-Building and Control Korean Peninsula", *Vantage Point* vol.6, No.9 (September 1988) pp.1-32.

Chon Young-hon, "North Korea's Chang Communist System and Its Unification Ideology(2)", *Vantage Point* vol.6, No.11 (November 1988) pp.1-32.

Chong Tae-hwan,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Freedom Digest* vol.21, No.4 (December 1987) pp.34-40

Chu Yun-Peng "ROC and PRC: Natures of Their Economies and Implications for Their Relationship in Future", *논문집 제5집(승실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7)* pp.15-34.

Cotton James "The Prospect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Succession" *Korea and World Affairs* vol.11, No.1 (January 1988) pp.79-94.

Foster Richard B. & William M. Carpenter,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soviet-North Korean Allianc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7, No.2 (Fall-Winter 1988) pp.151-163.

Ha Young-chool, "Behaviors of Small Socialist States: The Case of North Korea & Rominia"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8) pp.23-32

Harrison Selig S., "Changing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0, No.3 (Fall 1989) pp.343-360.

Kim Roy, "Gorbachev's Asia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Korean Observer* vol.18, No.4 (Winter 1987) pp.380-408.

Koh B. C., "North Korea in 1988: The Fortieth Anniversary" *Asian Survey* vol.29, No.1 (January 1989) pp.39-45.

Mikheyev V., "The DPRK's Regional Economic Relations", *Far Eastern Affairs* 1989.2, pp.66-75.

Olsen Edward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 Comparison of U.S vs U.S.S.R. Roles and Interests in the 1990s", *통일논총* 제10집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988)

Rhee Kang-suk, "North Korea's Pragmatism: A Turning Point?", *Asian Survey* vol.27, No.8 (August 1987) pp.885-902.

Rhu Suk-ryul, "The Rise of Kim Jong-il and Heir-Succion Probrem(2)" *Vantage Point* vol.10, No.12 (December 1987) pp.1-11.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鄭圭燮(延世大)

### 要 約 文

본 연구의 목적은 北韓 對外政策의 역사적 전개에는 몇 차례의 變化樣相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외교정책 연구의 환경적 모델에 의거하여 개관한 후 현재 진행중인 주요 정책전개에 대한 影響要因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變化方向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수립 이후 1954년 까지의 기간에는 社會主義 陣營에 국한된 상황에서 국가승인외교와 戰時外交, 전후복구를 위한 외교를 전개했으나, 1955년에 들어 多邊化된 대외정책을 개시하였다. 1961년 이후 북한은 中·蘇紛爭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 3 세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시키면서 대외관계에서 自主的 立場을 모색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전개하는데 영향을 준 國際環境要因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제 3 세계의 등장이며,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 1 차 당대표자대회를 계기로 성립된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통해 성취한 북한의 경제력 상승은 다변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전개를 뒷받침한 국내환경적 요인이었다.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표자대회에서 북한은 對外關係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自主路線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중·소분쟁은 북한의 자주노선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베트남전쟁의 확산이라는 地域體系의 변화와 군사력 강화,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 內政干涉의 경험 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수립에 대한 국내외적 영향요인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외교정책의 “세계화”를 시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남북대화, 미국에 대한 직접접촉 제의, 국제기구에의 가입, 비동맹운동과 77그룹에의 가입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世界化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은 기술관료의 등장, 6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수행과 미·소 데탕트, 미·중국 데탕트, 남한과의 경쟁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 6 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 이념을 “자주, 친선, 평화”라고 체계화시켜 제시하는 한편,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설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對外開放政策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7년 4월에 채택된 북한의 제 3 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경제합작, 합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대외개방정책을 모색하는데 영향을 미친 국내적 요인은 自力更生政策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필요성,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기술관료의 부상 등이다. 또한 중국의 개방정책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 한국의 北方政策등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쳐 온 국제환경적 요인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내·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리식대로 살아 나가자!”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體制固守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편향된 상태에서 소련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한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다.

1988년 12월 6일 미·북한 외교관의 직접접촉 시작, 1990년 9월 일·북한 관계 정상화 추진 합의, 1991년 5월 27일 북한의 유엔가입 공표, 7월 16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와 핵안전협정표준문안 假署名등과 같은 일련의 상황전개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양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연방제가 실현된 후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에 가입하거나 통일전 단일의식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동시가입은 “두개조선”정책에 의한 한반도 分斷의 固着化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한 것에 비추어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그동안 북한이 견지해 온 “하나의 조선”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국제 환경 요인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體制變動과 脫冷戰이라는 세계체계의 변화, 중·소관계정상화와 韓·蘇修交, 한·중 관계증진에 따른 東北亞 兩者關係의 재조정, 남한과의 격차 심화 등이다. 또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되어 파생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잠재적 불안정성, 경제침체의 지속과 같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現實政治의 인

정에 따른 現實主義 路線을 채택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은 중국과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과 소련과의 기존 관계유지, 동유럽 국가들과의 기존관계 유지, 대미·일접근 가속화, 이중적인 對南政策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증진 모색 등과 같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이 가속화되어 북한의 대외정책의 變化方向은 대중·소 동맹관계의 유지와 미·일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양자관계의 재정립, 남한과의 平和共存體制의 구축,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등으로 展望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改革과 開放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만, 개혁·개방은 경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촉진시켜 體制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정하는 등 “통제된 개방”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I. 序 論

북한은 對外政策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sup>1)</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정한 정치적 목적의 실현이란 북한의 對外政策 目標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안전 유지, 국제적 위신의 증대, 경제적 번영,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과 “하나의 조선”정책에 입각한 韓半島 統一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는 몇 차례의 變化樣相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외교정책 연구의 환경적 모델(environmental model)에 의거하여 개관한 후, 현재 진행중인 주요 정책 전개에 대한 影響要因을 분석하여 앞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方向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외교정책 연구에서 환경적 모델의 핵심주제는 환경적 요인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인지되고 반응함으로써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병철교수, 브레커(Michael Brecher), 파파다키스(Maria Papadakis)와 스타(Harvey Starr)의 모델을 원용하여 다음의 그림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動因을 규명하려 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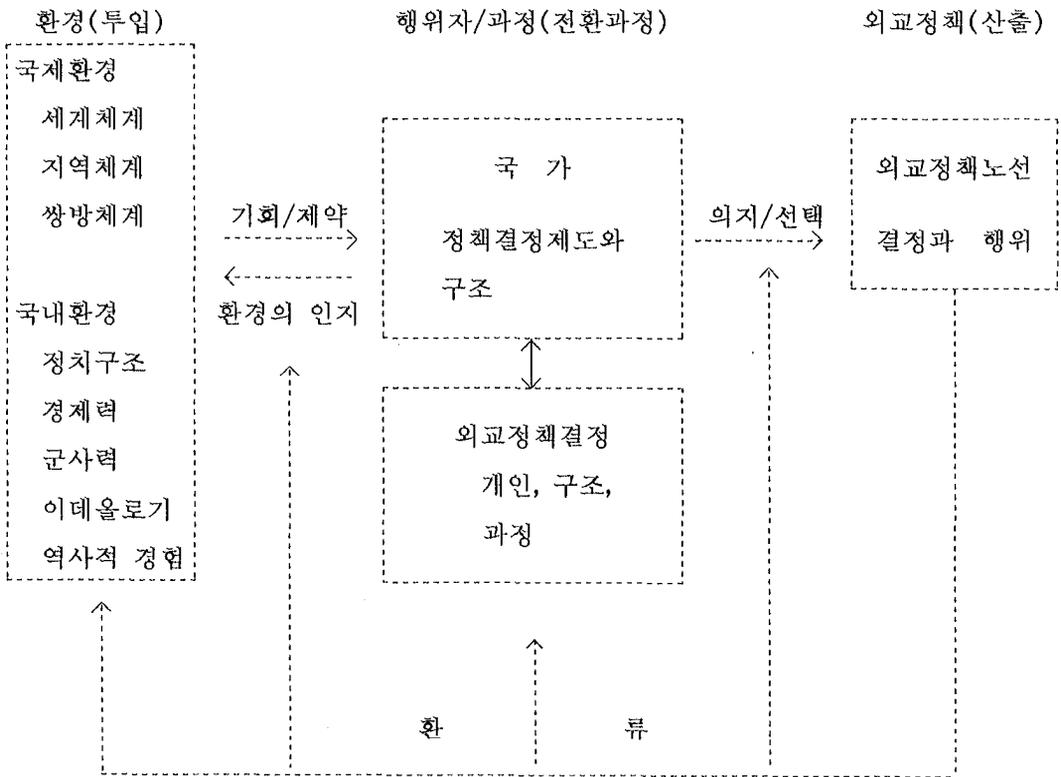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틀은 체계이론의 기본도식인 투입, 전환과정, 산출, 환류로 구성된다. 投入은 국제체계내의 모든 행위자 사이의 총체적인 관계의 網인 전세계체계, 동북아시아의 지역체계, 두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의 전체 양태인 쌍방체계 등의 國際環境과 정치구조, 경제력, 군사력, 이데올로기, 역사적 경험 등으로 형성된 國內環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분석틀에서 브레커와 고병철교수가 제시한 이데올로기, 역사적 경험, 개인적 특질 등의 태도적 프리즘과 조작적 환경에

1)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79.

2)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Michael Bre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 Setting, Images, Process*(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2) ; Maria Papadakis and Harvey Starr, “Opportunity, willingness, and Small States :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Foreign Policy,” in Charles F. Hermann, Charles W. Kegley, Jr., and James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Boston : Allend & Unwin, 1987), pp. 409-432 참조

대한 엘리트 이미지라는 심리적 환경은 제외되었다. 단,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경험이라는 변수는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 전체에까지 전파되어 하나의 政治文化를 형성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환경에 포함된다. 환경은 외교정책을 위한 기회와 제약으로 작용하며, 정책결정자들은 환경에 대한 인지와 의지(선택)에 따라 가능한 외교정책의 路線을 결정한다. 결정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결정들과 행위가 전개된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產出은 외교정책 체계의 각 구성요소에 還流된다.

그림 : 본 연구의 분석틀



북한의 對外政策은 국제-국내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陣營外交(1948-1954), 대외정책의 多邊化(1955-1965), 自主路線의 수립과 전개(1966-1970), 대외정책의 世界化(1971-1979), 대외개방정책의 모색(1980이후) 등의 변천과정을 보이면서 전개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체제변동, 한-

소 수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특히 經濟難의 심화와 같은 국내환경의 영향아래 북한 대외정책은 또 다른 變化樣相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그동안 북한이 견지해 온 ‘하나의 조선’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要因分析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變化方向을 전망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 II.北韓 對外政策의 變遷過程

북한의 외교는 국가수립 이후 1954년까지의 기간에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며, 김일성이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 1차회의에서 발표한 政府政綱에서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이 최초로 표명되었다.<sup>3)</sup> 이 기간 북한의 외교는 주로 국가승인외교와 戰時外交,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 획득에 치중되어 전개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후견하에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합법적인 外交的承認을 획득하고, 한국전쟁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 획득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중에 만행을 자행했다는 대외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sup>4)</sup> 한국전쟁 이후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은 정전회담,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획득, 판문점 정치회의와 제네바회의에 있었다. 韓戰期間의 ‘역사적 경험’은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에 대한 敵對政策을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국제적인 승인과 원조는 북한 대외정책의 원직가운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상존시키는 요인이었다.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대외정책의 多邊化의 論理가 최초로 표명된 것은 1955년 2월 25일에 발표된 “대일관계에 관한 외무상의 성명”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

3) 이 政府政綱에서 제시된 대외정책 방향은 독립국가로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과 일본에 적대적인 태도의 표명이다.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4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46 참조.

4)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 까지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의 대북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김일성이 1953년 12월 20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 6차회의에서 행한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문의 전분은 「조선중앙년감 1954-55」, pp. 19-29;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1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617-640 참조.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대외선전 내용에 대해서는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430-433 참조.

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으며 우선 호상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연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는 점을 밝히고, 일본과의 關係正常化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sup>5)</sup> 이러한 다변화의 논리는 1956년 4월 제 3 차 당대회,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1 차회의, 1961년 9월 제 4 차 당대회,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 3 기 제 1 차회의 등에서 김일성이 행한 보고문, 연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첫번째 대상은 일본이었으며, 북한은 1955년부터 인도, 인도네시아와 접촉을 시작하여 점차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범위를 확대시켰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는 平和統一을 표방하며, 군대축소, 국제회의 소집, 연방제 통일방안, 경제문화교류, 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對南政策을 추구하였다.<sup>6)</sup> 1961년 이후 북한은 中·蘇紛爭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 3 세계국가들로의 진출을 가속화하였다.<sup>7)</sup>

북한의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전개하는 데 영향을 준 국제환경적 요인은 소련의 平和共存政策과 제 3 세계의 등장이었다. 북한은 스탈린(Joseph Stalin)사후 전개된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여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sup>8)</sup> 또한 1955년 4월 개최된 반둥회의(Bandung

5) 「조선중앙년감 1956」, p. 16.

6) 이 시기 북한의 주요 대남제외는 제 3 차 당대회,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 1 기 제 12 차회의, 1957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1 차회의, 1959년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6 차회의, 1960년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8 차회의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7)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북한은 알제리(1958. 9. 25), 기니아(1958. 10. 8), 쿠바(1960. 8. 20), 말리(1960. 10. 31), 우간다(1963. 3. 2), 북예멘(1963. 3. 9), 이집트(1963. 8. 24), 인도네시아(1964. 4. 16), 모리타니아(1964. 11. 11), 캄보디아(1964. 12. 20), 콩고(1964. 12. 24), 가나(1964. 12. 28), 탄자니아(1965. 1. 13) 등 13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8) 북한이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의 평화공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구체적인 내용은 鄭鎭渭, 「北方三角關係：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서울：法文社, 1985), pp. 50-53 참조. 북한은 1958년 9월부터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에서 레닌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평화적 공존원칙”으로 표기하였다.

Conference) 이후 1961년 9월 제 1 차 비동맹정상회의 개최등 비동맹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1960년대에 들어 新生獨立國家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서구적 입장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들과의 관계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sup>9)</sup> 결국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제 3 세계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대외정책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 1 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성립된 김일성의 權力鞏固化와<sup>10)</sup> 전후복구 3개년계획 및 제 1 차 5개년계획을 통해 성취한 북한의 경제력 상승은 다면대외정책의 효율적인 전개를 뒷받침한 국내환경적 요인이었다. 특히 북한은 經濟力을 바탕으로 제 3 세계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제발전 모델을 신생독립국가에게 부각시키면서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sup>11)</sup>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다면대외정책의 전개와 함께 대외관계에서 自主的 立場을 모색해 왔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3 기 제 1 차회의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9) 북한이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의 하나가 제 3 세계 국가의 등장이었다는 점은 「조선전사」의 다음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하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밀리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196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0」(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430.

10) 김일성은 1961년 제 4 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특히 당은 1956년 8월의 전원회의와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내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한 점에서 김일성의 권력공고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 1962」, p. 45 ;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Part 1*. p. 561.

11)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9), p. 167. 이 시기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평가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 Economy : structure and Development*(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p. 156-161 참조.

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간의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주장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간에 서로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그 나라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sup>12)</sup>

이후 북한은 일련의 「로동신문」 논설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自主路線을 거듭 표명하였고,<sup>13)</sup>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 대표자회의에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自主權과 平等權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sup>14)</sup> 북한은 1967년 12월에 발표한 政府政綱을 통해 자주노선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sup>15)</sup> 自主路線의 樹立으로 주체사상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이후부터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자주’는 북한 대외정책의 제 1 원칙으로 지속되고 있다.<sup>16)</sup> 북한이 자주노선을 선포한 이후 대외정책 분야에서 ‘자주’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對南強硬政策의 전개와 反美鬭

12) 「조선중앙년감 1963」, pp. 38-39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Ⅱ輯」, p. 1175.

13) 구체적인 예는 1963년 1월 30일자, 1963년 10월 28일자,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논설 등과 1965년 4월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연설, 1965년 10월 당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의 연설 등이다.

14)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중앙년감 196-67」, pp. 100-130 참조.

15)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중앙년감 1968」, pp. 1-29.

16) ‘자주’에 대한 북한의 개념정의는 「정치용어사전」, p. 430 ;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64-765 ; 「철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8 참조.

쟁이라는 슬로건을 강화시킨 것이다.<sup>17)</sup>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준 결정적인 요인은 中·蘇紛爭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었다.<sup>18)</sup>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중-소분쟁은 자주노선 수립의 기회가 되었으나, 실리적인 면에서는 제약이 되었다. 북한은 韓日國交正常化와 베트남전쟁의 확산이라는 地域體系의 變化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판단되며, 이는 자주노선 수립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sup>19)</sup>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은 김일성 唯一體制의 형성과 연관되고, 軍事力 強化는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선포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었다.<sup>20)</sup> 해방 이후 북한이 중-소 양국으로부터 받아 온 내정간섭은 자주노선을 선포하게 된 역사적 경험이었다. 즉 내정간섭의 배제가 곧 자주노선의 수립으로 표출된 것이다.<sup>21)</sup> 특히 1966년 8월 12일자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教條主義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자주노선이 중국과의 쌍방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표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17) 이 시기에 북한의 대남전북활동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Rinn-Sup Shinn,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I(January/February 1973), pp. 60-62 참조. 1968년 1월 23일의 푸에블로(Pueblo)호 나포사건과 1969년 4월 15일 EC-121기 격추사건 등은 소련의 사전양해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arry Gelman and Norman Levi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Santa Monica : Rand, 1984), p. 18 ; B. C. 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 4(April 1969), pp. 264-280.

18) Dae-Sook Suh,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06 ; 「조선전사 30」, p. 437.

19) 鄭圭燮, “北韓 外交政策의 環境要因과 變化過程 研究”(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pp. 77-83.

20)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과 자주노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 1969」, p. 120 참조.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5 차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을 채택한 이후 1964년 2월부터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군사력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21)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 1966년 8월 12일자 ; 「김일성저작선집 4」(1968), p. 348.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對外政策의 ‘世界化’를 시도하였다.<sup>22)</sup> 북한이 구체적으로 대외정책의 세계화에 대한 논리를 표명한 것은 1970년대 초 김일성이 외국기자들과 행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서이며,<sup>23)</sup> 이러한 정책변화는 김일성이 1971년 11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보고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24)</sup> 북한의 대외정책의 세계화 논리는 김일성이 1972년 1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1차회의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체계화되어 표명되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sup>25)</sup>

22) 1970년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을 세계화(globalization)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Samuel S. Kim, “Pyongyang, the Third World, and Global Politics,” *Korea & World Affairs*, vol. 3, no. 4 (Winter 1979), pp. 439-462 참조.

23)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 10월 8일, 1972년 1월 10일, 9월 17일 일본기자와의 담화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관계의 도모의지를 표명하였다.

24) 『조선중앙년감 1972』, pp. 279-281; 『정치사전』, pp. 842-843; 統一院,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p. 354.

25)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중앙년감 1973』, pp. 28-29.

이와 함께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6조는 북한이 추구한 대외정책 노선의 세계화 논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自主性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의 강화, 반제반미투쟁 강화,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지지, 反帝力量과의 연대성 강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추구되었다.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북한은 제 5차 당대회 이후 제 6차 당대회까지 66개국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결실을 얻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세계화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추진한 실제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관계개선과 서방으로부터의 플랜트 수입, 차관도입 등 경제관계의 확대, 유엔주재상주대표부의 개설과 유엔산하기구에의 가입, 미국에 대한 직접접촉의 제의, 南北對話, 비동맹운동과 77그룹에의 가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국내환경적 요인은 군사력 강화보다 經濟成長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技術官僚의 등장이라는 政治構造의 변화와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에서 공표된 6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이었다.<sup>26)</sup>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對外經濟交流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세계화라는 논리를 산출하였다. 1969년부터 미-소 데탕트가 이루어진 국제환경은 북한의 정책진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미-중국 데탕트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여 駐韓美軍 철수의 실현, 대외적으로 국가지위와 이미지의 증진,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상품의 도입 등을 도모하면서 남북한간의 직접접촉과 외교활동의 급속한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sup>27)</sup>

26) 제 5차 당대회에서 개편된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은 Lee and Scalapino, *Communism in Korea, Part I*, pp. 661-664 ; Suh, Kim Il Sung, pp. 246-247 참조, 6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 1971」, pp. 16-21 참조.

27) Chong-Sik Lee, “New Paths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VI, no. 2 (March/April 1977), p. 56 ; Chong-Sik Lee, “The Impact of the Sino-American Detente on Korea,” in Gene T. Hisao, ed., *Sino-American De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New York : Praeger, 1974), pp. 189-206.

이에는 남한과의 外交的-經濟的 競爭에서 열세에 처한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작용하였다.<sup>28)</sup>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과정에서 1980년대에 들어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對外政策 理念이 체계화된 것과 對外開放政策을 모색-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 6 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확대발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 제의와 함께 북한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체계화하여 공표하였다.<sup>29)</sup> 북한이 제시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은 ‘자주, 친선, 평화’이다.<sup>30)</sup> 이 이념은 1988년 9월부터 ‘자주, 평화, 친선’으로 그 우선순위가 변하여 제시되고 있다.<sup>31)</sup> 북한은 1966년 자주노선의 수립 이후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확고히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親善이라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가, 제 3 세계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단, 북한 대외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非同盟國家들이 분열양상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國家利益의 향상은 미약한 것이었다. 북한은 제 6 차 당대회 이후 非核-平和에 대한 주장을 고조시키고 있다.<sup>32)</sup>

북한은 제 6 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 이념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과 함께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강조하였고,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제 7 기 제 3 차회

28) 1970년 말 현재 남북한의 수교국 수는 각각 83 : 36이었고,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도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pp. 11-12 ; Lee, “New Paths for North Korea,” p. 56.

2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 6 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p. 28-76 참조.

30)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정책 이념에 대한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는 ; 정동욱,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26호(1986년 2월), pp. 88-92 ; 고성순,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38호(1987년 2월), pp. 92-96 참조.

31)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32.

32)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 김수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근로자」, 제533호(1986년 9월), pp. 72-76 ;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반핵평화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이자,” 「로동신문」, 1991년 7월 25일자 참조.

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채택하여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sup>33)</sup> 북한은 經濟合作과 技術協調의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sup>34)</sup> 북한은 1985년 3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세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sup>35)</sup> 김일성은 1985년 6월 9일 「世界」誌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합영법 제정의 意義와 앞으로의 경제합작과 교류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나라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 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sup>36)</sup>

33) 「조선중앙년감 1985」, p. 124 ; 이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의 전분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589-597 참조.

34) Young Whan Kihl,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0 (April 1986), pp. 164-165 ;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1985년 제 6 호, pp. 41-46 참조.

35)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 no. 12(December 1988), pp. 1272-1273 ;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0), pp. 257-258 참조.

36) 「조선중앙년감 1986」, p. 18.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 3 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경제합작, 합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sup>37)</sup>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의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sup>38)</sup> 라고 말하여 대외무역의 확대, 합영, 합작사업의 확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自立經濟가 결코 폐쇄적인 자력갱생원칙의 고수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sup>39)</sup> 결국 북한은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로 나타나는 대외개방의 논리를 이미 구축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대내적인 制約要因으로 인해 북한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합영사업을 추진해 온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게 된 근본원인은 계획경제,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제 2 차 7개년계획과 제 3 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기본과업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對外經濟關係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했다. 즉 북한의 經濟狀況은 대외개방의 모색에 핵심적인 影響要因인 것이다. 政治構造의 측면에서 제 6 차 당대회를 계기로 형성된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세대교체의 가속화, 엘리트의 역할분화, 기술관료의 부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sup>40)</sup> 특히 技術官僚

37) 북한의 제 3 차 7개년계획 법령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910-924 참조.

38) 「조선중앙년감 1989」, p. 24.

39)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논문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 144.

40) 제 6 차 당대회시 개편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Kim, Kim, Il Sung, p. 112 ; Nam-Sik Kim,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 An Analysis of the Sixth Congress of the KWP,”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 no. 1(Spring/summer 1982), p. 141 참조.

의 대거 부상이라는 현상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통해 後繼體制를 공고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것은 북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였으며, 이를 위해서 대외개방의 모색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기술관료의 부상이라는 국내환경이다.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준 외적 요인은 우선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開放政策이다.<sup>41)</sup> 한국의 北方政策의 추진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인 동시에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체제변동과 맑스-레닌주의의 붕괴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와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라는 體制固守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편향된 상태에서 소련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한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다.

---

41) 김일성은 1982년 9월 중국방문시 중국이 1978년 12월 제11기 3중순에서 결정한 대외개방, 경제개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정책을 支持하고 있다.

### Ⅲ. 北韓·對外政策의 變化動因

북한 대외정책의 추진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이라는 세계체계의 변화, 중-소 관계정상화와 한-소 수교, 한-중 관계증진에 따른 동북아 양자관계의 재조정, 남한과의 격차 심화라는 國際環境要因과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 정치체제의 잠재적 불안정성, 경제침체의 지속등 國內環境 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요인의 대부분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북한은 體制維持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대외정책을 전환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곳에서는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動因을 국내 국제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려 한다.

#### 1. 國際環境要因

##### (1) 社會主義圈의 體制變動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집권 이래 적극 추진되어 온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는 소련사회의 민주화-다원화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등 소련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시킨 동시에, 동유럽국가들의 民主化를 촉진시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脫冷戰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소련의 '新思考' 정책의 영향에 따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급속한 정치-경제개혁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당과 국가기관의 권력축소 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기구의 확대,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다당제의 도입, 共產黨 一黨獨裁의 종식에 이어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되었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동유럽 社會主義圈은 와해되었다. 동유럽의 변혁을 계기로 개최된 1989년 10월의 몰타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東-西 冷戰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하여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었으며, 1990년 10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에 의해 獨逸統一이 실현되었다. 더욱이 1991년 8월 소련의 쿠데타 실패 이후 소련공산당이 해체된 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동유럽국가들의 급격한 政治變動이 초래되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자들

에 의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압력에 대한 우려의 표명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sup>42)</sup>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에서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른 변화양상은 帝國主義者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고, 사회주의만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고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북한은 社會主義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sup>43)</sup> 이러한 基調에 입각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변혁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4)</sup>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예견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로 표현하고, 그 원인은 帝國主義의 평화적 이행 전략이라고 언급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여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42) 김일성,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50호(1988년 2월), pp. 3-11 참조: 김정일은 1988년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행한 담화에서 “현시기 인류의 자주화위업은 우리 시대의 기본호를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질탁하여 똬합된 세력으로 세계자주력량을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變革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그 원인이 帝國主義에 있다고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근로자」, 제565호(1989년 5월), p. 4.

43) 김일성, “신년사,” 「근로자」, 제561호(1989년 1월), p. 9.

44)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은 말 그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워 온 세계를 황색세계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화하려는 악랄한 반공전략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의 특징은 그것이 힘의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평화체략을 전면에 내세운 반혁명적 양면전술책이라는 것이다.” 「로동신문」, 1990년 12월 14일자.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어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sup>45)</sup>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體制固守를 위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구호 아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黨 업적의 고수와 계승발전, 주체사상 교양 강화,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개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sup>46)</sup>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라고 언급하여 北韓社會의 우월성을 재강조하였다.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수령 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체제고수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러한 體制守護型의 선전상징조작에서 북한이 체제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북한은 동유럽국가들의 체제변동에 대한 실제 정책측면에서의 대응으로 해외에 유학중이거나 기술훈련중인 인원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여 體制結束을 도모하면서 ‘사회주의원칙의 고수’를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45)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78호(1990년 6월), p. 17.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평화적 이행〉의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 세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46) 고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1989년 10월), pp. 15-20. 이 글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의 개념정의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관계를 지속시켜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체제변동과 韓國의 北方政策 추진이 맞물려 이루어진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外交關係 樹立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인 비난과 대사 소환 등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면서 동유럽국가들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sup>47)</sup> 199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 오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북한은 1990년 11월 헝가리, 1991년 1월 폴란드와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12월 소련과 규격-계량부문 과학기술 협조의정서를 조인했으며, 1991년 3월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등과 과학-기술분야 협조의정서를 조인하였다.<sup>48)</sup>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과 탈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對外政策 推進에 이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脫冷戰에 따른 동-서 긴장완화라는 국제환경은 북한에게 미국-일본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에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체제변동은 김일성-김정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體制維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와해를 초래하여 북한의 外交的 孤立을 심화시키는 '제약'요인인 것이다.

북한은 獨逸統一이 실현되자 남한에 의해 흡수통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을 守勢的 立場으로 전환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간주된다.

## (2) 東北亞 兩者關係의 再調整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東北亞 兩者關係도 획기적인 변화양상을 보였다.

47) Rhee Sang-woo, "North Korea in 1990 :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vol. XXXI, no. 1 (January 1991), p. 74. 한국은 헝가리(1989년 2월 1일), 폴란드(1989. 11. 1일), 유고슬라비아(1989년 12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1990년 3월 22일), 불가리아(1990년 3월 23일), 알바니아(1991년 8월 22일)와 각각 國交를 수립하였다.

48) 「北韓 및 共産圈動向」, 제117호 (1991. 4), p. 33.

그 대표적인 예는 1989년 5월 중-소정상회담의 개최로 이루어진 中-蘇紛爭의 終熄, 1990년 9월 일-북한 수교원칙 합의, 1990년 10월 한-소 수교, 1990년 10월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 1991년 4월 일-소,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 등이다. 이러한 동북아 양자관계의 변화 가운데 북한의 대외정책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소 관계정상화와 한-중, 한-소관계의 긴밀화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중-소 관계정상화는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지만 북한의 대중-소정책 추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中-蘇紛爭이 심화된 이후 양국의 경쟁적 압력의 대상이 된 동시에 競爭的 支持의 수혜자가 되었다. 중-소 관계정상화에 따라 북한은 양국의 경쟁적인 군사-경제-외교적 지원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증진은 기존 북한-중국관계에 대한 장애요인은 아닌 것 같다. 한-중의 非政治的 交流의 증진에 대해 북한은 이미 양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한-중 무역사무소 상호설치에도 불구하고 중-북한간의 전통적인 友好關係는 고위지도자의 빈번한 상호방문에서 나타나듯이 효율적으로 지속되고 있다.<sup>49)</sup> 더욱이 1989년 6월 중국의 天安門事態에 대해 북한은 1989년 7월 1일자 「로동신문」 논설 “중국공산당 창건 68돐”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천안문사태를 ‘반혁명폭란’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 조치를 지지한 이래 양국의 유대는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중-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변혁을 평화적 이행(平和演變)으로 공동인식하는 한편, 실질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共同步調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이라는 제하의 1991년 7월 1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위업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49) 중-북한간 고위지도자의 상호방문은 1989년 4월 趙紫陽의 訪北, 1989년 11월 김일성의 訪中, 1990년 3월 江澤民의 訪北, 1990년 9월 김일성의 訪中, 1990년 11월 연형묵의 訪中, 1991년 5월 李鵬, 6월 錢其琛의 訪北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동기, “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로 확고히 전진하는 중국인민,” 「국제생활」, 제51호(1990년 4월), pp. 30-31 참조.

다”라고 인명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북아 양자관계 개선문제에 대해 중-북한은 한-중 관계증진의 속도를 미-북한, 일-북한 관계개선의 속도에 비례하여 추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韓·蘇 修交는 북한에게 커다란 정치-외교적 손실이었다. 북한은 소련이 추진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군사-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왔다.<sup>50)</sup> 그러나 한-소 수교에 대해서 북한은 “달라로 팔고 사는 <외교 관계>”라는 재하의 1990년 10월 5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소련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한-소 수교는 결국 ‘두개 조선’ 인정, 북한의 국제적 고립, 開放에로의 유도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51)</sup> 한-소 수교 체결과정에서 북한-소련관계는 상당히 소원해지기는 했으나 기존의 同盟關係가 와해되는 국면으로까지 진척되지는 않았다.

한-중 관계증진, 한-소 수교는 북한이 견지해 온 중-소와의 同盟體制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안보체제는 취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양자관계의 제조정으로 남북한 交叉承認은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이며, 북한이 ‘두개 조선’이라는 ‘현실인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 東北亞 地域體系의 변화인 것이다.

### (3)南韓과의 隔差 深化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남한과의 경쟁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초 남한과의 외교-경제정책에서 뒤지기 시작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對非同盟 外交를 전개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군사 부문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國家的 一體性的 확보라는 측면을 제외한 대부분

50) 북한은 1989년 7월 6일자 「로동신문」 논설 “불패의 조조조선”에서 “오늘 소련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를 새로운 수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사업이 심화발전되고 있으며 쏘베트사회의 갱신과정이 적극 추진되고 인민들의 복리가 날로 증진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소련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51)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자.

의 國家能力에서 남한 보다 열세에 있다. 1990년 12월 현재 남북한의 총 수교국 대비는 145 : 105로 남한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은 재분배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sup>52)</sup>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民主化가 진척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체제 경쟁 자체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남한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한 북한은 김일성의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sup>53)</sup>”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경쟁체제를 공존체제로 전환시키려 했다.<sup>54)</sup>

김일성은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공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으로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sup>55)</sup>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체방식으로

52)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비교는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 統一院, 1991), pp. 29-32 참조.

53)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년감 1989」, p. 6.

54) 이러한 해석은 이정식, “공존과 혁명과 통일논의,”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45 참조.

55)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p. 29.

실현되어야 합니다”<sup>56)</sup> 라고 언급하여 한반도내의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존재라는 현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이 ‘수세적 공존’의 입장에서 對南政策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한과의 격차가 심화되면 될 수록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체제유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對外政策도 이러한 政策目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 2. 國內環境要因

### (1) 이데올로기적 要因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며 이는 북한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普遍思想임과 동시에 唯一思想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3가지 構成要素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자주적 입장의 견지, 창조적 방법의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으로 정형화되었다.<sup>57)</sup> 주체사상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政策推進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다. 북한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지도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56) 김일성, “신년사,” 「근로자」, 제573호 (1991년 1월), p. 9.

57) 「철학사전」, pp. 107-117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p. 125-159 참조.

견지한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 다시 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에게 복무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8)</sup>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극단적인  
 反外勢的 論理이다. 이는 북한의 효율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逆機能的 側面은 주체사상의 또 하나의 지도적 원칙  
 인 창조적 방법의 구현으로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창조적 방법을 구현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  
 법”중 후자는 북한의 정책추진에 伸縮性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이다. 북한은 실  
 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  
 이 변화하는 력사적 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  
 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sup>59)</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은 狀況變化에 따른 政策轉換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언제  
 든지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  
 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정책지침의 우선순위  
 는 명백히 자주적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파생한 慣性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급  
 격한 정책전환은 저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 政治的 要因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일성은 북한의 유일한 지  
 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政治體制는 김일성 1인 지배  
 체제(monocracy), 즉 일개인에 의한 통치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체제의 지속에  
 따라 북한의 정책추진에 국내정치적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  
 명하기는 어렵다. 단지 북한의 權力構造에서 군부세력 혹은 기술관료의 부상이

58) 「철학사전」 p. 110.

59) 위의 책, p. 110. 김정일은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  
 사상에 대하여,” p.148.

정책변화와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침체 등의 요인으로 잠재적인 不安安全性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정도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 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제 2 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김일성의 後繼者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외정책을 관장해 왔으며,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확대개편된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軍部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黨-政 모두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sup>60)</sup>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의 담화문을 통해 후계체제가 완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불패성의 담보로 됩니다.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과 당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건설 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발전되어야 합니다.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sup>61)</sup>

김정일의 後繼體制는 이미 공고화되었다고 간주되나 김정일이 국가주석과 당 총비서직에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북한의 권력이양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김정일이 김일성의 직책을 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완

60)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자 : 「內外通信 綜合版 41」, p. 53.

61)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전한 權力移讓에 대한 沮害要因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해요인으로서는 사회주의권의 와해와 경제난의 심화 등에 따른 당 및 군부, 국민의 반발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이 1990년 10월 당 창건 40주년을 맞아 「근로자」에 게재한 글에서 “당 간부대렬에 이색분자, 우연분자들이 끼여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당의 통일단결을 쪼먹는 자그마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sup>62)</sup> 라고 지적한 것은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은 아닐지라도 黨內部에 어느 정도의 분열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의 핵심권력층은 소수의 빨치산 출신을 제외하고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면서 대부분 技術官僚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술관료들은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체제를 옹호하는 인물들로 간주되나, 이들은 혁명1세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의 완화와 실용주의적인 정책추진을 선호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정일이 북한의 軍部를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김정일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취임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군부가 김정일체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이 1991년 4월 군 창건 59주년 기념행사와 「로동신문」 사설에 軍과 수령-당-대중의 統一團結을 매우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군의 헌신성을 촉구한 것은 군부내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3)</sup>

김정일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상존하는 변수는 北韓人民의 支持이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經濟難에 비추

62)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근로자」, 제 582호(1990년 10월), pp. 9-10.

63) 「로동신문」, 1991년 4월 25일자: “조선인민군은 대를 이어가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혁명전사들의 대오이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가장 숭고한 품모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인민군장병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행함으로써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의 영예를 영원토록 빛내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제591호(1991년 7월), p. 14.

이 김정일은 경제의 활성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이 “우리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역으로 국민의 동요징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外部情報가 확산되고 북한지도자들이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추진에 실패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인민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북한의 체제유지는 커다란 위협에 처할 것이다.

북한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정이 필수불가결하나 체제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은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의 획득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수밖에 없다.

### (3) 經濟的 要因

북한은 1987년부터 제 3 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64달러로 추계되며, 북한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經濟成長率에 있어 1990년에는 휴전 이후 최초로 -3.7%를 기록했고 1987-1990 4년간의 평균성장률은 1.21%로 연평균 성장률 목표인 7.9%에 크게 밀도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sup>64)</sup> 그리고 1991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2 차회의에서는 1991년도 예산규모를 173.5억달러로 책정하였고, 예산증가율은 세입기준으로 1990년의 6.2%보다 대폭 축소된 4.0%에 머물렀다.<sup>65)</sup> 북한이 긴축예산 기조로 전환한 것은 경제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貿易赤字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外債부담을 가중시킨 결과 1990년말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은 78억 6천만달러에 달한다.<sup>66)</sup> 이는 북한의 경제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임과 동시에 經濟狀況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첫째 과업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선

64)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p. 3

65) 「北韓 및 共産圈動向」, 第118號(1991년 5월), p. 13.

66)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p. 32.

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운다”는 것은 이들 산업분야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북한경제 전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sup>67)</sup>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으로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45%에 지나지 않고 있고, 주민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食糧事情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다.

북한의 경제침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정치-군사 우선정책에 따라 국민총생산액의 20-24%를 軍事費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sup>68)</sup>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라 중-소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1990년 11월 2일 북한과 소련이 무역대금의 硬貨決濟協定을 체결한 이후<sup>69)</sup>, 중국 역시 북한에게 무역결제 방식의 전환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투자자금의 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 기술 낙후, 생산의욕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관리의 측면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계획과 생산을 원활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0)</sup>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政權維持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민생문제의 해결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

67) 김일성은 이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였다. 이 내용에서 북한경제의 선행부문의 부진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68) 「國防白書 1990」(서울:國防部, 1990), pp. 116-117.

69) 「內外通信」, 第717號(1990. 11. 9).

70)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경제관리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목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sup>71)</sup> 경제침체가 지속된다면 북한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改革과 開放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만, 개혁-개방은 경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초래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의 활성화, 實用主義路線의 채택이 불가결하지만, 이는 逆으로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점에 북한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sup>72)</sup> 그리고 중-소로부터의 대북한 경제협력과 지원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자본과 기술확보를 위해 미국-일본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시키고, 남한과의 실질적인 經濟交流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71) 이에 덧붙여 김일성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려는데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72) 朴漢植-高秉喆, “金日成 以後의 北韓政治 전망,” 「金日成 이후의 北韓」(서울: 國土統一院, 1990), p. 26.

## IV. 變化方向

북한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現實主義 路線에 입각한 對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중국에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대중-소 관계 유지, 동유럽국가들과의 기존관계 유지, 대미-일 접근, 南韓과의 共存 모색,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증진 모색 등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그간 연방제가 실현된 후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에 가입하거나 통일전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두개 조선'정책에 의한 한반도 分斷의 固着化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한 것에 비추어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북한이 견지해 온 '하나의 조선'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양상이 가속화되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중-소 동맹관계의 유지와 미-일과의 관계개선이라는 兩者關係의 再調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가속화, 二重的 對南政策 전개후 평화체제의 구축 등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統制된 開放' 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1. 中國과의 關係緊密化와 對蘇關係 維持

북한은 동북아 4강과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중국에 보다 편중된 상태에서 중-소와는 기존 同盟關係를 유지시키는 한편 미-일과의 접근을 가속화하여 國交樹立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소련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한-소 수교와 소련의 급격한 政治變動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8월의 소련사태 직후 8월 24일 중국 당대외연락부장의 평양방문, 8월 24일 중-북한 외교부장회담, 8월 30일 「91년 과학기술협조의정서」 조인 등 中-北韓의 밀착양상에 비추어 양국은 소련 사태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앞으로도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소련과 같은 政治變動이 발

생하지 않는 한 양국의 협조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경제역량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의 對北韓 經濟支援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관계는 무역결제방식의 硬貨決濟로의 전환 등 현실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재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련의 정치변혁으로 북한은 중국에 더 기울어질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의 對蘇依存도를 쉽게 축소시킬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소련과의 기존 同盟關係를 쉽게 단절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1990년까지 소련으로부터 국제가격의 30%수준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왔고, 북한의 생산부문중 전력의 60%, 철강의 33%, 석유화학제품의 50%, 섬유 40%가 소련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련은 북한의 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 1989년에 들어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거래규모에서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지만 북한의 전체무역고 가운데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년 45—50%에 이르고 있다.<sup>73)</sup> 또한 북한의 武器體系는 대부분 소련식 모델로 이루어졌고 소련과의 군사동맹체제의 지속은 북한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유지시키려 할 것이다.

## 2. 對美—日關係改善

북한은 미국, 일본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는 國交를 樹立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1991년 5월 27일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한 후 8월 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한의 유엔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동시가입이 실현된 것은 북한의 대미—일 접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7월 16일 國際原子力機構(IAEA)와 핵안전협정표준문안에 假署名하여 핵사찰 수

73) 徐鎮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 40年: 資料와 統計」(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9), p. 352; 江原規由, 「89年の 對外貿易」, 「北韓의 經濟와 貿易 전망」(서울: 國土統一院, 1990), p. 70; 「朝鮮日報」, 1991년 5월 9일자 참조.

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9월 이사회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사찰 수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체의 核開發을 은폐시키는 한편, 核査察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미-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sup>74)</sup>

북한-일본관계에서 1990년 9월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로동당과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 國交正常化에 합의한 것은 일-북한 수교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sup>75)</sup>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이 1991년 1월 30일 개최된 이래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은 한반도의 管轄權問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북한의 핵사찰수용, 남북대화 개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등이다.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과 核査察 受容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쟁점중 남은 주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에 관한 양국의 의견조정 뿐이다. 賠償問題는 수교를 먼저 한 후에 협상으로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는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1988년 12월 6일 北京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1년 9월 현재 17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前提條件을 상호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전, 비무장지대에서의 신뢰 구축, 미군유해의 송환, 반미 적대선전활동의 중지, 테러사용의 포기, 核安全協定 加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對美 要求事項은 접촉수준의 격상,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지, 평화협정 체결,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체 구성 등이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미군유해의 반송, 미국

74)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Leonard S. Spector and Jacqueline R. Smith, "North Korea :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March 1991), pp. 8-13 참조.

75) 이 공동선언의 전문은 「국제생활」, 제57호(1990년 10월), pp. 25-26 참조. 1990년까지 일-북한관계의 진전에 대해서는 柳錫烈, 「日-北韓關係發展과 韓半島에 미칠 影響」(서울 :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90) 참조.

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대표단 파견, 미국학자의 訪北招請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미-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인 쟁점들 가운데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한-미군사관계의 재조정에 따른 駐韓美軍과 核武器의 철수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는 타결된다면 미-북한 관계는 급진전되어 관계정상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한, 일-북한 수교는 한-중국 수교와 더불어 동북아 4강의 남북한 交叉承認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로써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 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關係增進 加速化

북한은 1984년 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 7기 제 3 차회의에서 채택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를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여 南南協調와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남남협조를 추진하기 위해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協調와 交流가 강조되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 나라들 특히 동남아세아 나라들과 협조와 교류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완전한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동남아세아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합작과 기술협조를 널리 실현하면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나 동남아세아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다같이 이익을 주고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sup>76)</sup>

이후부터 북한은 南南協調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關係增進을 모색해 왔으며,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

76)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594-595.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 있는 아세아 인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아세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1991년에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연형묵 총리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을 순방하여 태국과 대사관개설과 식량구매 등을 합의하였다. 4월말에는 이종옥 부주석의 베트남, 라오스, 인도 방문이 있었으며, 6월에는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이 김달현의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순방이 있었고 필리핀과는 1991년내에 수교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巡訪外交의 목적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문제의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동남아시아 輸出市場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증진 정책추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상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二重的 對南政策

북한은 1988년부터 남북한 共存體制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그동안 북한이 견지해 온 ‘하나 조선’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공존체제로의 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불가능하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南北韓 關係改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남북한이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서 승인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남북한간의 外交的 競爭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고, 현실인정은 관계개선의 시발점으로 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이 영토의 존중,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유엔憲章을 수락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평화공존체제로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한편,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둘러싼 불가침협정, 군축, 유엔사 및 주한미군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유엔이라는 상설대화창구가 마련됨으로써 남북한의 직접접촉은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유엔 및 산하의 각종 국제기구내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통일우선주의의 강조와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비핵지대화 등 對南攻勢를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이 對南政策을 전향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징후는 없다.<sup>77)</sup>

북한의 對南政策은 단기적으로는 南北對話와 통일전선전술을 병행하면서 非政治的인 交流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미-일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비핵지대화의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對南, 對美關係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다원화된 남한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민족대단결’을 내세우면서 대남평화공세와 함께 統一戰線戰術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남, 대외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징표로 스포츠-문화-학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한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자체의 경제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한과의 經濟交流-協力を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통일방안도 기존의 연방제안을 고수하되 실질 내용을 수정하여 국가연합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sup>78)</sup>

그러나 이미 북한은 ‘수세적 공존’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交叉承認이 완

77) 김일성,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

78)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여 연방제안의 수정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남북한의 基本關係를 규정하는 조약 또는 틀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한의 平和體制가 구축될 것이다.

## 5. 統制된 開放政策

북한이 경제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對外經濟開放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呑臚와 合作을 중시하고 이를 수단으로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을 모색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sup>79)</sup> 북한은 대외개방을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을 開放과 改革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에 대해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평화적 이행〉 전략에 따라 북에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어 공화국 북반도의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 엎고 저들의 체제를 북에까지 연장해 보려는 것이다”<sup>80)</sup> 라고 논평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개방이 북한주민에 주는 영향을 극소화시켜 體制維持가 손상받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은 ‘제한된 지역’을 自由貿易地帶 또는 經濟特區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sup>81)</sup> 이를 통해 북한은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 할 것이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이

79)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함영과 함작은 다같이 상대적으로 기술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을 호상류통하고 공동으로 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이미 1984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영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그를 리행하기 위한 〈함영법 시행세칙〉과 〈함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을 내용으로써 함영과 함작을 위한 법적인 담보들과 그를 널리 장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1990년 12월), pp. 20-21

1984년 9월 함영법 발표 이후 북한의 함작유치실적은 조총련 77건, 소련 25건, 중국 9건, 기타 24건 등 총 135건이며, 함작유치 업종은 서비스, 경공업 및 농수산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p. 22.

80) 『로동신문』, 1990년 12월 7일자.

81) 북한은 1991년 8월 30일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국제세미나」에서 선봉지구의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을 밝혔다. 『東亞日報』, 1991년 8월 31일자.

다. 또한 북한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질서와 경제협력기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나, 시베리아 개발, 중국의 동북경제구를 포함한 여타 경제특구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북한 지도자들은 이미 태평양연안의 경제적 動態性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sup>82)</sup>

---

82) John Curtis Perry, "Dateline North Korea : A Communist Holdout", *Foreign Policy*, no. 80 (Fall 1990), pp. 173-174.

## V. 結論：韓國의 對應方案

북한의 對外政策 變化가 초래할 궁극적인 결과는 동북아 4강의 南北韓에 대한 交叉承認이다. 한국은 1973년 6.23 선언 이래 남북한 교차승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北方政策’ 추진 결과 한-소수교, 한-중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 등을 통해 남북한 교차승인을 현실화시켜 왔다.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기존의 북방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한-미동맹체제, 한-일협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 國家利益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방향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한-중수교를 조속히 실현시키는 문제와 소련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를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實利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북방정책 추진과정과 남북한 교차승인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韓-美, 韓-日關係를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인하여 한-미, 한-일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교차승인을 계속 추진해온 입장이므로 북한과 미-일의 國交正常化에 대해 한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과 미-일의 직접접촉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으로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배제된 채 미-북한간 평화협정의 先締結, 주한미군 철수 합의 등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한국의 對北韓 立地를 축소시키고 안보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북한 직접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관계를 밀접히 지속시키면서, 미-북한관계 진전이 북한의 開放을 유도하고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對美外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실현된 후에도 한국은 미-일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결되는 상황은 곧 4강이 남북한 평화공존과 한반도 현상유지에 이해관계를 같이 함을 의미한다. 이는 現狀打破로 실

현될 수 있는 韓半島統一과는 상호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4강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실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정치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한 주도하에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내부분제화’를 조화-병행시키면서 한반도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이중적인 對南政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대결상황의 해결 등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와 平和共存體制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對北韓政策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북한의 불가침선언, 군축,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철폐, 연방제 등과 같은 대남제의를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통일전선전술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북한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交流와 協力を 증진시킴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선 북한의 통제된 개방지역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정치변동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한편, 민주화의 가속화, 사회정의 실현, 富의 공정한 분배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體制能力을 강화시키고 유엔시대에 부합하는 外交力量의 提高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國 文

- 國防部, 「國防白書 1990」, 서울: 國防部, 1990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제 4 권,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_\_\_\_\_, 「金日成 이후의 北韓」, 서울: 國土統一院, 1990.
-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전망」, 서울: 國土統一院, 1990.
- 朴在圭 編, 「北韓의 對外政策」,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徐鎮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40年: 資料와 統計」,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  
研究所, 1989.
-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柳錫烈, 「日-北韓 關係發展과 韓半島에 미칠 影響」, 서울: 外務部 外交安保研究  
院, 1990.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鄭鎮渭, 「北方三角關係: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 서울: 法文社, 1985.
- 統一院,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 \_\_\_\_\_,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서울: 統一院, 1991.

### 2. 英 文

#### (1) 單行本

- Brecher, Michael,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s,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Chung, Joseph S,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Gelman, Harry and Levin, Norma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  
lations.* Santa Monica: Rand, 1984.
- Hermann, Charles F., Kegley, Charles W. Jr., Rosenau, James N, eds. *New Direc-  
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Boston: Allen & Unwin, 1987.

Hisao, Gene T. ed., *Sino-American De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 Praeger, 1974.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 Praeger, 1969.

\_\_\_\_\_,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Suh, Dae-Sook,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2) 論 文

Kihl, Young Whan,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April 1986), pp. 164-167, 178

Kim, Nam-Sik,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 An Analysis of The Sixth Congress of the KWP",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 no. 1(Spring/Summer 1982), pp. 125-151.

Kim, Samuel S, "pyongyang, The Third World and Global Politics", *Korea & World Affairs*, vol. II, no. 1(Spring/Summer 1982), pp. 439-462

Koh, B. C.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 4(April 1969), pp. 264-280.

Lee, Chong-Sik, "New Path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I, no. 2(March/April 1977), pp. 55-66.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December 1988), pp. 1264-1279.

Perry, John Curtis, "Dateline North Korea : A Communist Holdout", *Foreign Policy*, no. 80(Fall 1990), pp. 172-189.

Rhee, Sang-Woo, "North Korea in 1990 :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vol XXXI, no. 1(January 1991), pp. 71-78.

Shinn, Rinn-sup,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January/February 1973), pp. 55-71.

Spector, Leonard S. and Smith, Jacqueline R, "North Korea :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March 1991), pp. 8-13.

### 3. 北韓資料

「국제생활」.

「근로자」.

「김일성저작선집」, 제 3 판, 제 6 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1973.

「로동신문」.

「사회과학」.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33」, 평양 :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198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정치용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89」,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1990.

### 4. 其 他

國土統一院, 「北韓 및 共產圈動向」.

內外通信社, 「內外通信 綜合版」, 「內外通信」.

鄭圭燮, “北韓 外交政策의 環境要因과 變化過程 研究,” 延世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許文寧(江原大)

### 〈 要 約 文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에 전개될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을 이론적으로 예측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1970년대 초반 제1차 데탕트기 및 1980년대 중반 제2차 신데탕트기에 전개된 북한 對外政策과 主·客觀的 環境要因의 相關關係를 브레처(Michael Brecher) 모델을 원용하여 체계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대외정책 비교연구에서 대외정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 제유형을 비교·전망하여 본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항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성격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變因은 무엇인가?

셋째, 1990년대에 있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1장에서는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先行研究의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외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론적 연구에 의한 분석이 미흡하고,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촉진 및 억제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對外政策 決定要因에 대한 이론들은 1970년대 들어와 발표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스나이더(Snyder), 로제나우(Rosenau) 맥가완(McGowan), 브레처(Brecher), 매크리디스(Macridis) 등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자의 역할과 이데올로기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 변인이기 때문에, 브레처 분석틀을 북한의 '3대혁명역량강화노선'과 결합하여 수정·발전시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북한 대외정책 결정자의 성격과 이미지, 정책결정기구간의 관계를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을 북한 대외정책의 基本性格, 決定構造 및 政策的·地域別 特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國家目標에

기인하는데, 궁극적 목표는 ‘祖國統一(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世界革命’에 있고, 당면목표는 安保, 經濟發展, 正統性 및 國家威信의 增大이다. 그리고 대외정책 노선은 위의 목표를 위한 것으로 ‘國際革命力量強化路線’과 主體思想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원칙의 고수로 나타난다. 북한 대외정책 결정기구는 형식상의 기구와 실제상의 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대외정책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외교부가 집행하나, 실제적으로는 당 중앙위 국제부와 비서국 담당비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관할하며, 나아가 金日成·金正일이 결정·집행한다 할 수 있다. 정책적 특징으로는 ‘自主外交’를 들 수 있고, 지역별 특징은 기본적 혁명지원역량으로서 공산주의 국가, 보조적 혁명지원역량으로서 제3세계 국가, 예비적 혁명지원역량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형성으로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1970년대 초반 데탕트시기 북한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표출된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당시 세계적 요인으로는 美·蘇데탕트와 中·蘇領土紛爭, 동북아 지역요인으로는 美·蘇데탕트와 美·中·日 三角體制 등장, 남한요인으로는 한국의 통일정책 및 대외정책의 變化와 급속한 經濟發展, 북한 내부요인으로는 技術官僚의 登場과 6個年計劃의 推進이 북한 대외정책 방향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객관적 환경에 대한 북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은 철저히 主體思想에 근거하여 인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정책은 “多邊化와 實利追求”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對4強관계에 있어서는 對中·蘇 自主 等距離 노선과 對日接近 추진, 對美強硬路線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1980년대 중반 신데탕트시기 북한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표출된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당시 세계적 요인으로는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주도하의 美·蘇 신데탕트 시작과 동북아 지역요인으로는 中·蘇 和解와 中國의 開放政策, 남한요인으로서 제2기 南北對話 추진과 한국의 經濟發展, 북한요인으로서 金日成-金正日 세습제제 공고화, 安保劣等感과 經濟難이 북한 대외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객관적 환경에 대하여 북한정책결정자는 1970년대 경우와 변함없이 主體思想에 근거하여 인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정책은 ‘制限

的 對外開放'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對4強關係는 초기에 親蘇경향을 띠었으나, 蘇聯의 對內外 政策變化('90. 9. 30 韓蘇修交)로 인하여 親中경향을 갖게 되었고, 國際的 孤立과 內部 經濟難을 해결하고자 對美·日 關係改善을 적극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1990년대 주·객관적 환경요인과 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를 전망하였다. 세계적 요인으로서는 美·蘇 신데탕트 構造化 趨勢, 世界經濟體制의 變化(자본주의 체제화), 社會主義 國家(소련 및 동구권)들의 變革, 동북아 지역요인으로서 蘇聯의 相對的 弱化, 日本의 정치·경제·군사적 強大國으로 부상, 中國의 國內安定化 및 改革·開放推進, 美國의 相對的 地位強化, 남한요인으로서 한국의 北方政策 성공적 추진 및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북한 내부요인으로서 經濟難(대외부채 상환능력 저조, 경제 및 기술력 상대적 저하, 식량부족, 소비재 생산저조)과 정치적 어려움(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 기술관료의 자율성 증대) 및 기타 사회변동요인들이 북한 대외정책을 개혁·개방케 하는 촉진요인이 된다. 억제요인으로서 세계적 요인으로서 동구개혁 결과에 대한 공포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두려움, 대남적 요인으로서 한국의 비민주적 요소와 분열, 북한내부적 요인으로서 김일성 및 혁명1세대의 견제와 군부세력 존재, 조직적인 정보통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主體思想의 절대화이고, 이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화'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적극적 대외 폐쇄정책, 소극적 대외폐쇄정책, 소극적 대외개방정책,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으로 구분·예측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消極的 對外閉鎖政策에서, 중장기적으로는 消極的 對外開放政策을 거친후 積極的 對外開放政策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에 전개될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을 예측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1970년대 및 1980년대 전개된 북한 대외정책과 主·客觀的 環境要因의 상관관계를 브레쳐(Michael Brecher) 모델을 원용하여 體系的·實證的으로 分析한다. 그리고 1990년대 북한의 주·객관적인 환경요인을 변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방향의 諸類型을 비교·전망하여 본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東北亞 域內國家들에 대한 對美·日·中·蘇 政策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 1) 북한 대외정책의 基本性格은 무엇인가?
  - ①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이념·노선은 무엇인가?
  - ②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기관은 실제로 어디인가?
  - ③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2)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에 가장 영향을 주는 變因은 무엇인가?
  - ① 1970년대 데탕트시기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이 무엇이고, 가장 영향주는 변인은 무엇이었는가?
  - ② 1980년대 신데탕트시기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장 영향주는 변인은 무엇이었는가?
  - ③ 1970년대와 1990년대 있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가?
  - ④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 3) 1990년대 있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 ① 1990년대 북한의 주·객관적 환경요인은 어떻게 전망되는가?
  - ②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은 무엇인가?
  - ③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類型은 무엇인가?

## 2. 研究現況과 問題點

북한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는 1969년 高秉喆교수의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가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15권 이상의 연구서들이 나와있다.<sup>1)</sup> 이들 연구가 개척자적 또는 학문축적적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사실(fact)과 정보의 記述的 수준에 단지 머무르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 대외정책에 대한 理論的·分析的(즉, 記述(description)이 아닌 說明(explanation), 豫測(prediction))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에 대한 先行 研究는 다음과 같다. 全寅永교수는 “北韓의 外交政策: 持續과 變化”에서 북한외교정책의 目標, 決定機構, 決定要因과 북한과 4強, 第3世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내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폭넓은 변화는 김일성 퇴진후 가능하다고 본다.<sup>2)</sup> 전교수의 연구는 個人研究로서는 폭넓게 분석되어 있으나, 북한외교정책의 變化要因(促進 및 抑制)이 잘 분석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許漫교수는 “北韓 外交政策의 基底와 그 變化展望”에서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목표와 특징을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외교는 革命外交(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큼)이었으나, 앞으로는 金正日 體制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 외교의 목표 및 전략이 수정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sup>3)</sup> 허교수는 매크리디스(Macridis)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밖’의 變因이 체계적으로 정립·연구되어야 한다.

이호경 교수는 “北韓의 對外政策變化 展望”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 변화과정, 현황을 다루고, 대외정세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sup>4)</sup> 그는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북한 대외정책의 變化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러나 전술상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교수는 국제혁명역량의 변화문제는 잘 분석하고 있으나 主觀的 環境要因에 대한 分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註1)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Y.: Frederick A. Praeger, 1969). 각 연구서에 대한 간단한 검토는 졸고, 「1980년대 北韓의 對中·蘇政策 및 對南政策 研究」, 1991년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3-5 참조.

2) 全寅永, “北韓의 外交政策: 持續과 變化,” 「亞細亞研究」, Vol.81.(1989), pp.35-107.

3) 許漫, “北韓 外交政策의 基底와 그 變化展望,” 「釜山師大論文輯」, 제19집 (1989), pp.163-187.

4) 이호경, “北韓의 對外政策變化 展望,” 「전환기의 남·북한 관계」(서울: 大旺社, 1990), pp.218-245.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이론적 연구에 의한 분석이 미흡하다. 분석틀 사용 및 가설 정립에 의한 분석연구가 희소하다. 비록 분석틀을 원용하였어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분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틀이었다. 둘째,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촉진 및 억제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셋째, 북한의 내재적 논리인 '3대혁명역량 강화로선'에 의거한 대외정책의 종합적 분석이 부족하다.

### 3. 理論的 背景

#### 가. 對外政策 決定要因에 관한 諸 理論

대외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들어와 활발히 제안된 비교외교정책(comparative foreign policy)의 이론과 모델들 중 대표적인 것 몇몇을 살펴본다. 그런 연후 북한 대외정책 이해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외정책에 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이론적 연구의 최초의 시도는 1954년에 스나이더(Snyder), 부룩(Bruck), 세이핀(Sapin)의 “국제정치 연구방법으로서의 정책결정”(Decision-Making a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논문에서였다.<sup>5)</sup> 이 연구는 권력(power)과 國益(national interest)에 기초한 現實政治的(real politik) 외교정책 분석의 지배적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으로, 외교정책 행위의 해석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서 인간의 정책결정(human decision making)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政策決定 研究接近法(Decisin-Making Approach)은 對內·外的 환경과 정책결정과정을 조직적으로 연구케 하였으나, 경험적 사례들을 비교연구하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sup>6)</sup>

5) Richard C.Snyder, H.W.Bruck, and Burton Sapin, “Decision-Making a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eign Policy Analysis Project Series*, No.3. (Painceton, New Jersey, 1954).

6) Charles F. Hermann and Gregory Peacock, “The Evolution and Future of Theoretical Research in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in Charles F. Hermann, Charles W. Kegley Jr. and James N.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Boston: Allen and Unwin, 1987), pp.22-23.

둘째로, 로제나우(Rosenau) 교수는 ‘對外行爲에 대한 内部 영향’(internal influences on external behavior)과 ‘國內政治에 대한 外部 영향’에 착안하여 連繫(linkage)<sup>7)</sup>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체계이론을 원용하여 투입, 산출, 환류로 대외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5개의 變因(variable)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 ① 個人變因(individual variable)은 개개의 정책결정자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성격으로서 그의 가치관, 재능 및 기왕의 경험으로서 이루어진다.
- ② 役割變因(role variable)은 개인의 가치 또는 성격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상의 변인이다. 그러나 후에 역할변인은 개인변인에 포함된다.
- ③ 政府變因(governmental variable)은 정책결정자의 외교정책 선택을 제한하거나 강화시키는 정부구조의 모든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 ④ 社會變因(societal variable)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비정부적 측면으로서 사회의 주요 가치, 여론, 산업화의 수준, 국가의 통합정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 ⑤ 體制變因(systemic variable)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행위 또는 외부환경의 비인간적 측면으로, 지리적 현실, 전략적 위치, 잠재적 적국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도전 등을 포함한다.

로제나우 교수는 이상의 5가지 변인을 投入(input)요소인 獨立變因으로 간주하고, 이것에 의해 產出(output)된 外交政策을 從屬變因으로 보았다. 이러한 로제나우의 豫備理論(pre-theory)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變因들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변인들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만으로 그쳤기에 변인들이 어떠한 양상을 취한다는 것을 언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나이더의 질문(왜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선택을 결정하는가?)을 ‘정책결정자의

7) 연계(linkage)는 “한 시스템에서 연유하여 다른 시스템 속에서 반응을 얻는 반복되는 行爲繼起(any recurrent sequence of behavior that originates in one system and is reacted to in another)”를 의미한다.

James N. Rosenau, "Toward the study of National-International Linkages,"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New York: The Free Press, 1980), p.381.

8)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앞의책(1980), pp.128-129.

그러한 선택을 해명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說明變因들이 무엇인가? 로 로제나우 교수는 발전시킨 공이 있다.<sup>9)</sup>

셋째로 맥가완(McGowan)과 샤피로(Shapiro)는 비교외교정책(CFP)연구에 있어서 축적된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검토된 假說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틀을 제시하려 한다. 이들은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1개의 獨立變因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0)</sup>

- ① 個人(individual)變因 ② 엘리트(elite) 變因 ③ 定立(establishment) 變因 ④ 政治(political) 變因 ⑤ 政府(governmental) 變因 ⑥ 經濟(economic) 變因 ⑦ 社會(societal) 變因 ⑧ 文化(cultural) 變因 ⑨ 連繫(linkage) 變因 ⑩ 他國의 政策(other's policies) 變因 ⑪ 體制(systemic) 變因

등 11개의 變因群으로 맥가완은 외교정책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틀은 대외정책 결정요인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대외정책 이론수립에 발전적인 기여를 했다 하겠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맥가완의 분류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느낌이 있으며, 따라서 중복된 것도 있다.

넷째, 브레처(Brecher)는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외교정책 결정의 일반적인 모델을 먼저 설정하여 理論化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環境(environment)과 政策決定者의 환경에 대한 認知(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of that environment)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의 모델에 있어서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因은 다음과 같다.

- ① 操作的 環境(operational environment) 變因이다. 이는 內的 背景(internal setting) 變因(경제력, 군사력, 정치동력 등)과 外的 背景(external setting) 變因(世界體制: global system, 地域體制 regional system, 兩者體制 bilateral system)으로 구성된다.
- ② 心理的 環境(psychological environment) 變因이다. 이는 政策決定者의 態度프리즘(attitudinal prism) 變因(이데올로기, 전통, 정책 결정자의 개성 및 심리적 성향 등)과 엘리트 이미지(elite images) 變因으로 구성된다.

9) C. F. Hermann and G. Peacock, 앞의 책(1987), p.24.

10) Patrick J. McGowan and Howard B. Shapir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Beverly Hills: SAGE, 1973), pp.13-15, pp.40-50.

브레처의 모델에서는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認知와 그들의 狀況規定(definition of situation)이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브레처는 操作的 環境이 정책결정의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만, 그러나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과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브레처는 因果律的(if-then) 研究와 經驗的으로 검토가능한 命題에 대한 흥미를 가중시킨 점에서 과학적인 비교외교정책 연구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이미지 구조와 태도적 프리즘에 대한 그의 독특한 개념들은 조작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세련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여 심리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정책결정자들이 외부영향력의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합하는가?”에 있었던 것이다.<sup>11)</sup>

다섯째, 매크리디스(Macridis)는 대외정책결정요인을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물질적 요인(the relatively permanent material elements)(지정학적위치, 천연자원; 광물, 곡물, 에너지)과 가변적인 물질적 요인(less permanent material elements)(산업화 정도, 군사력 등)과 인간적 요인(the human elements)(인구의 크기, 지도자의 성향과 능력, 이데올로기, 정보)으로 구성한다.<sup>12)</sup>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자의 역할과 이데올로기가 대외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매크리디스 분석틀은 북한 대외정책 연구에 좋은 모델이 되지만, 매크리디스 분석틀은 ‘밖’의 요인(세계체제, 동북아체제, 분단체제)을 간과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對外交策 決定要因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외교정책이 環境과 認識과 政治體制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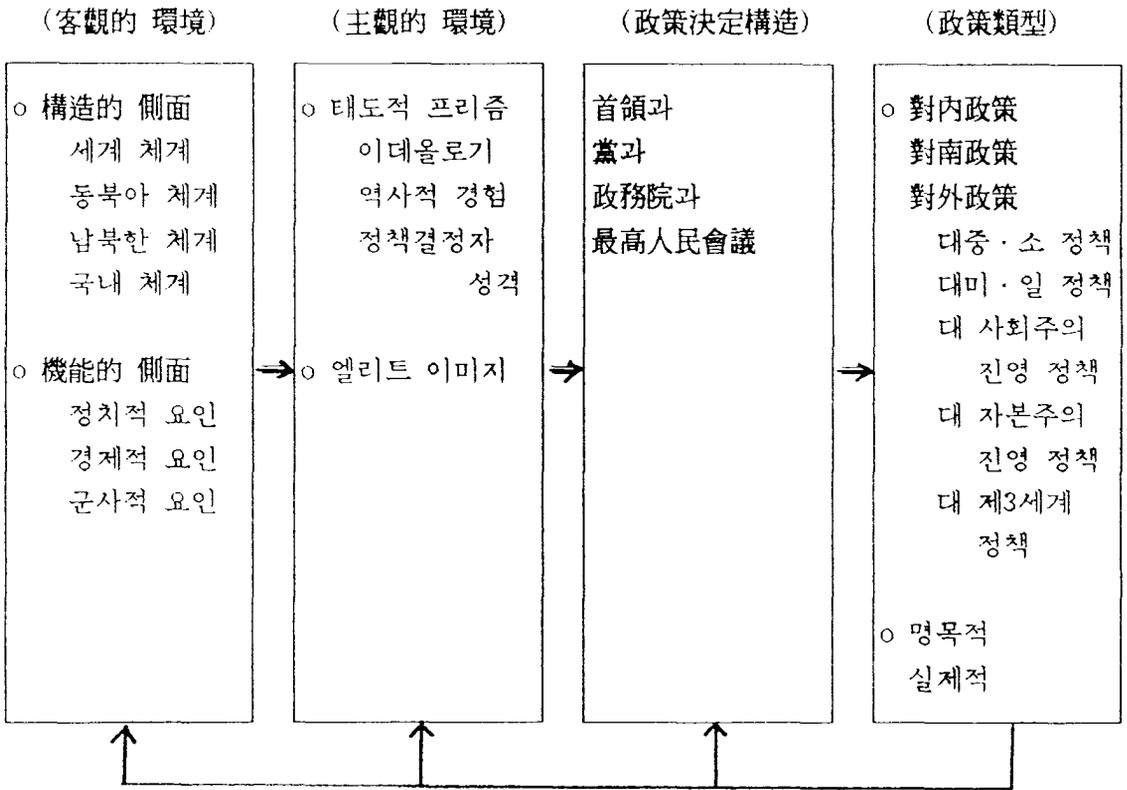
#### 나. 본 연구의 분석틀

따라서 북한 대외정책 변화의 분석틀로서는 브레처 모델을 원용·발전시켜 사용한다. 본 논문의 北韓外交政策決定過程 분석틀은 다음 도표와 같다.

11) C. F. Hermann and G. Peacock, (1987), p.25.

12) Roy C. Macridis(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Prentice Hall: N.J. 1989), p.XV.

(北韓 對外政策 分析틀)



본 연구 분석틀에서 발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客觀的 環境要因을 構造的 側面과 機能的 側面으로 구분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브레쳐 모델에서는 객관적 환경요인을 외적 배경과 내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외적배경에서는 체제적 접근(global system, regional subsystem, bilateral subsystem)을, 내적 배경에서는 기능적 접근(경제력·군사력·정치력)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정치·경제·군사의 요인분석은 국내차원에서뿐 아니라 국제차원에서도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政策決定 構造要因을 새로이 설정하여, 共產主義 國家특유의 二重構造的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명제는 共產黨이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지도적인 핵심체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외교정책의 객관적 환경요인을 분석할때,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에 의거하여 '국제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북반부혁명역량'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다.<sup>13)</sup>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요인 및 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한다. 그 방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의 특징과 그 주·객관적 환경 변인들을 비교하여 북한의 대외정책과 그 주·객관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따라서 중점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독립변인은 주관적 환경요인과 객관적 환경요인중 어느것이 우세한가?

둘째, 198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독립변인은 주관적 관계요인과 객관적 환경요인중 어느것이 우세한가?

셋째,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요인으로서 주관적 환경요인과 객관적 환경요인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연구시각은 이른바 '전체주의론'적 시각이나, '진보적' 시각 양편 모두를 극복한 입장에 서고자 한다. 다시말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 보수단체에서 나타나는 불신·증오의 관점과 급진운동권에서 나타나는 미화·숭배의 관점을 북한 내제론적·비판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1차자료로서 ①로동신문 ②조선중앙년감 ③북한 방송보도 ④「김일성 저작선집」 등 관련원전과 國土統一院에서 편집한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과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을 사용하고, 2차 자료로서는 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선행 국내연구들과 국내외 신문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북한외교정책 결정자의 성격과 이미지, 정책결정 기구간의 관계를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13) 김한교교수는 한국내의 정치변동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북한측의 한국정치상황 인지가 북측 형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 II. 北韓 對外政策의 特徵

### 1.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性格

북한 대외정책의 目標, 理念 및 路線은 北韓의 國家目標에 기인한다. 黨規約와 社會主義憲法에 나타난 북한의 國家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韓을 赤化시켜 국토를 통합함으로써 韓半島 共產化 統一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 규약 前文,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서 채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북한 헌법 제5조,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서 채택).<sup>14)</sup>

둘째,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혁명 전위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세력을 타도하고 全世界의 共產化를 달성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시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당 규약 전문).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북한 헌법 16조).

14) ‘북한 로동당 규약’ 全文은 統一院, 「北韓概要」(1990), pp.499-517.

‘북한헌법’ 全文은 앞의 책, pp. 483-498

따라서 북한의 國家目標은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과 “全世界의 共產化”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따른 북한 對外政策의 目標은 다음과 같다. 궁극적 목표는 ‘남조선 해방’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세계 공산화 달성을 위한 革命前衛隊 역할 수행이다. 당면목표는 安保, 經濟發展, 正統性 및 國家威信 증대이다.<sup>15)</sup>

김일성에 따르면 국제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북한대외정책의 중요 과업이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전반적 국제정세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sup>16)</sup>(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허담은 북한대외정책의 기본목표가 “미제를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sup>17)</sup>

또한 金日成은 북한의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으로 自主·親善·平和를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거듭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閔內天 교수는 ①안전의 보장 ②정권의 합법성(정당성) 승인 ③국제지위의 향상으로 규정.

申正鉉 교수는 ①정통성의 확보 ②국가안전의 유지 ③경제발전의 추구 ④민족제 통일의 여건조성 등으로 규정

段天基 교수는 ①북한자신 체제의 유지·보호 ②국제적 지위 향상과 사회주의 국가와 유대 강화 ③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규정

金泰丸 교수는 ①한반도 공산화 통일 ②전세계의 공산화로 규정

全寅永 교수는 ①체제보존 ②사회주의 경제건설 ③대한국 우위확보

朴昌熙 교수는 ①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보호 ②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사회주의 제국과의 유대 강화 ③한반도의 공산화 실현으로 규정

朴昌熙, 「북한 외교정책전략상의 특징」,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한국정치학회, 1989. pp.613-619.

李慶淑 교수는 북한 정권의 기본목표를 ①한반도 공산화 통일 ②전세계의 공산화로 규정. 그리고 북한 외교정책목표는 당면목표로 안보·경제발전·정통성·국제위신 증대, 중간목표로 3대 혁명역량 강화, 궁극목표로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세계 공산화로 규정.

李慶淑, 「외교: '혁명환경' 조성을 위한 총력전」, 이상우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444-448.

16)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 4輯」, p.797.

17) 「로동신문」, 1970.11.6(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당시 외교부장 許談 발언).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친선·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sup>18)</sup>(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사업총화 보고).

“우리 공화국 정부가 대외관계 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기본 이념은 자주·친선·평화입니다. 자주·친선·평화의 이념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공동된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의 확고부동한 지침을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정치실정에 맞게 세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 나갈 것이며,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결히 고수할 것입니다”<sup>19)</sup>(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그런데 소련의 개혁·개방화 정책에 따른 신데탕트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1988년말에는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의 순서가 自主·平和·親善으로 바뀌었다.

“오늘 자주, 평화, 친선은 세계인민들의 공동된 지향으로, 생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온 세계 자주화의 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며 오히려 저들의 멸망을 촉진시킬 뿐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마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는듯이 허장성세 하지만 현대제국주의 위기는 날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연합된 독점자본에 의거하여 다른나라 인민들을 착취하면 할수록,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에 매달려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자주와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더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자체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침략과 약탈정책을 버리지 않는한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날 출로가 없으며, 제국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20)</sup>(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40돐 기념경축대회

18)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4輯」.

19) 金日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4輯」, p.797.

20)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 1988.9.9.

에서 한 김일성 보고).

북한은 국가목표인 ‘祖國統一’과 ‘世界革命’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정책으로 ‘국제혁명역량 강화’로선과 主體思想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원칙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세가지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이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미제국 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sup>21)</sup>

“현대 수정주의는 아직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큰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sup>22)</sup>

“<우리 혁명은 국제혁명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혁명에 충직한 것이 곧 국제혁명운동에서 자기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은 매개나라 인민들이 자기나라 혁명을 잘하여 나라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에 다같이 충실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sup>23)</sup>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북한 헌법 16조).

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의 김일성 연설(1965.4.14),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 239.

3대혁명역량 강화방안은 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 김일성 연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한영음,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서울: 온누리, 1989), pp.245-256,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950-953 참조.

22)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239.

23)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219-220.

## 2. 北韓 對外政策의 決定構造

북한 대외정책 결정기구는 形式上의 機構과 實際上的 機構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 憲法에 나타나 있는 대외정책 결정과 관련된 기구들은 最高人民會議,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政務院을 들 수 있다. 最高人民會議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基本原則을 세우고, 戰爭과 平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취급한 적이 없다. 단지 최고인민회의에서 金日成의 施政演說 또는 政綱發表 등에 의해 그 기본방향이 제시될 뿐이다. 主席은 국가수반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부원을 지도한다. 또한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하고,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본래 이기능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는데 신헌법에서 주석에게로 옮겨진 것이다. 주석은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위자로서 대외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中央人民委員會는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우고,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하며, 대외정책위원회를 그 산하에 둔다. 헌법상 최고인민회의가 수립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도한다.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가 공식발표한 대외정책이 한건도 없으며, 당 정치국과의 합동회의에서 非同盟運動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적이 있는데 중앙인민위원회 구성원이 거의 정치국 위원이므로, 사실상 黨의 政治局 이 國家機關인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권력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政務院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정부원은 대외정책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라 대외사업을 執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원의 기능중 대외활동분야를 전담하는 실무부서로는 外交部를 들 수 있고, 경제외교 집행기관으로는 對外經濟委員會와 對外經濟事業部와 貿易部를 들 수 있다. 이외에 비정부기관인 외곽단체로서 외교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對外文化連絡協會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원의 관계부서가 기획·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실질적 최고권력 기관인 朝鮮勞動黨으로서 모든 대외정책에 대한 原則문제로부터 政策決定과 執行에 이르기까지 黨의 指導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헌법과 '헌법해설서'에 따르면 黨이 共和國의 上位에서 지도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북한헌법 제4조).

“우리 공화국의 國家主權은 근로 인민의 主權으로서 朝鮮 勞動黨의 영도가 없이는 유지·공고화가 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國家事業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조선 로동당의 지도에 따라 진행된다 ... 조선 로동당은 우리 人民主權의 핵심으로 되며, 人民主權이 나갈 뚜렷한 목표를 내세워 주고 그 목표에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실지로 지도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 주권은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건결히 집행하고 그 정책을 충실히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된다”<sup>24)</sup>

외교정책과 관련된 노동당 기구들은 黨大會, 中央委員會,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秘書局을 들 수 있다. 黨大會는 조선노동당 최고기관으로서 5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한다(당규약 22조).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中央委員會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대외관계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한다(당규약 23조). 黨中央委員會 政治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당규약 25조). 따라서 대외정책도 정치국이 실질적 결정을 내린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金日成·金正日·吳振宇)가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黨中央委員會 秘書局은 당 실무부서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16개 비경제부서, 11개 경제부서) 대외관계를 당적으로 지도하는 부서로 國際部가 있다. 그리고 이의 공작·정보담당 부서로 對外運絡部와 對外情報調查部가 있다. 이렇게 볼때 국제부는 당대회에서 결정된 대외노선에 입각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지도 통제하는 한편, 대외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기구내에서 이를 작성·심의하고, 이것이 담당비서를 거쳐 당 정치국에 상정되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대회에서 승인되고, 형식상 중앙인민위원회와 당 국제부를 통하여 정무원 외교부를 비롯한 집행부서들에 의해 실천에 옮겨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의 실질적 결정기관을 黨이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당 중앙위 국제부와 비서국 담당비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당에 있어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비서, 국가기관에 있어서 주석을 겸직하고 있으며, 金正日이 당에 있어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사업전반 담당비서, 국가기관에 있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겸하

24)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서울: 博英社, 1975), p.91. 재인용.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의 대외정책은 金日成·金正日 양인에 의해 결정·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 3. 北韓 對外政策의 主要特徵

북한 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主體思想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政策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도 主體思想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그들의 대외정책의 목표와 목표를 수행하는 행동지침이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다.<sup>25)</sup> 여기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형성되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정책적 특징과 지역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政策的 特徵 : ‘自主外交’

김일성은 건국초부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기치아래 中·蘇와 軍事同盟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反帝國主義, 民族解放論, 階級鬭爭論에 역점을 둔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경향이 북한외교정책의 본질과 행동방향을 혁명지향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김일성에 따르면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형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sup>26)</sup>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sup>27)</sup>

이에 대한 북한 사회과학원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철저히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25) 柳錫烈, “北韓의 主體思想理念과 對外政策,” 「韓國政治學會報」, 제18집(1984), p.235.

26) 金日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91. 재인용.

27)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306.

시종일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으며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 국제혁명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데 대한 공산주의 운동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에 국제주의를 체현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우리 당은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과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위에서 서로 단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3대륙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투쟁은 세계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투쟁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역량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 있다. 이로부터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은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현시기 이 지역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다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sup>28)</sup>

主體思想의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思想에서의 主體’는 외교이념에 있어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자주적’인 외교노선 추구를 표방한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정치외교에 있어서 中·蘇紛爭에서 자주적 노선에 따라 엄정한 中立과 實利追求를 표방한다. ‘經濟에서의 自立’은 ‘외세에 의한 경제적 의존’과는 다른 것으로, ‘자발적인 국제적 경제협력’과는 양립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따라서 ‘合榮法’을 통해 해외 자본·기술을 유치하는 일이나, 中·蘇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갖는 일은 모순이 아니라 한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주체적 자위역량’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帝國主義’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상호협력·지지성원하는 것과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이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국과 군사

28) 「정치사전」, pp.913-917.

29) 金正日,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조선중앙연감 1983」(서울: 동아일보사, 189), pp.359-361.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달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립경제는 다른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약 체결·협력받는 것은 ‘외세’, ‘군사적 독점’, ‘침략’, ‘예속’ 등으로 북한은 비난한다.<sup>30)</sup>

#### 나. 地域別 特徵

북한은 그들의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대상국가에 따라 단계적인 전략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혁명지원 역량을 크게 세부류로 나누고, 대상지역에 따라 융통성있는 外交原則과 戰略·戰術을 적용한다.

첫째, 共產主義 國家들과의 관계에서는 蘇聯·中國·東歐·기타 共產主義 國家들을 直接的이고 基本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는 黨的 關係, 政策上的 差異, 이데올로기상의 마찰과는 상관없이 관계유지 및 단결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중국·소련과는 軍事同盟 體制를 계속 유지하여 군사장비의 지속적 지원을 받고, 동시에 중·소분쟁을 활용하여 북한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중·소의 경쟁적 지원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국과 접촉 또는 외교관계 수립하는 것을 저지해 왔다.

둘째, 第3世界 國家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을 間接的이며 補助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한다. 이들 국가 다수가 非同盟임을 감안하여 비동맹운동의 中立主義와 反帝國主義 및 反植民主義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비동맹외상회의와 정상회담시에 채택되는 결의안에 駐韓美軍撤收, 美國·北韓 平和協定체결과 같은 북한 주장을 지지하게 유도한다. 그결과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되도록 노력해 왔다.

셋째, 資本主義國家들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일본·서구 기타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우회적이며 豫備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이들 국가내의 공산당, 사회주의 정당, 기타 좌경단체와 인사 등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문화적·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人民外交”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방국가와 이룩한 한국의 외교기반 약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3자회담 개최, 한국의 유엔가입 저지 등을 시도하고 한·소관계 이간을 모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0) 柳錫烈, 앞의 글(1984), 참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뿔럭 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 세력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친선 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뿔럭 불가담 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과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 나라들과의 선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세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sup>31)</sup>

“공화국 정부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세계혁명의 강력한 보루이며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정적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뿔럭불가담 운동은 역사적 전진을 힘입게 추동하는 우리시대의 위력적 반제자주 역량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제3세계나라들과의 국제관계를 더 확대발전시키며 남남 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 본성적 요구이며 인류공동의 념원입니다. 오늘 인민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핵우위로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류의 평화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시대가 제기한 엄숙한 과제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평화위협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할 것입니다”<sup>32)</sup>

31) 金日成, “조선로동당 6차대회 사업총화보고,”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 大會資料集, 第4輯」, p. 73.

32) 金日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4집」, (국토통일원, 1988), p. 797.

### Ⅲ. 197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 特徵

#### 1. 1970年代 北韓의 客觀的 環境要因

##### 가. 世界的 要因 : 美·蘇 德탕트

1968년 美國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Nixon)은 1969년 7월 태평양의 괌島(Guam)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원칙을 선언하였다.<sup>33)</sup>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닉슨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蘇 양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어왔던 냉전적 국제질서(알타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모색하였다. 즉 1971년 7월 6일 닉슨대통령은 「캔자스」시에서 알타체제를 대신할 5大強國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sup>34)</sup> 그리고 1972년 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제체계의 구조가 정치-경제적으로 多極化됨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밀착경향에 직면한 소련으로서는 美·蘇關係改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되었다. 그결과 새로운 미·소관계인 데탕트가 형성되었다.<sup>35)</sup>

##### 나. 東北亞 地域要因: 美·中 德탕트와 美·中·日 3角體制 등장

1971년 2월 25일 美國 닉슨 대통령이 中共(Red China)을 中華人民共和國으로 정식 호칭한 이후, 급변하기 시작한 美·中 관계는 1972년 2월

33) 이른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일컬어지는 이 원칙의 주내용은 ①美國은 조약상의 공약을 준수하고 ②同盟國에 대한 核공격이 있을때는 미국이 방위조치를 취할 것이나, ③在來式 戰爭이나 局地紛爭에 대해서는 當事國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Henry Kissinger, *The Memoirs of Henry Kissinger-White House years: 1967-1972*(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9), 京鄉新聞譯(서울: 경향신문사, 1979), pp.92-95.

34) 미국의 역대 외교정책은 孤立主義와 國際主義가 서로 교차되어 왔는데, 對外 불간섭주의의 「몬로독트린」 및 「테오도르·루즈벨트」의 문호개방 정책은 각각 그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닉슨 행정부의 입장은 고립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겠다. 캔자스선언의 주요내용은 ①미국은 향후 5년내지 10년동안 西歐, 日本, 蘇聯, 中國과 세계 지도권을 분담하게 될 것임. ②武力에 의한 세력다툼은 차차 사라지고 「經濟戰爭」으로 대체될 것임. ③구주공동체에 영국이 가입하며 西歐가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되고, 日本이 제2의 超強大國으로 등장할 것임.

35) 미·소관계에 대해서는 1969년부터 공식적으로 데탕트(detente)라고 불리게 되었다.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金徹凡譯, 「世界政治論」(서울: 法文社, 1989), p.75.

21일 닉슨대통령의 북경 방문에 이르렀다. 이러한 닉슨대통령의 訪中은 소련을 불안케하여 美·蘇關係改善을 가져왔고, 동시에 日本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1972년 7월 自民黨총재선거에서 中國과의 關係正常化를 다짐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후쿠다(福田)를 물리치고 총재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다나카 新首相은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된 9월 25일 訪中하여, 黨主席 毛澤東, 首相 周恩來와 일련의 정상회담을 갖고, 日·中國 國交正常化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축소를 전제로한 '닉슨독트린'은 일본의 군비강화와 역할증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는점에서 동북아 세력구조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美國 및 日本의 對中國和解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새로운 進路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中國의 위협을 받고있는 中國주변의 국가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은 국제사회에 진출하게된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하거나 또는 中立을 주장하였다. 또한 반공국가들(한국, 필리핀)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도 二重三角關係(북방삼각관계: 蘇聯-中國-北韓, 남방삼각관계: 美國-日本-韓國)의 동요가 일어났다.

#### 다. 南韓要因

##### 1) 韓國의 統一政策 및 對外政策 變化

북한의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韓國과의 競爭요인이다. 1948년 12월의 유엔총회가 韓國을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북한의 正統性 問題에 타격을 가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은 북한의 安保問題에 도전을 주었다. 1960년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능가하였다. 또한 1960년대 한국의 외교역량은 북한의 외교역량을 능가하였다.<sup>36)</sup>

한국은 1960년대 말까지 '反共'을 國是 및 外交의 基本原則으로 삼아, 북한 및 공산국가와 일체의 접촉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간의 교차접촉은 남북한 각각에게 충격을 주어, 종래의 대결구조를

36) 외교관계 국가 수립수(1960년 남북한 각각 15개국, 1965년 남한 75개국, 북한 23개국, 1970년 남한 83개국, 북한 36개국)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California Press, 1984), pp.11-12 참조.

반성케 하였다. 그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 ① 북한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포기하면 남북한에 가로놓인 人爲的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
- ②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북한의 참석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
- ③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게 하는지 개발과 건설과 창조 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平和統一構想’을 선언하였다.<sup>37)</sup>

이는 한국의 주도하에 남북한 관계를 對決구조에서 平和競爭구조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안이었다. 이 선언에 입각해서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는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 적십자사 손성필 위원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70년대의 南北對話가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인도적 차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별도의 통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정보부장을 평양에 비밀리 파견하여 김일성·김영주와 일련의 회담을 갖게했고, 그 결과 ‘7·4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非敵對共產國家들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따라 1971년 9월에 민간경제인단의 유고슬라비아 방문이 있었다.<sup>38)</sup> 또한 박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특별성명에서 ①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 ②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유엔 同時加入을 반대하지 않음. ③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과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한국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였다.<sup>39)</sup> 남한의 통일정책 및 대외정책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미-소데탕트와 미-중데탕트에 의한 동북아질서 변화에 영향받은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변화에 대처하여야 했다.

## 2) 韓國의 급속한 經濟發展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1-1967년)과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을 추진하여 각각 8.3%, 12.0%라는 고도경제성장율을 기록

37) 國土統一院, 「南北關係資料」, pp.43-51.

38) 外務部, 「韓國外交 30年: 1948-1978」(서울: 外務部, 1979), p.242.

39) 國土統一院, 「南北關係資料」, pp.615-619.

하였다.<sup>40)</sup> 당시 한국의 발전전략은 경공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북한보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가시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한국은 수출지향적이며 외자주도형의 발전전략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북한은 자급자족의 발전전략(Autarky)을 추구하여 생활수준에 있어 제약과 성장속도의 제한을 초래하였다. 또한 외국자본의 대규모적 유입과 전체 플랜트의 도입은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북한은 이분야에 있어 성장이 지연되었다.<sup>41)</sup>

## 라.北韓內部要因

### 1) 技術官僚의 登場과 6個年計劃의 推進

1968년 말에 이르러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 軍部勢力의 지나친 권력행사와 북한의 軍事化가 안고있는 폐단에 눈을돌리고 그들(대남담당 허봉학,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을 숙청하였다. 이 사실은 북한이 1960년대를 통해 강력히 추진해온 軍事力 強化政策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5차 조선로동당대회(1970.11.2-11.13)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중앙위원들이 새로 선출되어 黨 指導體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권력구조상의 변화의 특징은 經濟分野의 專門家들이 고위층에 부상한 점으로, 이는 지나친 국방 강화정책으로 파생한 경제발전의 둔화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7개년 계획(1961-1970)의 성과를 보고하고 6개년 계획(1971-1977)을 밝혔다. 그 이전에 북한은 1961년 9월 7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그 결과는 석탄생산만 빼고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67년 생산목표량으로 전력 170억키로와트시, 석탄 2,500만톤, 강철 230만톤, 화학비료 170만톤, 시멘트 430만톤을 설정하였다.<sup>42)</sup> 그러나 1970년대에 가서 북한은 전력 165억 키로와트시, 석탄 2,750만톤, 강철 220만톤, 화학비료 150만톤, 시멘트 400만톤을 생산하게 되었다.<sup>43)</sup>

40) T.C. Rhee,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Socio-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Vol. XIII, No.7 (July 1973), pp.670-690 참조.

41) Lee Chong-Sik, "New Paths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I, No. 2 (Mar/Apr 1977), p.56.

4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 통계수자," 「조선중앙년잡 1962」, p.75.

4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제3집」, p.21.

김일성은 북한경제의 이러한 둔화발전의 이유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並進政策에서 파생하였다고 보고, 6개년계획에서는 공업화의 성과를 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sup>44)</sup> 또한 이러한 6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對外經濟交流가 필요함을 언지시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콕스탄을 찾아내지 못하여 우리는 지금 형제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의하여 제철공업의 콕스탄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sup>45)</sup>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sup>46)</sup>

결국 북한은 6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技術人力의 양성과 대외적으로 對外經濟交流 통한 차관의 도입,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다시말해 7개년계획의 시행이후 자력갱생의 한계를 느꼈고, 6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나라,’ 특히 서방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관계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 2. 1970年代 北韓의 主觀的 環境要因

### 가. 이데올로기 : 主體思想

1969년 7월에 발표된 닉슨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 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

44) 앞의책, p.33, p.263.

45) 앞의책, p.38.

46) 앞의책, p.40.

립과 사회주의 위협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 악랄한 침략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한 편으로는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도 다른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을 내들고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고 있습니다… 파쑈호전광인 닉슨이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평화전략》에 세롭게 분칠을 한 이른바 《닉슨주의》란 것을 내 놓았습니다… 《닉슨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상투적인 양면술책의 재판이며 《힘의 정책》의 파산에서 오는 미제의 세계지배체계의 붕괴를 가로막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꾸며낸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닉슨주의》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기본고리를 이루고 있는것은 퇴살야만 일본군국주의를 앞장에 내세우는 것입니다.”<sup>47)</sup>

요컨대 닉슨독트린은 美帝國主義의 양면술책의 일환으로서, 아시아인끼리 전쟁을 하게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치라고 본다.

또한 1971년에 들어와 시작된 美-中國의 데탕트와 1972년의 日-中國 國交正常化라는 동북아 지역환경의 변화는 北韓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닉슨의 중국방문계획 발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위대한 혁명적 변혁과정을 <힘>으로써 저지시켜보려고 스무해 이상이나 무모하게 추구하여온 미제의 중국 적대시정책이 마침내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제가 세계의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의 앞에서 드디어 굴복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닉슨의 중국방문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며 미제국주의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큰 승리이며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승리입니다… 지금 닉슨의 중국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진영 내부는 새로운 혼란과 와해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제에 전적으로 추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시하여오던 일본수상 사토는 당황망조하여 매일과 같이 앞뒤가 맞지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반동정책의 파산을 가리워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미제에 맹종하여오던 그밖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도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특히 장개석도당과 남조선 괴뢰도당은 일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아우성치고 있습니다.”<sup>48)</sup>

47) 허담,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1971.4.12),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3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48) 김일성,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1971.8.6), 「조선중앙년잡 1972」, pp.9-10.

“우리는 닉슨의 중국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외정책을 크게 변동시켜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대외정책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이며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의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닉슨이 중국에 오든,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sup>49)</sup>

요컨대 김일성은 닉슨의 중국방문은 폐배자의 행각으로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인 일본·대만·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北-中 親善關係와 北韓의 對外政策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국제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변화를 모색하였다.

“물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쌍방간에 대화가 진행되어 국제 긴장상태가 좀 완화되고 아세아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미제가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인 대미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제가 일본이 아세아에서 <맹주>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며 조선에서 침략군대를 철거한다면 그에 따라 우리의 대미정책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완화되면 그것을 좋게 리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세발전에 역행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완화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지 긴장상태가 격화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sup>50)</sup>

1972년 2월 28일 美·中의 「上海共同聲明」이 발표된후, 이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후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 접촉의사를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간의 공동통신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남조선이 북조선과 접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남조선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미국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완화와 남북간의 접촉을 지지

49) 김일성의 일본기자와의 담화(1971.9.25, 10.8), 「김일성 저작선집 6」(1974), p.101.

50) 앞의 책, pp.105-110.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압력에 못이겨 빈말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 가운데서 가장 흥미있는 것은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닉슨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sup>51)</sup>

1972년 9월 29일 北京에서 「田中-周恩來 共同聲明」이 발표되고 國交正常化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이에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공동성명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일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것은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커다란 기여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sup>52)</sup>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김일성은 1969년 7월의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철저히 냉전적 인식과 대응을 하였다. 1971년 美·中대탕트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美國의 패배로 선전하였으나, 1972년 日·中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북한은 美國, 日本의 정책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데올로기 동맹국인 中國, 蘇聯의 정책변화에는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동서 대탕트)에 의해 영향 받았다 하겠다.

### 3. 北韓의 對外政策의 特徵

#### 가. 理論的 特徵

이 시기에 있어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다음 문건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71년 11월 15일 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多變化 및 實利追求’ 경향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거듭 표출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도 선진관계를 맺을 것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는 우리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51) 김일성의 *New York Times* 기자회견(1972.5.26), 「조선중앙년감 1973」, p.59.

52) 「김일성의 「世界」지 편집국장과의 담화」(1972.10.6), 「앞의 책」, p.87.

대외정책에 기초한 것입니다”<sup>53)</sup>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외활동에서 다른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상호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단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또한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sup>54)</sup>

이상과 같이 북한은 自主路線을 토대로 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및 反帝·反美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친선·협조관계 발전시켜 나가는 實利外交를 천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최고인민회의의 5기 제1차회의(1972.12.25-28)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5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1972.1.10), 「로동신문」, 1972.1.15.

54)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9.17), 「로동신문」, 1972.9.19.

관계를 맺으려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sup>55)</sup>

이러한 입장은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도 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sup>56)</sup>

이러한 입장은 1973년 12월 20일 발간된 「정치사건」의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항에 반복 설명되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내용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동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우호적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이다”<sup>57)</sup>

이상의 문건들을 종합정리하여 볼 때 북한은 1971년 이후 ‘다변화 및 실리추구’노선을 추구하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 하였다. 물론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다.

55)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3輯」, pp.507-508.

56) 사회주의 헌법 제16조, 헌법전문은 「김일성 저작선집 6」(1974), pp.370-391, 統一院 「北韓概要」(1990), pp.483-498 참조.

5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평양: 1973), p.714.

## 나. 實際的 特徵

이 기간에 있어 대외정책의 多邊化와 實利追求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전개한 실제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 國家와의 關係改善과 經濟關係擴大, 유엔주재 상주대표부의 개설과 유엔산하 기구에서의 가입, 美國에 대한 直接對話의 摸索, 外交樹立國家 擴大, 南北對話의 추진 등이다.<sup>58)</sup>

본 고에서는 對美·日·中·蘇 政策의 變化에만 한정하여 검토한다.

북한의 對美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개변한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큰나라(소련, 중국 등)들과만 관계개선할 것이 아니라 작은나라(북한 등)들과도 관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일본군국주의 재생의 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9)</sup> 또한 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주한미군 철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무기공급 중지, 군비확장, 전쟁연습 중지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미국과의 平和協定체결을 제의하였다.<sup>60)</sup>

북한의 對日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그 이전의 對日敵對와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 政黨·人民外交 및 經濟交流를 추진하였다. 1970년대초 일본내의 진보세력과 좌익세력은 세계적 긴장완화 조짐에 부응하여 對北韓 關係 改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사회주의 제국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등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日·中 國交正常化는 일본의 田中내각이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北·日 關係개선에 있어서도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1970년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사회당 대표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관계를 긴밀화 하였고, 1971년 11월 자민당의원 31명이 참가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조직하였다. 또한 1971년 10월에는 사회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日·朝國交正常化 3原則」에 합의하였다.

58) 鄭圭燮, 「北韓外交政策의 環境要因과 變化過程 研究」, 1991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6.

59) 김일성, 뉴욕타임즈 기자와의 담화(1972.5.26), 「로동신문」, 1972.6.2.

60)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2집」, pp.683-684, pp.857-859 참조

북한의 대일본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 5,775만\$, 1971년 5,896만\$, 1972년 1억3,175만\$, 1973년 1억7,247만\$, 1974년 3억6,073\$로 늘어났고, 특히 수입면에 있어서는 1970년 2,334만\$에서 1974년 2억5,191만\$로 급증이 있었다 (표-2 참조). 또한 북한의 對自由圈 무역은 북한 무역 전체중 1971년인 15.2%에 불과했으나 1974년 53.6%로 급격히 신장하였다.

북한의 對中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72년으로 예정된 닉슨대통령의 中國 및 蘇聯 방문은 북한에게 심각한 불만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이념적 동지이자 血盟之友인 中國에의 '美帝' 대통령의 방문은 북한에 충격이었다. 중국은 닉슨대통령의 방문이 北·中 관계에 조금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양국은 1971년 10월 25일의 中共軍 韓國戰爭 參戰記念日에 아무런 公式行使도 갖지 않았다.

표 1) 北韓의 圈域別 貿易現況

(單位: 100만불, ( )는 %)

구분 년도	총 계	공 산 권	자 유 권
1971	866	734.6(84.8)	132(15.2)
1972	1,038.7	796 (76.6)	243(23.4)
1973	1,340.7	820 (61.2)	214(15.8)
1974	1,980.3	918 (46.4)	1,062(53.6)
1975	1,906.6	1,032 (54.1)	875(45.9)
1976	1,486.9	984 (66.2)	503(33.8)

註) 國土統一院, 「北韓 經濟體制의 變動要因分析」(1977), p.38.

표 2)北韓의 對日·中·蘇 貿易 現況

(單位: 1,000\$)

국명	구분 연도	총액	수출	수입	수지
日本	1968	54,780	34,030	20,750	13,280
	1969	56,350	32,190	24,160	8,030
	1970	57,758	34,414	23,344	11,070
	1971	58,966	30,059	28,907	1,152
	1972	131,754	38,311	93,443	-55,132
	1973	172,478	72,316	100,163	-27,847
	1974	360,738	108,824	251,914	-143,090
	1975	245,469	64,839	180,630	-115,791
中國	1968	113.06	45.87	67.19	-21.32
	1969	92.15	44.94	47.21	-2.27
	1970	115.08	54.20	60.88	-6.68
	1971	166.73	72.41	94.32	-21.91
	1972	283.07	118.63	164.44	-45.81
	1973	335.95	118.40	217.55	-99.15
	1974	389.59	146.30	243.29	-96.99
	1975	481.87	197.81	284.06	-86.25
蘇聯	1968	293.1	120.9	172.2	-51.3
	1969	328.2	126.6	201.6	-75.0
	1970	373.2	143.2	230.0	-86.8
	1971	502.6	135.8	366.8	-231.0
	1972	458.4	154.9	303.5	-148.6
	1973	480.6	179.3	301.3	-122.0
	1974	461.6	200.3	261.3	-61.0
	1975	468.5	209.7	258.8	-49.1

註) 徐鎮英 편, 「現代中國과北韓 40年」,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89), pp. 353-358. 재정리.

결국 金日成은 中國으로 부터 經濟軍事援助의 국가 제공을 보장받고서 새로운 美·中 관계를 양해하였다. 이는 中·蘇 分爭을 이용한 북한의 대응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對蘇 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美·中 관계개선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對蘇接近을 추진하였다. 이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經濟·軍事援助를 보장받고, 中國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對美接近을 견제하는 양면적 성격을 띤 정책이었다. 따라서 이때 북한의 對中·蘇 政策은 나름대로의 實利를 확보하려는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데탕기에 있어 북한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나름대로 적응하여 국가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 기간에 있어 최고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고, 최저 목표인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데탕트 흐름에 동참하여 대서방관계개선(政黨 및 人民外交 시도,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民間次元의 貿易量 증대)과 對中·蘇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여 實利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軍事備를 명목적으로 감축하여 테러리스트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삭감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북한은 대외정책 전면에 있어서 수동적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대서방외교 전개 방식이나 대중소 정책은 독자적인 대외정책 원칙에 입각해서 전개되기 보다는 상대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셋째, 그러나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主體思想에 근거한 諸原則들과(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군대와 군비축소 등) 反帝, 反美 路線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말하자면 이때 이후 부터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분리경향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 IV. 198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 特徵

##### 1. 198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

###### 가. 客觀的 環境要因

###### 1) 世界的 要因 : 美-蘇 新데탕트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Gorbachev)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革命的 再編 또는 改革)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公開性 또는 開放) 그리고 노보예 므이슬레니에(Novoe Myshlenie: 新思考) 政策을 추진하여 세계적 차원, 동북아적 차원, 한반도적 차원에서 모두 충격을 주었다.<sup>61)</sup>

사실 미·소관계는 1979년말 소련(8만5천 병력)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사태를 계기로 '新冷戰'상태에 돌입했었다. 그후 고르바초프 신정권 등장과 레이건(Reagan) 행정부의 제2기(1985-88) 출범으로 6년만에 양국 지도자는 1985년 11월 19-20일 제네바에서 만나, '新冷戰'에서 '신데탕트'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당시 소련은 國內經濟가 만성적 침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美國과 軍備競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軍縮과 對話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결과 1987년 12월 7일에는 '중거리 核戰力 폐기협정(INF)'서명이 이루어져 약 2800基의 중거리 핵미사일이 향후 5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철거케 되었다.

또한 소련은 1988년 5월 15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1988년 6월 28일 개최된 제19차 소련공산당 특별 당대회에서 相互依存의 世界觀과 汎世界主義를 바탕으로한 新思考 外交政策을 공식화하고, 平和共存과 긴장완화 추구,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축소, 美國과의 平衡재확립, 全方位 外交를 선언하였다.<sup>62)</sup> 나아가 소련 외교정책의 전환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 소련 외무장관이 1988년 9월 27일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계급투쟁은 끝났으며 이데올로기가 국제관계의 기본원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성과는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으로 개최된 中-蘇 頂上會談과 1989년 12월 몰타에서 개최된 美-蘇 頂上會談이다.<sup>63)</sup>

61)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1985년 4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소련이 처한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를 변혁시키기 위한 改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2월에 개최된 제27차 당대회에서는 외교정책에서의 개혁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이 노보예 므이슬레니에(new thnking)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62) 줄고, 「1980년대 北韓의 對中·蘇政策 및 對南政策 研究」, 1991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pp.126-132.

63) 몰타회담 이후 세계질서는 '冷戰 後期 時代'(The Post-Cold War Era)라고 불리워

## 2) 東北亞 地域要因

## 가) 中·蘇 和解

고르바초프정권이 등장한 1985년 이래 中·蘇關係 改善을 위한 소련의 노력은 더욱 적극화 되었다. 소련은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하여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당면 외교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태평양 회의'를 제기하며 아시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소련으로서 중국과의 화해는 아시아의 긴장완화로 인해 막대한 군사부담과 미국의 對蘇포위망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동인이 된다. 또한 시베리아 개발에 필요한 소비재와 식량의 구입, 생산재의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sup>64</sup> 중국의 관심사는 4個現代化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 주변환경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방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 나) 中國의 開放政策

중국은 1978년 12월 黨 제11기 3中全부터 鄧小平體制가 공고화되면서, 대내적으로 毛澤東 格下運動을 전개하고, 대외적으로 1978년 8월 일본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과 1979년 1월 1일을 기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反蘇 親西方路線으로 전환하였다.<sup>65</sup> 1980년 1월 등소평은 80년대 국가목표로서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것, 둘째로 대만을 회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 셋째로 경제건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인데 이는 바로 4개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現代化 建設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국제문제와 국내문제의 해결에 있어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sup>66</sup>

1982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호요방은 중국의 80년대 外交原則은 反霸權主義와 더불어 自主獨立的 對外政策의 고수임을 명백히 하였다.<sup>67</sup> 중국의 이러한 대내외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진다.

64) 朴斗福, “최초 中·蘇關係의 發展과 展望,” 「韓國과 國際政治」 제3권 제2호(1989년 가을), pp.17-20 참조.

65) Kenneth Lieberthal,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Harry Harding(ed),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New Haven: Yale Univ. Press, 1984), pp.61-70 참조.

66) 鄧小平, “現在の 形勢와 任務,” 「中·蘇研究」 제7권 제4호, 1983, pp.283-284.

67) 호요방, “第11期 中央委員會 報告,” 「中·蘇研究」 제6권 제4호, 1982, p.246.

북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 3) 南韓 要因 : 전향적 北方政策과 經濟發展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反帝·反美 鬭爭과 南朝鮮 解放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통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더욱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해 북한의 GNP는 한국의 1/5에 불과하고, 북한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국은 국내정치적 변화(선거를 통한 6共출범)와 더불어 소련 및 동구권 그리고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불가침선언, 정치·군사회담 등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전향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 4) 北韓 內部 要因 : 安保劣等感과 經濟難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소련과 북한은 각자의 전략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공동전략을 취해 급진적으로 가까워졌다. 소련은 對美·中·日에 대한 前哨基地로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중요시 여겼다. 북한은 ‘한·미·일 군사블럭’에 대한 두려움과 對南 軍事的 優位를 확보하기 위해 北韓軍을 現代化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련의 군사적 원조가 절대적이었다.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1970년대 초 이래로 심각한 經濟 不況을 겪어 왔다. 그 이유는 中央集權的 官僚體制의 특성으로 창의와 능률을 도외시하게 되어 생산품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고, 둘째 중공업 우선정책 결과 경공업이 낙후되었고, 셋째 1970년대 이래 GNP의 25%정도를 군사비로 할당하고 있으며, 넷째 노동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데 최근들어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反金 政治勢力과 결부하여 體制維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도 실패로 끝나자 이에 초조해진 북한 지도층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4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상환 불이행과 외교적 특권을 이용한 밀수로 국제 신용도가 최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서방 개방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소련의 ‘아시아 安保會議’ 구상에 적극 지지, 참가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댓가로 소련은 북한에 경제 원조를 약속·실천하였다.

### 나. 主觀的 環境要因

객관적 환경이 外交政策 形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환경의 여러 조건들이 政策決定者의 認知를 통해서만 비로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認知된 環境(Perceived environment) 즉 주관적 환경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적 환경은 크게 태도적 프리즘과 엘리트 이미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1) 태도적 프리즘(attitudinal prism) : 主體思想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격리와 선별적인 동일시로 특징 지을 수 있다.<sup>68)</sup> 예컨대 1986년 10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경제 협력과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김일성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국제정세와 대외정책을 주로 언급하였다. 소련 공산당 제19차 대회를 보도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은 각종 변화를 개괄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당관료 임기, 당의 역할 약화, 복수 후보제, 공개 토론 등과 같은 정치적 개혁이나, 협동조합법, 가격 개혁, 합작투자법 등 경제적 개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격리를 시도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을 선별적으로 동일시한다. 예컨대 북한은 여전히 양대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으로써 소련의 탈이데올로기적 시각과는 모순이 있으나, 소련의 해외철군 및 병력 감축시도, 세계 여러지역의 비핵지대화 추구등의 평화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수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다자간 무기 감축협상을 제의한 점에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소련의 관심은 의도적으로 빠뜨렸다.

결국 북한은 소련의 평화구상을 동일시하고, 대아시아 정책을 선별적 지지함으로써 소련으로 부터의 정치·군사적 이득을 계속 보고자 하였다.

## 2) 엘리트 이미지(elite image) : 美·日의 帝國主義

프리즘을 통해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에 비친 1980년대 동북아 국제정세는 北韓의 安保에 대한 危機狀況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북한 지도자들의 美·日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81년 1월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한 후, 韓·美 安保協力體制가 강화되자,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戰爭의 危險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 1월 평양 타임즈(Pyongyang Times)와의 인터뷰에서 “美帝國主義者들이 核武器를 남한에 배치하고 있고, 핵전쟁을 위한 軍事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은 핵전쟁의 가장 위험한 온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또한 韓美合同軍事訓練인 ‘틴스피리트’를 예비전쟁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를 트집잡아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sup>70)</sup>

김일성은 또한 일본 정부의 對韓偏重外交를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 김일성은 “일본정부가 모든 문제를 미국에 문의하여 처리하고 미국의 2개 조선 노선을 추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이며 군국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植

68) 하용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 대응,” 최명 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246.

69) 「Pyongyang Times」, 1986.1.25.

70) 「Pyongyang Times」, 1986.1.18과 2.25.

民通治를 겪고, 韓國戰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규모를 직접 경험한 김일성으로서는 韓·美·日 三角協力體制가 침략적으로 느껴지고, 그결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이 이러한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고 한국과 간접 교역을 늘리게 되니, 김일성은 ‘南朝鮮 革命’을 위한 국제적 혁명역량 및 남조선 혁명역량의 약화에 대한 우려와 안보위협을 느끼고 소련의 개혁 개방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親蘇路線으로 기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2. 北韓 對外政策의 特徵

가. 理論的 特徵 : 經濟側面에서의 制限的 開放

북한의 대외정책이 改革·開放으로 變化하는 것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개혁의 지표는 反美, ‘하나의 조선’정책과 ‘남조선 혁명’을 위한 국제혁명역량강화로선 및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포기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개방의 지표는 對外貿易의 확대로 볼 수 있다.

먼저 대외개방의 측면을 살펴본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대외무역의 확장을 간헐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1970년대 초 적극추진 했으나 1970년대 중반 外債의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하였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에서 다시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강조했고, 1984년 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984년 9월에는 ‘合榮法’을 제정하여 경제협작과 합영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경제협작·합영이 구체화 되었다.

대외개방과 관련된 북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 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 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up>71)</sup>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립과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

71) 김일성,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51.

보”이다.<sup>72)</sup>

“자주성을 건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더욱 확대강화 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와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무역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기술교류를 널리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도움으로 될뿐 아니라 이 나라들과의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우리에게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과 여러 분야에서 기술교류와 경제협작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서로 래왕과 접촉을 많이 하여야 한다.”<sup>73)</sup>

요컨대 제6차 당대회시 김일성의 보고에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國際的인 經濟協力이 自立經濟와 상충하지 않음을 김정일이 주장하였다. 이에따라서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交易關係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북한 대외정책의 정치적 개혁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가 있습니다.”<sup>74)</sup> 라고 언급하였다. 미군철수와 통일문제에 대한 불간섭이 전제되었지만 미국과의 친선관계를 당대회의 보고문에서는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경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현시기 국제정치 분야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세세계 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핵무

7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144.

73) 최고 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589-597 참조.

74) 김일성,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66.

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sup>75)</sup>

#### 나. 實際的 特徵

김일성은 1984년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소련을 비롯하여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김일성의 공식적 소련방문은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 참석한 이후 23년만의 일이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보고 배우며 이들과 交流 및 協力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것이었다.<sup>76)</sup> 북한은 경제협작과 기술협조의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85년 3월 “합영법 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등을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sup>77)</sup>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에서 이근모정무원 총리는 貿易額을 3.2배로 증가시킬것과, 貿易 및 경제사업의 대상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발전도상국가, 자본주의 국가 모두를 언급하였다.<sup>78)</sup> 1988년 11월 26일 정무원내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였고,<sup>79)</sup> 1989년 4월에는 북한과 조총련이 공동운영하는 ‘조선합영은행’이 개설되었다.<sup>80)</sup> 북한의 합작 실적을 살펴보면, 1985년 6건, 1986년 8건, 1987년 12건, 1988년 8건, 1989년 19으로 총 53건이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소련 9건, 중국 2건, 재미교포 3건, 조총련계 27건, 프랑스 1건, 기타 11건이다.<sup>81)</sup> 이상을 정리해 볼 때 북한은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확대를 공식화 하고,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과의 합작·합영을 지

75)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년감, 1987」, pp.4-5.

76) 「조선중앙년감 1985」, p.113.

77) 합영법 전문은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서울:국토통일원,1989), pp.119-128 참조.

78) 이근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 중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항,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제4집」, pp.830-832.

79) 「內外通信 綜合版 38」, p.321.

80) 「內外通信 綜合版 39」(1989), p.559.

81) 「北韓 및 共産圈動向」, 제101호(1989.11), pp.20-21.

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북한의 대외개방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으나, 그 속도와 범위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만에서 조절되어 왔다 하겠다.

따라서 1980년대 북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분적 開放의 노력이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개방은 대외적 요인인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대내적 요인인 자체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데탕트가 북한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多變化 및 實利追求’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북한의 실리추구는 제한적인 것으로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 하면서도 여전히 反美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게 한 객관적 環境變因은 美·蘇 데탕트와 美·中 데탕트, 美·中·日 3각체제 등장, 韓國의 통일정책 및 대외정책의 變化와 급속한 경제발전, 북한에 있어 기술관료의 등장과 6개년계획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당시 냉전체제와 이에 따른 동북아 二重 三角關係(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소련-중국)의 첨예한 대립 구도 하에서 美·蘇 및 美·中 데탕트와 日·中 관계개선은 북한에게 크나큰 시련이 되었다. 또한 남북경쟁에서의 상대적 열등감은 북한 정책결정자에게 압박이 되었다. 이러한 대외적·대내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북한은 철저히 主體思想에 근거한 논리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데탕트가 북한 대외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핵심적 변인은 美·蘇 및 美·中, 日·中 데탕트라는 대외적 요인과 이를 해석·수용하는 주체사상이라 하겠다.

1980년대 신데탕트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制限的 對外開放’ 정책 추구기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북한이 ‘제한적 대외개방’ 정책을 추구하게 한 객관적 環境變因은 美·蘇 신데탕트, 中·蘇 和解, 中國의 開放政策, 韓國의 경제발전, 北韓의 安保劣等感과 經濟難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환경요인은 정책결정자의 認知를 통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 정책결정자들은 主體思想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였어도 경직된 도그마로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근본적 관계개선은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신데탕트가 북한 대외정책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핵심적 변인은 미·소 신데탕트라는 대외적 요인이 아니라 대내적 요인인 북한의 경제난 變因이고, 이를 또한 제약하는 變因은 주체사상이라 하겠다.

1970년대 대외정책과 1980년대 대외정책에 있어 공통점은 양 정책 모두 주체사상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1970년대 대외정책은 대외적 요인(데탕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1980년대 대외정책은 대내적 요인(경제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시말해 경제적 요인은 북한 대외정책의 형성에 있어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그 비중은 점점 커져왔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하지 않는한 북한이 주체사상에 의해 체제유지 및 대외정책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겠다.

## V. 1990年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과 對外政策變化 展望

### 1. 1990年代 北韓의 主·客觀的 環境要因 展望

#### 가. 客觀的 環境 要因

##### 1) 世界的 要因 : '冷戰後期 時代'와 多極化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冷戰後期 時代'(The Post-Cold War Era)는 더욱 加速化될 것이다.<sup>82)</sup> 이는 蘇聯의 革命的 變化에 기인한다. 소련은 경제침체와 기술낙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의 저해요인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스탈린주의적 全體主義體制의 병폐를 제거하는 根本的인 改革을 추진했다. 소련은 1990년대에도 政治的 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추구할 것이며, 소련경제는 당면한 경제적 혼란을 점차적으로 극복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蘇聯 聯邦制는 構成共和國의 自主權이 확대·보장되는 방향의 「國家聯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소련은 더욱 적극적인 新思考 對外政策을 추진하여, 美·蘇 신데탕트는 軍備縮小의 실현과 함께 더욱 構造化될 것이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國際政治經濟體制의 多極化와 世界 經濟 主導權이 分擔되어 갈 것이다.<sup>83)</sup> 日本·西歐의 부상과 新興工業國家들의 출현으로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 약화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 우위를 전제로 한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음이 노정될 것이다.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 힘(power)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國際政治秩序가 軍事力均衡(balance of military power)을 중심으로한 兩極體制로 부터 經濟力 均衡(balance of economic interest)을 중심으로 한 多極體制로 이행되면서, 國際經濟의 多極化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국제경제질서의 再編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국제관계는 個別國家利益 중심의 競爭과 協力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국제관계의 중심이 安保, 軍事 위주의 '高位政治'(high politics)에서 교역, 투자, 기술이전 등 經濟위주의 '下位政治'(low politics)로 옮겨감에 따라 美·日·西歐 등 선진 경제

82) 外交安保研究院, 「1990년대 國際情勢 展望」(1991년판), pp.5-23 참조

83) 앞의 책, pp.23-30 참조.

세력간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체제는 美·蘇·日·中·통합된 유럽을 중심으로 탈군사화, 탈이데올로기화 多極化 양상을 보일 것이다.<sup>84)</sup>

## 2) 東北亞 地域要因 : 中·蘇 改革 開放化 政策 및 和解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볼때 美·蘇 新데탕트체제, 中·蘇 和解 및 日·蘇關係改善 展望, 韓·蘇 修交, 韓·中 貿易代表部 교환설치, 北·日/北·美 관계개선은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온 냉전적인 진영외교적 이중 삼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탈진영외교적 분위기를 실리추구적 양자관계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는 한반도상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한반도상의 안정화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中國의 연안 개발 및 蘇聯의 시베리아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東北亞地域의 전략적 대결구조가 완화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세계경제의 基軸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亞·太地域은 역동적인 발전과 더불어 安保協力을 겨냥한 ‘多者主義 接近’(multilateralism)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sup>85)</sup> 그러나 美國의 ‘雙務主義(bilateralism)에 입각한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安保公約, 한반도·캄보디아등 地域分爭, 日·蘇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 亞·太국가들의 政治·文化的 다양성과 安保의 측면에서 공통이해관계 결여등으로 볼때 단기적으로 多者主義 접근의 가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 소련의 탈군사화 정책이 가속되면 亞·太 각료회의(APEC)가 경제협력 이슈뿐만 아니라 安保協力 문제도 의제에 포함하여, 安保·經濟協力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추론하여 볼때, 동북아 지역은 平和와 安定 및 繁榮에 대한 전망이 2차대전후 그 어느때 보다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sup>86)</sup>

여기서 특별히 북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화 정책 및 중·소 화해를 들 수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소련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을 때는 동맹국가의 일원으로서, 중·소 분쟁이 심화되었을때는 이른바

84) 앞의 책, p.3 참조.

85) 노태우 대통령의 ‘東北亞 平和協議會議’(1988.10), 蘇聯 세바르드나제 外相 ‘汎아시아 포점’(1990.9), 濠州 에반스 外相 ‘아시아판 安保協力會議(CSCA)’ 제의, 캐나다 크라크 外相 ‘北太平洋 다이얼로그’ 제의 등.

86) 앞의 책, p.4, pp.21-23 참조.

‘자주노선’ 추구로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의 개혁·개방화정책 추구와 관계정상화로 말미암아 양국으로부터의 경쟁적 지원은 상실케 될 것이다. 따라서 帝國主義와의 대결을 여전히 고집하는 북한의 兩陣營論의 냉전시각과는 상충하게 된다.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4강의 대결구조가 협력구조로 전환)앞에서 북한이 계속 이러한 시각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3) 南韓要因 : ‘남조선 혁명역량’ 弱化

이른바 ‘남조선 혁명역량’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 變因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은 외교측면에 있어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北方政策을 추구하고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교역 및 각종교류 체결과 수교, 그리고 그에 따른 UN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韓·蘇 修交 및 韓·中 貿易代表部 개설은 북한의 대중·소 同盟體制(북방삼각관계)의 弱化를 초래케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의 북방정책이 ‘두개의 조선’을 조장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이라고 비난·매도하고, 한국의 이러한 술책을 저지키 위해서 UN에 가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소 수교, 한·중 관계개선 및 북·일 수교교섭, 북·미 접촉은 결국 南北韓 交叉承認을 현실화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평화적 공존적인 ‘두개의 조선’ 정책을 수용하게끔 압력을 가할 것이다.

표 1. 남북한 1인당 GNP 변화 추이

연 도	남 한	북 한	연 도	남 한	북 한
1960	526	137	1983	1,944	765
1965	622	192	1984	1,999	762
1970	897	286	1986	2,296	860
1975	1,281	579	1987	2,826	936
1980	1,654	758	1988	4,040	980
1981	1,741	750	1989	4,968	987
1982	1,813	736			

- 자료: 1) 1987년까지는 국토통일원, 「남북경제현황비교」 각년판 참조.  
 2) 1988년 이후는 국토통일원, 「1989년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참조.  
 3) 1990년은 통일원, 「1990년 북한경제종합평가」(1991) 참조

경제성장율에서도 한국은 1988년에 12.2% 달하여 1986년 이래 연3년째 12% 성장율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1988년에 3.0% 성장에 그쳤고(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목표성장율 7.9%에 못미침) 결국 1990년에는 -3.7%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sup>87)</sup> 한국은 주요 經濟部門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sup>88)</sup> 한국과의 경제력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改革과 開放을 촉발시킬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韓國은 제6공화국 이후 대통령 직접선거, 지방자치제 도입 등 民主化와 사회개혁이 진전되고 있으며, 1992년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운 文民政治가 확실히 된다. 따라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한국정부는 정치력 경쟁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을 것이고, 이는 북한 정부에게 변화의 압력이 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내적혼란을 이용하여 '남조선 혁명'을 성취한후 南北韓 合作統一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점진적 사회 민주화 정착과 각종 사회개혁 추진으로 이른바 혁명의 주력군(노동자, 농민)과 보조역량(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더우기 동구권

87) 統一院, 「1990년도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統一院, 1991), p.3.

88) 앞의 책, pp.29-32 참조. 그러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分配의 不平等構造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및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을 목도한 일반시민들은 이들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수정을 초래케 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1988년 군사비로 북한은 41.3억\$, 한국은 57.3억\$을 사용하였다.<sup>89)</sup> 1990년에는 북한이 49.6억\$, 한국이 97.3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軍事費/GNP %로 보면 북한이 21.5%, 한국이 4.1% 사용한 것이 된다.<sup>90)</sup> 물론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軍事力을 빠른 속도로 유지·증강하여 왔고, 특히 1985년을 전후하여 대폭적인 質·量的 軍事力 팽창을 해왔다.<sup>91)</sup> 그러나 군사비는 경제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침체된 북한경제로서는 군사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열세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비의 열세와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의 열세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이나 아니면 平和共存을 지향하게 할 것이다.

#### 4) 北韓 內部要因 : 經濟難과 改革勢力의 可能性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改革·開放化로 촉진하는 요인은 김일성을 비롯한 혁명1세대의 노령화와 黨·政 기술관료들의 영향력 증대추세, 김정일 후계체제 정통성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 추구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억제요인으로는 김일성의 존재, 김정일 승계체제 관리를 위한 감시·감독강화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북한에 있어서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사회적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가하며, 더우기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사상·정치중심의 혁명 1세대 리더쉽보다 실무·실용적 전문 기술관료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는 점점 실무관료에 의존하여 북한사회 발전을 추진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실현하고 남한과의 平和共存을 수락하면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갖고있는 김일성의 존재는 여전히 북한의 變化를 억제할 것이고, 또한 개혁정책을 시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쉽게 바꿀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 개방의 촉진요인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

89) IISS, *Military Balance 1988-89*(London, 1988), pp.167-169.

90) 統一院, 앞의 책(1991), p.29.

91) 白鐘千, “北韓 軍事力과 軍事戰略,” 『통일문제연구』(통일원, 1989), pp.163.164

를, 억제요인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정치·경제적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 6개년계획(1971-76) 이래 實用的·開放的 입장을 취해왔고, 1980년대 들어와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다. 물론 1970년대 전반기 무모한 자본도입과 이에 따르는 외채상환 불능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1978-84)에서는 自力更生을 다시 강조하였으나, 이는 개방정책의 난관에 대한 반작용일 뿐, 결국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직접투자 유치하는 보다 적극적 개방정책을 실시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1984년 이래 독립채산제 범위가 확대되고, 생필품·소비품의 생산 증대를 위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현재 북한경제의 당면애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력·석탄·철강등 산업생산의 기반에 있어 심각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의식주 문제 해결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기존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가동율의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있어야 된다. 또한 막대한 군사력의 유지는 북한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당면 경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비축소등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측면에서 개혁 개방화 촉진요인은 개혁세력의 존재, 북한 인민들의 생활개선 욕구 상승 등을, 억제요인은 개혁·개방화 전통의 미비, 철저한 정보통제, 낮은 사회적 다원화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유학의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관료, 소련·동구의 변화를 직접한 지식인, 유학생, 외교관 집단 및 일부 군인등의 개혁세력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sup>92)</sup> 그러나 김일성은 김일성체제에 대한 반발과 노선수정에 대하여 1956년 '8월 종파사건' 처리이후 단호하게 대처하여왔다. 그 결과 끊임없는 숙청과정을 통해 반대세력을 제거해 왔고, 이는 개혁세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와 다원화를 억제하는 사회정책을 추구해 왔다. 게다가 병영국가라 일컬어질 만큼 전체주민의 30%가 군사·조직에 편재되어 사회적 다원화는 매우 낮다. 그러나 북한사회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와의 비율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비록 제한된 범위나마 사

92) 미카네기 연구재단의 해리슨(Selig A. Harrison), 루마니아 집권당 '구국전선'의 지도자 브루칸 박사(1990.6.11), 미아시아 재단 스칼라피노 박사(1991.6)등 주장함.

회적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아직은 변혁 주체세력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장차 지식인, 외교관, 해외여행자를 통하여 수평적 비교시각(현시점에서 중국, 한국, 일본 국민과의 사회생활 비교)이 북한사회에 침투할 것이고, 이에따라 장차 개혁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은 있다.

#### 나. 主觀的 環境要因：主體思想의 強調

주체사상은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지침이며, 행동강령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북한 정책결정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對內外 情報를 인식·판단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외정책의 주요 전략·전술의 방향을 결정 내린다.

1980년대 후반 급속히 전개된 蘇聯 및 東歐의 개혁·개방화는 북한의 主體思想의 變化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主體思想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전파 되었다. 예컨대 1989년말까지 東歐의 變革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축소·왜곡 보도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를 일단 사실로 보도하되,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노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인것 만큼 전진도상에서 예상치 않던 사변에 부닥칠 수 있으며,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반드시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의 진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sup>93)</sup>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친다고 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sup>94)</sup>

93)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0.1.1.

94)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1990.5.25.

「로동신문」 사설의 주제별 빈도수에 의하면 1980년대 북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던 것은 경제발전(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이었다. 그런데 1988년 이후 북한에서는 사상통제에 대한 강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에 이르게 되면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문제보다 정치사상문제로 이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동구권의 급속한 변화와 최근의 소련 상황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과 대응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sup>95)</sup>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sup>96)</sup>

“우리는 앞으로도 제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작품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품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우리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을 이끌어 기술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sup>97)</sup>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권 변혁의 외적요인을 帝國主義者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한 위기로 인식한다. 또한 내적 요인으로서 특권층의 부패, 세도와 관료주의의 만연 등으로 정권과 인민대중이 괴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대응방안으로 다섯가지 유형의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혁명적 원칙을 지키는

95) 徐鎮英, 「北韓權力變動 및 社會變化對備計劃 研究」(統一院, 1991), pp.93-97.

참조.

96) 김일성, 「로동신문」, 1990.5.25.

97)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당 중앙위 책임일꾼과 담화, 1991.5.5) 統一院, 「統一速報」, 91-17, p.37.

나라들에 공격의 여봉을 돌리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  
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는것이 나라와 민  
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당  
의 자주적인 노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우  
리 인민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  
른나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강행하  
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  
리 인민은 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반양시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 놓음으로써 제국주  
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봉쇄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덕하  
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영도이  
론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 한편 사업방법과 작풍  
에서 나타나는 공부정자료를 가지고 제때에 사상교양과 사상투  
쟁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sup>98)</sup>

첫째, 외부의 영향력을 반사회주의 책동이라고 규정짓고,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촉구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우  
월성에 자긍심을 갖도록 선전한다.

둘째,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며, 북한식 민주주의인 인민대  
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주체사상을 재해석·강조  
하고 있다.

셋째, 인민의 이반을 막기 위하여 수령, 당, 대중은 일심동체라 규정하  
고 인민대중의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강조하  
고 있다.

넷째, 자본주의의 위기 비판과 우방 중국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 수립 이후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요컨대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主體思想은 통치이데  
올로기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변화가 있다면 北韓  
體制 維持를 위한 部分的 變化( 주체사상의 재해석과 강조점의 변화)만  
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남북한이 UN동시가입을 하였을지라도 북  
한으로서는 ‘하나의 조선’정책과 ‘反帝·反美’정책 및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98) 김정일, 앞의 글, p.13, p.25.

## 2.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展望

새로이 전개되는 1990년대 주·객관적 환경속에서 북한은 이제 대외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대외정책의 變化 指標는 1 대외정책의 目標·理念·路線 2 대외정책의 決定構造(機構 및 政策決定者) 3 대외정책의 地域別 特徵 등에 있어서 변화 有無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1과 3을 중심으로 北韓 대외정책의 변화방향을 살펴본다. 국가목표에 있어서는 ‘남조선 해방’ 및 한반도 공산화통일과 전세계의 공산화의 추진여부이다. 노선에 있어서는 國際革命力量의 強化 및 主體思想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고수 여부이다. 지역별 특징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國家를 基本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第3世界 國家를 間接的인 補助力量으로, 資本主義 國家를 豫備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는 革命指向的 路線의 추진 여부로 本稿에서는 본다.

북한 대외정책 變化類型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가.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類型

#### 1) 積極的 對外閉鎖 政策

##### 가) 原因

북한체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에 그 정당성을 의존해 왔고, 폐쇄체제의 성격상 남북한관계를 개방하는 경우 체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남조선 혁명’의 논리를 갑자기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中國·蘇聯 및 社會主義 陣營과의 유대를 토대로 反帝·反美主義 및 社會主義 建設 完成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東歐圈 및 蘇聯의 變革은 北韓이 體制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충격을 준다.

##### 나) 政策的 特徵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주체사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改革·開放化에는 적극 반대한다. 이 경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反帝國主義路線과 反‘平和的 移行’路線을 철저히 고수하며 社會主義陣營과는 유대를 강화한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통일 전선전술에 입각한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되,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세련되게(인민⇒민중, 민족해방⇒자주통일, 계급투쟁⇒민주화) 구사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와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 다) 地域別 特徵

북한은 중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소련에서의 경제난과 민족분규에 따른 共產黨 政權의 급격한 몰락은 주변 공산주의 국가에게 큰 충격을 준다. 이에따라 아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中國, 베트남, 北韓 등) 經濟交流에 중점을 둔 「아시아 社會主義 共同體」(Asian Socialist Community)를 형성하고, 나아가 '新社會主義 聯盟'(쿠바 포함)을 결성하여 자본주의의 팽창에 대항한다. 그리고 美國·日本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蘇聯은 社會主義원칙을 팔아먹은 나라로 비난한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美帝의 植民地임을 비방·선전하고, 그에따라 각종 南北對話 및 經濟交流을 중단한다. 단지 남조선 해방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적극 강화해 나간다.

## 2) 消極的 對外閉鎖 政策

### 가) 原因

북한으로서는 '남조선 혁명'과 '하나의 조선'노선을 체제(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체제) 유지상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食糧難을 포함한 심각한 經濟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制限된 經濟交流이 필요하다.

### 나) 政策의 特徵

對內政策과 對南政策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對外政策에서만 제한된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다. 과거 북한의 정책·전개를 살펴보면, 1950년대 스탈린 死後 후르시초프 修正主義노선의 압력에도 건티어냈고, 1960년대 中·蘇分爭의 壓力下에서도 근본적인 체제수정을 하지 않으면서 主體思想으로 이를 지탱해왔다. 1970년대 동서 테탕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러한 대응정책으로 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에도 비록 제기되는 문제상황이 더 크고 심각하지만 北韓은 이를 對內的인 體制強化와 對外的인 유연정책을 배합하여 대응할 수 있다.

### 다) 地域別 特徵

中國 및 社會主義 國家들과는 理念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과는 反帝國主義 및 '빨럭 불

가담' 연대를 강화한다. 특히 식량난의 해결과 천연자원의 확보를 위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의 南南協調를 강조한다. 美國·日本과는 아주 제한적인 關係改善을 시도한다. 日本과는 정식국교정상화가 아닌 연락사무소 수준정도를 쌍방간에 설치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면, 民族解放이라는 북한의 기존논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경제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美國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 규정하되 대외적으로는 북경에서의 참서관급 대화를 계속 유지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을 시도한다. 한어서는 段階的 철군과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한다.

#### 4) 積極的 對外開放 政策

##### 가) 原因

金日成의 자연적 수명이 다하거나, 세계적인 개혁·개방화의 도전을 김일성의 생존시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권력승계상의 문제등을 계기로 主體思想의 변화가 도래하여 實用主義的 政權이 등장한다.

##### 나) 政策의 特徵

이러한 실용주의적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의 대내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에 있어서 根本的인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북한은 세계적 조류가 相互依存과 多元主義로 진행하고 있음으로 對外政策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革命路線을 포기하고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본질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對南政策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變化가 나타나는데, 東北亞 平和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對南革命戰略을 포기하고, 南北韓 平和共存政策을 적극 추진한다.

##### 다) 地域別 特徵

북한은 과거와 같이 中國·蘇聯 중심의 陣營外交나 反美·反日·反帝國主義 등의 鬭爭外交를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국가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東北亞 域內的 모든 주변국가와 實利追求的 立場에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한국에 대해서도 安保, 經濟利益 및 국위선양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남혁명기도를 포기한다. 이에따라 平和共存

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문화적 교류와 나아가 남북한 政治的統合에 나선다.

#### 나. 北韓 對外政策 方向

북한은 1990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국가적 意志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주·평화·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이것은 온 세계 자주화의 요구에 맞게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에서는 段階的 철군과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한다.

#### 4) 積極的 對外開放 政策

##### 가) 原因

金日成의 자연적 수명이 다하거나, 세계적인 개혁·개방화의 도전을 김일성의 생존시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권력승계상의 문제등을 계기로 主體思想의 변화가 도래하여 實用主義的 政權이 등장한다.

##### 나) 政策의 特徵

이러한 실용주의적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의 대내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에 있어서 根本的인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북한은 세계적 조류가 相互依存과 多元主義로 진행하고 있음으로 對外政策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革命路線을 포기하고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본질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對南政策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變化가 나타나는데, 東北亞 平和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對南革命戰略을 포기하고, 南北韓 平和共存政策을 적극 추진한다.

##### 다) 地域別 特徵

북한은 과거와 같이 中國·蘇聯 중심의 陣營外交나 反美·反日·反帝國主義 등의 鬭爭外交를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국가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東北亞 域內的 모든 주변국가와 實利追求的 立場에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한국에 대해서도 安保, 經濟利益 및 국위선양

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남혁명기도를 포기한다. 이에따라 平和共存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문화적 교류와 나아가 남북한 政治的統合에 나선다.

#### 나. 北韓 對外政策 方向

북한은 1990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국가적 意志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주·평화·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이것은 온 세계 자주화의 요구에 맞게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뿔럭불가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뿔럭불가담 나라들,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남남협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진관계를 맺고 편등과 호사존중의 원칙에서 경제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국가목표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이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로선은 1990년대에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國家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시 (1986.12.30)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단결을 강조했으나 제9기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구권 및 소련의 변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확립과 관련되고, 동시에 국제정세가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자국 이익중심으로 변화됨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외정책 이념에 있어서 제8기 제1차회의에서는 ‘자주, 친선, 평화’ 순으로 강조하였으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 순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북한이 신데탕트의 국제정세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시대가 제기하는 국제주의 구호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대신하여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원칙 적립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추구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단결과 연대성 강화를, 발전도상국가들과는 친선협조 관계를 특히 남남협조를,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경제문화적 교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군축·핵무기 철폐·외군철수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를 계속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 들어와 대외정책에 있어 理想主義·教條主義를 떠난 일련의 現實主義的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반대한 UN同時加入의 受容, 제국주의 국가들인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對日 國交 正常化 推進, 對美 關係改善 접촉, 對아시아 外交 강화 등 보다 현실 적응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련에서의 보수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와 그 실패는 북한과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 양국은 내부적인 體制 단속을 위해 소련 공산당 붕괴의 파급효과를 막고자 하며, 사회주의 및 양국 연대에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더욱 확고히 전진해 나갈 것’을, 중국은 ‘中國式 社會主義’를 고수할 것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對四強政策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韓·蘇修交('90.9.30)와 소련 쿠데타 사태이후 소련과 疏遠하여졌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對蘇 經濟 軍事的 依存度가 높은 상태여서 기왕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되, 장기적으로는 自主性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 곤란으로부터의 탈피가 체제유지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배상금 유입과 기술 자본의 유치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내건 수교 전제조건을 적극 수용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 국민의 인식상의 혼돈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韓中關係, 對日 수교협상의 속도에 맞춰 완만히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 다. 北韓 對外政策 變化展望

이상의 제논의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소극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중기적으로 소극적 대외개방정책을 거친후 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발전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때, 북한은 현재 동구권의 변혁 및 소련 공산주의의 해체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혁명역량이 무척 위축된 것으로 판단한 북한 지도층은 북한 체제유지를 그 근본목적으로 하여, 우선은 1992년으로 연기된 제7차 조선로동당 전당대회까지는 소극적 대외폐쇄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조선 혁명' 및 '하나의 조선' 원칙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UN단독가입을 저지시킨다는 명분하에 UN동시가입을 추진하되, 중국과의 사회주의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북한은 냉전종식과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의 결과로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인 경제난이 겹쳐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남 북한 교차승인과 경제협력의 수용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對中國關係를 계속 강화하되, 對日本·美國과의 修交노력 및 對東南亞 南南協調, 對西歐 經濟協力확대노력을 더욱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은 경직되었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실용주의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르는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 對美·日政策 決定要因分析을 中心으로 —

임순희(淑明女大)

### 〈 要 約 文 〉

1. 昨今 북한의 對外的 외교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탈이데올로기, 탈냉전 국가간 이해와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정세의 전반적인 화해분위기, 중국의 개방과 개혁,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실패는 북한에게 있어 충격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국제지위 향상,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보다 더 적극화된 對北韓關係 개선 의지 등은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 몰려 있는 북한에 대해 향후 진로선택에 있어 초조감을 더 해 주고 있으며 새로운 외교적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북한정권의 최대 당면과제인 김정일 권력계승의 실현을 위해서도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인 배경이 작용하여 최근 북한의 이른바 南方外交가 적극화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를 통하여 꾸준히 모색되어 온 對美·日接近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북한외교의 현실이라 하겠다.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은 한국의 對中·蘇關係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현상유지 및 평화정착을 제도적으로 틀지어 놓기 위한 先決條件이라고 볼 때 한반도의 對內外的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에게서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向後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북한의 對美·日政策 결정요인에 중점을 둔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정한 외교정책 분석틀을 원용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對美·日外交政策 변천과정을 概觀하면서 특히 북한의 對美·日外交 전환기에 주목하여 昨今 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에 작용한 요인들을 구

체적으로 개념화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료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일반문헌과 북한관련 특수문헌을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 외교정책의 개념 및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하여 외교정책 비교분석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북한 외교정책 목표와 기본노선 : 북한정권의 기본적인 외교정책 목표를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일반적인 국가이익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로서 안보추구, 정통성의 확보, 경제발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에 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3대혁명역량 강화, 자주노선 등 세 가지의 기본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對美政策 목표 및 對日政策 목표에 대해서는 주로 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의 목표 및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였다.

4. 북한의 對美·日政策 변천과정 : 북한의 對美·日政策 전개과정에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징하게 시기구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별다른 근거없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등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북한 對美政策의 전반적인 흐름은 反美투쟁으로 일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초 對美 直接 접촉 제의 이후 북한은 인민외교를 병용하면서 對美 接近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로 1980년대말 최초의 외교적 공식접촉이 성사되어 금년 7월말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17차례에 걸친 참사관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군유해 송환, 유엔가입 등을 통하여 對美接近을 보다 더 가속화하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관계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측이 對北韓關係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내 핵사찰 수용 문제에 관하여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對日接近은 주로 경제 및 人的 交流를 통하여 꾸준히 진전되어 왔으며 '90년 북한 일본 간의 수교교섭 합의 이후 두 나라는 4차례의 수교회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교회담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난 8월 북한의 무역사무소가 동경에 개설됨으로써 조만간 수교가 실현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북한에 대해 핵사찰의 무조건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교의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일본 북한의 국교정상화는 핵사찰 수용문제를 포함한 일본 북한간의 현안에 대한 尙後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5. 북한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 분석 : 북한의 對美·日政策 결정요인은 국내요인과 국제환경요인으로 크게 나누고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1) 국내요인—김일성,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경제력, 주체사상

2) 국제환경요인—미국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일본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국제정세, 중국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소련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동구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 등이 그것이다.

6. 결론 : 북한의 對美·日政策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尙後 북한의 對美·日政策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적인 외교환경의 변화는 對美·日接近을 보다 더 가속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국제환경요인들 중에서도 소련 및 동구의 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이 더욱 그러했다고 본다. 북한의 對美·日接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요인들 즉 북한의 經濟力과 국제환경요인 모두는 앞으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김일성 개인과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리고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등은 전망이 불투명한 변수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는 김일성의 고령과 질병에 따른 有故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김일성의 有故 내지 死後에 주체사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김일성의 존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한편 김정일의 권력계승이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므로 결국 김정일 권력승계의 성공적인 실현여부와 권력승계 이후의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과 관련한 김정일체제의 정책전개가 尙後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 김정일 권력계승 여부 그 자체가 예측불허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로서는 북한의 對美·日接近을 북한의 기방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의 적극적인 對美·日接近이 북한이

바라는대로의 성과를 거두어 우리측으로 하여금 결과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북한의 對美·日接近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은 물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I. 序 論

북한외교의 對外的環境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美.中 화해, 美.蘇 화해, 日.中 화해, 中.蘇 화해 등으로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국제정세의 전반적인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理念的, 體制的인 갈등과 대립이 止揚되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 관계가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脫이데올로기, 脫冷戰, 국가간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정세의 화해분위기와 함께 中國의 개방, 개혁, 蘇聯 및 東歐의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실패는 북한에게 있어 충격 그 자체일 것이며 이로써 북한외교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政治的 民主化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地位向上, 北方外交의 성과,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된 對北韓關係改善 의지 등은 심각한 경제난과 外交的 고립에 몰려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외교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하므로써 앞으로의 對外政策 向方 決定에 초조감을 더 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외교적선택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정권의 最大 當面課題인 김정일 권력계승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도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安定的인 對外環境 조성이 절대 필요할 것이므로 外交的인 정책 전환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昨今 북한외교의 현실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國內外的인 배경이 작용하여 최근 북한의 이른바 南方外交가 적극화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를 통하여 꾸준히 모색되어 온 對美日接近이 加速化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북한의 強力한 對美日 關係改善 의지는 日本과의 관계에서 이미 '무역사무소 개설'의 단계로까지 구체화 되었으며 美國과의 관계에서는 外交的 公式접촉을 成事시켜 지속적인 접촉을 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은 한국의 對中.蘇 關係改善과 함께 韓半島의 현상 유지 및 평화정착을 제도적으로 틀지워 놓기 위한 先決條件이라고 볼 때, 한반도의 對內外的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의 開放과 南北 關係改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우리에게서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向後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을 전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북한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에 중점을 둔 분석을 시도하며 특정한 외교정책 분석틀을 援用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對美日外交政策 변천과정을 概觀하면서 특히 북한의 對美日外交 전환기에 주목하여 昨今 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에 作用한 要因들을 구체적으로 概念化하여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연구 자료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國內外 일반문헌과 북한관련 특수문헌을 활용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外交政策의 概念

외교정책의 定義는 외교정책의 연구에 있어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다시 말해서 외교정책의 정의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용어는 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정책 概念의 부정확한 사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sup>

이를 테면 외교정책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 내지 목표들로 정의되기도 하였고 또는 정책결정 과정으로 定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온 외교정책의 概念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정책의 이론화를 위한 외교정책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외교정책 비교분석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맥가완(Patrick J. McGowan)은 외교정책 행위란 한 국가 사회의 정부 또는 정부의 공식대표가 그 국가사회의 환경의 일부인 다른 국가사회의 정부 또는 정부대표와 상호작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up>3)</sup>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외교정책이란 他國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국제환경에 대한 自國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不斷하게 전개되는 행위체계라고 정의한다.<sup>4)</sup> 또한 로제노(James N. Rosenau)는 외교정책이란 정식으로 임명된 국가관리들이 그들의 전임자 또는 그들 자신이 결정한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제체제 상황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행

1) William Wallace,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71), pp.11-12.

2) Sook ja Lee, "A Study on the Eastern European Foreign Policy", pp. 6-7.

3) Charles W. Kegley, Jr., "The Generation and Use of Events Data" in *International Even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ed. by Charles W. Kegley, Jr., Richard A. Skinner (Columbia : Univ. of South Carolina 1975), p.93.

4) Charles F. Hermann, "Policy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politics*, ed. by James N. Rosenau, Vincent Davis, Maurice A. East(The Free press, 1972), p.70.

위과정이라고 정의한다.<sup>5)</sup> 허만(Charles F. Hermann)은 외교정책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의도적으로 국제적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하는 공식적 행위로 구성되며 이 때에 국제적 행위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개체들로서 정책결정자, 정부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대리인, 他國政府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며, 외교정책은 국가와 국제환경(人間的측면과 非人間的측면)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 내지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sup> 홀스티(K. J. Holsti)는 외교정책이란 환경, 즉 他國 또는 他國들의 정책, 태도, 또는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계획된 행위 또는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sup>7)</sup>

한편 차이(Winberg Chai)는 그의 저서 '中共의 新政治'에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교정책이란 외교의 도구이며 국내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간 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관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며 또한 외교정책은 실제적인 면에서 외교의 내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자체와 방법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이는 외교정책의 일반적의미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강조된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의 不可分의 관계에 대해서는 윌레스(William Wallace)와<sup>9)</sup> 힌튼(Harold C. Hinton)<sup>10)</sup> 등의 학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외교정책 定義들을 종합해 보면 외교정책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국가의 이익 내지는 목표달성을 위해 他國, 또는 국제적 실체에 대해 不斷하게 전개하는 행위체계이며 이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을

5) 앞의 글, p.71.

6) 앞의 글, p.72.

7)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Prentice-Hall Inc., 1977), p.107.

8) Winberg Chai, The New Politics of Communist China, (Good year publishing Company, 1972), p.153.

9) William Wallace, 앞 책, p.17.

10) Harold C. Hinton,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New York : Praeger 1973), p.255.

포괄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일련의 행위체계로서 한 국가가 수행하는 특정한 외교정책은 自國이 주도한 결과이거나 他國이 주도한 정책에 대한 반응이며<sup>11)</sup>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産物이라고 보면<sup>12)</sup> 북한의 외교정책은 북한이 처한 국내외 환경적 요건들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지 및 평가의 산물로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적 정책이나 노선 행위, 또는 '합리적 선택'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sup>13)</sup> 끝으로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개념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의 대외정책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외정책은 그 국가의 본질로 부터 나오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서 어떤 계급이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sup>14)</sup>... 공화국의 대외정책은 주체사상을 국제관계 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우리 혁명의 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sup>15)</sup>

## 2. 外交政策 決定要因

런던(Kurt London)은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外交政策은 국가간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현명한 외교정책에 全世界의 운명이 달려있다.”<sup>16)</sup>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날 急變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 나라의 존립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외교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외교정책 결정은 수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함은 물론이고 또한 수 많은

11) 구영복, 국제정치的主要개념(서울 : 법문사, 1978), p.177.

12)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Prentice-Hall, 1972), pp. 20-23.  
북한연구소 편, 북한외교론(북한연구소, 1978) p.21에서 재인용.

13) 전인영, “외교정책”, 최명 편집, 북한개론(서울 : 을유문화사, 1990), p. 558.

14)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79.

15) 앞 책, p.531.

16) Kurt London,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N.Y. : J.B. Lippincoff Company, 1965), p.1.

요인들이 외교정책의 변수로서 정책결정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음이 외교정책의 自明한 현실이라 하겠다.

외교정책은 政策이 作成되고 결정 집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을 먼저 분석한다면 의외로 쉽게 외교정책 결정 그 자체도 분석될 수 있다.<sup>17)</sup> 이는 외교정책 분석대상으로서 '결정요인'이 갖는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외교정책의 비교연구에 있어 8가지의 정설(Orthodoxy)을 제시한 문톤(Don Munton)도 그 첫번째 것으로 외교정책 분석은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sup>18)</sup> 로제노(James N. Rosenau)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sup>19)</sup> 이러한 외교정책의 주요 분석대상인 정책결정요인에 관하여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위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크게 나누면 사례연구에 유용한 것과 비교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차 대전 후 초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사례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외교정책 변수의 복잡성을 들어 외교정책의 일반화와 모델 설정 시도를 위한 비교연구에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行態主義 운동의 결과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의 과학화 운동이 본격화 됨으로써 외교정책의 理論化를 위한 방법으로서 비교분석이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외교정책 분석틀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레스(William Wallace)<sup>20)</sup> 맥가완(P. J. McGowan)<sup>21)</sup> 로제노(James N. Rosenau)<sup>22)</sup> 브레처(Michael Brecher)<sup>23)</sup> 케

17) 정순영, "외교정책 결정의 요인과 스타일", 입법조사월보 145(1985.4), p.1.

18) Don Munton, "Comparative Foreign Policy" in International Even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pp.257-269.

19)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Y.: The Free Press, 1971), p.99.

Rosenau도 외교정책의 이론수립을 위한 'if-then' 모델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if'는 內的要因의 특수형태이고 'then'은 외교정책의 특수형태라고 그 개념을 밝히고 있다.

20) William Wallace, 앞 책 pp.39-52.

외교정책 변수를 국내변수와 국제환경 변수로 나누고 국가간연계(국내외간연계)를 또 하나의 주요요인으로 제시.

21) P.J. McGowan, H.B. Shapir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 Sage Publications, 1973), pp.53-194.

글리(Charles W. Kegley)<sup>24)</sup>등의 분석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라 하겠다. 한편 上記한 외교정책 분석들 가운데 특히 브레처의 분석들은 개별국가의 特定政策을 분석하는데 매우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sup>25)</sup>실제에 있어서도 북한 외교정책의 분석을 위해 학자들 사이에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sup>26)</sup>

본 논문도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것이므로 브레처의 외교정책 분석틀 적용이 나름대로의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객관적 환경의 內的要因들 가운데 하나인 군사력이 昨今 북한의 對美日接近 政

외교정책요인을 10개의 독립변수로 개념화하고 외교정책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설명.

22) James N. Rosenau, 앞 책 pp.108-109.

외교정책 변수를 개인변수, 사회변수, 정치변수, 체제변수 등 4개 변수로 개념화.

23)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4-7.

○ 객관적 환경 : 外的환경 - 세계체제, 지역체제, 양자체제 <국가 대 국가의 쌍방관계 >

: 內的환경 - 경제력, 군사력, 정치제도

○ 심리적 환경 : 태도적 프리즘 - 이데올로기 역사적유산, 정책결정자의 특성 : 엘리트 이미지

Michael Bre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 Setting, Images, process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72).

24) Charles W. Kegley, Jr., Eugene R. Wittkopf, Perspectives on American Foreign policy : Selected Readings pp.1-3.

Charles W. Kegley, Jr., E.R.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N.Y. : St. Martin's Press, 1979), pp.99-395.

25) 이숙자,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북한의 對蘇外交政策" 통일논총 제 6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p.23.

26)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고병철교수는 특히 브레처의 외교정책 분석틀을 인용하여 남북한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

이숙자,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북한의 對蘇外交政策", pp.21-48, 이숙자 교수는 고르바초프체제 등장 이후의 북한의 對蘇外交政策 決定要因을 브레처의 외교정책 분석틀을 적용시키어 분석.

策에 미치는 영향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볼 때<sup>27)</sup>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 분석을 위한 브래처 분석틀의 援用은 그 적용에 있어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對美日外交政策 결정요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 어떤 특정한 외교정책 분석틀을 인용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對美日外交政策 변천과정을 개관하면서, 특히 북한의 對美日外交 전환기에 주목하여 昨今 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에 작용한 對內外的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概念化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對內外的인 요인들을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안병준교수는 북한 외교정책의 배경 즉 정책결정의 制約要因으로 역사적 경험 地政學的 위치 김일성에 의해서 정의된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발전 수준 등을 들고 이들 가운데 역사와 地政學的인 요인들은 북한의 초기 정책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나 근래에 와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요인이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고병철교수는 북한 외교정책의 제약점들로 첫째 외교정책의 목표 그 자체, 둘째 對內的인 제약으로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쇠퇴기미의 경제상황, 셋째 對外的인 제약으로서 주로 북한의 전략적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sup>29)</sup>특히 소련 및 동유럽의 격변과 남한의 증가된 地位向上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高교수는 브래처의 외교정책 분석틀에 의거하여 북한 외교정책의 객관적 환경의 外的要因들을 全世界 차원에서의 강대국간의 관계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美, 蘇, 中, 日 4大強國間的 관계 그리고 북한과 이들 4강들과의 쌍방관계, 남북한 관계 및 북한의 對南韓政策 등을 들고 있으며 객관적 환경의 내적 요인들로는 북한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제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 환경의 외적요인들이 여과되는 프리즘 즉 북한외교정책의 심리적 환경으로

27) 북한의 對美日接近政策은 군사적인 목적이기 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경제적인 의도가 더 한층 강한 것이라고 본다.

28) 안병준, 비교공산주의와 현대국제질서(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6), pp. 335-341.

29) 고병철 “北韓外交政策 方向 : 목표, 제약점, 전망”, 동화연구소, 제 1회 국제학술회의(동화연구소, 1991), p. 68.

이데올로기, 역사적 경험, 정책결정자의 성격 등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프리즘을 통하여 반영된 객관적 환경의 이미지, 즉 정책결정자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심리적 환경의 또 다른 요소로 들고 있다.<sup>30)</sup> 또한 신정현교수는 북한 외교정책의 대외적요인들로 세계체계, 지역체계 및 한반도 상황을 들고, 대내적 요인들로는 이데올로기, 정치구조, 경제능력, 군사력 등을 들고 있으며<sup>31)</sup> 염홍철교수는 북한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내부결정인자와 외부결정인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2)</sup> 즉 그에 따르면 먼저 내부결정인자라는 일반적 개념은 영토, 지형, 기후, 인구, 자원 등 자연환경과 정치문화, 국민의 가치관 및 태도, 정치적 리더십 등 인위적인 측면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後者, 그 중에서도 김일성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결정인자는 국제환경을 뜻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국제환경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4강이고 이 4강이 연출한 데탕트라는 상황이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인자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남식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주체사상 등 정치이념과 국제혁명역량 사회주의 건설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sup>33)</sup> 이외에도 중소의 배경을 중요시하고 있다.<sup>34)</sup>

지금까지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은 국내적인 요인들과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요인은 첫째 최고 정책결정자 김일성, 둘째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셋째 경제력, 넷째 주체사상 등 4개 요인이다. 그리고 국제환경요인은 첫째

30) 고병철 “북한 대외정책의 형성과정”, 박재규 편, 북한의 對外政策(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59-69.

31) 신정현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407-419.

32) 염홍철, “북괴의 외교정책과 제 3 세계”, 북한(1975.3), pp. 106-108.

33) 김남식, “북한의 對外政策 결정과정”, 민병천 편저,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대왕사, 1987), pp. 71-82.

34) 김남식 “북한의 대외활동 기구”, 안보연구 제 7호(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78), pp. 117-124.

미국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둘째 일본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셋째 국제정세, 넷째 중국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大韓國關係改善, 다섯째 소련의 국내외정책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여섯째 동구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일곱째 한국의 북방정책과 南北韓關係 등 7개 요인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외교정책 결정요인의 개념화는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의 국제적인 신기류 형성에 즈음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북한의 對美日接近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 Ⅲ. 北韓 外交政策 目標와 基本路線

#### 1. 北韓 外交政策 目標

대부분의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외교정책의 결정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의식적 무의식적인 국가목표의 설정은 외교정책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sup> 따라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외교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국가목표는 곧 외교정책 목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목표는 국가이익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체계의 필요물은 그 체계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은 다시 체계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sup>2)</sup> 이렇게 보면 결국 외교정책 목적은 국가이익과 거의 동일시되는 것이며 국가이익의 개념은 일련의 안정되고 비교적 변하지 않는 외교정책 목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3)</sup>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自國의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나라의 국가이익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아 自己保存, 經濟發展, 地位向上 등 세 가지 範疇로 구분되며 이러한 국가이익에서 비롯되는 외교정책 목표는 각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국가이익의 概念에서 비롯되는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외교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公式文獻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5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1) Edward. E. Azar. “Behavioral Forecasts and Policy-making” in International Even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p.222.

2) 전용, 외교정책론(서울 : 법문사, 1986), p.248.

3) William Wallace, 앞 책, p.31.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sup>4)</sup> 고 하며, 제 16조는 “국가는 맑스 -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sup>5)</sup>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80년 10월 북한노동당 제 6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는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sup>6)</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上記한 헌법과 당규약에서 북한의 기본목표는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전세계의 공산화가 그것이며 이는 북한최고 정책결정자인 김일성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sup>7)</sup>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父子권력세습체제의 김일성 후계자인 김정일 역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노동계급, 비동맹나라 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며 자기 앞에 맡겨진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sup>8)</sup>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

4) 통일원, 북한개요 '91(통일원, 1990), p. 483.

5) 통일원, 앞 책, p. 484.

6) 통일원, 앞 책, p. 499.

7)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주체사상연구(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9), p. 105.

8) 김정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앞 책, p. 250.

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sup>9)</sup>라고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 그들 체제의 본질적 목적임을 시사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북한 외교정책 형성의 기본이념은 주체사상이며 自主, 親善, 平和를 외교정책의 3대 목표로 한다고 標榜하였다.<sup>11)</sup> 서대숙교수에 의하면 이 목표들은 북한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정책목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고병철교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는 ‘자주, 친선, 평화’를 겉으로 드러난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로 보고 그 외에 정통성, 안보 개발 등 세 가지를 평양외교정책의 잠재적 목표로 도출해 내고 있다.<sup>13)</sup>

이와 유사한 견해가 안병준,<sup>14)</sup>신정현,<sup>15)</sup>전인영<sup>16)</sup>등 북한관계 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본 북한외교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외교정책 목표로서의 안보추구는 동족상잔의 전쟁과 분단상태에서의 남북한 대치 및 군비경쟁 그리고 주한미군과 韓美 군사동맹관계에 대해서

9) 조선중앙년감(1981), pp. 39-40.

10) 허동찬, “김일성 이후의 북한 체제전망” 김일성 이후의 북한.(국토통일원, 1990), p. 51.

11) 서대숙, “북한외교정책 : 조직과 관리체계”, 이흥구, 스칼라피노 共編 북한과 오늘의 세계(서울 : 법문사, 1986), p. 57.

12) 앞 책, p. 58.

13) 고병철, “북한외교정책 방향”, 동화연구소, 제 1회 국제학술회의(동화연구소, 1991), pp. 67-68. 고병철교수는 그의 저서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에서도 남북한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들로 정통성, 국가안보, 경제개발 등을 들고 있다.

14) 안병준, 비교공산주의와 현대 국제질서, pp. 342-346. 안교수는 안보, 국제사회의 인정과 위신, 경제적 번영, 정통성 등을 북한 외교정책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15) 신정현,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 pp. 394-401. 신교수는 정통성의 확보, 국가안전의 유지, 경제발전의 추구, 민족 재통일의 여건 조성 등을 들고 있다.

16) 전인영, “외교정책” 최명 편집,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558-564. 전교수는 안보와 통일, 경제건설, 정통성경쟁 등을 들고 있다.

느끼는 危機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정통성의 확보는 한반도의 분할과 그 결과 나타난 상호 적대적인 두 나라(한국과 북한)의 출현으로부터 생긴 것인데<sup>17)</sup>금년 8월 南北韓 유엔 동시 가입으로<sup>18)</sup>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의 정통성 경쟁은 또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는 북한의 국력신장과 북한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특히 이 목표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제발전이 곧 현실적 이익을 산출해 낼 뿐만 아니라 또한 獨自性(自主)이라는 명백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잠재적 목표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9)</sup> 이렇게 볼 때 근래에 들어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 확대에 부심하고 있음은 이 목표가 갖는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최근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개방화의 전략적인 주목적이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 있음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sup>20)</sup>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 외교정책 목표를 홀스티(K. J. Holsti)의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홀스티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타국가들의 행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킴으로써 초래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및 일련의 조건에 관한 이미지'라고 정의하고<sup>21)</sup>외교정책의 목표를 핵심적 가치와 이익, 중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sup>22)</sup>

이에 따르면 첫째, 북한의 核心的 가치와 이익은 북한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17) 고병철 "북한외교정책 방향", 동화연구소, p. 68.

18) 동아일보, 1991. 8. 9. 남북한의 유엔가입권고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 고병철, 앞 글, p. 68.

20) 유석렬, "북한의 정치정세와 개방화 정책", 동아연구 제 8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6. 7. ), pp.15-18.

21)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New Jersey : prentice - Hall, 1977), p. 139.

22) 앞 책, pp.145-152.

위한 안전보장의 확보이며 둘째, 中期的 목적은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이고 셋째, 長期的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을 성취하고 나아가서 全世界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는 데 前衛的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sup>23)</sup>

## 2. 北韓 外交政策 基本路線

북한의 외교정책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3대혁명역량강화, 자주노선 등 세가지의 기본노선에 따라 추진된다고 보겠다.

### 1)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북한 헌법 제 16조는 “국가는 맑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sup>24)</sup>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黨規約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sup>25)</sup>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북한 대외정책 기본노선의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맑스 - 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로동계급이 자본주의 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사상을 말한다”<sup>26)</sup>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이 원칙은 종래의 전통적 개념으로가 아닌 주체사상에 근거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추구되고 있으며<sup>27)</sup> 이로써 민족주의의 부적절한 표현이며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하는<sup>28)</sup> 주체사상과 프롤레타리아

23) 이경숙, “외교 : ‘혁명환경’ 조성을 위한 총력전” 이상우외, 북한 40년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pp. 445-446.

24) 통일원, 북한개요, p. 484.

25) 앞 책, p. 500.

26)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30.

27) 김남식,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민병천 편저,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 대왕사, 1987), pp. 71-74 참조.

국제주의와의 관계설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sup>28)</sup>라고 선언한 마르크스주의와 상치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주체사상은 맑스가 내놓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sup>29)</sup> 이라고 변명한 바 있으며 또한 김정일도 “우리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sup>30)</sup> 라고 밝힘으로써 주체사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아무리 공정하고 순수하고 세련되고 문명적인 것이라고 해도 민족주의와는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언명한<sup>31)</sup>레닌의 말에서 주체사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의 양립 조화는 순조로울 수 없음을 간파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기나라와 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보편성 보다는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sup>32)</sup>

## 2) 3대 革命力量強化

1964년 2월 김일성은 노동당 제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28)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 청계연구소, 1989), p.264.

29) Karl Marx,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박재희 옮김. 공산당 선언(청년사, 1989), p. 81.

30) 조선중앙년감(1973), p. 34.

“일본(요미우리 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1.10.”

3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 연구, p. 261.

32) 박재규, 북한정치론(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4), p. 29에서 재인용.

33)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론체계”,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 p. 96.

는 남.북조선에서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한편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를 고립시키며"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34)</sup> 또한 그는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sup>35)</sup>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강조하는 것은 자체의 힘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적화통일 노선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화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sup>36)</sup> 한편 김일성은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연대성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노선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 회의에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조선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은 전반적 국제정세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sup>37)</sup>라고 말하여 한반도 공산화 실현을 위해 국제환경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과업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기본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한이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들과의 연대성 강화, 非同盟國家들과의 '反帝國主義 共同戰線' 형성 및 유대 증진, 한국에 우호적인 美.日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추구를 통한 서방국가들과 한국간의 이간 획책 등에 주력해 왔음은

34) 북한총람 : 1945-1982, (북한연구소 : 1983), p. 334.

35) 김일성저작선집, 제 4권, p. 239.

36) 북한총람(1983), p. 334.

37)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4집, p. 797.

周知의 사실이다. 38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북한의 3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이는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에 반하여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 및 이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전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와 국가간 교류 협력증대, 中, 蘇를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의 개혁, 개방 정책, 실리추구 외교 추진 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 3) 자주노선

김일성은 “정치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이 우리 당의 자주노선”<sup>38</sup>이라고 말한다. 또한 김정일은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sup>39</sup> 라고 밝히었다. 上記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주노선에 관하여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견지하며 맑스 - 레닌주의 원칙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견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우리당의 로선”<sup>40</sup>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자주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기본 담보인 동시에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sup>41</sup>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북한 특유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을 뜻한다.<sup>42</sup> 이와 같은 북한의 이른 바 자주적 입장이 체계적으로 발표된 것은

38) 유석렬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과 대외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 18집 (한국정치학회), p. 231.

39) 조선중앙년감(1972), p. 41.

“이리크 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4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200.

41) 정치용어사전(1970), p. 430.

42) 앞 책, p. 430.

43) 이경숙, 앞 책, p. 447.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논설에서였으며<sup>44</sup>북한의 공식적인 자주노선 선포는 1966년 10월 5일에 개최된 黨 대표자 대회에서였다.<sup>45</sup> 즉 당시 김일성이 행한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문에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당의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 4기 제 1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강으로 채택되었고<sup>46</sup>1972년의 개정헌법(사회주의 헌법)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표명되어<sup>47</sup>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북한외교정책 기본노선으로서의 자주노선은 그 공식적인 표방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여 왔음이 특히 中.蘇와의 관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테면 스칼라피노 교수에 의하면 김일성은 결코 순수한 등거리 입장을 취했던 적이 없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8</sup> 또한 이온죽 교수도 북한은 소련과 중공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과대평가 될지도 모르나 그 주체사상의 잠재적 기능과 등거리 외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일 것

44) 북한연구소 편, 북한외교론(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78), pp.665-689.

이 논설은 ① 자기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② 자기힘을 믿어야 한다.

③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④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⑤ 민족적 긍지를 기저야 한다. ⑥ 자립적 민족 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이다. ⑦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자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5) 자주노선의 연원은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자주노선의 수립에 대해서는 정규섭, 북한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92-104. 참조.

46)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3집, pp.76-107.

47)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1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48) 스칼라피노, "미.북한관계 : 논쟁과 실제" 이흥구,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서울 : 법문사, 1986), pp.216-217.

이라고 한다.<sup>49</sup> 이렇게 볼 때 자주노선은 결국 자기방어를 위한 방어본능에 따라 中.蘇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서 생존을 모색해 온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자주성이 상호 모순적이지 않다고 하는 김일성의 주장도<sup>50</sup> 실은 생존을 위한 強辯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 3. 北韓의 對美政策 目標

북한의 대미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동란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 對美政策의 핵심적인 목표라 하였으며 북한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즉, 북한헌법 제 5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로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라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대외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정권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집념을 고수하는 한 북한의 對美外交의 가장 으뜸가는 목표는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이며<sup>51</sup> 이는 그동안 푸에블로(Pueblo)호 나포와 같은 무력 행위로 부터 對美 직접협상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오고 있다.

둘째, 북한의 對美接近은 북한정권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지위약화 내지는 고립화를 목표로 한다. 즉 북한은 對美 직접접촉을 실현하여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 협력관계를 이간 분리시키고 나아가 한국을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外的環境 조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對美接近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북한경제의 침체와 남북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특히 80

49) 이은죽, “북한의 對外關係와 경제개발의 종속적 성격”, 논문집 제 11호. 서울대학교 부설 국제문제연구소(1987.12), p.45.

50) 조선중앙년감(1969), pp.24-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51) 유석렬, 북한정책론(서울 : 법문사, 1988), p.225에서 재인용.

년대 이후 북한정권이 대외무역과 경제교류를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對美接近을 적극화하여 온 것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라 하겠다.

네째, 북한은 對美接近을 통해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 자유화와 민주화를 추구함에 따라 받게 되는 심각한 체제의 위협과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sup>52)</sup>

#### 4.北韓의 對日政策 目標

북한의 對日政策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이다. 북한의 對日本關係改善을 위한 노력은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sup>53)</sup>오는 8월 24일 동경에 무역사무소를 개설케 됨으로써 북한의 對日本國交正常化는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둘째, 경제관계의 유지 및 확대를 목표로 한다. 경제침체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건설을 위한 西方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강대한 일본과의 경제관계 확대야말로 북한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長期的으로는 對日國交正常化를 목표로 하여 왔으므로<sup>54)</sup>對日本 경제관계 유지 및 확대에 더욱 주력해 왔다고 본다. 셋째, 在日韓國人들에 대한 침투를 통한 지지세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남북한 경쟁 관계에서 在日韓國人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목표라 하겠다. 넷째, 對日關係改善을 통한 일본의 중립화를 피하고 또한 한일관계 이간과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피함으로써 對南赤化統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간

52) 유석렬, “북한의 대미접근 현황과 전망”, 국제정세(1990.4), p. 56.

53) 신정현, “북한의 對日本政策 : 인식, 목표, 추세” 박재규 편, 북한의 대외정책, p. 341.

54) 유석렬, “日.北韓關係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影響” 국제문제(1984.12), p. 80.

접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sup>55)</sup> 즉 북한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對北態度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55) 유석렬, 북한정책론, p.278.

## IV. 北韓의 對美·日政策 變遷過程

### 1. 北韓의 對美政策 變遷過程

#### 가. 1950년대

1950년대를 통하여 북한의 對美政策은 東西冷戰의 구조 속에서 진영의존적인 反美鬭爭으로 일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미투쟁은 당시 진영 외교에 충실해야만 했던 북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6.25동란을 거치면서 보다 고조된 對美적개심과 북한에 대한 일차적 위협요인으로서의 對美認識에서 결과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당시 북한은 내부적인 체제형성과 강화를 위해 對內的 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敵' 개념의 표방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sup>1)</sup> 더욱 반미투쟁을 고취해야만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북한의 반미투쟁 과정에서 북한은 1955년 4월 반동회의를 계기로 第三世界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미제국주의의 국제적 고립 및 약화"라는 것을 모든 대외활동의 기본 강령으로 삼았으며<sup>2)</sup> 그 후 반미투쟁을 위한 국제적 통일전선 형성을 획책하는 등 지속적인 반미투쟁 강화를 추구해 나간다.

요컨대 1950년대를 통한 북한의 對美政策은 극도의 적개심만을 요인으로 하여 전개 되었다고 보겠다.

#### 나. 1960년대

1960년대에 있어서도 북한의 對美政策은 반미투쟁 관계로 지속되며 후반기에 들어서는 북한의 對美무력 도발이 감행되기도 한다. 1962년 10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투쟁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sup>3)</sup>라고 하여 反美鬭爭의 강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 1) 유광진 "북한의 對美外交政策" 민병천 편저, 북한의 대외관계, p.169.
- 2) 박재규, "북한의 對美國政策", 박재규외, 북한외교론(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8), p.121.
- 3)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173, "제 3기 1차회의, 김일성 연설"

이는 1960년대 初, 中盤을 통해 발생한 일련의 대외적사건들로 인하여 對美무력도발 감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對美적대의식과 對美 위기의식을 고조시킨 일련의 대외적인 사건들은 美日安保條約(新安保條約)체결(1960), 한국에서의 5.16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1961), 쿠바미사일 위기사태(1962), 월남의 군사쿠데타와(1963) 미국의 월남전개입 적극화, 한일 관계정상화(1965)등으로 북한정권은 이들 사건이 모두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적인 의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극구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미일군사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그것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sup>4)</sup> 라든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군사 쿠데타를 통한 직접적인 군사파쇼 통치로 수습”<sup>5)</sup>하였으므로 “남조선 군사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에 불과”<sup>6)</sup>하다는 것이라든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카리브해역에서 새로운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sup>7)</sup> “오늘 월남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제의 강도적 침략행위에 있습니다.”<sup>8)</sup> “<한일회담>은 미제의 아세아 침략정책의 產物”<sup>9)</sup>이라는 등 모두가 미국을 겨냥한 격렬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 요컨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특히 美日동맹과 韓日關係 正常化는 당시 북한의 정치외교적, 안보적 차원에서 심각한 사태발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對美적대감정도

- 
- 4)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173, “제 3기 1차회의, 김일성 연설”
  - 5)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297, “제 3기 3차회의 외무상 박성철의 보고”
  - 6)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174, “김일성연설”
  - 7)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173, “김일성연설”
  - 8)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권, p.1362, “제 3기 4차회의 내각부수상 김광협의 연설”
  - 9)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2권, p.1396, “제 3기 4차 외무상 박성철의 연설”
  - 10) ‘60년대 들어서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방이 급증하였음이 다음의 연구 논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온죽,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통한 북한사회 변동의 추적, 1952-85”,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8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314.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와 같은 對美적대감은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克明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對中.蘇 동맹 조약체결(1961),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 선언(1964), 4대군사노선 확립, 자주노선 선언(1966) 등이 그것이며 또한 1.21 무장공비 침화대 기습사건(1968),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 EC-121기 격추사건(1969)등은 북한의 對美적대감이 직접적인 反美武裝 투쟁으로 나타난 實例들이었다.

요컨대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반미투쟁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며 이는 이른바 김일성의 '미제의 각을 뜨는 전략'(1968)<sup>11)</sup>과 함께 전개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對美적대적인 사건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있어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관련해서이다. 즉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이른바 자주노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다.<sup>12)</sup> 이는 곧 미국의 對北韓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당시 북한이 추구하기 시작한 탈진영외교가 미국에 반영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1962년 10월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 3기 제 1차회의에서 연설에서 탈진영외교 및 對西方接近政策의 전개를 시사한 바 있었던 것이다.<sup>13)</sup>

#### 다. 1970년대

이 시기에 북한의 對美政策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1960年代末에 미국과의 관계를 극도로 긴장상태로 유도한 이후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人的인 교류와 접촉을 추진시켰다는 점이다.<sup>14)</sup> 다시 말해서 1970년까지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어떠한 접촉

11) 이는 제 3세계와의 反美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북한의 反美反帝투쟁전략이다. 로동신문 '68년, 9.8. 김일성 저작선집, 제 5권(1968), p. 501.

정치용어사전(1970), p. 531.

12) 정용석 "미국의 對북한 여론 동태" 북한(1978.8), p. 181.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한 미국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는 안병준 편, 한국과 미국 1 : 정치안보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62-75 참조.

13)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집, p. 1176, "김일성 연설문"

14) 신정현 "미국과 남북한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 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봄), p. 289.

도 없었고 미국과 진지한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기<sup>15)</sup>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對美政策 전환은 크게 주목을 끌었던 것이며 특히 對美 直接接觸 제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對美政策의 전술적 전환을 시도하여 非政府次元에서의 이른바 人民外交와 정부차원에서의 對美공식접촉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며 당시 북한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이를 가능케 해 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1970년대 초의 국제정세는 美, 蘇, 美, 中, 中, 日 화해로 전반적인 대탕트 분위기에 싸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脫이데올로기적인 국가이익 우선의 다변, 실리, 현실주의적 外交關係 모색이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추세를 보였으므로 이를 배경으로 북한의 外交關係 역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경제성장 둔화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초조감 그리고 과거 북한의 군사화와 對南 對美무력도발이 기대이하의 성과를 보인데 대한 불가피한 전술상의 변화 모색 등 국내적인 요인들도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對美政策의 전술적 전환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한편 1972년 미국 '뉴욕타임즈'지 기자에게 김일성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개변 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응당 작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반동정책을 반대하지만 미국인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 많아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sup>16)</sup> 고 밝히어 북한의 對美接近政策과 이른바 인민외교의 적극화를 시사한 바 있다.

#### - 인민외교 -

북한의 인민외교는 1969년 미국 공산당 대표일행의 공식적인 평양방문으로 막을 열<sup>17)</sup> 이후 미국의 사회단체, 언론인, 학자, 운동선수, 재미교포학자 등

15) 정진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연세행정논총 제 9집(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p. 129.

16) 조선중앙년감, (1973), pp. 57-64.

17) 유석렬, 남북한 관계론(서울 : 정음사, 1985), pp. 324-325.

의 평양 초청으로 적극화되어 갔으며 미국내의 각종 親北韓團體<sup>18)</sup> 김일성 주체사상연구소조, 교포사회의 친북한단체, 공산당 및 지하조직 등을 주요거점으로 활용하여 對美外交의 전술적인 효과를 피하기도 하였다.<sup>19)</sup> 또한 이와 같은 북한의 인민외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sup>20)</sup> 첫째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 실현, 둘째 북한의 對外的 地位 및 이미지 개선, 셋째 西方 기술 및 상품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과정의 가속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한국과의 일시적인 대타ंत्र를 추구하고 對西方 外交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국제기구들에 가입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1972), 西歐 9개국과의 수교,<sup>21)</sup>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개설(1973), 4개 UN기구 가입<sup>22)</sup>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를 적대시하고 미국인민과의 결속을 다지려던 북한의 인민외교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또다른 對美政策 전환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 - 對美 공식접촉 추진 : 對美평화협정 제의 -

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5기 2차 회의에서의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및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sup>23)</sup> 채택은 정부간 외교형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최초의 시사였으며<sup>24)</sup> 그 다음 해 3월에 개최된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의 북한 외교부장 허담의 對美 平和協定 공식 제의와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채택으로 북한의 對美 공식접촉 추진이 본격화 되기에 이른다.<sup>25)</sup>

18) 북한연구소 편, 북한외교론, pp. 613-614.

19) 박재규外 북한외교론, p. 128.

20) 앞 책, p. 123.

21) 전정환, "북한의 對西歐外交政策", 민병천 편저, 북한의 對外關係, p. 229.

22) 전정환, "북한의 對 UN 外交政策", 북한의 對外關係, pp. 264-266.

23)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3집, pp. 679-682.

24) 정노관, "美, 北韓關係 추이와 그 장래", 공산권연구(1990.4), p. 21.

25)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3집, pp. 839-846, 857-859.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이 집적토의 할것을 정식으로 제의한 이 제안의 논리적 근거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치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대표는 정전협정에 조인했지만 남한의 대표는 조인하지 않았으므로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 토의만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의는 중공과 대만에 대한미국의 정책이 변하고 있으며 닉슨독트린에 의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미국이 평화협정 제의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기되었던 것이며<sup>26)</sup> 이후 4개항의<sup>27)</sup>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제의는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 언론 매체와 제 3국 지도자들을<sup>28)</sup> 통하여 미국에 대해 반복주장 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북한의 對美接近政策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70년대를 통하여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관한 美.北韓 공식접촉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몇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는 7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對北韓政策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美議會內 진보파의원들의 對韓군사원조 삭감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sup>29)</sup> 미국내 언론인, 학자, 정치인들의 북한방문 허용, 서유럽국가들의 북한 승인 및 UN산하 국제기구 가입 묵인, 북한 유엔대표부개설 허용 등이 그것이며 특히 1972년 3월 미국무장관 로저스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한국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고 한 최초의 발언과<sup>30)</sup> 1974년 11월 포드대통령의 극동순방 때 사

26) Ralph N. Clough, "북한과 미국", 박재규 편, 북한의 對外政策, p.322.

27)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3집 p.845.

- ① 상대방에 대한 不侵犯 서약과 직접적 무역충돌의 위험성제거
- ② 무력증감과 군비경쟁 중지,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 중지.
- ③ 남조선 주둔 外軍은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가장 빠른 기간내에 철거
- ④ 外軍철거 후 조선의 外軍基地化 不可.

28) 북한은 중국의 등소평 파키스탄의 부토, 유고의 티토, 루마니아의 차우 세스쿠, 이집트의 무바라크(1980), 전캄보디아 국가주석 노로돔 시아누크 공(1980)등을 통하여 미국에 대해 美.북한 단독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29) 정용석, "미국의 對북외 外交政策" 북한(1977. 5).

30)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p.325.

회주의자들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교섭의 의사를 표명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교섭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은<sup>31)</sup>북한의 對美接近 본격화 무렵에 나온 미국 정부의 對北韓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었다. 또한 1972년 6월 로저스 미국무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공식호칭한 바도 있었다.<sup>32)</sup>

이와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宥和的인 태도는 1977년 1월 카터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노골화되기에 이른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터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키스탄의 부토대통령을 통해 前例에도 없는 김일성에게 회신을 보내는가 하면 (1월)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3월) 또한 미국인의 북한여행 제한 조치 철폐를 발표하였고(3월), UN 리셉션에 북한대표도 초청하였다.<sup>33)</sup> 그런가 하면 당시 크리스토퍼 미국무차관은 한 연설에서 "모든 국가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은 북한 중공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원한다"고 밝히었으며<sup>34)</sup>9월에는 비동맹국가 비상외상회의 참석을 위한 북한외상 허담의 미국방문을 허용하는 등<sup>35)</sup>획기적인 對北韓政策 전환 표명과 함께 對北韓接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對北韓接近에 대해 북한은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고<sup>36)</sup>종래 사용해 오던 '美帝', '美帝國主義者' 대신 '미국', '미합중국', '미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sup>37)</sup>한편으로는 당시 사이러스 밴스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 보에게 직접접촉을 제의하는 허담 명의의 서신을 보내는가 하면<sup>38)</sup>허담의 미국

31) 앞 책, p. 325.

32) 조선일보, 1972. 7. 2.

33) 동아일보, 1977. 10. 4.

34) 조선일보, 1977. 6. 14.

35) 동아일보, 1977. 10. 4.

36) A. Chronology of U.S. Relations North Korea - 1970 - February 1985. Korea & World Affairs(Spring, 1985) p.148.

Jan. 31. 日本 자민당의원인 쿠노쥬지의 발언과 June. 20. 김일성의 불란서 르몽드지와의 인터뷰 내용 참조.

B.C. Koh, North Korea in 1977 Year of Readjustment, p. 40.

37) 유광진, "북한의 外美外交政策" 민병천 편저. 북한의 對外관계, p. 174.

38)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 148.

방문시 미국관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sup>39)</sup>對美接近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1978년 초 카터행정부에 의해 주한미군철수 계획이 연기되고 同계획의 일부수정 발표가 있자 북한은 다시 對美비난의 강도를 높였으며<sup>40)</sup>1979년의 스포츠교류에도 불구하고<sup>41)</sup>미국 북한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말았다. 한편 북한의 對美평화협정 제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1975년 9월 제 30차 UN총회 연설에서 국무장관 키신저를 통하여 남북한, 미, 중공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으며<sup>42)</sup>이는 다시 1976년 7월에 반복 주장되었고<sup>43)</sup> 동년 9월 제 31차 UN 총회에서 또다시 수정안으로 단계적 방법에 의한 4자 또는 확대회의를 제의한 바 있었다.<sup>44)</sup> 그리고 1979년 7월 카터 미대통령의 訪韓時 한국과 미국은 공동제안 형식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3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한 바 있었다.<sup>45)</sup> 美, 北韓 양측의 상호제의는 美, 北韓 양측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對美평화협정 제의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의 참여없이 絶對 不可 하다는 것으로 일관하였으며<sup>46)</sup>미국의 3당국자 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실현불가능 하다는 것과 비난으로 일관하였다.<sup>47)</sup>

39) B. C. Koh North Korea in 1977 Year of Readjustment, pp. 40-41.

40)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150, 1978, Feb.1.

41) 유석렬, 남북한 관계론, p.329.

42)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141.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Korea and World Affairs Vol.9, No. 1(spring, 1985). pp.174-175.

43)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pp. 176-177.

44) 앞 책, p.178.

45)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154.

46)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142.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pp.175-176, 조선일보, 1978.4.5., 동아일보 1978.5.9.

47) Young C. Kim "North Korea 1979 : National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p.56-57.

Ralph Clough, "북한과 미국" 북한의 대외정책, p.327

랩프 클러프에 의하면 북한이 3자회담을 거절하자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직접대화를 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며 남한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1970년대를 통하여 발생한 사건들, 즉 닉슨독트린 선언(1969)과 닉슨행정부 출범, 미국의 反戰어른 팽배화, 월남전 종결, 닉슨행정부의 붕괴, 미국대통령 선거, 한국의 6.23선언과 경제성장, 중국의 개방외교 노선과 소련의 군사적 팽창주의, 북한경제의 침체 등을 배경으로 하고 평화지향적인 이미지 부각, 韓美關係 이간, 한국의 外交的 고립화, 미국철수의 조기실현, 한국의 군사적 약화, 中.蘇를 의식한 자주노선 구현, 미국과의 대등한 회담요구를 통한 북한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된 북한의 人民外交와 對美평화협정 제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미.북한관계는 결국 냉각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한편 1970년대에 있어서도 북한의 對美접근 정책을 무색하게 한 反美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對美비난 발언과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김일성의 “미국정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자기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미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sup>48)</sup>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 하지만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모두 달라 붙어 미제의 각을 이루는 곳마다에서 뜨게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sup>49)</sup>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은 도적이 매했을 드는 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sup>50)</sup> 는 對美비난 발언의 계속과 함께 일련의 對美무력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 그 구체적인 실례로는 판문점 유엔군측 경비 부사령관 헨더슨 소령에 대한 북한 경비병들의 집단 구타사건(1976.6), 판문점 도끼살인만행사건(1976.8), 휴전선의 美헬리콥터 격추사건(1977.7) 등이 그것이었다.

요컨대 上記한 사건들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대화단절(1973), 비무장지대에

48) 조선중앙년감, (1973),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972. 5.26” pp. 57-59.

49) 조선중앙년감, (1972), p. 10.

50)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4집. p. 49, 김일성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서의 땅굴발견(1974, 1975, 1978), 박대통령 암살기도(1974), 북경에서 행한 김일성의 對南도발적인 성명발표(1975)<sup>51)</sup>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적극적인 對美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의 북한에 유리한 여론조성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정권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굳히었을 뿐이었다.

#### 라. 1980년대

1981년 레이건행정부가 등장하여 對蘇 강경노선을 표방하고 駐韓美地上軍 철수정책을 백지화하는가 하면 1979년 政變 이후 출범한 한국의 강력한 군사 정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자 북한의 對美外交는 적대적으로 변하였으며 이는 한 미합동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비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反動的 好戰的 정권이라고 규정한 레이건행정부에 대해서도 對美 직접접촉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보였으며 이는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人民外交와 對美협정제외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 - 인민외교 -

북한은 레이건 대통령의 對北韓 강경정책으로 북한의 對美직접회담 개최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此際에 對美 人民外交 방식을 강화하여 美國民으로 하여금 美政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1981년에는 지난 10년간 초청한 수보다 많은 재미교포 학자 및 미국인 50-60명을 평양에 초청하여 대대적인 人民外交를 전개하였다.<sup>53)</sup>

51) 조선중앙년감, 1976. p. 53.

남한에서 정부에 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도발적인 성명.

52)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4집, pp. 573-584.

“조국명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허담의 보고”, pp. 585-588.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호소문” 참조.

53) 서성우 “북한의 對美政策 변화과정” 북한(1987. 5), p. 172.

54) 유석렬, “북한의 對美政策 變化와 전망” 국제문제(1990. 6), p. 43.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p. 159-163 참조.

또한 1980년 중반에 들어서도 북한은 미국 주요 언론사의 언론인들을 비롯하여 미국 민간인들을 평양에 초청하였으며 1985년 10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3명의 학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학자들에게 비자를 준 경우였다.<sup>55)</sup> 이외에도 북한은 1985년 일본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 미국과의 스포츠 교류 추진을 비공식 타진하기도 하였다.<sup>56)</sup>

이와 같은 인적교류는 1988년 미국의 제 3차 對北완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더욱 활발해져 특히 학술적 종교적인 분야에서 크게 확대 되었으며 1989년 시거 前美 국무성 차관보의 訪北은 비록 개인자격이기는 하나 단순한 人的交流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sup>57)</sup> 요컨대 이상과 같이 8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은 人民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人民外交는 전면개방에 의한 상호교류가 제한적인 것이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즉, 북한은 미국인들의 入國을 허락하는데 있어서 選別的인 태도를 취했으며 때로는 북한의 초청을 받은 미국인사들이 초청에 불응하기도 하였고, 또한 1985년 10월 이전까지 유엔이나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방문한 북한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sup>58)</sup>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북한 人民外交의 한계는 북한에 초청되는 미국인의 유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스칼라피노교수에 의하면 북한초청 訪北 미국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다.<sup>59)</sup> 즉, 첫째 여행자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출생하였거나, 북한에 친척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둘째,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북한의 현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셋째,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나 실제 동조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지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유형은 첫번째와 두번째 범주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55) 안병준, “북한의 新外交政策”, 동아연구 제 8집, p. 69.

56) 유광진, “북한의 對美外交政策”, 북한의 대외관계, p. 178.

57) 국제문제조사연구소,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p. 220-221.

58) Ralph Clough “북한과 미국” 북한의 對外關係, p. 328.

59) 스칼라피노, “美.北韓 關係 : 논쟁의 실제” 북한과 오늘의 세계, pp. 230-232.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선별적인 초청에 의한 인민외교는 북한의 對美接近 정책이 호의적인 순수한 對美關係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對美평화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 對美 공식접촉 추진 : 對美평화 협정 제의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또 다시 제 3국을 통한 對美接近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스티븐 솔라즈 美하원의원과(1980. 7.), 톰 레스턴 前美국무부 부대변인(1980. 9)을 각각 초청하여 북한의 對美접촉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즉 미국의 공직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솔라즈 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김일성은 세 가지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公式 外交關係의 수립이 없어도 미국과의 문화교류 및 기타 형태의 접촉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美접촉의사의 적극적인 표명은 1980년대를 통하여 여러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소련 중국과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고 한 김일성의 발언<sup>60)</sup> 1984년 10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영남 외교부장의 발언<sup>61)</sup> 그리고 일본 사회당 도이위원장에게 “북한이 對美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자세”라고 한 김일성의 발언<sup>62)</sup> 등이 그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른바 ‘3자 회담’ 제의는 1983년 10월 북경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바 있었으나<sup>63)</sup> 바로 하루 뒤에 발생한 ‘버마랭군 테러사건’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가 1984년 1월 10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제의된다.<sup>64)</sup> 북한이 제의

60) 유석렬, “북한의 對美政策의 變化와 전망” 국제문제(1990.6), pp.43-44.

61) 스칼라피노, “對日.對美關係” 김준엽外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법문사 1987), p.346.

62) 길영환 지음, 이원웅 옮김. 남북한 비교정치론(서울 : 문맥사, 1988) p.275에서 재인용.

63)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 - North Korean Relations. pp.191-192.

64) 동아일보, (1987.9.27.)

65) 유광진, “북한의 對美外交政策” 북한의 對外關係, p.177.

66)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4집, pp.573-583.

한 3자회담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하고, 이를 先行條件으로 하여 상호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한국이 협의를 한다는 二元的 구조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한국은 종속적인 입장으로 지위가 격하되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정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1970년대에 북한이 제의했던 對美평화협정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 제의도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제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중국이 참여하는 四者會談제의로 나타났다.<sup>66)</sup> 요컨대 80년대를 통한 북한의 對美평화협정 제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항상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것과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가 先行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sup>67)</sup> 중국과 소련의 남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간의 실질적인 접촉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sup>68)</sup> 한편 이러한 공식적인 對北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80년대를 통하여 3차에 걸쳐 對北韓 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1983년, 1987년, 1988년의 조치가 그것이며,<sup>69)</sup>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DPRK' '미국' 등으로 相互 호칭하는 등<sup>70)</sup>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서 상호 접촉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2월 북경주재 미국 북한 외교관(양국대사관의 참사관)이 중국정부의 주선하에 북경의 중립적 장소에서 외교적인 공식접촉을 갖는 성과를 올리기에 이른다. 그 밖에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의 또 다른 의미있는 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의 보고” 참조.

67) Ralph Clough “북한과 미국” 북한의 對外政策, p. 329.

68)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 170, Jan. 11, Jan. 31.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pp. 180-181.

69)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pp. 179-180.

70) A Chronology of U.S. Relation with North Korea. p. 157.

71) '83년 조치는 버마랭군 테러사건으로 중단되었고, '87년 조치는 KAL機 폭파사건으로 철회되었었다.

72) 중앙일보, (1987. 3. 20.)

향은 상업적 교역의 길이 사실상 열려 미국의 對北韓 수출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사실이라 하겠다.<sup>73)</sup>

그러나 북한이 종래 견지해 온 對美이중적 행태는 80년대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미국의 高空정찰기 SR-71機에 대한 미사일공격(1981), 反美공동투쟁의 달 설정, 버마랭군 테러(1983), KAL機 공중폭파(1987) 등은 북한이 對美접촉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反美도발 행위였던 것이다.

#### 마. 1990년대

1991년 7월말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17차례에 걸친 참사관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sup>74)</sup> 미국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북경접촉이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상호 전달하는 순수한 접촉 수준일 뿐 협상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美.北韓間 접촉이 이제는 사실상의 準公式的인 定例的 접촉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로써 북한이 주장해 온 미국과의 접촉 및 공식대화 채널 개설의 예비적 단계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5)</sup> 그러나 수차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기본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별다른 관계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입장의 차이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제시한 관계개선의 前提條件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남북대화의 진전,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실종미군의 유해 반환,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가입, 테러포기, 對美 비방중지 등을 對北韓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남북한 상호감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정부간 직접 대화 및 관계 개선,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정부간 협의 등을 對美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sup>76)</sup>미국과의 대화창구를 참사관급에서 공사, 대사급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77)</sup> 이러한 전제조건들 가운데 미국은

73)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16.

74) 동아일보(1991.8.2).

75) 89, 90년도 동북아안보환경, p.17.

76) 앞 글, p.17.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 북한 간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sup>77)</sup>이에 대해 북한은 핵 선제공격의 포기 및 한국내 핵무기 철거가 先行 되기 전까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sup>78)</sup>美北關係 개선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1990년 5월과 1991년 6월에 행해진 판문점을 통한 한국전 참전 실종미군의 유해 송환은 쌍방 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측의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져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약속대로 91년 9월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일련의 對北關係 개선 조치를 취하고 현재의 美-北 접촉 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키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sup>79)</sup>뒤이어 미국 아시아협회의 한 간부는 9월쯤 미국-북한 연락사무소가 상호 개설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sup>80)</sup> 美-北關係 개선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하는 듯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양측의 人的交流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90년 5월 워싱턴에서의 「동북아시아 전문가 회의」에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원 그리고 유엔 북한대표부의 부대표가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으며<sup>81)</sup>1991년 6월에는 북한의 前유엔대사였던 한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남북한, 미국의 3者 회담을 주장하고 카터 前미국대통령을 訪北초청한 바 있다.<sup>82)</sup> 한편 1991년 6월에는 리처드 스틸웰 前주한미군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이 訪北하여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과 만나기도 하였으며<sup>83)</sup>역시 6월에 駐스위스 북한대사에 의해 美國방차관 訪北說이 나돌아 우리측을 긴장하게도 하였다.<sup>84)</sup>

77) 조선일보(189.11.12).

78) 유석렬 “북한의 對美政策의 변화와 전망” 국제문제(1990.6), p.39.

79) 동아일보(1991.7.18).

80) 동아일보(1991.6.19).

81) 동아일보(1991.6.25.).

82) 유영구, “북한, 미국관계” 북한(1990.7), p.46.

83) 동아일보(1991.6.18).

84) 동아일보(1991.6.22).

요컨대,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對美接近은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미군유해 송환 걸프전쟁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입장표명, 3者회담 이전에 남한과도 군사정치회담을 갖겠다는 용의 표명<sup>85)</sup> 그리고 90년 5월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시기에 대해 처음으로 기한을 못박지 않고 남북한의 단계적 병력감축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힌 점,<sup>86)</sup> 유엔가입 신청 결정 등은 종래와는 다른 對美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미국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sup>87)</sup> 對北韓 접촉은 한국과 사전협의 후 한다는 것이 미국의 公式的 입장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85) 동아일보(1991. 6. 13).

86) 안병준 “脫冷戰期의 북한 外交政策” 통일문제연구, p. 119.

87) 유영구, 앞 글, p. 55.

88) 동아일보(1991. 5. 29) 북한의 유엔가입신청 결정 발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유엔가입과 미. 북한 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유영구, 앞 글, p. 54.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에 대해 미국은 “미. 북한 관계개선의 호혜적 진전을 향한 하나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응을 보임.

## 2.北韓 對日政策 變遷過程

### 가. 1950년대

1950년대를 통하여 북한의 외교는 진영의존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1950년대 초까지는 對蘇一邊倒적인 것이었으므로 북한은 외교정책에 있어 獨自性을 가질 수 없었다. 북한 공산정권 수립 직후 공식화된 북한의 對日政策은 反日敵對的인 것이었다.<sup>1)</sup> 그러나 1955년 2월에 발표된 당시 북한 외상 남일의 성명에서 북한은 對日關係 개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sup>2)</sup>북한의 對日政策은 탈진영 외교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이후 북한은 對日關係 정상화를 目標로 적극적으로 對日接近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정부간 접촉 추진과 인민외교 방식을 병행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對日關係改善 제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의 최우선 정책이 서울 동경 관계의 정상화에 있었으며 또한 일본의 對北韓 政策은 東西갈등에 의하여 특히 미국과의 밀접한 안보유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sup>3)</sup> 따라서 북한의 對日접근은 주로 非政府的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었으며 이는 日本內에 있는 한국교포들 중 좌익세력들의 조직 동원과 일본 사회당, 공산당을 포함한 일본 좌익세력들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유대 강화, 평양방문 일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과의 우호적인 접촉 추진을 통하여 전개되었다.<sup>4)</sup> 1950년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전개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관계의 확대와 在日한국인 복수에 관한 협정 체결이었다. 당시 북한은 지리적인 인접성과 공산품 구입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對日本 경제관계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였던 바 그

- 1)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1집, pp.95-9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발표", 김일성연설, pp.216-22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하여" 박헌영 연설.
- 2) 로동신문(1955.2.26) 참조. 이러한 북한의 對日정책 전환은 1955년 3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기 9차 회의에서의 외무상 남일의 연설에서 다시 공식화됨.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1집, pp.719-726. 참조.
- 3) 신정현 "북한의 對日本政策 : 인식, 목표, 추세" 북한의 對外政策, p.342.
- 4) 신정현, "북한과 일본간의 화해 가능성" 북한과 오늘의 세계, p.240.

결과로 1956년 일본과 북한 간의 무역촉진을 위한 '日.朝무역회'를 비롯한 3개 협회가 설립되었고 비록 간접교역의 형식이었으나 1956년에는 60만불의 교역이 이루어져 對日 경제교류의 통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sup>5)</sup> 한편 북한의 對日政策에 있어서 在日한국인에 대한 문제는 韓.日間의 歷史性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경쟁상태에 있었으므로 북한의 주요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在日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1955년 조총련의 결성과<sup>6)</sup>1959년 소위 '캘커타 협정'으로 불리는 '在日 조선인 귀환협정' 체결로<sup>7)</sup>구체화되었다. 이로써 일본내의 좌익한국인 조총련을 통하여 북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에 대한 북한정책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8)</sup>

또한 在日한국인의 복송에 관한 협정 체결로 북한은 일본과의 쌍무관계 증진과 戰後 복구 사업을 위한 人力부족 해결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sup>9)</sup> 이상과 같이 韓.日關係 이완과 북한.일본 간의 관계 증진을 통하여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전개되어 온 북한의 對日 接近政策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었다.<sup>10)</sup> 당시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회담 타결에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한일회담의 방해 저지를 이 시기의 북한의 對日접근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 나. 1960년대

1960년대의 日.北韓 關係는 정치적으로 最惡의 상태를 보이었다. 즉 한국에서의 강력한 반공군사 정권의 출범(1961), 韓.日國交正常化 실현(1965), 美日공동성명 발표(1969)등 일련의 한반도 內外 政勢 변화로 북한의 불안감이

5) 김세진, "북한의 對日本政策" 박재규外 북한외교론, p.137.

6) 강인덕 "북한의 對日政策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Vol. XIII, No.1(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3), pp.59-64.

7) 앞 책, pp.88-98.

8) 신정현, "북한과 일본간의 화해 가능성" 북한과 오늘의 세계, p.240.

9) 앞 책, p.244.

10) 앞 책, p.241.

극도에 달했으며 이로써 1960년대를 통한 북한의 對日태도는 적대적인 것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對日적대감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한일회담을 일컬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협잡 놀음”이며 “기본관계조약은 을사망국조약의 재판”이라는 등 격렬한 논조의 비난을 가하였으며 북한은 韓日회담에서 토의 결정되는 어떠한 문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韓日間의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도 무효임을 선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11)</sup> 또한 북한은 美.日공동성명을 ‘흉악한 침략문건’이며 이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팽창주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었다.<sup>12)</sup> 그러나 북한과 일본간의 경제적 인적교류는 6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증대를 보여왔다. 먼저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對日접근으로 1961년 4월 북한과 일본간에 직접교역이 개시된 이래 북한의 對日무역은 꾸준한 신장추세를 보였으며<sup>13)</sup> 이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장기정책의 채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sup>14)</sup> 한편 6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정치적관계의 惡化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제교류 확대에 주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였다고 보겠다. 첫째 7개년계획(1961-70) 및 6개년계획(1971-76)의 수행을 위해 각종 기계설비의 수요가 증대되었다는 것, 둘째, 소련의 對北韓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 중단, 셋째, 韓.日관계 긴밀화 전제 등이 그것이다.

북한과 일본간의 人的교류도 이 시기에 꾸준히 증대되었다. 1953년 최초의 평양 방문 이래 일본인의 평양방문은 좌경혁신계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 예술인들에 의해서 계속되어<sup>15)</sup>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64년 부터는 日本自民黨 의원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기에 이른다.<sup>16)</sup>

11)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2집, pp.1149-1177, 1435-1437. 참조.

12)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3집, pp.335-362. 참조.

“외무상 허담의 보고”.

13) 북한연구소편, 북한외교론, p.341. 60년대 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에 관하여는 강인덕 “북한의 對日政策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pp.65-88. 참조.

14) 신정현 “북한의 對日本政策 : 인식, 목표, 추세” 북한의 對外政策, p.345.

15) 강성운 “북한의 對日外交政策과 전개”, 북한의 對外關係, p.194, 강인덕, 앞 책, pp.112-128. 참조.

#### 다.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현저하게 호전되어 갔으며 이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데탕트 구조 출현과 그 때를 같이하고 있다. 즉, 美. 中和解, 日. 中關係 정상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과 일본은 相互 接近政策을 본격화한 것이다. 먼저 북한은 세계적인 東西和解 분위기와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힘입어 對日 접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971년 일본에서의 초당파적인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의 결성이라는 可觀的인 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리고는 韓日協定の 파기를 日. 北韓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日本에 대하여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제의하면서 日本과의 수교 희망의사를 적극 표명하기에 이른다.

즉, 김일성은 “일본이 마땅히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일변도정책을 쓰지 말고 어떠한 침략적 성격도 없는 균등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sup>16)</sup> “만일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sup>17)</sup>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對日접근정책은 일본에서의 다나카內閣 출범과 함께 더욱 활기를 띠고 전개된다. 한편 이시기에 있어서 日本의 對北韓 정책도 이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며 전개된다. 1971년 결성된 日朝 우호촉진의원 연맹은<sup>18)</sup> 北韓의 對日접촉을 집권당인 자민당에로까지 연결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1972년 출범한 다나카(田中)內閣의 이른바 ‘두 개의 한국정책’ 추구로 日本의 對北韓 접근이 구체화된 것이다.<sup>19)</sup> 그리고 이러한 日本의 對北韓關係 개선 의

16) 유완식, “전환하는 북한의 對日外交” 북한(1972.11), p. 87.

17) 조선중앙년감(1973), p. 90.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한 담화, 1972.10.6”.

18) 조선중앙년감(1973), p. 63.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972.5.26”.

19) 북한연구소 편, 북한외교론, pp. 591-593. 日本內親北단체 참조.

20) 김홍락 “日本의 한반도 정책 : 1965년 이후” 구영록 외, 남북한 정치 통합과 국제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288-289. 일본의 對韓 정책 변화 참조.

지는 당시 극적으로 이루어진 南北韓間 접촉과 대화, 한국의 6.23 문호개방정책 선언, 미국의 對北韓政策 완화 조짐 등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70년대 중반에 즈음하여 일본과 북한은 한 때 냉각관계를 보이게 되며 이는 당시 월남의 공산화 남북대화의 중단과 휴전선 근방에서의 땅굴발견, 김일성의 好戰的인 북경발언, 북한의 對日 무역채무 불이행, 日.北韓 무역의 부진,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한 韓.日 관계 악화 등이 그 이유 내지는 배경으로 作用한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美.中.日.中間의 접근이 새로이 전개되고<sup>21)</sup> 카터 美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對北 접근정책이 적극화되자 日本과 北韓 관계는 다시 적극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며, 이는 주로 경제 및 인적교류 관계의 확대에 나타난다. 먼저 1970년대를 통하여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무역 분야에서 나타났다.<sup>22)</sup>

1972년에 시작된 협정무역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日本.北韓間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무역량도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日.北韓間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두 나라 간에 심한 무역불균형 현상과 북한의 對日 무역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제기되어 한 때 무역량 감소의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1979년 쌍방간에 북한의 對日 채무상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두 나라 간의 경제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일본 북한간 人的交流 확대는 주로 日本政府의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이었으며<sup>23)</sup> 그 결과 양측의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경제인, 정치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人的교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 보였다.<sup>24)</sup> 또한 1977년 9월 日本과 北韓은 민간어업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어업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갔다.

요컨대 1970년대에 있어서의 일본 북한 관계는 북한의 적극적인 對日 정치 외교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人的交流和 經濟交流 확대는 급진전을 보였으며 특히 경제교류는 양측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21) 1978. 8. 日.中 평화우호조약 체결, 1979. 1. 美.中 修交.

22) 신정현 “북한과 日本간의 화해가능성” 북한과 오늘의 세계, pp. 252-255.

23) 김홍락 앞 책, p. 302.

24) 신정현 “북한과 日本간의 화해가능성” 북한과 오늘의 세계, p. 253.

를 보였다. 즉 日本은 시장 및 원자재 수입원 확보를 위하여 북한에 적극 접근한 것이며 북한은 자본 기술 및 시설재 도입과 전략물자 도입을 위하여 對 日本 접근을 적극 모색한 것이다.

#### 라.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의 對日접근은 적극적이었으며 對日공식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日本 사회당을 對日本접촉 창구로 활용하였다. 일본내 社會主義者들은 북한의 등거리정책에 대하여 支持를 보였으며 또한 북한의 입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 日本사회당은 공산당보다 훨씬 큰 이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sup>25)</sup>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당을 對日本 연결근으로 이용하면서 1981년 9월에는 「朝.日友好促進親善協會」를 조직하여 對日政治外交關係 발전을 적극 꾀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이 '80년대를 통하여 북한이 추구한 對日關係 개선노력은 당시 美, 中, 日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한 동북아의 긴장 완화 노력과 남북한 대화의 재개로 더욱 고무되었으며, 1984년 북한의 이른바 '합영법' 제정으로 더욱 촉진 되었고 더우기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동서화해의 조짐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對日本 접근은 보다 안정적인 對外환경 속에서 적극화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對日本접근은 이중적인 행태를 보다 노골화하였다. 이는 對日本 비난과 對日本 관계 개선 적극화라는 두 가지 양태로 전개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1983년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서울방문을 전후한 북한의 對日本 태도와<sup>26)</sup>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對日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김일성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종래의 상투적인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경제, 정치, 문화관계에 있어서의 교류사업 범위 확대를 분명하게 원하였으며 日本이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북한과 일본간의 연락 사무소의 설치를 수락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sup>27)</sup> 이러한 북한의 對日 이중

25) Robert A. Scalapino, "對日 對美關係" 북한의 오늘과 내일, pp.334-335.

26)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3 : 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 Asian Survey(January, 1984), pp.106-107.

27) Robert A. Scalapino, "對日對美關係" 북한의 오늘과 내일, p.332.

적접근 행태는 對日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전술에 불과했던 것임은 周知의 사실이며 80년대 중반 북한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하여 對日관계 정상화 제의를 일본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sup>28)</sup> 이상과 같은 북한의 對日接近에 대한 日本의 반응도 적극적인 對北 접근으로 나타났다. 80년대를 통하여 日本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對北韓제제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두 나라 관계가 한 때 냉각상태를 보인 적도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으며 日本은 對北韓관계 개선을 향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83년 5월 일본정부는 아세아·아프리카 법률 자문위원회의 출석을 위한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허가한 바 있으며<sup>29)</sup> 83년 탕군사태로 인한 對北제제조치와 87년 KAL기 테러로 인한 對北제제조치에 있어서도 美國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미국에 비해 훨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sup>30)</sup> 또한 일본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후지산號' 선원 석방문제 등 두 나라간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對北협상 지속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對北제제조치가 해제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對北접근을 더욱 본격화한다.<sup>31)</sup> 이를 테면 88년 10월 다케시다 당시 日本수상은 의회답변 과정에서 “日本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正常的인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89년 3월에 행한 의회답변에서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수상으로서 최초로 對北韓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고 아울러 북한의 公式國名을 거명하면서 對北관계 개선의사를 公式化한 발언을 함으로써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이 바야흐로 對北關係正常化 방향으로 旋回하고 있음을 명백히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日本의 對北접근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東西間 新데탕트 분위기와 中·蘇관계의 정상화, 한국의 7.7.선언과 북방정책의 적극화 그리고 미국의 對北政策 변화 등 일본 외교의 對外的 환경 변화로 더욱 가속화 되

28) 조선일보, 1984. 6. 23. 조선일보 1984. 7. 5. 참조.

29) 일본정부가 직접 관계하는 국제회의에의 북한대표의 출석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이 때 북한대표와 당시 일본 외상과의 간단한 대화도 있었다. 안몽필 “남북한 관계와 日本”, 한국과 국제정치 제 3권 1호(1987. 봄), p. 326.

30)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p. 223-224.

31) 앞 책, pp. 224-226.

었다. 요컨대 上記한 바와 같이 80년대를 통하여 일본 북한 두 나라는 상호 접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관계정상화를 모색해 나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일본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정상화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다케시다 일본총리의 사임을 前後한 일본 국내 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한국측 UN加入案 支持 등<sup>32)</sup>親韓입장 표명으로 인하여 북한의 對日태도는 오히려 경직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두 나라 간의 경제교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북한 간의 무역은 79년과 80년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그 이후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으며 83년도에는 약 2억달러의 對日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한다.<sup>33)</sup> 이와 같이 日.北韓間 경제관계가 부진했던 원인은 특히 北韓의 對日 채무상환 불이행에 있었으며 이는 당시 日本.北韓間 주요현안 가운데 하나였다.<sup>34)</sup> 그러나 19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부터 조총련계를 중심으로 한 對日本 경제교류를 적극화 하게 된다.<sup>35)</sup> 한편 80년대를 통해서도 日.北韓 인적교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주로 日本人의 訪北에 의한 것이었다.<sup>36)</sup> 그러나 북한의 정치인, 경제인, 학자, 체육인, 예술인 등 北韓人의 일본방문도 꾸준히 지속 되었으며 특히 1986년도에는 전년도 303명에서 461명으로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했다.<sup>37)</sup> 또한 80년대 후반에 있어서의 北韓.日本 관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민간어업협정 재연장의 문제였으며 북한과 日本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으므로 그 타결의 전망이 불투명 하였다. 즉, 일본은 일본내 영세어민의 안전한 어업활동보장을 위해 민간어업 협정의 재연장을 필요로 했으나 북한은 협정 그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한 對日 관계개선을 모색한 것이다.

32) 앞 책, p. 232.

33) 유석렬, 북한정책론, p. 287.

34) 강성윤, “북한의 對日政策과 諸현안”, 안보연구 제 16호(동국대 안보연구소), pp. 40-41.

35) 유석렬, “북한정책론”, pp. 291-292.

36) 앞 책, pp. 296, 299-300.

37) 앞 책, p. 295, pp. 297-298.

### 마.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는 극적인 국면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周知하듯이 90년 9월 日本 자민당의 최고실력자인 金丸 前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의 訪北時 북한 주석 김일성이 日本政府에 대해 11월 부터의 본격적인 수교교섭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기이후 일본수상은 환영을 뜻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비야흐로 일본과 북한 간의 대화가 공식적인 직접 대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北韓 관계의 급진전은 金丸 일행의 訪北 기간 중에 발표된 빠른 시일내의 국교관계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항의 공동선언문』 발표와 90년 11월의 제 1차 예비회담 개시로 이어지며 연이은 3차례의 예비회담을 기친 후 91년 1월의 제 1차 본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日本과 北韓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회담 - 1991년 1월 평양회담, 3월의 동경회담, 5월의 북경회담, 8월의 북경회담 - 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相互間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양측 공히 수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 뿐이었다.』 또한 그 동안의 日本.北韓間 수교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보상문제, 관할권, 핵사찰문제 등이었는데 여기에서 특히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는 美.北韓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북한이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제 4차 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정부는 앞으로 日.北韓間 수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 핵사찰의 무조건 수용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로 알려진 「이은혜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사실상의 양보로 겨우 본회담이 정상화된 제 4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경제적 諸問題: 보상 또는 청구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案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수교를 향한 실질교섭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38) 신희석 “일.북한의 관계개선 전망과 한국” 국제문제(1990.12). pp.33-34.

39) “북한.일본간 공동 선언문 全文”, 국제문제(1990.11), pp.133-134.

40) 유영옥 “북한의 UN가입선언과 美.日과의 관계 추이 전망”, 국제문제 (1991.7.), p.78.

41) 동아일보(1991.9.7).

42) 동아일보(1991.9.2).

요컨대 당초 회담의 순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日本.北韓間 수교회담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한이 기대하는 조기수교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北韓수교교섭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남북대화의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이다. 즉, 수교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일본 정부는 우리측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의미있는 진전과 연계해서 수교교섭을 추진할 것을 일본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1991년 들어 북한의 對日本接近은 수교회담 타결을 목표로 보다 더 적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인 바 있다.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이와 같은 對日接近은 黨국제담당서기 김용순이 이끄는 노동당 대표단의 訪日(2.20 - 27)과 북한 방송대표단의 첫 공식 일본방문(2.5 - 14)을<sup>45)</sup>통해서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마침내 8월 24일 동경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sup>46)</sup>

43) 김석우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해소와 일본의 역할” 외교 제 16호 (1990.12.), p. 29.

44) 정노관, “91년도 김일성 신년사와 정책 방향” 공산권 연구(1991.2), p. 93.

45) “북한의 초청, 방문 외교활동” 국제문제(1991.5.), p. 124.

46) 동아일보(1991.8.11.).

## V. 北韓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 分析

### 1. 國內要因

#### 1) 김일성 : 최고 정책 결정자

고병철 교수에 의하면 외교정책의 外的環境이 여과되는 프리즘은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경험 정책 결정자의 성격이 중요하며, "특히 정책결정자의 성격은 파악하기 힘든 변수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성격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이는 북한 외교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개인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개인변수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이며 김일성 1인독재에 의한 개인승배 체제, 즉 수령의 唯一的 영도체제이고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북한 외교정책 결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位階秩序下에서 김일성 수령과 노동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에 의해

1) 고병철, "북한 對外政策의 형성과정" 북한의 대외정책, p. 65.

2) 앞 책, p. 67.

3)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1971), pp. 108-109. James N. Rosenau, *World Politic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6), pp. 17-29. 참조.

個人變數(individual variables), 役割變數(role variables), 社會變數(societal variables), 政治變數(governmental variables), 體制變數(systemic variables)등으로 개념화. 후에 역할변수는 개인변수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개인변수는 정책결정자의 특성, 즉, 가치기준, 재능, 이전의 경험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접하고 있는 역할 등을 뜻한다.

4)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6, No.4. (Winter, 1982), pp. 567-573.

신정현 "外交政策과 對外關係", 북한의 정치, pp. 413-414.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3권 1호.  
(통일원, 1991), pp. 20-24.

창건된 것이며, 黨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sup>5)</sup> 결국 김일성은 노동당 위에 군림하여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테면 “김일성 주석의 말이 조선노동당의 정신(soul)이라면 黨組織은 그의 몸이요, 이 몸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중앙의 모든 변덕과 지시에 복종할 것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sup>6)</sup>

### 가.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김일성은 현재 북한 국가주석, 黨의 총서기로서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제 5차 黨大會 이후 완전한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후<sup>8)</sup> 1972년 12월 최고 인민회의 제 5기 1차회의에서 新憲法을 제정함으로써 김일성은 名實相符한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절대권력자로 君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이 이른바 ‘김일성 왕국’의<sup>9)</sup> 帝王으로서 군림하게 되기까지는 처참한 피의 숙청사를 기록하였음이 周知의 사실이며, 김일성 자신도 이를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우리 당이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또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고 밝힌 것이다.<sup>10)</sup>

이러한 김일성의 숙청에 의한 권력장악 과정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것은 특히 1956년의 ‘8월 종파소동’으로 이는 북한 공산화 이후 계속되어 온 파벌투쟁이 종식되고 김일성에 의하여 黨의 영도권이 완전 장악되었음을 의미한 사

5) “북한로동당 규약” 북한개요 (1991), p. 499.

6) 길영환 “남북한 비교정치론” p. 109에서 재인용.

7) 북한헌법에서 국가주석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과 기능 및 노동당내에서의 김일성의 절대적인 지위는 다음을 참조.

북한 헌법 제 89조 제 99조 제 4조 제 12조, 제 13조 제 100조 제 107조 제 142조.

북한 노동당 규약 全文.

8) 이용필, 북한정치, pp. 47-48.

9) 길영환 “남북한 비교정치론”, p. 108.

길영환 교수에 따르면 ‘김일성 왕국’이라는 말은 1970년대 북한이 선전하고 실행해 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이라고 한다.

10)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주체사상연구, p. 112.

건이었으며, 11) 이후 김일성의 리더십 패턴은 획일주의적 통제, 준엄함, 개인 숭배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12) 그리고 또 한편 이와 같이 확립된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는 그들의 수령관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합리화 되었다. 이른바 '수령론'에 의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령도자"이며 "막스 - 레닌주의 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켰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13) 또한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수뇌"이며 14) "모두의 위대한 스승"이고 "정치적 생명의 아버지"이므로 그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것"이며 15) 김일성의 교시와 黨의 방침은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6) 요컨대 주체사상의 핵심인 이른바 '수령론'에 근거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은 바꾸어 말하면 주체사상을 활용한 '김일성 개인숭배체제의 확립'인 것이며, 이러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활용하는 능력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원인들 가운데 個人的 資質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7)

#### 나.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며 세계 수 많은 나라 진보적 인민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존경하고 있고 18)

11) 박재규, 북한정치론, p.17.

12) Chong-Sik Lee, "Kim Il-Song of North Korea" Asian Survey(June, 1967), p.379.

13) 정치사건(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p.324.

14)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 연구, p.264.

15) 앞 책, p.269.

16) 앞 책, pp.267-268.

17)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 한울, 1987), pp.314-315.

18)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

또한 김일성은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난 전설적 영웅이며, 김일성의 혁명역사는 불멸의 영웅서사시이다.<sup>19</sup> 이러한 김정일의 親父에 대한 찬양은 김일성 치하의 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보여지는 김일성 개인 숭배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테면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이상숭배적 수식 실례를 보면, 김일성은 ‘질세의 애국자’, ‘인류의 영재’, ‘주체의 태양’, ‘민족의 태양’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1977년 4월 15일자 신문에는 수식문귀가 114종이나 되며 가장 긴 수식문귀는 215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이외에도 1981년 북한을 방문했던 在美 韓國人 정치학 교수들의 눈에 비친 김일성 우상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즉 “북한의 어느 곳에 가든지 김일성 총비서를 피할 수가 없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김일성에 대한 찬사는 빠질 수 없는 의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북한은 바로 김일성의 것이었다... 이들은 상징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그를 숭배하기 위한 의식과 동일한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우리에게 인지된 그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sup>21</sup> 이와 같은 김일성 우상화는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부터 시작된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동구의 스탈린주의 독재자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sup>22</sup> 이러한 김일성에 대한 이상숭배는 스탈린의 개인숭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지만 스탈린 경우보다 一步前進한 형태였다.<sup>23</sup> 다시 말해서 김일성 우상화는 다른 공산주의자 우상화와 判異한 것으로, 양성철 교수는 이에 관해 다음의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연구, p. 269.

- 19)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서울 : 한울, 1986), p. 63.
- 20) 이상민 “북한의 정치 과정에서의 우상화 실태분석” 현대사조와 한반도 제 4집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8), pp. 68-79. 참조.
- 21) 고병철, “혁명2대” 북한기행 p. 51.
- 22) 김종익, 고병철 “기행을 마치고” 앞 책, pp. 220-221.
- 23) Chong Shik Chung, Gahb-Chol Kim,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Korea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 173.
- 24) 유석렬, “북한정책론” p. 96.
- 25) 양성철 “남북한 정치체제 분석모형” 한국정치학회보 제 20-2(한국정치학

첫째, 餘他 공산주의 지도자의 이상화가 집권자 장본인에 그친 데 反해서 김일성의 경우는 그들 가족의 이상화에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 둘째, 김일성의 이상화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그것과 비교가 안될 만큼 극심한 정도 (magnitude)라는 것, 셋째, 이상화의 기간도 어느 공산주의 지도자의 이상화에 비해서 또한 가장 길다는 것, 넷째, 이상화가 권력승계와 연계되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上記한 것들 가운데 특히 이상화가 권력승계와 연계되었다는 사실은 곧 김일성 개인숭배의 원천이 ‘혁명적(사실상 상징적인) 불멸성’에 대한 김일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과 카리스마와<sup>26)</sup> 충성을 그의 후계자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라 하겠다.<sup>27)</sup> 이러한 권력승계와 연계된 김일성 이상화는 개인숭배, 족벌미화, 역사날조 등을 통하여 행해져 왔으며<sup>28)</sup> 특히 이는 김일성 1인에 대한 개인숭배가 수용될 수 있었던 북한사회의 문화적 배경<sup>29)</sup>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일찌기 마르크스는 “개인숭배 혐오”를 밝힌 바 있다.<sup>30)</sup> 그러나 김일성에 의하면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은 수정주의적 견해이며, 이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려 공산주의 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음모”<sup>31)</sup>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외교정책결정 요인의 하나인 김일

회, 1986), pp.112-113.

26) 이용필 교수에 의하면 김일성의 似而非 카리스마는 조작된 그의 인격의 聖化와 神化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사이비카리스마적 권위는 조직적인 이데올로기적 주입과 강압 또는 공포수단을 병용해서 구성된 것이라 한다. 이용필, “북한정치”, p. 54.

27)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October, 1986), p.1094.

28)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pp.124-127. 참조.

29) 유교적 가부장제 왕조정치, 일본식의 천황숭배와 군국주의, 스탈린식의 개인숭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諸要素가 사회 통제 수단으로 소개, 도입됨으로서 개인숭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문화가 고착되어 버렸다.

도홍렬, “북한의 정치문화와 혁명계승의 모순”, 북한학보 제 13집,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p.136.

30) 이정수 “최근 북한의 정치동태 분석” 통일논총 제 6권 2호(국토통일원, 1986), p.154에서 재인용.

31) 朴東雲 “북한의 대중조직” 아세아 연구 제 14권 3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p. 89.

성 개인 역할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일성 개인숭배는 외교정책 결정과 정에서의 합리성을 저해할 것이 明若觀火한 사실이라 하겠다.

#### 다. 김일성의 성격

「김일성 王朝」<sup>32)</sup> 「김일성 神政體制」<sup>33)</sup> 절대적 지배자인 김일성의 성격은 특히 그의 성장과정과 성장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징지워지고 있다.<sup>34)</sup> 여기에서는 몇몇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 정리해 보기로 한다.<sup>35)</sup> 첫째, 생존 제일주의 성향이다. 이는 김일성이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異國(만주, 중국, 소련등) 땅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는 곧 무자비성 가학성으로 표출되어 왔으며 북한정권수립 후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숙청과 억압이라는 그의 통치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불신 근성이다. 이는 살아남

- 
- 32) 한인계 소련시민이며 공산주의자인 林隲은 북한 김일성 정권을 '피로 만들어진 王朝'라고 한다. 林隲 김일성왕조비사(서울:한국양서, 1982) pp. 230-232.
- 33) 이상우 교수에 의하면 북한이 단순한 1인 전제정치체제에서 김일성 신정체제로 전환된 시기를 김일성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定式化한 때와 같이 보고 있다.  
이상우 "김일성 체제의 특징" 북한 40년(서울 : 을유문화사, 1988) p. 25.
- 34) 김일성의 성장과정 및 그의 家系, 그리고 이른바 항일투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  
이명영, 권력의 역사 : 조선로동당과 근대사(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3).  
이명영, 북괴괴수 김일성의 정체(서울 : 민족문화사, 1975).  
양성철, 분단의 정치(서울 : 한울, 1987)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연구소, 1989).  
허동찬, 김일성 평전 : 허구와 실상(서울 : 북한연구소).  
허동찬, 김일성 전기비교연구(통일원, 1990).  
임은, 김일성 왕조비사 : 김일성정전(서울 : 한국양서, 1982).  
김창순, 김일성공식전기 해부, 북한(1987. 6, 7호.)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체(한국일보사, 1991).
- 35) 홍성후, 김일성의 성격 및 통치방식(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백상창, 김일성의 정신분석(동대출판사, 1980)  
서대숙, "김일성 : 그의 성격과 정치", 북한의 오늘과 내일, pp.64-92.  
양성철, 분단의 정치, pp.328-329. 참조.

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러한 심리상태는 무한 기만심리, 무한 보복심리 및 잠재적 피해의식 등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유발시키어 김일성으로 하여금 기습과 힘의 전략에 의존하게끔 만들었다. 셋째, 존경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다. 이는 그의 비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그가 어렸을 때 당한 박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비교적 비천한 농촌 태생이라는 것과 학력 및 이론의 수준에 있어서의 부족함에 근거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등의식에서 김일성의 보상적 정치행위, 즉 과도한 개인 숭배 강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外勞 혐오증이다. 이는 만주에서의 항일유격운동기에 생긴 것이며 외국세력과의 접촉으로 얻어진 부정적 인상에 의해 더욱 굳어졌다고 보겠다. 이러한 김일성의 외국인 혐오증은 '역경에 대한 완강한 저항' 성향으로 특징지워진다. 이외에도 김일성에게서 보여지는 성향으로 근면성과 성취욕, 적응성, 허구성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서대숙 교수는 이러한 김일성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국민과 정치체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가장 위험한 특징일 것이라고 강조한다.<sup>36)</sup>

#### 라. 國際政勢觀, 對美日觀

오늘날의 세계적 조류가 脫이데올로기적인 국가간 협력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 실리주의 외교,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 개방과 脫共產主義의 대변혁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이념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991년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세계정세의 急變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종래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昨今の 국제정세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는 시대역행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37)</sup> 한편 김일성의 對美觀은 극도의 反美主義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특히 과거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의 실패와 좌절감,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북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김일성 자신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36) 서대숙, “김일성 : 그의 성격과 정치” 북한의 오늘과 내일, p.91.

37) “91년도 김일성 신년사 분석”, 국제문제(1991.2), p.106.

있다. 요컨대, 김일성에게 있어서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sup>38)</sup> 이므로 이른바 「미제의 각을 뜨는」<sup>39)</sup> 전략에 의해 멸망하고야 말 「세계제국주의의 두목」<sup>40)</sup> 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김일성은 “미국정부의 반동정책은 반대하지만 미국인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sup>41)</sup> 이른바 인민외교를 통하여 對美接近을 적극화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김일성의 對日觀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이 미국에 유착되어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미제의 ‘두개조선’ 정책에 추종”<sup>42)</sup> 하여 온, “미제를 등에 업고 제놈들의 옛 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sup>43)</sup> 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sup>44)</sup> 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對日關係에 있어서도 이른바 ‘인민외교’가 對日本접근의 가능한 통로로 적극 활용되어 그 결과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머지 않았음이 또한 현실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對美日觀은 昨今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의 개연성이 보다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라는 김일성 정권의 최종목표가 수정되지 않는 한 쉽게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38) 조선중앙년감(1971), p. 38.

39) 조선중앙년감(1972), p. 10.

40) 조선중앙년감(1969), p. 25.

41) 조선중앙년감(1973), p. 64.

42) 조선중앙년감(1979), p. 55.

43) 조선중앙년감(1968), p. 235.

44) 조선중앙년감(1969), pp. 26-27.

## 2)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 가. 후계체제 구축과정

1991년 4월 현재<sup>1)</sup>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명실공히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는 이미 1981년에 김일성과 함께 공동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sup>2)</sup> 이는 1982년 부터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黨의 결정의 70% 정도가 이른바 '당중앙' 김정일에 의해 내려졌으며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나머지 30%만을 김일성이 처리하였다고 하는 한 연구보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sup>3)</sup> 한편 1970년 11월 제 5차 黨大會에서 김일성에 의해 후계문제가 제기된 이후<sup>4)</sup> 1980년 10월 제 6차 黨大會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對内外의으로 公式化 되기까지 이른 바 권력계승을 위한 사전작업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sup>5)</sup> 이 과정에서 그는 '당중앙'이라는 신비화된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클리핑저(Morgan E. Clippinger)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이른바 '당중앙' 캠페인은 1974년 2월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때부터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의 간행물(잡지 : 근로자, 천리마 등)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미지 구축을 꾀하였다는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이 김정일을 '당중앙'이라는 암호명으로 호칭한 것은 권력세습에 대한 대내외적인 저항을 피하면서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며, 1977년 일본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확인보도되자,<sup>7)</sup> 그 이후로 '당중앙'이라

1) 1991. 4. 11-13. 북한최고인민회의 제 9기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 Rin-Sup Shinn, "North Korea in 1981 : First Year For De Facto Successor Kim Jong Il" Asian Survey, Vol. XXII, No.1(January, 1982), p.100.

3)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October, 1986), p.1099.

4) 앞 책, p.1095.

5)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242-243. 참조.

6) Morgan E. Clippinger, "Kim Chong-Il in the North Korean Mass Media : A Study of Semi-Esoteric Communication" Asian Survey(March, 1981), pp.292-293.

는 암호명은 거의 2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8)</sup> 이상과 같은 비밀스러운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黨총비서인 김일성의 뒤를 이어 黨비서국의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공개적으로 후계자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또한 6차 黨대회에서 그는 서열 4위의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당군사위원회에서는 김일성과 오진우의 뒤를 이어 서열 3위로 오르는 등 막강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여졌다.<sup>9)</sup> 제 6차 당대회 이후 1980년대를 통하여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sup>10)</sup>라고 밝힌 바 있다. 제 6차 黨大會 이후, 바야흐로 실질적인 북한의 통치자로 군림해 온 김정일은 김일성과 동일하게 ‘수령’으로 호칭되고, 김일성과 함께 ‘주체사상의 창시자’로까지 찬양되기에 이른다. 또한 김정일은 1988년 이후 보다 더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보여 왔으며, “지난 5월 북한의 黨국제부장 김용순에 의하면 김정일은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sup>11)</sup> 사실상 1990

- 
- 7) 1977년 2월 日本에 있는 조총련이 발간한 책자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조총련 간부들에 대한 특별강의 교재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우고 그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 244-245.
- 8) Morgan E. Clippinger, 앞 책, p. 292, ‘표1’에 의하면 잡지 ‘근로자’에서 ‘당중앙’ 호칭은 1977. 4월부터 1979. 1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1978. 2월 제외) 1979년 2월부터 다시 사용된다.
- 9)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 245-246.
- 10)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주체사상연구, p. 162. 1986년 6월 발표된 김일성 강의를.
- 11) 구인창, “북한 1980년대의 모습과 90년대의 전망” 공산권연구(1990. 2), p. 85, “김일성은 1981년 초두 부터 김정일에게 대폭적 권력위임을 했으며 그 목적은 帝王學 교육이었고, 김정일에게 결집된 ‘수령’으로서의 카리스마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 12) 1986년 5월 25일 평양방송, 김덕배 “김정일 지도체제 구축위한 끊임없는 권력개편” 북한(1986. 12. ), p. 63에서 재인용.
- 13)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 143.
- 14) 동아일보(1991. 5. 18).

년 5월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 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위원장:김일성) 제 1 부위원장에 김정일이 임명됨으로써 김정일의 지위 격상과 후계세습체제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또한 그가 국가행정기관에서 첫 직책을 맡음으로써 그는 군부에 대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 周知의 사실이다.<sup>15)</sup> 요컨대 昨今 북한에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이제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으로 호칭되고 있는 바,<sup>16)</sup> 김정일父子 세습체제 구축이 완성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 권력승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 및 인사개편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내용을 概觀해 보면 먼저 노동당 전당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빈번한 인사교체가 이루어진 바, 여기에서 새로 승진되는 고급간부들의 배경을 보면 경제관리나 기술계통의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들이 압도적이며, 이에 반해 군인들의 비율이 점차 감소를 보였고 정무원에서도 조직과 인사개편이 빈번히 행해졌는 바, 여기에서는 거의가 經濟關係 部處가 관련된 개편이었음이 주목되며,<sup>17)</sup> 실제로도 최고인민회의 제 6기('77. 12)부터 정무원총리는 경제관료들로 교체되어 왔음이 사실이다.<sup>18)</sup> 특히, 현재의 연형묵 총리는 만경대학원과 소련 우랄(Ural) 공과대학에서 수학한 경제기술 전문관료로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990년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서열 4위로 격상되어 있음이 주목할만하다.<sup>19)</sup> 1990년 5월, 노동당 제 6기 8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 회의에서 단행된 권력구조 개편도 80년대를 통하여 행해진 권력구조 및 인사개편 동향과 別다름이 없음을 보여주고

15) 박완신, “북한정치행정체제의 변화와 특징” 북한학보 제 14집(북한연구소, 1990), pp. 161-162.

16) 동아일보(1991. 7. 2.).

17) 박한식, 고병철 “김일성 이후의 북한 정치전망” 김일성이후의 북한 (국토통일원, 1990), pp. 13-14.

18) 이종옥, 강성선, 이근모, 연형묵 등이 그러하다.

19) 조영환 “북한 권력구조와 김정일 세습” 월간조선(1990. 5), p. 334.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6위로 나타났다고도 함. 한국일보(1991. 4. 13).

20)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국토통일원, 1991. 봄)

있다.<sup>20</sup> 다만 몇 가지 特記할 만한 것은 첫째, 세대교체가 대폭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점, 둘째, 新.舊의 조화를 모색함과 더불어 고학력 및 전문기술인들을 중용했다는 점, 셋째 혁명세대의 두드러진 진출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서 특히 빨치산 세대의 급부상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보호막 형성, 권력승계의 과도기적 상황 극복,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에 대한 의지 대변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21</sup> 요컨대 上記한 바와 같이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권력구조 및 인사 개편도 거의 완성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 나. 김정일 후계체제 권력기반

유석렬 교수에 의하면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첫째, 김일성과 그의 黨 동료들 즉 항일 빨치산 세대들, 둘째, 노동당 조직, 셋째, 군부 지도층, 넷째, 엄선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 다섯째, 3대혁명 소조원, 여섯째,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조직 등이다.<sup>22</sup> 여기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행동대 역할을 해온 3대혁명소조와 김일성 死後, 김정일 권력승계 및 개연성 높은 북한 권력투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지는 군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 3대 혁명 소조원 -

김일성은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은 세상의 주체

pp.24-35. 참조.

21) 박완식, 앞 책, pp.161-167. 참조.

22) 정노관 “북한의 9기 최고인민회의 구성동향과 정책방향” 공산권 연구 (1990.7), pp.44-47.

23) 앞 글, p.47.

유석렬 교수는 강력한 군부의 부상이 북한의 고립주의 강화로 분석되나 이는 개방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앞으로 있을 개방의 준비로써 강력한 통제수단을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석렬 “공산주의의 소멸” '90 자유논단 논문집, 한국자유 총연맹, p.281. 참조.

24)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6. No.4. (Winter 1982), pp.577-579.

사상화를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25)</sup> 이러한 3대혁명의 추진을 위해 1973년 2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조직된 것이 3대혁명소조이며,<sup>26)</sup> 1973년 9월 김정일의 '중앙당 조직 및 선전 선동 담당 비서'로의 선출과 함께 3대 혁명소조 운동은 김정일의 직접지도하에 전개되었다.<sup>27)</sup> 한편 이 소조원들은 주로 黨의 젊은 핵심 요원 및 대학생, 사회단체 조직원, 공장 기업소의 기술자, 책임자, 그리고 과학자, 예술인 등의 청년 인텔리겐치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선동과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선전하고 사상교양을 하는 데에 있다.<sup>28)</sup> 그러나 3대혁명소조 운동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는 불가피한 경우에 나이든 간부들은 젊은 親김정일파로 교체해 가면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sup>29)</sup> 결국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정일의 권력구축을 위한 행동대원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어왔음이 틀림없다고 보겠다.

#### - 군 부 -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에 기용됨으로써 김정일은 군부에 대해서도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3월 미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카린' 동북아 부장은 "김정일은 軍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軍이 그를 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김정일의 동장을 軍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서는 黨정치국에서 군출신을 이미 정리해 버렸고 현재 군출신 정치국원은 2명 뿐이며 영향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sup>30)</sup> 이는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에 있어

25) 조선중앙년감(1981)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pp. 39-40.

3대혁명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체사상연구' pp. 143-145.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북한의 정치, p. 127-135. 참조.

26) 이용필 앞 책, p. 135.

27)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p. 1096.

28)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p. 137.

29) Morgan E. Clippinger, 앞 책, p. 298.

30) 동아일보(1991. 3. 27).

서도 김정일은 그의 군사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3년 부터 지속적으로 군부에 대한 세대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음이 사실이며, 1982년 4월 부터 인민무력부를 김정일의 직접 장악하에 놓았고 또한 김정일의 공식 출현 행사에는 항상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동하고 다닌 사실 등이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김정일은 당지도부예의 군부의 대거 진출과, "군부내 정원초과 승진 등을 통해"군부장악을 모색한 바도 있으며, 1983년 부터는 군부내에도 중대 단위까지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군부 완전 장악을 본격화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군대에서 김정일에게 '인민군대 최고사령관'이라는 최고의 존경과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sup>31)</sup> 요컨대上記한 바와 같이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鞏固化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붕괴시킬 만큼의 강력한 저항세력이"북한체제내에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겠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북한 사회내의 모든 정치조직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포용함으로써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32)</sup>

31) 金武 "김정일의 권력 기반은 튼튼한가" 북한(1983.10.), p. 58.

32) 제 6차 당대회를 한 예로 들면 34명의 정치국원중 10명이 군인이었다.

Dong 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 Vol.5, No.3(Fall, 1981), pp.417-418. 정치국원 명단 참조.

33) 북한총람 : 1983-1985(북한연구소, 1986), p. 39.

34) 이항구 "김정일 그는 누구인가" 북한(1983.10), p. 176.

35) 이석호 "북한 정치권력 계승에서 군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제 22-2 (한국정치학회, 1988), p. 295.

36) 김정일 권력승계에 따른 문제점 및 對外的인 저항요소, 외국으로 부터의 반응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 Dong 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Fall, 1981), p. 432-434.

-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6, No.4(Winter, 1982), pp. 579-587.

-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October, 1986), pp. 1102-1111.

- 박재규 "북한의 김정일 승계체제 : 문제점과 전망" 북한의 對外政策 pp. 175-185.

-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Spring, 1986), pp. 33-39.

- 김학준 "최근(83년-84년) 북한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 그 현황과 전망" 북한의 오늘과 내일, pp. 416-422.

### 다. 김정일의 성격 및 성장과정

김정일은 1942년 2월 소련 극동지방에서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일곱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중국 동북부(만주)로 피난 했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평양에 돌아와서는 계모의 손에서 이복 동생들과 함께 자랐고 한 때 동독에서 유학하였으나 중도 퇴교하고 돌아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7)</sup>

이러한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성격상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먼저 非合理的인 성격적 특징으로 i) 타인에 대한 不信과 嫌惡, 잠재적 피해의식 ii) 자제력 결여 iii) 관용성결여와 반대세력에 대한 비타협성 iv) 모험주의적 好戰性 v) 편견과 고집을 가진 소영웅주의적 대담성 vi) 병적인 잔인성 vii) 오만무례한 성격 viii) 신체 및 능력상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공격과 복수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의 合理的인 성격적 특성으로는 i) 개방적 성향 소유, 장기간의 지도자 훈련을 통한 고유의 업무 추진방식 발휘 iii)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sup>39)</sup>등을 들 수 있다.

### 라. 김정일 우상화

김정일 개인숭배는 1975년에 시작되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sup>40)</sup>도홍렬 교수에 의하면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지난 날에 사용한 바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고 한다.<sup>41)</sup>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동원

37) 사카이 다카시(坂井隆) “김정일 권력의 기반과 구조” 동화연구소 제 1회 국제학술회의, p.17.

38)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246-247.

39) 임영일, 김일성 김정일의 정책노선 비교, 석사학위 논문(국방대학원, 1988), pp.61-63.

편집부, “붉은 세자 김정일의 정체”, 국제문제(1984.11), pp.124-126 참조.

40) 길영환교수도 김정일은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며 예술에 관해 어느 정도 독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길영환, 남북한 비교정치론, p.179.

41)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ng Vol. 6, No.4(Winter 1982), p.576.

42) 도홍렬, “북한사회의 개방화 요인과 전망”, 통일논총 제 4권 1호.

된 몇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면, 대중매체를 통한 이미지 구축,<sup>43</sup>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호칭사용,<sup>44</sup> 백두산 출생설 조작,<sup>45</sup> 정책 전개 및 역량과시,<sup>46</sup> 그리고 김정일 문헌의 집중적 공개, 학습토론회의 증가, 김정일과 직접 관련되는 聖域의 확대, 김정일 명칭의 상징물 조성, 김정일의 업적에 대한 대규모 중앙토론회 개최 등이 있으며,<sup>47</sup> 이상과 같은 방법들에 의한 대내적인 우상화 작업 이외에 김정일 우상화 강화 작업은 대외적으로도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48</sup> 上記한 바와 같이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김정일 우상화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유일적 후계 체제의 논리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주체사상에 대하여', '혁명적 수령관', '지도자론' 등을 발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학습시켜 왔으며 특히 '지도자론'에서는 '혁명계승론', '세대교체론', '혈통계승론', '역사적 준비단계론', '김일성 化身論' 등을 제기하고, 세습체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49</sup>

#### 마. 國際政勢觀, 對美日觀

김정일의 國際政勢觀과 對美日觀은 김일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국제무대에서 오랫동안 전개되어 온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더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sup>50</sup> “오늘 혁명의 전반적 정세는 매우 복잡” 하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인데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국토통일원, 1984), pp.84-87 참조.

43) Morgan E. Clippinger, 앞 책, pp.299-305.

44) 이상민, 앞 글, pp.80-85.

45) Morgan E. Clippinger, 앞 책, pp.305-306. 참조.

46) 앞 책, pp.294-298.

47)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p.144-152.

48) 1988년 판 동북아 안보환경, p.80.

49) 도홍렬 “북한의 社會變化와 주체사상” 동아연구(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7), pp.155-158.

50) 김정일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주체사상연구, p.246.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다”<sup>51)</sup> 것이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제반미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무서운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2)</sup>

#### 바. 김정일 權力承繼 展望

요즈음 김일성정권의 제 1의 당면문제는 김정일 권력승계의 문제라고 하겠다. 김정일의 권력계승 준비 기간이 80년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 거의 10년이 지나 지났으며 현재 김정일은 북한권력구조내에서 '제 2인자'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기반도 공고히 해 놓았고 또한 권력세습에 대한 허락을 얻어내기에 마음 졸여야 했던 배후동맹 中. 蘇는 대내적인 문제들에 골몰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의 父인 김일성이 고령인데가 노환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sup>53)</sup>미루어 볼 때,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일 때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언제 그것이 실현될 것인가, 권력승계가 순조로이 이루어질 것인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장래는 어떠한 것인가 등의 물음이 될 것이다. 먼저 권력승계의 時期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1992년 개최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듯 보여진다. 1992년 개최설의 근거는 첫째, 북한 당국이 현행 경제계획(제 3차 7개년계획 : 1987 - 1993)의 1년반 조기달성을 독려하고 있는 점, 둘째, 88년과 89년에 각기 착수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성과가 可視化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 셋째, 정치상징적 의미가 큰 김일성의 80회, 김정일의 50회 생일 到來時期라는 점 등이며<sup>54)</sup>이외에도 김일성과는 서로 이해하는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한 독일의 작

51)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앞 책, p.271, p.278.

52) 김정일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앞 책, pp.247-249.

53) 동아일보(1991. 3. 20).

54)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152.

가 루이제 린저는 “김주석은 이미 3년전부터 80세가 되는 92년에는 은퇴 하겠다는 말을 해 왔고 이는 지켜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55)</sup> 또한 西方언론들도 대체로 92년 권력승계를 전망하고 있다. 한 서방기자에 의하면 “김주석이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동상을 그만 세우라는 등 새삼스럽게 겸손해진 이유는 내년 권력승계에 대비해 김주석이 개인승배 대상을 자신에서 김정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6)</sup> 다음의 문제는 순로로운 권력승계 여부이다. 이는 순조로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제 6차 당대회에서의 공식지명 이후 지금까지 북한내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저항세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김정일체제 구축과정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강력한 저항세력의 존재 가능성 마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사회의 극도의 폐쇄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속에서의 생활에 더없는 만족(?)을 느끼게 하므로 북한 주민들은 ‘세습’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sup>57)</sup> 이외에도 1981년에 이미 김정일은 김일성과의 공동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의 권력은 보다 더 강화되었을 것이며 권력세습체제도 그만큼 더 공고해 졌으리라고 보여진다. 한편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권력승계의 배경으로 미루어보면 순조로운 권력승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겠다. 김정일 권력승계의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 즉, 이정식,<sup>58)</sup> 서대숙,<sup>59)</sup> 유석렬,<sup>60)</sup> 조영환교수<sup>61)</sup> 등에

55) 동아일보(1991. 6. 27).

56) 동아일보(1991. 4. 14).

57) 북한의 정치용어사전(1970년)에는 ‘세습제도’라는 단어가 있었으나 정치사전(1973년)에서는 이 단어를 삭제해 버렸다.

58) Chong-Sik Lee,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Asian Survey(May, 1982), p.435.

“김일성은 현대화 및 혁명의 동시적 완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며 이는 김일성의 혁명적 불멸성을 보증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한다.”

59) 서대숙, “당.정 관계 변화” 북한의 정치, p.280. “김일성이 스탈린사후 소련에서의 스탈린격하운동과 중국의 모택동이 후계자 선정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 등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와 동일한 설명은 Rin-Sup Shinn, "North Korea in 1981 : First year For De Facto Successor Kim Jong Il" pp.100-101.

60) Suk-Ryul Yu,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앞 책, p.574.

의해 김일성의 권력승계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영환 교수는 그가 평양방문에서 만난 북한의 한 학자가 “김정일 권력계승은 북한의 ‘생존 정치 : Survival politics’의 핵심이 되었다”고 밝히었음을 전하기도 한다.<sup>60</sup> 요컨대 자신의 死後에 벌어질지도 모를 권력투쟁과 김일성격하 운동의 사전방지,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死後를 크게 염려하는 김일성에 의해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시도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김일성 생전의 권력승계라면 순조로운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물론 한 학자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권력계승을 생존정치로 보고 있다면 그러한 북한인들에게 있어서 김정일의 권력계승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다. 김일성의 생전에 권력계승이 이루어지고 김일성의 수명이 좀 더 연장된다면 김정일 체제는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보겠지만 김정일의 leadership 부족이 노출되어 버리면 김일성의 호홉 중단과 함께 김정일의 정치생명도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김일성이 후견인으로 버티어 있는 동안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별다른 저항이 없겠지만,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 체제가 공고해지기 이전에 든든했던 후견인이 사라져 버리면 그 후의 상황은 김일성 김정일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이 사라지기 이전에 김정일 체제가 보다 공고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나 확립 이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김정일의 보다 강한 leadership 발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특히 경제부문에서 탁월한 leadership을 발휘함으로써 침체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衣食住 해결에 성과를 보인다면 김정일은 자신의 세습체제에 대한 정통성 수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일성은 그의 이름과 정책들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서 계속 지켜져 나갈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며, 정치적 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혈통을 중시하였다”고 설명한다.

61) 조영환 “북한 권력구조와 김정일 세습” 월간조선(1990. 5), p. 335.

上記한 설명들과 유사한 내용이나 조교수는 김일성 자신의 과오가 사후에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 한 개인적, 심리적 동기를 추가하고 있다.

62)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October, 1986), p.1093.

### 3) 경제력

김일성父子세습체제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1983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제형편은 매우 좋으며 ..”<sup>1)</sup>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북한의 경제형편은 계획경제라기 보다는 자연경제에 되돌아간 느낌을 줄 정도로 낙후한 암시장 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sup>2)</sup>

실제로 북한경제는 제 2차 7개년 계획(1978-1984)이래 급격한 성장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1989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3.0% 보다 낮은 2.4%로 평가되었고,<sup>3)</sup>90년에는 89년 대비, 마이너스 3.7%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북한 정권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고 있다.<sup>4)</sup> 또한 통일원의 자료에 따르면 GNP 2백31억달러, 1인당 GNP는 1천 64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같은 수치는 같은 해 한국의 GNP 대비 10%, 1인당 GNP 대비 19%에 해당한다. 무역규모는 46억4천만달러로 89년에 비해 4% 감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20억2천만달러, 수입은 26억 2천만달러로 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90년말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은 78억 6천만달러로 89년에 비해 16% 가량 늘어났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은 북한의 주요산업 실태에서도 현저하며 이러한 경제난 심화에 따라 黨.政.軍의 고위간부 등 소위 ‘핵심계층’ 및 평양시민과 일반서민과의 생활격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 부족으로 뒷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생필품은 공정가격의 20-40배 가격으로 뒷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경제 실태라고 한다.<sup>5)</sup>

한편, 이와 같은 경제부진 현상은 90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특히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sup>6)</sup>국가별 무역구조는 中.蘇가 무역총액의 67.5%(소련이 51%)를 차지, 북한경제의 對中.蘇 의존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sup>7)</sup>

1) 김정일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주체사상연구, p. 239.

2) 허동찬, “북한 통치이념의 변천과정”, 북한(1988, 9), p. 52.

3) 이호, “북한의 경제구조와 현황”, 민주통일론 : 북한실태(통일연수원, 1991), p. 87.

4) 동아일보(1991. 8. 29).

5) 以上은 동아일보(1991. 8. 29)에서 요약한 것임.

6) “1990년 북한동향 결산” 국제문제(1991. 2. ), p. 132.

북한 헌법 제 24조에 의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sup>7)</sup>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 3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sup>8)</sup>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이는 북한경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하에서 공업화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자립적 및 계획경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김일성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은 경제건설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이며,<sup>10)</sup> 김정일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sup>11)</sup> 다. 이는 곧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sup>13)</sup>라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이는 ‘우리식’만으로는 극도로 악화된 북한경제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남의 식’도 받아들여겠다는 정책결정자의 의지표명으로 보여지며 좀 더 비약적인 추측으로는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이른 바 ‘주체경제’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해 보이기도 한다. 1980년 제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7) 동아일보(1991, 8.29).

8) 통일원, 북한개요 '91, p. 485.

9) 앞 책, p. 486.

10) 정진위 “헌법구조의 변화” 북한의 오늘과 내일, pp. 27-28.

11) 조선중앙년감(1972), p. 42.

1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201.

13) 고헌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1989, 10호), pp. 15-20.

1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203.

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sup>15)</sup>이라고 강조하고,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6)</sup>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84년 9월 이른바 '합영법'이 제정되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對西方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였지만 그 성과가 별로 없었음이 周知의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합작유치 실적은 총 1백35건인데 그나마 그 중 57%에 해당하는 77건이 조총련 상공인과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현실은 북한의 對內外的 경제정책상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먼저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경제체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公有, 혹은 집단 소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실시,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경제의 확립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는 북한경제의 문제점들은 i) 경제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정에서 그 목표를 黨 최고 지도자의 의도에 부합시키려 노력한 나머지 경제의 任意性이 심화된 점, ii) 자원의 희소성, 국제 경쟁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의 경직적 운용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점, iii) 이운동기의 결여로 기술 개발 및 경영혁신이 정체되어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점, iv) 경제발전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생활향상과 경제운용의 복잡화, 경제기술 관료의 비대화 및 이익집단화 등에 의한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경제체제가 갖는 주요 결점들이기도 하다.<sup>18)</sup>

또한 계획 경제는 가격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

15) 조선중앙년감(1981), p. 45.

16) 조선중앙년감(1981), p. 51.

17) 동아일보(1991. 8. 29).

18) 박춘삼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성과" 외교 제 5호(1988. 3. ), p. 38.

에 경제의 불안정화 요인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에서 제정한 國定가격이 가치법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불안요인도 있는 바 이를 태면 제품의 가격보다 원료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이외에도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은 경제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경제관리란 “사회적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기능을 실현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리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자각적 로동에 대한 지휘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데 있다”<sup>20)</sup> 하며 또한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i) 경제관리에서의 최고 지도기관인 黨위원회 집체적 지도의 원칙, ii)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 iii) 경제관리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 iv) 경제관리에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v) 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sup>21)</sup> 명시되어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적인 방식에 따라 경제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경제관리상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경제활동의 지휘에서 ‘정치사업’을 중요시 하여 모든 경제 관리에서 黨의 영도적 역할과 중앙집권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경제의 정치도구화’를 의미하는 바 최근 북한의 200일 전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북한은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이 우심해지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벌리는 200일 전투는 단순한 경제전이 아니라 적들의 발악적 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 투쟁으로 되고 있다”<sup>22)</sup> 것이다.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는 여전히 1960년대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30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경제관리 방식의 병폐를 인식한 듯 이미 1986년도에 그 시정방향을 부분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sup>23)</sup>

19) 김영규 “북한의 對西方 경제접근 동향 분석” 통일논총 5권 1호 (국토통일원, 1985), p.175.

20) 정치사전(평양 : 1973), p.32.

21) 앞 책, p.32.

22) 로동신문(1989.1.10). 북한(1989.3), pp.177-178에서 재인용.

한편, 북한의 기본경제정책의 특징은 政經一致,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폐쇄적 자립경제, 중공업 우선의 군사.경제 併進政策 등으로 집약되며,<sup>24</sup> 이러한 특징들에서 비롯되는 경제구조적 문제점들은 생산설비 및 산업기술 수준의 낙후,<sup>25</sup> 전반적인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상 불균형의 심화,<sup>26</sup> 경제정책의 정치.군사적 목적에의 종속으로 인한 철저한 군산복합체 형성과 이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 과중한 군사비 부담<sup>27</sup>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농업보다는 공업 우선 경공업 보다는 중공업 우선, 소비재생산 보다는 생산재 생산 우선 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으로 인하여<sup>28</sup>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소비재 부문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력,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 자본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sup>29</sup> 昨今 북한경제의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경제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외에도 오늘 날 북한 경제의 침체는 여러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테면 i) 주로 외연적 성장방식을 취한 경제발전 추구, ii) 노동력 부족 및 외화부족 등의 장애요소 iii) 외국원조의 漸減 iv) 군사비 부담의 증가, v) 中.蘇의 對北韓 경제협력 부진, vi)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출혈원조<sup>30</sup>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군사비 부담의 증가로 인한 경제발전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김일성 자신도 인정한 바 있다. 즉 그는 “지난 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다 보니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았다”<sup>31</sup> 것이다. 통일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군사비는 지난 90년의 경우에도 북한 GNP의 21.5%에 해당하는 49억 6천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2</sup> 또한

23)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1988년판, 동북아 안보환경, pp.117-121. 참조.

24) 이태욱 “경제:자력갱생 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pp.127-131.

25) 김영규, 앞 책, p.176.

26) 이호, 앞 책, p.86.

27) 이호, 앞 책, p.86.

28) 이태욱, 앞 책, p.161.

29)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pp.186-192. 참조 연하청 “사회주의 경제계획” 북한개론, p.157.

30) 정상훈 “경제계획과 성과” 북한의 오늘과 내일, pp.158-166. 참조.

31) 이숙자, 앞 책, p.21.

32) 조선중앙년감(1973), pp.56-57.

中.蘇의 對北韓 경제협력 부진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과 대외무역 침체는 최근들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과의 경제관계는 알력현상마저 보이고 있다.<sup>33)</sup> 게다가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의 무역거래 결제방식을 지금까지의 물물교환 방식이 아닌 달러를 위주로 한 외화결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 이를 북한에 통고한 바 있어,<sup>34)</sup>북한의 외화난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中.蘇의 對北韓 경제협력 부진이나 북한의 군사비 부담의 증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 8월 29일 개막된, 남북한을 비롯한 7개국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석한 '두만강 개발회의'는<sup>35)</sup>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투자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對西方 경제협력을 적극화하고 있고 특히 對美日接近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 및 대외경제협력 특히 對西方 경제협력에 관한 획기적인 발언은 이미 1975년 김일성의 한 연설에서 행해진 바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할 것”과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 그리고 “대외무역을 잘 하여야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수출품의 질을 높여야 하고 포장도 알뜰하게 하여야 하고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대외경제협력 의지는 1979년 신년사,<sup>37)</sup>

33) 동아일보(1991. 8. 29).

34) “최근 中.蘇의 對北韓 경제관계 동향” 국제문제(1990. 12), pp. 128-130.

35) 중앙일보(1991. 5. 16).

36) 동아일보(1991. 8. 29).

37) 조선중앙년감(1976), pp. 34-36.

38) 조선중앙년감(1980), p. 3.

1980년 신년사<sup>39)</sup>등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제 3차 7개년 계획에서 더욱 강조되어 同계획기간 중 총 무역액의 3.2배(220%)증가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sup>40)</sup> 그러나 이미 밝히었듯이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對西方과의 경제협력 관계는 합영법 제정이라는 대외 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周知의 사실이다.<sup>41)</sup>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부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첫째,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북한의 경제관계법,<sup>42)</sup>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對北韓 신뢰성 상실, 셋째, 외국으로 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점,<sup>43)</sup> 넷째, 원자재 수송 및 대내외 수송 통신망의 미발달과 산업구조적 수용태세 부족<sup>44)</sup> 등이 그것이며, 이외에도 북한 시장의 협소, 기술의 낙후, 북한사회의 폐쇄성, 경직성, 외채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예측을 초래케 한다”는 김일성의 의식구조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의 基調에 있다고 하겠으며,<sup>45)</sup> 따라서 합영법을 통한 북한의 對西方 경제개방은 주체사상으로 경직화된 북한체제 자체의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원인해소가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경제개방을 통한 북한경제 성장은 경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39) 조선중앙년감(1981), p. 4.

40) 1988년 판 동북아 안보환경, p. 96.

41) 홍성국 “북한의 경제개방현황과 그 전망” 공산권연구(1990. 5), pp. 36-45. 참조.

42) 김남권, “북한 경제개방의 선행조건”, 북한학보 제 8집, p. 70.

43) 김광수 “북한의 경제개방화 정책”, 북한학보 제 14집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1990), p. 137.

44) 홍성국, 앞 책, p. 44.

45) 김영규, 앞 책, p. 184.

46) 박춘삼 “日.北韓間의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통일논총 제 4권 2호 (국토 통일원, 1984), pp. 44-45.

47) 북한은 “합영법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反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하청 “북한의 對西方 교역과 개방화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권 2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가을), p. 333에서 재인용.

정치적인 개혁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의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自力更生' 위주의 주체경제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경제개혁, 개방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48)</sup> 또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드러나는 김정일의 經濟觀 역시 김일성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김정일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하며 "발전된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49)</sup>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사업 방향으로 첨단산업의 육성, 경공업 분야의 강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등을 채택하고 있는<sup>50)</sup>북한이 미덥지 않은 배후 동맹세력인 中.蘇와의 경제관계에서 더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결국은 북한도 점진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리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견지에서 적극적인 북한의 경제개방을 시사하는 '두만강 개발회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48) "91년도 김일성 신년사 분석" 국제문제(1991.2), p.107.

4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p.201-203.

50)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p.162-178.

#### 4) 주체사상

'81년 북한을 방문했던 在美 한국인 정치학자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단어 이외에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주체’라는 단어였다. ..주체는 일견 세계관, 생의 철학, 또는 행동의 지침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주체가 교육, 경제관리, 예술, 농업, 산업, 그리고 다른 모든 행위의 중심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자’는 캠페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곧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서는 ‘모든 진리와 지혜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sup>2)</sup>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일종의 聖典과도 같은 것은 북한 사회에 있어서 주체사상이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활동 지침을 결정해 주는 최고 이념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위 준칙을 결정해 주는 도덕규범이고 행위의 善惡을 가려 주는 宗教이기 때문이다.<sup>3)</sup> 주체사상의 이러한 역할은 북한 헌법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sup>4)</sup> 하였으며 북한로동당 규약에도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sup>5)</sup> 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sup>6)</sup> 라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 있습니다”<sup>7)</sup> 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

1) 김종익, 고병철 “기행을 마치고” 북한기행, p. 221.

2) 도홍렬,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변화” 평화연구 제 14집(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89.12), p. 57.

3) 이상우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對南政策” 북한의 오늘과 내일, p. 294.

4) 북한헌법 제 4조, 북한개요, p. 483.

5) 북한로동당규약, 북한헌법, p. 499

6) 조선중앙년감(1981),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pp. 39-40.

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sup>7)</sup>이며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sup>8)</sup>이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것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그리고 그 요체는 “주체사상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며<sup>10)</sup>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sup>11)</sup> 이고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sup>12)</sup> 라는 것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한 논문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설명되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sup>13)</sup> 이며 이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이라고 한다.<sup>14)</sup>

이와 같은 김정일의 주장은 이른바 ‘실로 고전적 문헌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불멸의 총서’<sup>15)</sup>라고 일컫는 그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구체화된 바 있으므로 이를 中心으로 주체사상의 내용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1982년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7) 조선중앙년감(1973), p. 32.

8)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533.

9)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주체사상연구, p. 103.

10) 김일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88.

11) 앞 책, p. 83.

12) 앞 책, p. 90.

13) 앞 책, p. 90.

14)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254.

15) 앞 책, p. 254.

1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 173.

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 가. 주체사상의 창시

여기에서 김정일은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 간부 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날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sup>

### 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이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19)</sup> 또한 그는 김일성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주었다고 하며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고 또한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이러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sup>20)</sup>라는 것이다.

### 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이며 주체사상에

1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p.173-227.

18) 허동찬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연원” 북한학보 제 13집(북한연구소 북한학회), pp.71-93. 참조.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264-265.

1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178.

20) 앞 책, pp.178-179.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 원리는 새로운 사회역사관 주체사관이라고 하며 이를 다음의 네 가지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sup>21)</sup>

가)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역사의 주체는 근로 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sup>22)</sup>는 것이며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로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영도자”라고 주장한다.<sup>23)</sup>

결국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자신이 대중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sup>24)</sup>

나)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밝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sup>25)</sup> 이라고 주장한다.

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역사적 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며 노동계급에 의하여 조직 전개되는 공산주의 운동은

21) 앞 책, pp.181-195.

22) 앞 책, p.183.

23) 앞 책, p.184.

24) 양성철, 분단의 정치, p.327.

2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p.185.

인류역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한다.

그는 “창조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혁명운동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며 전진도상에 부딪치는 난관을 대중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방법”으로 “창조적 입장은 오늘의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sup>26)</sup> 한다고 주장한다.

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었다는 것이며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이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sup>27)</sup> 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사상적 요인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혁명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혁명운동에서는 물질적 요인도 큰 역할을 하지만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달린 것”이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사상적 요인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조건을 적극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하고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sup>28)</sup> 라고 주장한다.

26) 앞 책, pp.190-192.

27) 앞 책, pp.192-193.

28) 앞 책, pp.194-195.

## 라.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이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고 한다.

### 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았다고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① 사상에서 주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며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 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sup>29)</sup>을 말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이와 같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져야”하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0)</sup>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하는데 특히 오늘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 ② 정치에서 자주

김정일에 의하면 사상에서의 주체도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정치에서의 자주가 자주성 구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29) 앞 책, p.196.

30) 앞 책, p.197.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려야"하고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자면 혁명의 지도역량인 당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여야"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sup>31)</sup> 이라고 강조한다. 또 한편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하며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sup>32)</sup> 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경제에서 자립

김정일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sup>33)</sup> 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하며 이러한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견지하여야"하고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sup>34)</sup> 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 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sup>35)</sup> 강조한다.

31) 앞 책, p.199.

32) 앞 책, p.200.

33) 앞 책, p.201.

34) 앞 책, pp.202-203.

35) 앞 책, p.203.

#### ④ 국방에서 자위

김정일에 의하면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국방에서의 자위 실현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하는데 이를 세우자면 “전군을 간부화하고 현대화 하여야”하며 또한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군을 요새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며 창조적 방법에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으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노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옳게 결합시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하며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 사업방법, 즉,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의 사업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36) 앞 책, p. 205.

37) 앞 책, pp. 207-209.

## ②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혁명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풀어 나갈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혁명투쟁에서는 주체적 요인, 정치사상적 요인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하며 "혁명투쟁을 옹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 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사상개조 선형

김정일에 의하면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김일성은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sup>39)</sup>고 한다. 그는 또한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인데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강조한다.<sup>40)</sup> 그리고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습을 통하여 배운 혁명이론

38) 앞 책, pp. 210-211.

39) 앞 책, p. 212.

40) 앞 책, pp. 212-213.

과 지식은 반드시 신념화 되어야”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 하여야”하는데 “혁명적 조직생활은 언제나 강한 사상투쟁 속에서 진행되어야”하며 또한 “혁명적 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된다”고 김정일은 주장한다.<sup>41)</sup>

## ② 정치 사업 선행

김정일에 의하면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에게 사상과의 사업”인데 이를 앞세운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행정실무사업이나 기술경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sup>42)</sup> 한다. 또한 그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자면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옹계 배합하여야”하며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하고 “정치사업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3)</sup>

## 마.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인류의 사상정신 생활과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 주었다”는 것이며 또한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는 것이다.<sup>44)</sup> 그리고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41) 앞 책, pp. 214-215.

42) 앞 책, pp. 215-216.

43) 앞 책, pp. 216-217.

44) 앞 책, pp. 218-219.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 완성되었다”고<sup>45</sup>김정일은 주장한다.

지금까지 概觀해 본 것이 이른바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sup>46</sup>논문 이라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체사상 내용의 골자이다.

이상우 교수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人間 中心 세계관, 근로대중 집단주의, 절대적 엘리트주의의 세 가지를 중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생각을 인민대중에게 획일적으로 주입시켜 의식 개조를 통한 인간개조를 성취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총체에 불과한 것으로<sup>47</sup>이는 마르크스주의도 레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단지 20세기 후반에 새로 나타난 새로운 종교, 그것도 邪敎일 뿐이라고 한다.<sup>48</sup>

서대숙 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있어서 가장 광신적인 것은 주체사상을 보편적 원리인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키고 북한 수령 김일성을 제3세계의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그의 아들의 무모한 시도일 것이며 이름이나 주장의 정교성과는 관계없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와 그다지 관계가 없는 외국혐오의 민족주의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sup>49</sup> 또한 신일철 교수에 의하면 소위 주체철학은 철학과 무관한 김일성 어록에 기초한 교시철학이며 정치구호 해설집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sup>50</sup>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실천의 이론을 그 근거로 해서 김일성 일인 독재를 위한 이론적 합리화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한 실천론의 북한적 變種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51</sup> 한편 김정일이 주장하는 바 김일성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자신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부인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사상이 아닙니

45) 앞 책, p. 221.

46) 로동신문(1982. 4. 1).

47) 이상우 “서론 : 김일성체제의 특징” 북한 40년, p. 21.

48)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p. 379.

49)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271.

50)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서울 : 사회발전연구소, 1987), p. 96.

51) 앞 책, p. 99.

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sup>52)</sup> 또한 “당신은 주체사상이 민족적 과업과 국제주의적 연대성의 과업과의 련관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 것이 아닌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래 진정한 맑스주의자라고 하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sup>53)</sup> 라고 밝힌 바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 내지 비난의 素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의 극도의 폐쇄성과 이미 신격화된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절대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주체사상이 맑스 레닌주의에 대한 하나의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음은 주목할만 하다. 주체사상의 기능은 첫째 정통성 확보와 체제유지 기능, 둘째 전체주의 사회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대중동원의 기능, 셋째 對南 혁명노선의 합리화와 통일강조의 기능, 넷째 제3세계에 대한 선전의 기능 등이 그것이며,<sup>54)</sup> 이외에도 혁명에 대한 일체감 형성, 남한에 대한 인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권력세습의 합리화 기능 등을<sup>55)</sup> 들 수 있다.

한편 현재 북한정권의 주요 당면과제가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으며, 또한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는父子권력세습의 정당화에 있다고 볼 때 주체사상의 권력세습 합리화 기능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1967년 4월 최고 인민회의 제 3기 제 7차 회의에서 김일성에 의해 주체사상이 唯一思想으로 대치된 후<sup>56)</sup> 1974년 김정일은 이

52) 조선중앙년감(1973), p. 65.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찌 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3) 조선중앙년감(1973), p. 83.

“1972. 10. 6.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담화”.

54) 고성준 ‘주체사상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p. 52-55.

55) 도홍렬, “북한의 정치문화와 혁명계승의 모순” 북한학보 제 13집, pp. 138-146.

56) 유석렬, “김일성 개인숭배 및 권력 승계” 북한의 정치, p. 289.

른 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sup>57)</sup>을 제시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一色化할 것을 강조하였는 바, 이는 김일성 唯一體制의 절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것의 승계권자를 김정일로 굳혀 나간다는 것을 시사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는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발표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이 논문발표를 통하여 김정일은 이른바 '金日成主義'의 완성을 선언함과 동시에<sup>58)</sup>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체득하고 구현하는 주체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굳히게 되며 이로써 주체사상의 권력세습 합리화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고성준 교수에 의하면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김일성주의는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김정일체제의 運身의 폭을 좁혀 놓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에겐 크나큰 딜레마라고도 한다.<sup>59)</sup> 한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이데올로기가 외교정책의 목표를 규정짓고 정치적 행위의 수단을 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때<sup>60)</sup>북한외교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역할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도 "공화국 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sup>61)</sup>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이 북한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각각 평가될 수 있지만,<sup>62)</sup>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신격화와 더불어 함께 신격화되어 絶對性, 完全性, 永久性을 가진 경직된 도그마로 변신하고 말았기 때문에<sup>63)</sup>주체가 대외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57) 북한총람 1945-1982. (북한연구소 : 1983), pp.172-179.

58) 고성준, 앞 글, p. 78. 참조.

고교수는 '김일성주의'를 '김정일에 의해서 재해석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이론 및 방법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59) 고성준, 앞 글, p.159.

60) 이상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북한과 오늘의 세계, p. 39.

61) 조선중앙년감(1973), p. 70.

62) 이경숙, 앞 책, pp. 500-502.

63) 고병철 "북한 대외정책의 형성과정" 북한의 대외정책, p. 66.

## 2. 國際環境要因

### 1) 미국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동북아시아는 서유럽이나 페르시아만과 함께 미국이익의 우선순위 중에서 앞선 서열 속에 들어 있으며<sup>1)</sup> 미국의 對東北亞 政策의 기본목표는 동북아에서 美·蘇·中·日 4개국간의 보다 안정된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對東北亞政策의 일환으로서의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은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통한 현상유지가 그 기본이라 하겠으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미국은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한 적대감 해소 및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4대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에 의한 남북 평화 공존체제 구축 등을 제도적 조치로 강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전쟁 이래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의 주요목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sup>2)</sup> 이는 곧 미국의 對北韓政策의 기본노선이라 할 수 있다.

올슨(Edward A. Olsen)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 있어 카다피의 리비아와 호메이니의 이란 외에 김일성정권 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가진 나라는 없으며<sup>3)</sup> 지난 30년동안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책 보다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사실상 두 나라간에는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sup>4)</sup>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한 북한의 꾸준한 對美直接接觸 제의와 미국의 對北接近 적극화로 1980년대말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적인 공식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조만간 미·북한간 관계 개선이 실현되리라는 전망마저 보이고 있다.

1) Kenneth N. Waltz. "중앙균형체제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강창희 편저, 한반도의 국제환경(법문사, 1984), p.20.

2)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p.343.

3) Edward A. Olsen "The Politics of Adversary Relations : The United States, Japan, and North Korea" Eun Ho Lee, Yong Soon Yim, Adversary Politics in East Asia : A Reassessment (Seoul : Seoul Computer press, 1986), p.98.

4) 앞 책, p.102.

이와 같은 미국의 對北政策 변화는 韓半島 현상유지를 위한 對北 戰爭 再發 억지에 있어서 군사력에 의한 對北 강경책과 대화와 실득을 통한 對北 유화책을 병용하는 데 있어 對北 유화정책에 더 비중을 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의 대북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첫째 美·中 화해, 美·蘇 화해, 中·日 화해, 中·蘇 화해 등으로 구체화된 국제정세의 전반적인 화해분위기와 국가간 협력 추세, 둘째 脫이데올로기 脫冷戰에 따른 이념 및 체제적인 갈등과 대립의 해소, 셋째 개방 개혁의 세계적 추세와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 넷째 한국의 對共產圈政策 변화, 다섯째 북한의 對西方接近 및 對美日政策의 變化, 여섯째 공산권국가들의 對韓國接近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美北韓 接近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對北關係 政策을 對北關係 발전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노선의 근본적인 변화여부가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 2) 일본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北韓接近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가이익은 基本的으로 東北亞地域의 안정된 세력균형 유지에 있으며<sup>5)</sup> 일본은 미·일 유대강화로 무장하지 않고 안보를 유지하면서 全方位外交를 전개한다는 것이 일본의 對東北亞 基本戰略이다.<sup>6)</sup> 이러한 對東北亞 政策의 일환으로서의 일본의 對韓半島政策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는 美·日간의 기본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sup>7)</sup> 이러한 기본인식에서 일본은 그동안 남북대화, 유엔동시가임, 교차승인 등을 지

5) 윤정석, “한일정상회담과 일본의 對북한관계 변화 가능성” 통일논총.

제 4권 2호(국토통일원, 1984), p.12.

6)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p.14.

7) 한배호외, 일본정책결정의 해부(서울 : 정음사, 1984), p.91.

지해 있으며 평화공존하는 '두 개의 한국'에 대한 등거리 정책이 일본의 국가 이익에 부합됨을 중시하여 이를 구체화해 왔고 90년대에 들어서에는 이미 4차례 걸친 일.북한간 수교회담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對北韓接近을 본격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겠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제지위 향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견제, 둘째,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 모색, 셋째, 경제적 이익, 넷째 韓蘇修交, 韓.中關係改善 등 한국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추진, 다섯째 미국의 對北韓接近 積極化 등이 그것이다. 한편 지난 1989년 1월 일본외무성이 발표한 한반도 정책에 관한 견해는 일본의 對北韓關係改善 政策 方向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8)</sup> 일본 정부는 '我國의 조선반도 정책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첫째 한반도 문제는 一義的으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이 남북한의 분단고착화를 고려하지도, 의도한 적도,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을 취한 적도 없음을 천명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북한이 원하는 한 對北關係改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일본 정부와 국민은 과거 隣接諸國의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를 깊이 자각,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평화국가로서의 자세는 한국만이 아니고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한일 기본조항 제 3조는 한국정부의 기본성격에 관한 UN 결의를 인용해서 확인한 것으로 일.북한 관계에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혔다. 요컨대 이러한 일본외무성의 견해표명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南北韓 等距離 政策'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일 뜻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식천명한 가장 구체적인 對韓半島 政策 指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미국의 對北韓政策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일본의 對北韓關係改善에 있어서도 先決條件은 남북한관계 개선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對北接近 태도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8) 89, 90년도 동북아 안보환경, p.225.

히 일. 북한 접근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 3) 국제정세

1970년대 초의 동서화해가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초의 新冷戰體制를 거치고 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동서화해는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 등장과 그 때를 같이 한 것이라고 하겠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그 해 11월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sup>9)</sup> 지금까지 미.소 양대국은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서화해를 모색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른바 동서냉전 종식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 과정을 概觀해 보면 1987년 12월에 개최된 워싱턴 미.소 정상 회담에서는 중거리 핵전력(INF)폐기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동서 신데탕트는 한 때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1989년 12월에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의 몰타회담은 1945년 2월의 알타정상회담 만큼 중요하고 의미깊은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되었다.<sup>10)</sup> 바야흐로 알타체제에서 몰타체제에로의 전환, 즉 상호신뢰 구축이 전제가 된 새로운 동서화해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그리고 1990년 5월에 개최된 워싱턴 미.소 정상회담에서 두 초강대국은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한 후 금년 7월 30일에 개최된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에 조인함으로써<sup>11)</sup>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 주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소 兩大軍事強國은 더 이상의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지속적인 상호군축을 모색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이 형성된 동서간 화해와 협력의 공존 체제는 昨今の 소련 및 동구의 변화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와 더불어 더 한층 확고부동한 것으로 굳어져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질서 또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오늘날 국제정세의 현실이라 하겠다. 한편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지각변동을 느낄 만큼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테면 한.소수교, 한.중관계 개선, 중.소 화해, 북한 일본 간의 수

9) 박재규 “서론 :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틀” 북한의 대외정책, p. 26.

10) 전정환 “국제관계의 역사적 전환” 국제문제('91. 4.), p. 14.

11) 동아일보(1991. 8. 1).

교 교섭, 북한과 미국의 실무접촉 일본과 소련간의 관계 개선 모색, 한국의 북방외교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이 모색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와해 및 공산주의의 실패이다. 이는 1980년대말 동구를 휩쓴 개방개혁 민주화의 바람과 특히 지난 8월 쿠데타 실패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소련의 정치 개혁이 그 결정적인 계기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로써 양진영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은 지양되고 주로 경제관계에 비중을 둔 국가이익 우선의 국가간 교류 협력관계가 모색되어 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해 가고 중국 EC 혹은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국제정치의 다원화 현상이 加速化되고 있다.<sup>12)</sup> 셋째 주요 강대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적, 군사적인 상호 경쟁 대립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간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나친 경제적 이익 중시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국가간 마찰과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 대립 및 美·蘇 지배체제의 종식에 따라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가 다시 강력히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sup>13)</sup>

한편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냉전종식의 새 시대를 여는 데는 무엇보다도 소련 고르바초프의 新思考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오늘날의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그의 신사고 전개에 훌륭한 배경이 되어 준 미국의 역할도 또한 절대적이었음이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냉전종식의 새 시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도 군사적 초강대국인 미·소의 역할 및 협력 관계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 완성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또 한편 지난 걸프전쟁으로 입증된 미국의 힘은 세계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재확인 했는 바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탁월한 리더십 또한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12) 전정환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추이” 국제문제(1991.1), p.27.

13) 앞 책, p.28.

#### 4) 중국의 國內外 정책변화와 對韓國 關係改善

周知하는 바와 같이 등소평체제 등장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실용주의의 노선을 견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외교를 전개하면서 自國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말 對外개방정책과 對內경제개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1980년대를 통하여 중국은 안으로 추진중인 실용주의 정책에 부응하는 개방외교를 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1989년 '6.4 천안문사태'와 그에 따른 政變을 겪기도 했지만 당시 리더십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對內개혁정책 및 개방외교는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4개현대화 실현이야말로 오늘날 중국의 對內外的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주요 국가목표이며 그 추진을 위한 對外政策의 목표는 선진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한 對西方接近, 그리고 국제환경의 평화유지이므로 對內개혁정책 및 對外개방외교는 중국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중국 개혁정책의 합리화방편으로 채택된 것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었으며 또한 1980년대 국가목표 즉 4개현대화 계획달성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의 조성이란 당위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독립 자주 외교노선으로 이는 4개현대화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제 1차적 목표달성을 위한 외교방안이었다. 요컨대 이와 같이 등소평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옴으로써 그 결과 중국은 모택동체제하에서 계속 고수해 온 사회주의 체제를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구조적,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음이 사실이다.<sup>14</sup>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변화의 특징은 경제개혁 및 변화에 상응하는 정치개혁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천안문 사태 이후 계속 집권해 오고 있는 강경보수 세력은 제한된 개방과 개혁을 실시하면서 정치적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에 대해 저항감을 나타내고 종래의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14) 신정현 "동북아 지역체계 변화" 국제문제(1991.1), p. 53.

있으며<sup>15)</sup>그런가 하면 등소평은 지난 8월의 소련 政變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하는 6개항의 지시를<sup>16)</sup>전국에 시달하는 등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와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해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西方경제에 깊이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 개혁 민주화로 특징지워지는 세계적인 추세는 조금도 약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개혁 개방에 대한 대다수 중국 인민들의 욕구는 소수의 보수집권세력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볼 때 제한적이나마 중국의 개방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본다. 한편 등소평체제의 개방외교 전개 이후 중국에 있어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과거의 정치와 혁명 및 이념적 요인이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써 對外政策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對韓國觀과 對韓國政策 변화에 긍정적으로 作用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上記한 중국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 보탬이 된다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가이익과 한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對韓接近 요인들이 한국의 북방정책과 맞물려 韓.中 關係는 특히 경제교류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어 왔으며 1990년 10월 영사기능을 부여한 무역사무소 상호교환 설치 합의와 1991년 초의 무역사무소 상호개설로<sup>17)</sup>韓.中 關係는 새로운 국면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나라 간의 마지막 과제인 韓.中 修交와 관련하여 중국은 남북한이 유엔에 정식으로 동시가입하는 대로 한국과 국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sup>18)</sup>오는 11월에 있을 중국외교 부장의 한국방문이 크게 주목된다고 하겠다.<sup>19)</sup>

15) 동아일보(1991. 8. 13).

중국공산당 창당 70주년 기념연설에서 강택민 총서기는 “중국은 결코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를 추진하는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16) 동아일보 (1991. 9. 3)

17) 유석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남북한관계” 국제문제(1991. 7. ), p. 28.

18) 동아일보(1991. 9. 3).

19) 동아일보(1991. 8. 28).

### 5) 소련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對韓國關係改善

1985년 초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에서는 대담하고 전례없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조치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Perestroika(개혁), Glasnost(개방), Uskareniye(가속화), Noboe Myisuleniye(新思考)등이 그것이다.<sup>20</sup> 여기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된 社會主義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과 최종목표를 말한다.<sup>21</sup> 글라스노스트는 소련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스케레니에는 바람직한 변화를 실현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노보에미슬레니에는 외교정책에서 새로운 사고에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페레스트로이카에 소련의 장래가 달려 있으며<sup>22</sup>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긴급과제라고<sup>23</sup>한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는 i) 정체된 상태를 극복하고 브레이크 현상을 타파하고 사회 경제적 진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메카니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며 ii) 대중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고 iii) 소련경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iv) 과학적 방법에서의 단호한 전환과 모든 새로운 창안에 대하여 확고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v) 사회적 영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소련 국민의 복지와 쾌적한 노동환경, 충분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교육과 의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며 vi) 사회에서 왜곡된 사회주의적 윤리를 배제하고 사회정의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sup>24</sup>한 “페레스트로이카는 혁명”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5</sup> 또한 글라

20) 하용출 “소련의 國內外交政策의 변화와 한국” 국제문제(1988.7), p.60.

21)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사회의 개혁정책은 소련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소련사회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즉, 사회를 계속 변혁하는 것이 사회주의 전체를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한다.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고명식 역, 페레스트로이카, (시사영어사, 1988), p.165.

22) 앞 책, p.6.

23) 앞 책, p.13.

24) 앞 책, p.31.

25) 앞 책, p.47.

스노스트에 대하여 고르바초프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신적 도덕적 사회분 위기의 생생한 증거로서 민중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의 노력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하고 이같은 이해의 바탕에서 의식적으로 개혁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sup>26)</sup>

1985년 4월 당중앙위가 경제 문화 민주주의 외교 및 모든 영역에 걸친 현행 제도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과 - 필요하다면 - 개편을 인정하는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한 이래, 그것은 사회 畝分野의 개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sup>27)</sup>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개혁추진을 위한 활로 개척을 위해 일련의 정치개혁을 단행한 바 있고<sup>28)</sup>지난 8월 사태 이후에는 소련공산당의 자진 해체 선언에까지 이르고 있다.<sup>29)</sup> 또한 고르바초프는 국내개혁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된 외부환경의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86년 2월 개최된 제 27차 당대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당강령 보고에서는 외교의 기본목표로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과 공산주의로의 전진을 위해 유리한 대외적조건을 확보하는 것과 세계 전쟁의 위협을 배제하고 전반적 안정과 균축을 달성하는 것”을 당의 국제정책 목표 중 첫번째로 제시한 바 있으며<sup>30)</sup>고르바초프는 이른바 ‘새로운 사고(新思考)’라는 슬로건 속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신기류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新思考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고르바초프는 “對內的인 진보를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전쟁이 없는 세계, 군비경쟁도 없고 핵무기도 폭력도 없는 세계는 오늘의 세계현실에서 생겨난 전세계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표”라고<sup>31)</sup>말하고 “세계 각국이 지금처럼 예전에 볼 수 없을 만큼 相互依存的 관계에 있는 적이 없으며, 진실로 오늘의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같지 않으므로, 이 현대의 세계의 새로운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지난

26) 앞 책, p. 74.

27) 김홍명 “페레스트로이카와 북방정책” 월간 중앙(1989. 2.), p. 459.

28) 문수연 “페레스트로이카는 韓.蘇關係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문제 (1989. 1), pp. 39-40.

전정환 “국제관계의 역사적 전환” 국제문제 (1991. 4), pp. 17-18.

29) 동아일보(1991. 8. 26).

30) 최종기 “공산권 개방화와 한국 외교의 진로” 국제문제(1987. 3), p. 42.

31) 고명식 역. 페레스트로이카, p. 7.

세기에서 이어 받은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된다”<sup>32)</sup> 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이란 오늘의 현실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도달한 것으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이제까지는 의심을 품을 여지도 없었던 전제들이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인식 위에서 가능한 사고방식”<sup>33)</sup> 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련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고의 한 예시로서 고르바초프는 1987년 11월 볼셰비키혁명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핵무기 시대에서는 국제정치 및 외교를 계급 투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제3세계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없고..(그 자신은) 교조적인 마르크스 이론과 결별을 선언한다” 고 공표한 다음 “정치, 경제 양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고 있는 제3세계와 소련과의 관계를 공동발전의 차원으로 재정립 하겠다”고 까지 말하였으며<sup>34)</sup> 특히 핵시대에 있어서의 평화공존은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 되었다”<sup>35)</sup> 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그는 1988년 3월 유고를 방문하고 '新베오그라드 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그 내용에서 소련, 유고 양측은 모든 공산당의 獨自路線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할 것임을 다짐함으로써 소련이 자기네 체제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뜻이 없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sup>36)</sup> 한편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의 논리는 소련의 對아시아정책에도 반영되었는 바, 이는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한 '블라디보스톡 선언(1986. 7)'과 뒤이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1988. 9)'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한국에 대하여 호혜선린 관계와 경제적 협력관계의 수립을 희망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였다.<sup>37)</sup>

이와 같이 소련이 對韓國接近을 적극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인 요

32) 앞 책, pp.7-8.

33) 앞 책, p.148.

34) 이원호 “민족자존의 새시대와 우리의 외교” 외교 제 6호(1988, 7), p.48.

35) Mikhail S. Gorbachev, “Document : The Revolution and Perestroika” Foreign Affairs(Winter 1987/1988), p.422.

36) 이원호, 앞 글, p.49.

37) 박하일 “동북아 지역 정세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 제 11호(1989. 9), p. 73.

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각각 작용했다고 보겠다.

먼저 소련은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책으로서 대외경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하였는 바 여기에서 특히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접국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따라서 소련은 이 지역개발을 위한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소련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이제 한창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급상하고 있는 한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소련의 對韓國接近의 경제적 이유라고 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는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라는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겠다. 요컨대 소련의 國內外政策 변화와 對韓國接近 요인들이 作用하여 적극화된 소련의 對韓國政策과 북방정책 및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의 對蘇政策이 맞물리어 韓.蘇 관계는 지난해 6월 未修交 상태에서의 韓.蘇 頂上會談이 개최된 데 이어 9월 30일 韓.蘇國交正常化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6) 동구의 國內外政策 變化와 對韓國 關係 改善

80년대말 동구를 휩쓴 개혁과 민주화바람은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동구권 전체를 크게 변모시키었으며 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sup>38)</sup>

첫째, 공산당 일당 독재가 폐지되어 다당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정치적 다원화 현상, 둘째,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와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제 인정,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정책 포기,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군수산업 中心의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주민의 생필품 조달을 위한 소비재 생산 중심의 경공업에로의 전환, 셋째, 관제적 이대올로기의 퇴조 및 실용주의화, 자유노조 등 체제비판적 단체의 허용, 언론탄압의 완화, 종교의 인정, 지성문화의 자유로운 분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변화를 일으킨 데에는 여러가지 요

38) 이명남 “국제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개방 전망” '90 자유논단, 논문집, p. 351.

인이 作用하였던 바 이를 테면 對內的인 요인으로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계획 경제의 한계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체제내적 경제개혁의 실패, 소련식체제와 정책의 획일적인 적용 및 강제에 대한 동구 각국의 민족적 반발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의지 및 아래로부터의 변화욕구<sup>39)</sup>등이 그것이다.

또한 對外的인 요인으로서는 동서화해 무드 및 국가간 협력관계 중대,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의 동구 민주화운동 적극 지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昨今 동구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였으며 또한 新思考를 바탕으로 한 소련의 對東歐政策 變化였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고르바초프의 對東歐政策은 한마디로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연대'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행된 것이었으며, 유기적 연대는 '이익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경제협력의 심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sup>40)</sup>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동구정책의 한 예시로써 그는 1987년 11월 불세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동맹국들의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동구 각국의 內的 個別性を 인정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곧 브레즈네프의 '공산국 제한주권론'을 정식 무효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對東歐政策 의지는 1988년 '新베오그라드 선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게다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지향을 촉구함으로써<sup>41)</sup> 동구의 개혁 의지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요컨대 이와 같은 對內外的 요인의 자극을 받아 동구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익을 고려한 동구의 對韓國接近이 적극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동구 국가들의 對韓國修交가 빠른 속도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39) 앞 책, p.354.

40) 하용출, 앞 책, p.64.

41) 동아일보(1989.11.27).

## 7)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

### 가. 한국의 북방정책

80년대 후반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의 북방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실현해 나가면서 북한의 개방유도와 남북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겠다. 또한 북방외교정책 역시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안보, 번영, 國威向上 추구에 그 목표를 둔 것이라 하겠으나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중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에 그 최종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북방외교 정책의 연원은 1973년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sup>1)</sup>으로 보겠으나 1983년 6월 당시 이범석 외무부장관의 북방외교에 대한 공식 발언이 있는 후<sup>2)</sup> 1988년 2월 제 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sup>3)</sup> 비야흐로 제 6공화국의 주요 대외정책으로 부각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가 실현되었으며 중국과는 무역사무소를 상호 개설한 상태이나 수교의 전망이 지극히 낙관적이므로 북방과의 修交현황만을 놓고 보면 북방외교 정책은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북방 외교의 성과는 지난 80년대를 통하여 나타난 한국 외교의 國內外的 환경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周知의 사실이다. 먼저 국내적인 환경변화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꾸준히 이룩해 놓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요체로 한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국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무대에서의 外交的 客體로부터의 外交的 主體로의 變身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제 1공화국 정부수립 후 30여년 남짓을 한반도를 둘러싼 美.蘇.中.日의 불안정한 세력균형 속에서

1) 허만, 한반도와 외교정책론(서울 : 교육과학사, 1988), p.158.

2) 신명순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에 관한 방안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집(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5), p.66

3) 정한구 "한국의 북방정책과 한소관계" 외교(1989.7), p.37.

외교적 객체로서 전전공공 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속에서만 安住하고자 했던 한국외교가 80년대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방외교를 적극화함으로써 외교적 주체로의 변신과 함께 미래를 향한 전진적 대외관계 자세를 보여 준 것이다. 한편 한국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도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美.蘇間의 新데탕트 및 동서냉전의 종식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中.蘇 및 동구 공산국가들의 혁명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세계의 조류가 先.後進國, 東西方國家를 막론하고 自國의 국익을 우선으로 한 새로운 국가간 경제 교류 및 협력시대로의 변화를 보였음은 한국외교의 주요 국제환경 변수로 作用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변화된 한국의 국가이익관과 이에 입각한 북방외교는 80년대 후반기를 통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속한 진전을 보였으며 中.蘇 및 東歐圈國家들의 개혁정책과 맞물리어 그 결과로서 공산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방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북방외교정책이 성공리에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전개될 북방외교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對內外的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방외교의 앞날에도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역시 북한의 존재이다. 북방외교의 추진 이래 많은 論者들이 북한의 집요한 방해를 주요 장애요소로 지적한 바 있으며 사실상 최근까지도 중국은 韓.中關係 개선에 있어서 북한을 의식하여 엄격한 政經分離의 원칙을 적용해 왔음이 지난 번 韓.中 무역대표부 상호개설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방외교 제약요인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앞으로의 북방외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훨씬 덜 하리라고 보며 이는 최근의 南北韓間 대화 및 교류 진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남북고위급 회담은 그 성과여부는 且置하고라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외에도 체육 및 예술 경제분야에서의 남북교류 및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하여 “이 정책은 분열주의적 ‘두 개의 조선’ 정책이며, 북한고립을 위한 전략의 산물이며, 사회주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3대 반동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탄시켜야 한다”<sup>4)</sup>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응한 이른바 南方政策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특히 對美日關係 改善에 주력하고 있음은 南北韓關係 개선에 긍정적인 作用을 하리라 여겨진다.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의 다른 하나는 소련과 동구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다. 현재 소련 내부의 정치정세는 지난 8월 쿠데타 실패와 그 후의 급격한 정치개혁 추진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는 惡化一路의 소련 경제사정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련 각 공화국의 연이은 독립선언과 함께 연방체제의 가속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마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소련의 현실이다. 또한 동구국가들도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유고의 內戰 惡化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소련 및 동구의 정치·경제적인 혼란과 함께 최근 중국의 국내사정도 불안정을 더해 가는듯 보여지고 있다. 소련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집권 보수강경세력의 개혁파에 대한 통제가 보다 더 강화되고 있으나 꾸준히 세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개혁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sup>5)</sup> 중국의 정치정세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中·蘇 및 東歐圈國家들과의 경제협력은 신중함을 더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들과의 관계개선이 곧 남북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맹목적인 접근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편, 북방외교의 주체로서 우리는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단순한 修交國인 中·蘇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우방국인 美·日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중한 외교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김창순 “연형묵 총리시대, 평양의 포석과 모색” 북한(1989.1), p.13.

5) 지난 1월 13기 7중전회에서 개혁파 세력들의 승진 및 복권이 있었다. 동아일보(1991.8.13), “중국, 노선갈등, 표면화” 참조.

북방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지는 요인으로는 국제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美.蘇 대탕트 및 東西冷戰의 종식, 그리고 국가간 협력중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은 장기간 지속성을 띠 것이며 전인류가 인간의 존엄성을 의식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한 달라질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中.蘇 및 東歐圈國家들에서의 개혁 개방 민주화의 대조류도 결코 억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치, 경제적 혼란만 수습이 되면 정상적인 진로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며 그 때에는 우리의 북방외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우리 정부의 외교목표는 對中國修交와 유엔가입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엔가입은 이미 실현되었고 중국과의 수교만이 남아 있으며, 머지 않은 韓.中修交가 실현될 때 우리의 북방외교는 성공적으로 일단락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 여건 조성 및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북방외교 정책의 최종목표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나. 남북한 관계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80년대 북한의 對南認識이 보다 현실인정 그리고 체제경쟁적 성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80년대 국제정세의 急變, 특히 공산권의 사실상의 소멸과 극도에 달한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배경적 요인으로 作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sup> 이러한 북한의 對南認識 변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다음과 같은 북한의 주요 對南提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3자회담 제의(1984. 1) 수재물자제공 제의(1984. 9), 남북국회회담 제의(1985. 4), 군사3당국자 회담(1986. 6),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1986. 12), 남북한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제의(1987. 3), 3자 외무장관 회담 제의(1987. 8), 남북국회 연석회의 제의(1988. 7), 남북체육회담 제의(1988. 12), 총리급 고위 정치군사회담 수락(1989. 1), 남북한 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 제의(1990. 1) 등이 그것이다.<sup>7)</sup> 90년대에 있어서도 上記한 것들과 관련된 제의

6) 이규열 “북한의 對南認識 變化” 통일문제연구, pp.141-143.

7) “북한의 주요 對南제의 일지(1980 - 1990)” 국제문제(1991. 4. ), pp.125-128.

가 여러번 있었으며<sup>8)</sup> 7월에는 「祖平統」 성명을 통해 南北間 자유 왕래 3원칙과 함께 판문점 북측지역을 8월 15일부터 개방한다고 선언하는 등 對南 평화공세도 전개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제의와 더불어 북한은 對南 공격적인 의지도 유감없이 드러냈는 바 버마랭군 사태와 KAL機 폭파사건, 휴전선 일대의 땅굴 발견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였으며 이로써 종래의 북한의 對南二重行態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한편 우리측의 對北提議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이는 주로 경제교류 및 협력과 인적교류를 中心으로 한 제의였다. 이를 테면 금강산, 설악산 사이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선포 공동개방, 개발제의 (1990. 4), 남북적십자 회담제의(1990. 5), 민족대교류 선언(1990. 7), 남북 법무, 군사 당국자 실무접촉 제의(1990. 7) 등이 그것이다.<sup>10)</sup> 또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관광 - 지하자원 공동 개발을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 간의 통신, 통행, 통상 등 이른 바 「3通」 교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sup>11)</sup>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주장해 온 남북불가침선언의 조건부수용을 검토키로 하는가 하면<sup>12)</sup> 북한이 제의한 한반도의 非核化宣言과 관련 앞으로 핵확산방지 문제를 남북한 당국자 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sup>13)</sup> 적극적인 對北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로동당 김용순서기(국제담당)는 지난 9월 3일 한 회견에서 남북한 총리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가침선언 등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sup>14)</sup> 불가침선언 채택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드러내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 相互提議는 체육회담과 예술인 교류 및 합동공연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을 뿐 대부분 성사되지 못

8) “1990년 남북대화 교류일지” 국제문제(1990. 9), p. 129.

9) “남북자유왕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문제(1990. 9), p. 129.

10) 앞 책, pp. 113-116.

11) 동아일보(1991. 8. 15).

12) 동아일보(1991. 7. 24).

13) 동아일보(1991. 8. 2).

14) 동아일보(1991. 9. 4).

하고 있으며 일부 성사된 것도 북한측의 거듭되는 연기, 중단 등의 요구로 제 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정체속에서도 남북고위급(총리) 회담의 성사는 對內外的인 주목을 끌고 있다. 1989년 2월 제 1차 예비회담 개시 이래 8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마친 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은 쌍방간 기본입장의 차이로<sup>15)</sup>차기회담의 개최일자에 합의한 것 외에는 可視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그 상징적 의미만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하겠다. 즉,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의 총리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공식적으로 對坐하여 관계개선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남북총리 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게다가 남북대표단의 남북 정상에 대한 공식예방을 통하여 남북 정상간의 간접대화가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2차 회담에서 북한주석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의 원칙적 동의'를 표한 것,<sup>16)</sup>그리고 무엇보다도 쌍방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보다 명백히 표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지난 8월 소련에서의 쿠데타 직후 '남한에서의 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회담장소 변경을 요구하면서 제 4차 평양회담 개최 합의를 위약하는 등<sup>17)</sup>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처사는 앞으로의 회담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이 회담자체를 단순한 정치선전용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남북고위급 회담(제 4차 평양회담, 10월로 예정)을 비롯하여 기존의 남북대화 및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리라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은 中, 蘇 및 東歐의 변화와 특히 그 배후동맹인 中, 蘇로부터의 절대적인 지지를 상실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韓, 蘇화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북한이 UN 가입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때<sup>18)</sup>무엇보다도

15) 김봉현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전망" 국제문제(1990.12), pp. 47-48.

참조.

16) 앞 책, p. 52.

17) 동아일보(1991. 8. 22).

韓.蘇修交로 인한 충격은<sup>18)</sup>북한으로 하여금 對外 및 對南政策에 있어 새로운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성공적인 북방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對北關係改善 의지는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 몰리고 있는 북한당국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對美日接近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교섭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관계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對美日關係 개선을 바라는 한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中.蘇 및 東歐의 변화, 한국북방정책의 성과 및 對北關係 개선의 적극화, 외교적 고립, 對美日 관계개선 추진, 경제침체, 권력승계 등 북한의 對內外的인 요인들로 인해 남북대화 및 교류는 지속되리라고 보며 최근 북한이 청진에 최초의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측에 투자참여를 요청해 온 사실은<sup>19)</sup>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 이념의 경직성, 남한에 대한 불신<sup>20)</sup>그리고 "폭력부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이 주권을 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sup>21)</sup> 김일성의 망상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18) 김학준 "한.소화해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제 3차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한국전쟁연구회, 피츠버그대 리지웨이 안보문제연구소, 1991), p. 11.

19) 한.소관계 발전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 책, pp. 8-11. 참조.

20) 동아일보(1991. 7. 28).

21) 이만우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북한 공격 명령을 서울에 있는 그의 '괴뢰'에게 할지도 모른다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한다.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북한기행, p. 158.

22) 조선중앙년감(1969), p. 30.

## VI. 結 論：向後 北韓의 對美·日政策 展望

上記한 바와 같이 북한의 對美日政策 決定要因 분석에 따른 向後 북한의 對美日政策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對外的인 외교환경의 변화는 對美日接近을 보다 더 加速化시키는 데 직접적인 作用을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國際環境 要因들 중에서도 蘇聯 및 東歐의 변화와 한국의 北方政策이 더욱 그러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북한의 對美日接近에 긍정적인 作用을 한 要因들, 즉 북한의 경제력과 國際環境 要因 모두는 앞으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김일성 개인과 그의 주체사상 그리고 김정일 권력세습체제 등은 전망이 불투명한 변수로 남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에 부정적인 作用을 하리라고 본다. 이는 김일성의 고령과 질병에 따른 有故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김일성의 존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金日成 주체사상이 外交政策에 투영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강조점은 美國을 비롯한 西方世界에 대한 철저한 증오감의 표현이라고 할 때<sup>1)</sup> 주체사상이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 추구로 인하여 철저하게 주체사상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對內的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對美日接近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一黨獨재국가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최종적 해석권을 독재자 자신이 장악하며<sup>2)</sup>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이미 神格化된 김일성은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教條主義的이지 않고 쉽게 적응하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의 원칙들까지도 타협할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sup>3)</sup> 주체사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1) 박재규, 북한정치론, p.124.

2) 양호민, "북한의 對外關係의 이데올로기" 북한의 대외관계, p.18.

3) 서대숙, "김일성 : 그의 성격과 정치" 북한의 오늘과 내일, p.73.

한편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므로 결국 김정일 권력 승계의 성공적인 실현여부와 권력승계 이후의 북한의 對美日關係 改善과 관련한 김정일 체제의 정책전개가 尙後 북한의 對美日政策에 결정적인 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순조로이 실현된다면 김정일은 그의 권력승계의 정당화, 즉 정통성 수립을 위해서라도 경제난 해소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開放 및 對美日接近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 김정일 권력승계 興否 그 자체가 예측불허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이 既定事實化된 것으로 본다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對美日接近을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의 적극적인 對美日接近이 북한이 바라는대로의 성과를 거두어 우리측으로 하여금 결과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북한의 對美日接近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임은 물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문 단행본 -

1. 강창희 編著 「韓半島의 國際環境」 서울 : 법문사, 1984.
2. 구영록 「國際政治의 主要概念」 서울 : 법문사, 1978.
3. 구영록 외 「남북한 政治統合과 國際關係」,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4. 통일원 「北韓概要」 서울 : 통일원, 1991.
5. 국토통일원 「김일성 이후의 북한」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6.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전 4권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7. 길영환 지음, 이원웅 옮김 「남북한 비교정치론」 서울 : 문맥사, 1988.
8. 김준엽 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 법문사, 1987.
9. 민병천 編著 「北韓의 對外關係」 서울 : 대왕사, 1987.
10. 박재규 외 「북한외교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8.
11. 박재규 編 「北韓의 對外政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12. 박재규 「北韓政治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4.
13. 북한연구소 編 「北韓總覽」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14. 북한연구소 編 「北韓總覽」 : 1983 - 1985, 서울 : 북한연구소, 1986.
15. 북한연구소 編 「北韓外交論」, 서울 : 북한연구소, 1978.
16.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 청계연구소, 1989.
17.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 사회발전연구소, 1987.
18. 안병준 「比較共產主義와 現代國際秩序」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6.
19. 안병준 編著 「한국과 미국 I : 정치안보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20.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서울 : 한울, 1986.
21.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 한울, 1987.
22. 유석렬 「북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88.

23.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 정음사, 1985.
24. 이상우 「韓國의 安保環境」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25.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26. 이용필 「北韓政治」 서울 : 대왕사, 1982.
27. 이홍구 외 「北韓과 오늘의 世界」 서울 : 법문사, 1986.
28.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 金日成 正傳」 서울 : 한국양서, 1982.
29. 전용 「外交政策論」 서울 : 법문사, 1986.
30.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31. 최명 편집 「북한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32. 편집부 엮음 「주체사상 연구」 서울 : 태백, 1989.
33. 한국일보 編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한국일보사, 1991.
34.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서울 : 정음사, 1984.
35. 허동찬 「金日成傳記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1990.
36. 허만 「韓半島와 外交政策論」 서울 : 교육과학사, 1988.
37. Marx, Karl,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박재희 옮김 「공산당선언」 서울 : 청년사, 1989.
38. Gorbachev, Mikhail S., Perestroika, 고명식 譯,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 시사영어사, 1988.

- 영문 단행본 -

1. Brecher, Michael,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 Setting, Images,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972.
2. Chai, Winberg, The New Politics of Communist Chin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1972.
3. Chung, Chong Shik, Kim, Gahb Chol,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4. Hinton, Harold C.,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New York : Praeger, 1973.

5. Holsti, K. J. International Politics, Prentice-Hall, 1977.
6. Kegley, Charles W. Jr., Wittkopf, Eugene R., Perspectives on American Foreign Policy : Selected Readings N.Y.:St. Martin's press.
7. Kegley, Charles W. Jr., Gregory Raymond A., Rood Robert M., Skinner Richard A., International Event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5.
8. Kegley, Charles W. Jr., Wittkopf, Eugene R. American Foreign Policy N.Y.:St. Martin's press. 1979.
9.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10. Lee, Eun Ho, Yim, Yong Soon, Adversary Politics in East Asia : A Reassessment. Seoul : Seoul Computer Press, 1986.
11. London, Kurt,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N.Y : J.B. Lippincoff Company, 1965.
12. McGowan, Patrick J., Shapiro, Howard B.,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 Sage Publications, 1973.
13. Rosenau, James 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Y : The Free Press, 1971.
14. Rosenau, James N., Davis, Vincent, East Maurice,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Free Press, 1972.
15. Rosenau, James N. World Politics, N.Y : The Free Press, 1976.
16. Wallace, William,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The Macmillan Press Ltd., 1971.

## - 국 문 논 문 -

1. 정순영, “外交政策決定의 要因과 스타일” 「입법조사월보」 145, 1985. 4.
2. 이숙자,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북한의 對蘇外交政策” 「통일논총」 제 6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3. 고병철, “북한 外交政策 方向 : 목표 제약점 전망” 제 1회 국제학술회의 동화연구소, 1991.
4. 염홍철, “북괴의 外交政策과 第三世界” 「北韓」, 1975. 3.
5. 김남식, “북한의 對外活動 기구” 「안보연구」 제 7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78.
6. 유석렬, “북한의 政治政勢와 開放化 政策” 「동아연구」 제 8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6. 7.
7. 유석렬, “북한의 주체사상 理念과 對外政策” 「한국정치학회보」 제 18집 한국정치학회.
8. 이온죽, “북한의 對外關係와 경제개발의 종속적 성격” 「논문집」 제 11호 서울대학교 부설 국제문제연구소, 1987. 12.
9. 유석렬, “북한의 對美接近 현황과 전망” 「국제정세」, 1990. 4.
10. 유석렬, “日-北韓關係 發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제」, 1984. 12.
11. 이온죽,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 분석을 통한 북한사회 변동의 추적 <1952-85>”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8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정용석, “美國의 對北韓 여론 動態” 「북한」, 1978. 8.
13. 신정현, “美國과 南北韓關係” 「한국과 국제정치」 제 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봄
14. 정진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연세행정논총」 제 9집,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15. 정노관, “美-北韓關係 추이와 그 장래” 「공산권연구」, 1990. 4.
16. 정용석, “미국의 對북괴 外交政策” 「북한」, 1977. 5.
17. 편집부, “1990년 북한 동향 결산” 「국제문제」, 1991. 2.

18. 허동찬, “北韓 統治理念의 변천과정” 「북한」, 1988. 9.
19. 박춘삼,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과 성과” 「외교」 제 5호, 1988. 3.
20. 이호, “북한의 경제구조와 현황” 「民主統一論 : 북한실태」 통일연수원, 1991.
21. 김영규, “북한의 對西方 經濟接近 동향 分析” 통일논총 제 5권 1호 국토통일원, 1985.
22.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1988년판, 東北亞 安保環境」.
23. 편집부, “最近 中.蘇의 對北韓 경제관계 동향” 「국제문제」, 1990. 12.
24. 홍성국, “北韓의 경제개방 현황과 그 전망” 「공산권연구」, 1990. 5.
25. 김남권, “북한 경제개방의 先行條件” 「북한학보」 제 8집, 북한연구소.
26. 김광수, “북한의 經濟開放化 政策” 「북한학보」 제 14집, 북한연구소.
27. 조영환, “북한 권력구조와 김정일 세습” 「월간조선」, 1990. 5.
28. 편집부 “붉은 세자 김정일의 정체” 「국제문제」, 1984. 11.
29. 도홍렬 “北韓社會의 開放化 要因과 전망” 「통일논총」 제 4권 1호 국토통일원, 1984.
30.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89, '90년도 東北亞 安保環境」.
31. 서성우, “북한의 對美政策 변화과정” 「북한」, 1987. 5.
32. 유석렬, “북한의 對美政策의 變化와 전망” 「국제문제」 1990. 6.
33. 안병준, “북한의 新外交政策” 동아연구 제 8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6, 7.
34. 도홍렬, “북한의 政治文化와 혁명계승의 모순” 「북한학보」 제 13집.
35. 유영구, “北韓-美國關係” 「북한」, 1990. 7.
36. 안병준, “脫冷戰期の 北韓外交政策” 「통일문제연구」 제 3권 1호, 통일원, 1991.
37. 신희석, “日.北韓의 관계개선 전망과 韓國” 「국제문제」, 1990.12.
38. 자료, “北韓日本間 共同宣言文 全文” 「국제문제」, 1990.11.
39. 유영옥, “北韓의 UN加入 선언과 美.日과의 관계 추이 전망” 「국제문제」 1991. 7.
40. 김석우, “韓半島에서의 冷戰體制 해소와 日本의 역할” 「외교」 제 16호.

1990. 12.
41. 정노관, “'91년도 金日成 신년사와 政策方向” 「공산권연구」, 1991. 2.
  42. 편집부, “북한의 초청, 방문, 외교활동” 「국제문제」 1991. 5.
  43. 강인덕, “북한의 對日政策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Vol. XIII, No.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3.
  44. 유완식, “전환하는 북한의 對日外交” 「북한」 1972. 11.
  45.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3권 1호 국토통일원 1991.
  46. 안몽필, “남북한 관계와 일본” 「한국과 국제정치」 제 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봄.
  47. 강성윤, “북한의 對日政策과 諳현안” 「안보연구」 제 16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6.
  48. 이정수, “최근 북한의 정치동태 분석” 「통일논총」 제 6권 2호, 국토통일원, 1986.
  49. 박동운, “북한의 대중조작” 「아세아연구」 제 14권 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1.
  50. 이상민, “북한의 정치과정에서의 이상화 실태 분석” 「현대사조와 한반도」 제 4집,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8.
  51. 양성철, “남북한 정치체제 분석모형” 「한국정치학회보」 제 20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6.
  52. 이명남, “국제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개방전망” 「'90 자유논단 논문집」 한국 자유총연맹.
  53. 하용출, “소련의 국내.외교정책의 변화와 한국” 「국제문제」 1988. 7.
  54. 정한구, “한국의 북방정책과 한.소 관계” 「외교」 1989. 7.
  55. 신명순,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에 관한 방안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 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5.
  56. 김창순, “연형묵총리 시대, 평양의 포석과 모색” 「북한」 1989. 1.
  57. 이규열, “북한의 對南認識 變化” 「통일문제연구」 제 3권 1호, 국토통일원 1991.

58. 편집부, “1990년 남북대화, 교류일지” 「국제문제」 1991. 2.
59. 편집부, “남북 자유왕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문제」 1990. 9.
60. 김봉현, “남북 총리회담의 결산과 전망” 「국제문제」 1990. 12.
61. 김학준, “한·소 화해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제 3차 한국전쟁 국제학술 회의, 한국전쟁연구회, 1991. 6.
62. 윤정석, “한·일 정상회담과 일본의 對北韓關係 변화 가능성” 「통일논총」 제 4권 2호, 국토통일원, 1984.
63. 久仁昌, “북한 1980년대의 모습과 '90년대 전망” 「공산권연구」 1990. 2.
64. 김덕배, “김정일 지도체제 구축 위한 끊임없는 권력개편” 「북한」 1986. 12.
65. 박완신, “북한 정치행정체제의 변화와 특징” 「북한학보」 제 14집, 북한 연구소 북한학회, 1990.
66. 정노관, “북한의 9기 최고인민회의의 구성동향과 정책방향” 「공산권연구」 1990. 7.
67. 유석렬, “공산주의의 소멸” 「'90 자유논단 논문집」 한국 자유총연맹.
68. 김무,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튼튼한가” 「북한」 1983. 10.
69. 이항구, “김정일 - 그는 누구인가” 「북한」 1983. 10.
70. 이석호, “북한 정치권력 계승에서 軍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제 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71. 박춘삼, “일·북한간의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통일논총」 제 4권 2호 국토통일원, 1984.
72. 연하청, “북한의 대서방교역과 개방화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 2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가을.
73. 도홍렬,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변화” 「평화연구」 제 14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89. 12.
74. 허동찬,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연원” 「북한학보」 제 13집, 북한연구소.
75. 전정환, “국제관계의 역사적 전환” 「국제문제」 1991. 4.
76. 전정환,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추이” 「국제문제」 1991. 1.
77. 신정현, “동북아 지역체제의 변화” 「국제문제」 1991. 1.

78. 김홍명, “페레스트로이카와 북방정책” 「월간중앙」 1989. 2.
79. 문수연, “페레스트로이카는 한. 소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문제」 1989. 1.
80. 최종기, “공산권 개방화와 한국외교의 진로” 「국제문제」 1987. 3.
81. 이원호, “민족자존의 새 시대와 우리의 외교” 「외교」 제 6호 1988. 7.
82. 박하일, “동북아지역 정세변화와 남북한관계” 「외교」 제 11호 1989. 9.
83. 정규섭, 「북한 外交政策의 環境要因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84. 임영일, 「김일성 김정일의 政策路線 비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85. 고성준, 「주체사상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영문논문 -

1. Koh, B.C. “North Korea in 1977 : Year of Readjustment” Asian Survey January 1978.
2. Kim, Young C. “North Korea 1979 : National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ian Survey, January 1980.
3. “A Chronology of U.S. Relations with North Korea : 1970 - February 1985” Korea & World Affairs, Spring 1985.
4. “Selected Source Materials on American-North Korean Relations” Korea & World Affairs, Spring 1985.
5. Lee, Sook Ja, “A Study on the Eastern European Foreign Policies”
6. Lee, Chong-Sik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I” Asian Survey May 1982.
7. Shinn, Rin-Sup. “North Korea in 1981 : First year for De Facto successor Kim Jong II” Asian Survey, January 1982.

8. Yu, Suk-Ryul,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Winter 1982.
9. Jo, Yung-Hwan,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October 1986.
10. Clippinger, Morgan E. "Kim Chong-Il in The North Korean Mass Media : A study of semi-esoteric Communication" Asian Survey, March 1981.
11. Kihl, Young Whan, "North Korea in 1983 : 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Asian Survey, January 1984.
12. Lee, Chong-Sik, "Kim Il-Song of North Korea" Asian Survey June, 1967.
13. Lee, Dong-Bok,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 fall 1981.
14. Yu, Suk-Ryul,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Spring 1986.
15. Gorbachev, Mikhail S. "Document : The Revolution and Perestroika" Foreign Affairs, Winter 1987/1988.

- 기타 -

1. 국내 주요일간지 :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참조
2.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1-39」, 서울 : 내외통신사, 1974-1989 참조

- 북한자료 -

1. 정치용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2.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8, 1969, 1971, 1972, 1973, 1980, 1981,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4.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제 5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5. 근로자, 1971. 7호  
1976. 2호, 4호  
1979. 4호  
1982. 4호, 5호, 11호  
1987. 1호, 12호  
1988. 10호  
1989. 2호, 10호.

## ◆ 北韓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 蘇聯 및 中國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金 德 重(世宗研究所)

### 〈要 約 文〉

본 연구는 우리의 北方政策의 결과 韓蘇 및 韓中 관계개선이 가시화된 1988년 이후 1991년 9월 현재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北韓의 對蘇·對中國政策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 方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中蘇의 對北韓政策이 아닌 北韓의 對中蘇政策을 분석하였으며 아래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변화하는 國際情勢, 특히 中國과 蘇聯의 변화와 中蘇 관계개선은 北韓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대해 北韓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2) 北韓은 韓蘇修交를 비롯한 韓蘇 및 韓中관계 발전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앞으로 統一方案을 비롯한 韓半島 관련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은 北韓을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

연구결과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988년 이래 韓半島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北韓은 유엔가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은 北韓 外交의 신축성을 보여 준 것으로 앞으로 日本 및 美國과의 관계 개선, 핵사찰 수용, 南北韓 軍縮, 韓半島 非核地帶化, 總理會談, 南北頂上會談 개최 등은 물론 南北韓간 直交易이나 직접투자, 민간인 교류, 관광지 開放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北韓은 蘇聯과 中國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開放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北韓은 이미 주민들에게 대해 開放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改革, 開放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蘇聯의 改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상당정도 주지시켜 왔다.

둘째 北韓은 韓蘇修交到 대해 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濟州會談에 대한 불만

을 나타낸 바 있으나, 그것은 短期的인 반응이었고 기본적으로는 蘇聯과의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韓蘇修交 이후 北韓이 蘇聯과 멀어지고 中國과는 가까워졌다는 통설과는 달리, 北韓이 蘇聯을 멀리했다는 증거는 北韓 刊行物을 통해서도 찾기 어렵다. 北韓은 蘇聯에서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실 보도를 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관망하였고 발틱 3국의 독립을 신속하게 공식인정을 하는 등 蘇聯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北韓의 政策은 향후 蘇聯 聯邦政府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공화국의 역할이 강화되면 러시아공화국 등 각 공화국들과도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수립하고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관계는 냉전시대에서의와 같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바탕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핵사찰문제에 관하여 美國과 보조를 같이 하는 蘇聯의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北韓-蘇聯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中國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일 것이다. 양국사이에는 초청·방문외교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며 北韓의 對外開放, 日本 및 美國과의 국교 수립, 韓半島 統一 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中國은 北韓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다. 韓中修交가 이루어지는 경우 北韓의 불만 표시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며 韓中修交로 인해 北韓-中國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中國은 北韓과 日本의 수교 교섭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北韓과 美國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중개역을 맡을 것이다.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했다고 해서 平和와 統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北韓이 對南 투쟁의 장소를 韓半島에서부터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北韓이 1991년 5월 27일의 外交部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유엔에서 하나의 의석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면, 유엔가입은 오히려 南北韓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991년 10월 2일의 유엔總會 연설을 통해 北韓 연형묵 總理가 유엔군 사령부 해체,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駐韓美軍 핵무기 철수 등을 반복해서 주장했듯이 유엔에서의 南北韓 和解와 협조를 만드십시오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韓半島를 포함하여 海外에 비치되어 있는 戰術核武器들을 철수한다는 부시 大統領의 선언은 北韓이 核査察을 미루어 온 구실의 하나를 없애준 면도 있으나 駐韓

美軍, 핵무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오히려 北韓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北韓이 蘇聯과 中國의 지지하에 韓半島 非核地帶化 주장과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커다란 난관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韓國은 北韓에 대한 몇가지 '지레장치'(leverage)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蘇聯과 中國을 활용하는 몇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 政府는 中國과 蘇聯이 北韓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北韓의 유엔가입 결정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 특히 中國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나 統一問題 논의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이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統一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北韓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美國이나 日本보다는 蘇聯과 中國이며 이러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경우 韓國은 北韓을 움직일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를 잃게 되는 셈이다. 中蘇가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北韓을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것과도 관련된다. 국제사회에서 北韓을 고립시키는 것은 南北韓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韓蘇, 韓中관계 강화가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國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둘째, 北韓에 대한 蘇聯의 對北韓 군사장비 부품공급이 줄어들고 中國의 對北韓 군사 지원이 감소되는 경우, 南北韓의 군사력 균형은 바뀔 것이고 北韓은 韓國과의 군비축소 會談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은 軍裝備 현대화계획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사력에 있어서 北韓을 월등히 앞서고 北韓이 군비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南北韓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美國의 레이건 行政府가 1980年代 初에 蘇聯과의 경쟁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셋째, 一方的으로 대폭적인 군비 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군축이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一方的 蘇聯軍 철수에서 시작되었듯이, 상호신뢰가 부족한 南北韓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韓國이 일방적인 군사력 감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韓國은 北韓과 美國, 그리고 北韓과 日本과의 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

게 하는 政策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韓國과 中國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7.7宣言에서도 표명한 바가 있는 北韓에 대한 외교적 지원이다.

## I. 問題의 提起

1980年代 末이래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는 美蘇和解에 따른 냉전체제의 종식과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蘇聯의 대대적인 후퇴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로 인하여 동유럽 여러나라들에서의 대변혁과 獨逸統一이 이루어졌고 세계 각지에서는 민족분규가 심화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주도아래 改編政策을 추진해 온 蘇聯에서는 1991년 8월의 불발쿠데타 이후 공산당 지배가 종언을 고하고 聯邦의 급속한 붕괴와 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의 과감한 이행과정에 있으나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東北亞에서는 中國의 開放·改革과 1989년의 天安門사태, 中蘇和解, 韓蘇修交 및 韓中 상주무역대표부 설치는 물론 北韓과 美國, 北韓과 日本 간의 수교 교섭이 진행되는 등 韓半島 주변 정세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南北韓 간에도 전에 없는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스포츠 단일팀 구성과 공동 응원, 예술단 교환은 물론 3차에 걸쳐 南北總理會談이 개최되었으며 9월에는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이 실현되었다. 美國이 해외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들을 철수하겠다는 부시 大統領의 1991년 9월 27일 선언은 그동안 핵사찰 수용과 駐韓美軍 보유 핵무기의 철수를 연계시켜 핵사찰을 거부해 왔던 北韓으로 하여금 政策 전환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이어서 日本 및 美國과의 국교 수립을 앞당기게 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경우에도 北方政策의 미결과제로 있는 中國과의 국교수립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나아가 유엔가입 이후 南北韓 간의 상호 실체인정, 주변 四強에 의한 교차승인, 군비통제 또는 감축, 南北韓 간의 직교역의 확대는 물론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統一方案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南北대화가 되도록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숙원인 統一을 今世紀내에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政府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커가고 있다.

향후 韓國은 蘇聯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中國과의 국교 수립 및 관계발전을 위한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蘇聯과 中國의 동맹국이었던 北韓이 그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정권 수립기부터 현재까지 北韓의 거의 모든 면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蘇聯, 그리고 韓國동란을 통해 '피로 맺은 혈맹'으로서 北韓에 대한 정

치적·경제적·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온 中國으로서는 비록 韓國과 국교를 수립했다고 해서 北韓을 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蘇聯과 中國이 바라는 것은 北韓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韓國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이 蘇聯 및 中國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北韓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의 對蘇, 對中國관계는 北韓의 對蘇·對中國 관계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韓國外交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 韓半島문제 전문가들은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國관계의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연구 업적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리기에는 아직 도저히 부족한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예를 보건데 우리는 北韓의 유엔가입 결정, 핵사찰 수용 용의 표명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고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의 교섭을 시작한 것을 놀라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등 北韓 外交를 미리 전망하고 그에 대한 아측의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유엔무대에서 北韓이 어떻게 행동할지, 핵무기개발을 계속할지, 南北對話에 어떻게 임할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北韓의 對蘇, 對中國政策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변화하는 국제상황, 특히 中國과 蘇聯의 변화와 中蘇 관계 개선이 北韓에 미치는 영향 및 北韓의 대응에 관한 의문이다. 蘇聯과 中國은 北韓에 대하여 開放·改革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를 통해 中蘇가 얻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北韓이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압력의 수단과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대해 北韓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입증해 주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경우 北韓의 외교형태는 우리들에게는 非合理的(irrational)인 것으로 보이지만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北韓의 對中·蘇 等距離外交라는 것은 약소국으로서 두 強國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中蘇和解 이후의 북한외교도 등거리외교라는 기본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향후 韓蘇 및 韓中관계 발전에 北韓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문이다.

韓蘇修交 이후 北韓이 蘇聯에서부터 멀어지고 대신 中國과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韓中修交 이후에 北韓은 中國과 멀어지고 蘇聯과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中蘇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고 日本과 美國을 새로운 친구로 만들려고 할 것인가? 北韓은 물론 韓中修交가 자연되는 것을 바랄 것이고 앞으로의 韓蘇 및 韓中 관계의 발전속도가 늦추어지기를 바라겠지만 그를 위해 北韓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비록 제로섬(zero-sum)게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韓國의 對中蘇관계 개선과 北韓의 對中蘇관계 유지는 필연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韓國은 北方政策의 지속적 전개, 즉 蘇聯 및 中國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반하여, 北韓은 기존의 우방인 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韓蘇修交 이후 北韓과 蘇聯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통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中國과의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90년 현재 北韓 對外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蘇聯과의 경제관계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中國으로부터의 원조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 및 中國의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북한의 경제전망, 또한 1961년에 체결된 朝蘇 및 朝中 同盟條約의 성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統一문제를 비롯한 韓半島 관련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이 北韓의 주장을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예를 들어 부시 大統領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이후 北韓이 주장해 온 韓半島非核地帶化 주장을 다시금 들고 나온다면, 종전에 北韓을 지지해 오던 蘇聯과 中國은 앞으로도 北韓의 주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駐韓美軍, 핵무기철수와 핵사찰 수용을 연계시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부시 宣言이 北韓의 핵사찰 수용을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핵사찰 수용을 지연시키는 좋은 구실을 北韓에게 제공해 준 셈이다. 韓半島에서 핵무기 철수를 완료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걸리고 더구나 철수과정을 北韓이 검증(verify)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蘇聯이 北韓에 대해서 가했던 핵사찰 수용압력은 단기적으로 약화될 것이고 더구나 非核地帶化 주장과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핵사찰 수용의 전망은 더욱 흐려진다.

또한 韓半島 統一方案에 있어서 '1국가 2체도'를 함께 주장해 온 中國과 北韓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盧泰愚 大統領이 유엔總會 연설 이후 제시한 韓國측의 南北聯合案과 北韓측의 聯邦制案을 수용하는 새로운 統一方案을 모색하는 경우 蘇聯과 中國의 태도가 의문시된다. 향후 유엔에서 南北韓이 상반된 의제를 두고 또 대결을 벌이는 경우 蘇聯과 中國은 韓國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北韓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韓半島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및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치, 駐韓美軍 철수 문제, 나아가서는 南北韓 統一실현에 이르기까지 蘇聯과 中國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수년간의 北韓의 對蘇, 對中國政策을 분석함으로써 그를 통해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研究範圍 및 方法

### 1. 研究範圍

北韓의 對中, 對蘇관계가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특히 韓國이 蘇聯 및 中國과의 관계 개선을 北方政策을 통해 적극 추진한 1988년의 올림픽을 전후한 때로부터이다. 이 시기는 蘇聯과 中國의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때로서 1988년 이후 1991년 9월말 현재까지 韓半島 주변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 특히 韓國과 蘇聯, 韓國과 中國간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北韓의 對中蘇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1988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공간적으로는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國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蘇聯이나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또는 對北韓政策을 다루는 것보다는 北韓이 행동주체(actor)가 되고 蘇聯과 中國을 대상(target)으로 하는 北韓의 對蘇聯政策과 對中國政策을 고찰한다. 그리고 종래에 흔히 쓰이던 北韓의 中國 및 蘇聯에 대한 政策을 비교하기 보다는 양자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2. 研究方法

北韓의 對蘇 및 對中國政策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외부요인으로서 韓半島 주변의 국제환경, 蘇聯과 中國에서의 開放과 改革이 北韓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내부요인으로는 北韓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상황을 살피고, 끝으로 南北韓 관계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北韓의 對外政策을 蘇聯이나 中國 또는 韓國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北韓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北韓의 간행물, 특히 노동신문을 중심으로 기간중의 주요한 외교적 사건을 전후한 北韓의 반응과 주장을 분석한다.

셋째, 北韓이 蘇聯 및 中國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蘇聯이 韓國과 국교를 수립하자 극렬한 비난을 퍼부었으나 곧바로 蘇聯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北韓이 취한 조치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北韓의 對外政策 특히 蘇聯과 中國에 대한 政策에서 발견되는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北韓 외교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韓國 政府의 政策 대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韓國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Ⅲ. 北韓의 對蘇政策

#### 1. 蘇聯의 변화에 대한 반응

蘇聯은 北韓 정권수립 이래 北韓의 모든 면에서 강력한 후원자의 역할을 해왔으며, 1961년에 체결된 朝蘇同盟條約을 기조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주도하에 계속된 蘇聯에서의 변화는 蘇聯의 對北韓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蘇聯의 改革에 대한 北韓의 공개적인 지지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노동신문은 1955년에 체결된 '朝蘇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協定' 체결35주년을 기념하는 "朝蘇 친선의 중요한 계기"<sup>1)</sup>라는 논평을 통하여 蘇聯의 改革을 지지한 바 있다.

오늘 蘇聯인민은 蘇聯공산당 제27차대회와 제19차 전연맹대표자회 결정에 따라 사회주의의 갱신을 위한 改編사업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 蘇聯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지지는 蘇聯이 改革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北韓 당국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蘇聯의 변화라는 것이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향후 北韓의 開放이나 改革의 방향도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北韓은 蘇聯의 改編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韓蘇修交에 즈음하여 蘇聯을 비난할 때 토로하였다.<sup>2)</sup>

蘇聯측이 平壤에 와서 南韓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또 한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설명한데 의하면 지금 蘇聯경제

1) 「노동신문」 1990년 2월 5일

2) 「노동신문」 1990년 10월 5일

가 다 파괴되고 위기가 직면하였기 때문에 南韓과 외교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던 蘇聯이 ‘改編’政策 5년에 어떻게 했으면 나라를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해놓고 南韓에 구전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韓蘇修交 이전의 北韓과 蘇聯의 관계는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12월 세바르드나제 蘇聯 외상은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과 회견하고 北韓의 高麗聯邦制案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였다고 美國과 韓國이 제안하고 있는 두개의 韓國 인정을 비난한 바 있다. 北韓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제안을 환영한다고 선언하였고 蘇聯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혁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sup>3)</sup>

## 2. 韓蘇修交에 대한 비난

1990년 9월 30일 韓國과 蘇聯이 국교를 수립한 것은 北韓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의 하나였다. 따라서 北韓은 蘇聯에 대한 가장 극렬한 비난을 노동신문을 통해 퍼부었다.

지난 9월 30일 蘇聯과 南韓 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蘇聯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며 蘇聯이 改編바람에 파국과 혼란에 빠져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때에 산생된 현상이다. 지난 9월초 平壤에서 있는 朝蘇 外交部長 회담 때 蘇聯측은 南韓과 外交關係를 설정하기로 결정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의 蘇聯은 그 전날의 蘇聯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로 되었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였다. 그후 蘇聯측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蘇聯이 南韓과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蘇聯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3) Coit D. Blacker, "The USSR and Asia in 1989 : Recasting Relationships," The Asian Survey, Vol. XXX, No. 1 (January 1990), p. 10.

며 자주국가인 蘇聯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蘇聯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견지하던 그 전날의 蘇聯이 아니고 그 어떠한 다른 성격의 국가로 변질된 것 만큼 그에 상응하게 새로운 벼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에만 하여도 蘇聯의 최고위당국자 자신이 蘇聯의 南韓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었다. 1988년 12월에 발표된 朝蘇 공동보도에서는 “蘇聯측은 南韓에 대한 자기의 원칙적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고 “南韓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南韓과 정치적 및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오늘에 와서 蘇聯이 이 엄연한 공약들을 다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 南韓과 외교 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니 이것을 ‘배신’이라는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蘇聯은 朝蘇 두나라 사이에 체결된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도 안중에 두지 않았으며 개통적으로 위반해 왔다. 蘇聯이 南韓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것을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주관적 의도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두개 조선’으로 분열을 고착시키고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소위 ‘開放’에로 유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 일으키는 美國의 기본전략에 공공연히 가담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될 수 없다. 오늘 분열된 나라들이 統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조선에서도 統一에 대한 南北 전체 인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蘇聯이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南韓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선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면 統一을 방해하고 분열을 고취하는 데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오직 美國과의 보조일치를 위해서라고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중략). 蘇聯은 사회주의제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23억달러에 팔아 먹은 것이다.<sup>4)</sup>

4) 「노동신문」, 1990년 10월 5일, “달라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

北韓이 이처럼 蘇聯을 극렬히 비난한 이유는 첫째로, 蘇聯의 韓國 승인이 北韓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택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韓國과 蘇聯간의 국교 수립은 北韓의 對內政策은 물론 특히 對外政策의 기본인 ‘하나의 조선’政策을 蘇聯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北韓의 對外政策상의 ‘하나의 조선’政策을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北韓의 대내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金日成 ‘권력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蘇聯은 北韓의 기본적인 韓半島政策인 ‘하나의 조선’政策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韓蘇修交를 감행할 때에 北韓의 체제적인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韓國의 ‘유엔同時加入’문제에 대한 蘇聯의 외교적인 동조와 지지는 확실히 北韓의 ‘하나의 조선’政策을 기저에서부터 동요시켜 北韓의 체제를 뒤엎는다는 전제위에 있다고 평가된다.<sup>5)</sup>

둘째, 韓蘇修交로 인하여 南北韓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데 있어서 北韓은 행동반경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종래 北韓은 南韓과의 협상과정에서 蘇聯이 北韓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냉전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對南協商에 임했었다. 그러나 韓蘇修交는 그러한 蘇聯의 지지를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어 北韓은 외교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은 濟州會談에 대해서도 심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1991년 4월 27일 노동신문은 濟州會談이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셋째, 韓蘇 관계발전은 결과적으로 北韓-蘇聯관계의 악화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蘇聯은 자신들의 경제改革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한국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蘇聯이 韓國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 北韓과의 관계는 악화될 전망이다.<sup>6)</sup>

5) 이기택,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서울 : 삼영출판사, 1991), pp. 207-210

6) Blacker, 1990, 앞의 글, p. 11.

그러나 北韓은 쉽사리 蘇聯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경제적으로 北韓의 對蘇 무역규모는 1989년만 하더라도 23억 9,800만불로 전체 무역고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무기와 원유 등을 국제시장의 30%수준인 이른바 '우호가격'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채 또한 39억 달러(전체의 57%)에 달해 北韓의 對蘇경제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89년말까지 발전시설의 60%이상, 탄광 및 정유시설의 50%이상, 철광석 40%이상 이 蘇聯의 지원으로 건설·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蘇聯과의 관계악화는 北韓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北韓은 蘇聯과 등을 돌릴래야 돌릴 수 없는 곤혹한 형편속에서 최소한 對蘇관계를 현상유지하는 차선책으로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sup>7)</sup> 北韓과 蘇聯은 1991년 4월 28일 平壤에서 '91년도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協定은 91년부터 쌍방간 무역 및 경제협조를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태환화폐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Payments in convertible currency at world prices)"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총 26억루블에 달하는 對蘇채무 중에서 5억루블을 91년도에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따라서 北韓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겠으나 蘇聯과 北韓과의 관계가 현저히 소원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9)</sup> 반면 蘇聯이 앞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北韓은 蘇聯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고르바초프와 옐친大統領이 최근 쿠바에 대해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쿠바 주둔 소련군을 조만간 철수할 것임을 공언한 마당에 앞으로 北韓이라고 예외 대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sup>10)</sup>

### 3. 蘇聯 쿠데타에 대한 반응

蘇聯이 改革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北韓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비

7) 「내외통신」, 1991년 9월 13일, pp. D3-D4.

8) 「타스통신」, 1991년 4월 28일.

9) 統一院, 「北韓概要 '91」(1990),

10) 「내외통신」, 1991년 9월 13일, pp. D4-D5.

교적 상세하게 보도해 왔다. 그러한 보도태도는 특히 韓蘇修交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노동신문의 제 5면 국제소식란에는 거의 매일 蘇聯소식이 실렸다. 北韓은 나아가 蘇聯 정국의 혼미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한 고르바초프의 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일례로 노동신문은 “蘇聯에서 大統領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근 蘇聯에서 파업, 집회, 시위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蘇聯大統領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sup>11)</sup>

그러나 1991년 8월 19일부터 21일의 불발쿠데타를 北韓이 공개적으로 환영했다는 증거는 없다. 일부 분석가들은 北韓 당국이 蘇聯의 쿠데타를 내심으로 환영한 반면 실패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의 하나로서 北韓이 蘇聯사태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蘇聯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 온 것이다. 쿠데타의 시작과 고르바초프의 복귀에 대한 보도 시각이 前者가 6시간 55분 後, 後者が 8시간 55분 後라는 사실을 보면, 北韓이 쿠데타의 發生을 환영했고 고르바초프의 복귀 즉 쿠데타의 실패를 서운해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쿠데타의 실패에 대한 보도는 蘇聯 정국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신속한 보도 태도는 쿠데타 후에도 계속되었다. 고르바초프의 共產黨 書記長職 사임 소식이나 共產黨 활동금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1) 고르바초프가 蘇聯共產黨 중앙위원회 총비서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는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면에서 蘇聯共產黨이 한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蘇聯共產黨 중앙위원회는 자체 해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공화국 共產黨들과 지방당 단체들의 운명은 이들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sup>12)</sup>
- 2) 蘇聯에서 反共產黨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엘친 러시아大統領은 러

12) 「노동신문」, 1991년 8월 26일.

시아共産黨의 활동을 금지하며 蘇聯共産黨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sup>13)</sup>

- 3) 지금 蘇聯은 “부닥치고 있는 난관들, 식료품 공급, 경공업 생산, 막대한 국제수지 불균형 등에서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외부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고르바초프가 9월 6일 말하였다.<sup>14)</sup>

이어서 북한은 발틱 3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신속히 발표하는 등 蘇聯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外交部는 성명(1991년 9월 7일)을 통하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독립을 공식 인정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앞으로 그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sup>15)</sup>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최근의 北韓-蘇聯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韓蘇修交 이후의 北韓-蘇聯관계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蘇聯이 과거의 동맹국들에게 주었던 우호가격에 의한 석유수출을 경화 또는 국제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은 北韓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蘇聯은 北韓의 경우, 쿠바 및 베트남과 함께 경화지불을 1년간 유예시켜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蘇聯의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둘째, 蘇聯이 北韓에 대해서 가했다고 하는 압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hard evidence)가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다. 蘇聯의 경우 北韓에 대한 원조를 줄임으로써 자신의 對外的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北韓에 대해 開放 및 改革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韓國과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또는 韓國측의 요청에 의해 北韓을 자극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蘇聯으로서는 韓國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으려는 즉 對北韓 압력 행사와 韓國의 對蘇 경협 제공촉진을 연계

13) 「노동신문」, 1991년 8월 26일.

14) 「노동신문」, 1991년 9월 8일.

15) 「노동신문」, 1991년 9월 8일.

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셋째, 기간중 金日成父子 世襲體制에 대한 蘇聯의 부정적인 태도, 또는 6.25동란 중 蘇聯軍의 참전 사실 폭로, 나아가서는 해방 이후 蘇聯軍에 의해 수립된 金日成政權에 얽힌 비화들이 공개됨으로써 金日成 神話와 일인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개는 北韓에 대한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준 셈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개는 北韓에 대한 蘇聯의 불만의 표시라기 보다는 開放(Glasnost)으로 인하여 蘇聯 언론매체 및 학자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 IV. 北韓의 對中國政策

### 1. 血盟關係 維持

그동안 中國과 北韓은 대체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관계는 정치적·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쌍방 모두 지도자간의 친분관계가 유대의 기저를 이루어왔다.<sup>16)</sup> 北韓은 中國과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져왔는데 1989년 金日成의 中國 방문, 1990년 江澤民 총서기의 平壤 방문, 1991년 李鵬 總理의 北韓 방문 및 金日成의 北京방문 등이 그것이다. 또한 노동신문의 논조는 일관되게 朝中 친선의 영구불멸성과 양국간의 친선협조관계 및 양국의 통일방안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면,

- 1) 中國共產黨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中國 인민은 4개의 기본원칙을 전지하고 改革과 開放을 심화시키면서 中國의 특색이 있는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中國 黨과 政府와 인민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中國을 統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sup>17)</sup>
- 2) 李鵬 總理는 우리 당과 政府가 내놓은 統一方案들을 특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政府에 기초한 聯邦制統一方案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조국을 統一하기 위한 中國 당과 政府와 인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sup>18)</sup>

그러나 1988년 이후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는 北韓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韓國과의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조정이 北韓-中國관계를 근본적으로

16) 平和研究院, 「東北亞와 南北韓」(年例報告書 1988)(서울: 平和研究院, 1989), p. 208.

17) 「노동신문」 1991년 5월 3일 사설, “형제적 인민의 친선의 사절”

18) 「노동신문」 1991년 5월 8일 사설, “朝中 親善의 불패성에 대한 힘있는 시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들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지도자들이 韓國과의 경제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계 개선은 현단계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고 이를 北韓측에게 거듭 확약해 온 점이 그 논거의 하나이다.<sup>19)</sup>

기본적으로 中國은 韓半島에서 세력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은 韓半島에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鄭鐘旭 교수에 따르면, 中國의 입장에서 볼 때 韓半島에 강력한 統一國家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 자국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統一獨逸의 출현이 나토(NATO)라는 안보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약화 또는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韓半島의 경우에는 統一國家를 견제할 수 있는 다자적 동맹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中國이 北韓을 지지하고 北韓이 美國이나 日本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韓半島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中國이 국내정치·경제적 이유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中國이 北韓을 지지하고 東北亞의 국제사회에서 北韓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韓半島에서 南北韓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sup>20)</sup>

이에 대해 北韓의 對中國政策은 기본적으로 닉슨 독트린 이래 ‘不信政策’으로 일관하여 왔다.

中國이 美國과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 대미접근을 한 것에 대해 北韓은 정치적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여 왔다. 北韓이 蘇聯에 대한 군사적인 접근정책을 1984년 이래 한층 강화한 것도 일면 이러한 中國의 對美和解政策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蘇聯의 군사적인 힘을 배경으로 하여, 中國의 對韓 접근에 위협을 가하는 ‘小國의 壓迫’政策으로 임하리라고 본다. 실제상 韓國의

19) 平和研究院, 1989, 앞의 책, pp. 213-214.

20) 鄭鐘旭, “東北亞 秩序와 中·日의 역할,” 「전환기의 東北亞 질서와 南北韓 관계」(세미나시리즈 91-1)(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28.

對中國 접근 政策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南韓의 北京 접근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北韓이 끈질기게 中國 外交部에 항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中國으로서도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만, 中國은 간접적인 對韓政策을 설득하기 위해 北韓에게 開放政策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中國은 對南政策의 '半公式化'라는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여 北韓에 대해 꾸준히 開放政策이라는 각도에서 외교적인 설득을 가하리라 예측된다. '半公式化'라는 문제는 물론 韓中間에 이미 협상이 진행되어 실현된 통상대표부의 상호교환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헝가리문제와 같이 北韓이 가장 기피하는 '하나의 朝鮮'政策으로부터 '두개의 朝鮮'政策으로의 이행이라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sup>21)</sup>

中國의 對北韓 경제·군사적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北韓은 대의명분 면에서 中國에 의존해 왔는 바, 金日成의 訪中(89. 11)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있는 일이었으며, 金日成 訪中 직후 中國 外交部 대변인이 南北韓 동시 유엔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北韓 외교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開放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中國과 北韓은 사실상 黨對黨, 국가對 국가 양면에서 공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반면, 中國의 對韓 경제접근 의지가 역류하기 어려운 대세라는 점에서는 中·北韓관계에서 대의명분상의 지원은 허구에 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사태후 北韓의 對內外 政策은 中國을 방패로 하는 면이 있어 혹시 中國 내에 돌발적 사태발전이 있을 경우 北韓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sup>22)</sup>

北韓은 蘇聯과 韓國의 국교 수립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韓中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北韓이 中國과의 관계 유지 내지 강화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中國과 北韓의 관계는 韓蘇修交이후 더욱 긴밀해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21) 이기택, 1991, 앞의 책, p. 174.

22) 世宗研究所, 「韓國의 對外關係: 1990년의 움직임」(서울: 世宗研究所, 1990), pp. 47-48.

1990년 9월 韓蘇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게 되자 北韓은 蘇聯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 먹은 행위”등의 극렬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中國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北韓이 급속히 中國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견국인 中國과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北韓의 金日成과 연형묵 總理 등 黨·政 고위 인물들이 잇따라 中國을 찾았고, 1990년 11월 압록강 다리를 「朝中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北韓의 보도매체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불멸의 朝中 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sup>23)</sup>

1991년 8월 蘇聯에서의 쿠데타사태 이후 北韓과 中國간의 밀착관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쌍방간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줄거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와 엘친 등 蘇聯지도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후 北韓과 中國은 내부적인 체제단속에 부심하는 가운데 앞다투어 사회주의 수호를 거듭 다짐하고 나왔다.<sup>24)</sup>

北韓은 中蘇和解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中蘇가 공히 北韓의 統一방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江澤民 總書記가 5월 17일 모스크바에서 蘇聯의 각계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中國은 北韓의 자주적 平和統一 方案을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는 것이다.<sup>25)</sup>

## 2. 유엔加入 결정과 中國

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中國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北韓은 유엔가입문제에 있어서 항상 韓國과 상반되는 주장을 해왔다. 北韓 정권수립 이후 1973년까지는 韓國이 단독가입을, 北韓이 同時加入을 주장했다. 韓國政府가 北韓의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6.23선

23) 統一院, 「北韓概要 '91」(서울: 統一院, 1990) pp. 362-363.

24) 「내외통신」 1991년 9월 13일, p. D1. “北韓의 최근 對中蘇관계 변화 분석”

25) 「노동신문」 1991년 5월 19일.

언을 발표하자 北韓은 유엔同時加入을 반대하고 金日成의 ‘祖國平和統一 5大 綱領’이라는 것을 통하여 유엔同時加入은 ‘두개의 朝鮮’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南韓이 聯邦制를 실현한 이후 단일국호에 의하여 가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南과 北이 유엔에 同時加入하거나 단독가입하는 것은 두개 朝鮮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統一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南韓의 유엔가입안은 우선 민족의 統一 염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분열방안이다. 南과 北은 지금까지도 유엔에 가입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제 統一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와서 굳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겨레의 統一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의 죄악으로 된다. 또한 南韓의 유엔가입은 國際平和의 유지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南과 北이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고 韓半島에 항시적으로 전쟁 위험이 감돌고 있는 조건에서 南과 北이 유엔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대결을 국제무대에 까지 연장하고 확대하게 될 것이다.<sup>26)</sup>

더구나 1991년의 金日成 新年辭에서는 聯邦制 주장과 유엔 가입문제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韓國에 의해 거부되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聯邦制 統一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하에서라면 그 전이라도 北과 南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sup>27)</sup>

그러다가 최근 韓國 政府가 同時加入과 韓國만의 단독가입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자 北韓으로서는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韓國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 單獨加入을 하기로 결정하여 실질적인 유엔 同時加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北韓이 유엔가입 의사를 발표한 1991년 5월 27일자 外交部 성명

26) 「노동신문」 1990년 11월 3일, “유엔은 朝鮮의 統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7) 「노동신문」 1991년 1월 1일.

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南韓 당국자들의 유엔單獨加入 시도가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南韓당국자들은 全朝鮮民族의 統一念願에 역행하여 끝끝내 유엔 單獨加入을 강행하려 함으로써 유엔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朝鮮을 둘로 갈라놓는 친추에 용서 못할 대죄를 저지르고 있다. 南韓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全朝鮮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변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청난 後果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우리 政府는 南韓 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단계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南韓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발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이다. 南北韓이 유엔에 각각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비정상적인 사태는 祖國統一을 실현하는 길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난국으로 된다. 南北韓이 유엔에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엔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28)</sup>

이와 같이 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北韓 스스로가 美國이나 日本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對西方 접근이 필요했고 中國과 蘇聯에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世界平和體制의 구축을 강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北韓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이 유엔가입을하기로 政策을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는 中國의 테도 변화에 의한 것이다. 1990년 이해 中國은 韓國에 상주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교역 관계를 확대시켜 왔음은 물론 정식 국교 수립도 가까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韓國이 單獨加入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北韓측에 알린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서 中國만이 유일하게 기권을 한다는 것인데, 유엔의

28) 「노동신문」 1991년 5월 29일.

역할이 강화되고 특히 天安門사태 이후 국제적인 고립을 겪어 온 中國으로서는 또 하나의 고립된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中國이 기권해도 韓國의 單獨加入은 실현될 것이고 中國의 국제적 이미지만 해칠 것이라는 판단이 中國지도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러한 배경을 鄭鐘旭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北韓의 유엔가입 신청 결정은 한마디로 中國의 영향력이 가장 큰 압력요인으로 작용해서 내려진 것이다. 蘇聯은 이미 韓國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中國의 태도가 유일한 관건이었다. 中國의 공식태도는 南北韓 同時加入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北韓이 주장해 온 단일의식 가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南韓의 單獨加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李鵬의 平壤방문이 시작되기 하루전인 5월 2일에도 黨 對外連絡部長 朱 良은 南北韓의 同時加入을 역설하면서 南韓의 單獨加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결국 李鵬은 다음 날 平壤에서 金日成과 회담하고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할 것을 역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南韓만의 單獨加入이 실현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北韓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미 유엔의 여론이 韓國의 單獨加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中國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설명했을 것이다.<sup>29)</sup>

中國은 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자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錢其琛 外交部長은 연설을 통해 “朝鮮 政府에서 취한 유엔가입 결정 조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광범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심원한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sup>30)</sup>

29) 鄭鐘旭, 1991, 앞의 글, pp. 26-27.

30) 「노동신문」 1991년 6월 18일.

## V. 北韓의 對蘇, 對中國政策의 변화 方向

이상과 같은 北韓의 蘇聯 및 中國에 대한 政策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보면 먼저 北韓은 급변하는 국제상황, 특히 中蘇의 改革·開放과 中蘇和解라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신축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둘째로 中國 및 蘇聯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내지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 對話와 統一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中蘇가 보여주었던 지원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 1. 情勢 변화에 대한 伸縮 對應

中國과 蘇聯의 開放政策은 北韓정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적극적인 對外開放 없이는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北韓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美國, 日本 등 서방선진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과거와 같은 中國과 蘇聯에 對한 의존은 이제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1)</sup>

北韓은 그동안 蘇聯이 처해 있는 혼란상태, 예를 들면 민족분규,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탄광노동자들의 파업, 군인들의 불만 등에 대한 내용을 노동신문이나 平壤放送, 中央放送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北韓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北韓 당국은 蘇聯의 改革이 결국은 실패하고 蘇聯 국민들은 경제파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北韓 주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과 그에 따른 共產黨 일당 지배의 종식이 北韓 체제변화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하였다.<sup>32)</sup>

동시에 北韓은 蘇聯에서의 혼란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장차 北韓에서의 改革과 開放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31) Jong-Chun Baek,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 Its Implication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 No. 2(Summer 1991), p. 194.

32) 金德重, "蘇聯改革政策의 成敗가 南北韓에 미치는 영향," 「統一問題研究」 제 3 권 2 호 (1991년 여름), p. 93.

혼란에 대비해서 일종의 면역이 되도록 蘇聯사태를 ‘他山之石’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北韓의 改革이 결국에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北韓의 정권유지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3)</sup>

中蘇和解는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中蘇紛爭 기간에 北韓은 中國과 蘇聯사이에서 등거리외교 혹은 줄다리기 외교를 통하여 양자를 견제하거나 활용하여 왔다. 中國과 蘇聯도 모든 對外政策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北韓의 줄다리기외교에 의해 경쟁적으로 北韓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中蘇和解는 北韓 對外政策의 원칙面에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첫째는 中國과 蘇聯 간의 정치적 타협의 원리인 ‘平和共存’원리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를 韓半島에 적용하는 것은 北韓의 ‘하나의 朝鮮’政策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둘째는 ‘北方三角關係’의 완전한 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中蘇會談직후 고르바초프의 北韓 방문취소이다. 蘇聯의 對北韓 군사지원이라든가 하는 문제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北韓을 중심으로 형식적이거나 구축되어 왔던 ‘북방삼각관계’가 특히 中蘇會談 이후로부터 본래의 사회주의 ‘형제국가’라는 원칙을 떠나 점차로 와해되거나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된다. 고르바초프의 平壤行이 취소된 것은 물론 직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문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고르바초프가 金日成을 설득할 희망이 없었다고 하는 절망에서 ‘가는 것’ 보다는 ‘안 가는 것’이 蘇聯의 위신면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중지된 것이라고 평가된다.<sup>35)</sup>

한편 李崇熙 교수는 北韓의 등거리외교라는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北韓이 中蘇 사이의 對北韓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33) 金德重, 1991, 위의 글, p. 88.

34) 李基鐸, 1991, 앞의 책, pp. 147-148.

35) 李基鐸, 1991, 위의 책, pp. 163-164.

등거리외교의 신화는 北韓이 이웃 사회주의 상대국들 간의 분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많은 北韓의 對外政策에 관한 글들이 北韓이 中蘇의 불화관계를 北韓에게 유리하게 잘 이용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北韓이 中蘇 간의 적대관계를 이용하여 蘇聯에 대하여 中國을 이용하고, 中國에 대하여 蘇聯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결론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한편으로 北韓은 이웃 강대국들에 비하여 약하며, 권력정치 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北韓은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나, 北韓이 이들에게 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北韓이 비록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중요성으로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중요성이 두 보호자들로부터 조심스럽게 조건이 붙어 있는 도움을 어렵게 받아 내는 것 이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北韓이 오히려 中蘇 사이의 對北韓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sup>36)</sup>

종합적으로 볼 때 北韓은 종래와 같은 中國과 蘇聯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독자적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 北韓이 느끼는 일종의 위협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北韓은 蘇聯 및 中國과 맺은 1961년의 同盟條約에 의해 한·미 동맹체제에 대응하여 왔으나 최근 日本의 방위력 증강과 함께 일종의 韓·美·日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되었다고 비난하였다.

美國이 아시아·太平洋 전략에서 주요하게 의거하는 공간은 다름 아닌 美國·日本·南韓 사이의 3각 군사동맹이다. 美日安保條約을 축으로 하고 거기에 韓美 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사실상 美國·日本·韓國 사이의 3角 군사동맹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美國이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것은 바로 대륙과 직접 잇닿아 있는 南韓에서 北韓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고 3각 군사동

36) 李崇熙, “고르바초프의 新思考政策과 蘇·北韓관계,” 「北韓研究」 제1권 제1호(1990년 겨울), pp. 43-44.

맹을 발동하여 美·日·韓의 연합된 역량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공격함으로써 저들의 침략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北韓의 주장은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의 철수를 통해 핵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韓半島를 非核地帶化하겠다는 장기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 2. 親蘇, 親中國政策 지속

### 1) 蘇聯과의 관계

北韓은 앞으로 蘇聯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우호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政策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蘇聯 聯邦의 붕괴로 말미암아 여러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 무역대금의 硬化支拂과 석유 수입대금의 국제가격 지불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지만 蘇聯의 경제적 지원을 가능한 많이 얻어야 한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北韓이 蘇聯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對內的 요인은 그것이 北韓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北韓 정권의 최대과제는 권력승계 문제이다.

金日成의 입장에서 對蘇政策의 기본은 蘇聯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체제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1984년 金日成의 모스크바 방문 이래의 北韓과 蘇聯간의 관계강화와 그 성격을 분석하여 보면, 北韓의 對蘇政策의 핵심은 ‘金日成 이후’의 北韓체제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된다. 즉 北韓의 1984년 이래의 對蘇政策은 ‘金日成 以後’(Post-Kim)에 대처하기 위한 政策이며, 蘇聯의 對北韓政策도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金日成 以後’의 체제적인 혼란을 정치적으로 요리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對北韓 접근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蘇聯은 南韓에 대한 강력한 平和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또한 전개할 것임은 틀림없다. 蘇聯이 對中國협상에 ‘3大 障礙’의 해결을 통한 지역적인 긴장완화를 전개하고 있으면서, 역으로 北韓에 대하여는

37) 「노동신문」 1989년 5월 6일,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3각 군사동맹”

꾸준히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蘇聯의 對南 韓 접근 政策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sup>38)</sup>

둘째로 北韓은 현재까지 소련식 무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聯邦 자체가 붕괴하고 있고 군수공장이 민수품생산공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방예산의 대폭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군사장비 부품생산과 공급이 감소되면, 北韓의 무기체제는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사태에 도달한다. 부품 교환없이 장비를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北韓 군사력의 급속한 약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韓國과의 군비제한 또는 축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로 蘇聯 聯邦의 붕괴 또한 향후 北韓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蘇聯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北韓과 蘇聯사이의 무역은 매년 체결되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協定'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蘇聯의 聯邦政府가 이미 상당 부분에서 통제력을 잃었고 北韓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여러 공화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蘇聯이 주었던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北韓은 경쟁적인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거래와 경화로의 결제를 요구하는 각 공화국들과의 교역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北韓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이다.<sup>39)</sup> 한편 KBS가 1991년 4월 17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蘇聯은 1991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원유대금의 경화지불조치를 北韓, 쿠바, 베트남에 대해 1년간 유예키로 했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그 진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2) 中國과의 관계

향후 中國의 北韓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中國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추구에 따라 中國의 현대화 노력에 유익한 韓國과의 경제교류를 중시, 사실상 두개의 코리아政策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과거 中國의 對韓 半島 이해관계에 있어서 中國이 강조하였던 혁명과 이념적 가치의 중요성이 약

38) 李基鏞, 1991, 앞의 책, pp. 172-173.

39) 金德重, 「蘇聯 쿠데타에 대한 北韓의 반응」(情勢分析 91-02)(서울: 世宗研究所, 1991), p. 5.

화됨에 따라 기존의 中·北韓간의 관계도 점차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 등 실질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中蘇和解로 蘇聯과의 對北韓 전략적 경쟁 필요성 감소, 韓蘇修交, 日·北韓간 수교 교섭 진행 및 美·北韓간 접촉 증대 추세 등과 같은 韓半島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北京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中國은 韓國과의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 등 관계 진전을 이룩한 바, 앞으로 中國은 '두개의 코리아政策' 논리를 수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統一原則과 對韓半島政策을 분리시키는 政策을 채택, 韓中관계를 격상시킬 가능성이 크다.<sup>40)</sup>

中國과 北韓간의 경제적 관계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蘇聯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蘇聯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中國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中國 또한 對外지원능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현재 北韓과의 교역시에 국제가격의 절반정도로 결제해 주는 우호가격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증대를 피할 경우 北韓으로서는 큰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中國의 경제사정도 현실적으로 자구책에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北韓이 中國으로부터 장기적인 경제적 보탬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sup>41)</sup>

北韓은 韓中간의 정식 국교가 수립된다고 해도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1990년 9월의 韓蘇修交時에 보였던 것과 같은 극렬한 비난을 中國에 대해서 퍼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北韓은 中國으로 하여금 韓國과의 국교수립을 최대한 늦추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日本 및 美國과의 수교와 연계시켜 줄 것을 中國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北韓은 中國의 開放 모델, 즉 政治改革을 유보한 經濟改革 방식을 받아들여 점진적인 對外開放을 시도하고 그에 관한 中國의 경험을 많이 배울 것으로 보인다. 平壤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가 美國과 日本 등의 서방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中國의 선례를 많이 배울 것으로 보이지만, 北韓이 中國型 開放모델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北韓은 金日成 세습체제라는 정치적 특성과 南北 對峙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中國과는

40) 外交安保研究院, 「1990년대 國際情勢 전망」(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pp. 48--49.

41) 「내외통신」 1991년 9월 13일, p. D5.

다른 改革 및 開放政策을 채택할 수 밖에 없지만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中國의 예를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北韓은 최고지도자 상호방문 등을 통한 친선강화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1991년 10월 초로 예정된 金日成의 中國방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3. 對南協商에서 中蘇의 支持 획득

최근까지 中國과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 및 統一方案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北韓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나 핵사찰 수용문제 등을 둘러싸고 北韓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유엔가입 이후 韓半島에서의 平和體制구축, 軍縮, 韓半島 非核地帶化, 새로운 統一方案제시 등 南北韓 간의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우 北韓으로서는 기존의 우방인 蘇聯과 中國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北韓이 韓國을 무력 침공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蘇聯이나 中國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즉 “中國과 蘇聯은 北韓이 대남도발하는 것을 지지하려고 할 것”<sup>42)</sup>이며 “대남도발을 감행하고자 하는 경우 北韓이 中蘇의 지원을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sup>43)</sup>

따라서 北韓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中國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상유지를 피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탈군사로 근본적 선회를 함으로써 中蘇의 탈냉전노선으로 인한 압박을 완화시키는 政策노선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침체된 北韓경제에 대한 군비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核安全協定 가입문제등 군사적 이유로 美日과의 관계정상화, 특히 日本과의 경제협력이 장애를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준다.<sup>44)</sup>

42) Baek, 1991, 앞의 글, p.187.

43) Arnold Horelick L., “U. S.-Soviet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Seoul : Dankook University Press, 1991) p. 30.

44) 金富起, “中蘇의 對韓半島 政策 變化,” 「21世紀 對內外 환경변화의 전망」(행사자료 91-3-36)(서울 : 21세기위원회, 1991), p. 128.

현재 北韓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北韓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國際原子力機構에 의한 핵사찰 수용문제이다. 韓半島에서의 핵무기문제에 관하여 北韓은 美國과의 직접 교섭추진, 美國의 北韓에 대한 핵위협제거,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은 國際原子力機構의 핵사찰을 거부해 온 이유로서 核安全協定 체결문제가 國際原子力機構와 北韓사이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北韓과 美國사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상 의무를 실행해야 할 당사국이면서 南韓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美國이 非核國家인 우리나라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제거할 데 대한 담보를 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美國이 우리에게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 담보를 주는 조건 하에서만 핵담보 協定에 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5)</sup>

北韓 자신도 인정하였듯이 駐韓美軍의 핵무기 철수와 北韓의 핵사찰 수용은 이론상 관계가 없다. 前者가 北韓과 美國의 문제인데 반하여 後者は 北韓과 國際原子力機構의 문제이고, 北韓이 1985년에 이미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상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양자를 연계시키는 것은 駐韓美軍 문제 특히 핵무기철수 주장을 통한 대남선전공세의 일환이다. 北韓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美國은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南韓에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美國도 인정하고 있으며 南韓 국회에서도 南韓에 1,120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소리가 울려나왔다.<sup>46)</sup>
- 2)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핵사찰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가 존재하는 南韓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게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핵사찰을 강요하려는 美國의 행동이다.<sup>47)</sup>

45) 「노동신문」 1990년 11월 17일.

46) 「노동신문」 1991년 4월 30일,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는 절박한 과제”

47) 「노동신문」 1991년 7월 2일, “핵사찰을 하려면 南과 北에 대하여 같이 하여야 한다.”

한편 1991년 9월 27일 부시 大統領이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일방적 철수를 발표하였고 그 가운데 韓半島에 배치된 핵무기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도되자, 北韓은 더 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렇지만 北韓이 핵사찰을 즉시 무조건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지난 6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國際原子力機構 理事會에서 北韓은 핵사찰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래 북한은 그 가능성은 항상 보이면서 수락 자체는 지연시키고, 대신 교섭과정에서 美國과의 접촉 수준 격상을 요구하거나,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주장할 것이다. 非核地帶化 방안에 대해서 蘇聯은 北韓을 지지하고 있고 中國도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주재 北韓대사관에서 개최된 朝蘇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관한 조약체결 30주년 기념연회에서 로가초프 외무차관은 “蘇聯은 韓半島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韓半島를 非核地帶化로 만들고 聯邦共和國을 창설하는데 대한 北韓의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48)</sup>

北韓은 中蘇和解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中國과 蘇聯이 공히 北韓의 統一方案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江澤民 總書記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발표된 中蘇 공동코뮤니케가 朝鮮의 平和統一 위업을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즉 “中蘇 두 나라는 朝鮮半島에서의 정세완화가 東北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쌍방은 최근 韓半島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환영하며 南北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sup>49)</sup>라고 하여 北韓의 입장에 대한 中蘇 양국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48) 「노동신문」 1991년 7월 8일.

49) 「노동신문」 1991년 5월 21일.

## VI. 結論 및 對應 方案

### 1. 結 論

北韓 對外政策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988년 이래 韓半島 주변정세의 변화는 北韓으로 하여금 유엔가입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北韓 外交의 신축성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日本 및 美國과의 관계개선, 핵사찰 수용, 南北韓 軍縮, 韓半島 非核地帶化, 總理會談, 南北頂上會談 개최 등은 물론 南北韓간 直交易이나 직접투자, 민간인 교류, 관광지 開放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北韓은 蘇聯과 中國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開放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北韓은 이미 주민들에 대해 開放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改革·開放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蘇聯의 改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상당 정도 주지시켜 왔다.

둘째, 北韓은 韓蘇修交에 대해 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濟州會談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으나, 그것은 短期的인 반응이었고 기본적으로는 蘇聯과의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韓蘇修交 이후 北韓이 蘇聯과 멀어지고 中國과는 가까워졌다는 통설과는 달리, 北韓이 蘇聯을 멀리했다는 증거는 적어도 北韓 刊行物을 통해서만 찾기 어렵다. 北韓은 蘇聯에서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실보도를 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관망하였고 발틱 3국의 독립을 신속하게 공식 인정을 하는 등 蘇聯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北韓의 政策은 향후 蘇聯 聯邦政府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공화국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러시아공화국 등 각 공화국들과도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수립하고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관계는 냉전시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바탕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핵사찰문제에 관하여 美國과 보조를 같이 하는 蘇聯의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北韓-蘇聯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中國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일 것이다. 양국 사이에는 초청·방문의교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며 北韓의 對外開放, 日本 및 美國과의

수교, 韓半島 統一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中國은 北韓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다. 향후 韓中修交가 이루어지는 경우 北韓의 불만표시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며 韓中修交로 인해 北韓-中國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中國은 北韓과 日本의 수교교섭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北韓과 美國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중개역을 맡고 있다.

## 2. 對應 方案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했다고 해서 平和와 統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北韓이 對南 투쟁의 장소를 韓半島에서부터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北韓이 1991년 5월 27일의 外交部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유엔에서 하나의 의석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면, 유엔가입은 오히려 南北韓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991년 10월 2일의 유엔總會 연설을 통해 北韓 연형묵 總理가 유엔군 사령부 해체,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駐韓美軍·핵무기 철수 등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듯이 유엔에서의 南北韓 和解와 협조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韓國은 北韓에 대한 몇가지 ‘지레장치’(leverage)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蘇聯과 中國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 政府는 中國과 蘇聯이 北韓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統一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北韓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美國이나 日本보다는 蘇聯과 中國이며 이러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경우 韓國은 北韓을 움직일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를 잃게 되는 셈이다. 中蘇가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北韓을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것과는 관련된다. 국제사회에서 北韓을 고립시키는 것은 南北韓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北韓의 유엔가입 결정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 특히 中國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나 統一問題 논의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이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중재자로 하여 南北韓 간의 접촉에 있어서 접촉 창구를 다변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中國이나 蘇聯에서 南北韓학자들을 동시에 초청하여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학술회의 등을 개최한다면, 그것은 南北韓 대표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고 南北韓 간의 대화와 관계발전에 中國과 蘇聯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관심과 영향력을 南北韓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韓蘇·韓中 관계 강화가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國의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둘째, 北韓에 대한 蘇聯의 對北韓 군사장비 부품공급이 줄어들고 中國의 對北韓 군사지원이 감소되는 경우, 南北韓의 군사력 균형은 바뀔 것이고 北韓은 韓國과의 군비축소會談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걸프전에서 보여 준 현대 첨단장비의 우수성은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과의 군비 경쟁에서 北韓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다. 첨단장비를 구입할 외화가 부족한 北韓으로서 는 여러가지 곤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강제적인 핵사찰을 거부하기 어려운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은 軍裝備 현대화 계획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사력에 있어서 北韓을 월등히 앞서고 北韓이 군비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南北韓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美國의 레이건 行政府가 1980年代 初에 蘇聯과의 군비경쟁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美蘇경쟁에서 蘇聯의 후퇴는 蘇聯이 美國과의 군비경쟁에서 패배하였음을 자인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예가 韓半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北韓과의 대화 및 南北韓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현 조건에서 또한가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一方的으로 대폭적인 군비 삭감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군축이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一方的 蘇聯軍 철수에서 시작되었듯이, 상호신뢰가 부족한 南北韓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韓國이 일방적인 군사력 감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韓國은 그러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北韓측에 사전통보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1991년 9월 27일 盧泰愚 大統領이 유엔總會 연설을 통해 제시한 南北韓 軍縮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韓國은 北韓과 美國, 그리고 北韓과 日本과의 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게 하는 政策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韓國과 中國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7.7宣言에서도 표명한 바가 있는 北韓에 대한 외교적 지원이다. 이것은 南北韓이 향후 국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金德重, “蘇聯 改革政策의 成敗가 南北韓에 미치는 영향”, 「統一問題研究」 제 3 권 2 호(1991년 여름).
- 金德重, 「蘇聯 쿠데타에 대한 北韓의 반응」(情勢分析 91-02)(서울: 世宗研究所, 1991).
- 金富起,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변화”, 「21世紀 對內外 環境 變化의 展望」(행사 자료 91-3-36)(서울: 21世紀委員會, 1991).
- 內外通信, “北韓의 최근 對中蘇관계 변화 分析”, 「內外通信(週間版)」 제761호 (1991. 9. 13).
- 世宗研究所, 「韓國의 對外關係: 1990년의 움직임」(서울: 世宗研究所, 1990).
- 外交安保研究院, 「1990년대 國際情勢 전망」(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 李基鐸,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서울: 삼영출판사, 1991).
- 李崇熙, “고르바초프의 新思考政策과 蘇·北韓관계”, 「北韓研究」 제 1 권 제 1 호 (1990년 가을).
- 鄭鐘旭, “東北亞 질서와 中日의 역할”, 「전환기의 東北亞 질서와 南北韓 關係」 (세미나시리즈 91-1)(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 統一院, 「北韓概要 '91」(서울: 統一院, 1990).
- 平和研究院, 「東北亞와 南北韓」(연례보고서 1988)(서울: 平和研究院, 1989).
- Baek, Jong-Chun,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Its Implication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 No. 2(Summer 1991).
- Blacker, Coit D., “The USSR and Asia in 1989: Recasting Relationships,” The Asian Survey, Vol. XXX, No. 1(January 1990).
- Horelick, Arnold L., “U. S.-Soviet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Implications for Korea”, in Yu-Nam Kim, ed., Korea,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1991).

## ◆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社會變化 趨勢研究

—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李炳澈(蔚山大)

### 〈 要 約 文 〉

南北 對峙라는 엄연한 현실과 그러한 필연적 귀결로 결과되는 남북의 첨예한 대립에서 生存키 위해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 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급하고 긴요한 당면과제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폐쇄화된 北韓社會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北韓사회 의 變化상을 분석,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北韓사회 의 變化趨勢를 추론, 예측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공식인문매체에서 발간, 유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중 北韓 사회 의 實상과 變化추세와 관련성을 지닌 잡지들을 대상으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北韓사회변화추세에 관해 인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客觀的이고 普遍타당하며 적실성있는 연구 結果를 도출하여 北韓사회 의 實상에 대한 단순한 現象규명만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적실성있는 未來豫測을 추론해 내리는데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다음 北韓잡지를 통한 北韓사회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예측키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 설정과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사회학, 정치학분야에서 발전된 기존의 社會變化의 概念을 理論的 차원에서 정리, 체계화하고 이의 公산권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헤치고, 이의 해소방안을 모색해 北韓 사회변화 趨勢分析의 분석준거를 설정의 이론적 기초로 하며 둘째, 관련분야의 문헌분석을 통해 北韓 사회변화추세에 대한 現象적 규명과 미래예측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 문헌분석이 內容분석을 위한 이론적 준거설정 의 기초를 제공토록 하고 셋째, 양적 분석에선 北韓잡지를 대상으로 內容분석기법을 사용해 北韓사회변화의 實상과 추세를 실증적으로 예측하고 넷째, 이상의 질적(문헌분석), 양적(내용분석) 분석 結果에 따라 北韓사회 의 최종적인 變化추세에 대한 現象규명과 미래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진

단결과와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토록 한다.

우선 사회변화의 개념과 이론적 변천에 있어 18-19세기에 나타났던 古典主義的 사회변화의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 시대의 사회변화이론을 대표했던 콩트와 스펜서는 진보를 향해가는 진화의 원리가 내적으로 작동해 모든 문명이 일정불변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았다. 즉, 단순하게 짜여져 있던 전통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산업화된 近代社會로 발전해 가는 것을 사회변화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콩트나 스펜서의 사회변화적 시각은 맑스의 비판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맑스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사회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고 이런 思考를 바탕으로 해 물질적 상황을 중심으로 벌여 온 긴 역사적 변동을 일정한 축에 따라 단계화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부르조아사회도 생산양식의 변동을 거쳐온 긴 역사적 발전과정의 산물이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고 인류역사는 所有階級과 勞動階級사이의 葛藤關係 즉 특정생산양식에 따라 나타난 계급투쟁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맑스의 사회변화에 대한 주요관심은 근대자본주의의 등장과 力動性 그리고 필연적인 滅亡이다. 맑스의 이러한 시각이 기존의 고전주의자들과의 사회변화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하였으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국가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을 서구 자본주의와 다른 각도에서 투영케 한 이유가 된다. 맑스의 이러한 시각이 지니는 한계를 보전키 위해 뒤르켐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맑스처럼 계급투쟁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업의 증대와 그에 따르는 집합적인 도덕적 양심의 점진적 進化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베버도 맑스의 사적 유물론이 발견적 원리로서의 통찰력은 갖고 있으나 사회현상이란 그와 같이 하나의 자만 가지고는 켤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는 사회변화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가치나 이념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어찌 되었건 뒤르켐이나 베버는 사회변화에 대한 고전적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이를 수정하려 한 맑스의 시각에 일응 동조하면서도 계급 갈등과 이에 기인한 계급투쟁에 의해 결과되는 급격한 혁명의 變革論理에 異見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기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이론들이 서구를 무대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동 과정이 다른 사회의 변동과정과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 못지 않게 차이점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사회변화를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남, 북이라는 두 實體가 다르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변화의 실체를 그저 서구적 시각에 입각해 규명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선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사회변화상의 모형설정의 추구도 시도되어지고 있다.

다음,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質的 分析을 고찰토록 한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대격변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혁의 분위기는 분명 북한에 대해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지속적이고 강고하게 체제를 폐쇄화하여 이러한 외부적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는 체제수호적 차원에서의 자구책을 강구하려 하겠지만 그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보다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개방으로 나갈 때 야기될 수 있는 계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개방의 당위성과 체제수호의 현실성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특성을 보다 광의적으로 이해키 위해 북한의 사회변화를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우선 政治的 變化를 살펴보면 북한은 기존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는 보수적 세력과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북한체제내부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改革勢力과 소련을 위시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북한 개방화 노력 등으로 표현되는 외생적 變化力間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정치적 변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혁의 길로 들어선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제 개혁의 문을 두드린 이상 변화의 물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經濟的 變化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어찌되었건 긍정적 방향으로 개방화될 것이나 그것이 북한 지도부 스스로의 자성에 의한 변화가 아닌 내·외적 압력에 의해 기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치적 변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결국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도 득이 되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社會的 變化를 보면 체제기득권세력의 의지와는 달리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먼저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에 유학한 學生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물결이 북한사

회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나 재미교포를 통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제한된 개방화물결이 유입됨으로써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體制守護勢力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 사상무장교육을 강화하는 일방 관제적인 시각에서 의도되고 계산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역기능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이라해도 제반 사회변화의 붓물은 이미 터졌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현시점에서 제반사회변화가 정치, 경제적 분야보다 다소 느린 템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변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변화의 발전양태는 체제수호세력의 보수적 반동노력과 개방화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일반인민들의 현실적 요구의 역학관계에 의해 도출되어질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도 결정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다음 內容分析을 통한 北韓社會變化를 살펴 보기로 한다.

접근방법은 문헌분석과 같이 세가지 차원 즉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분석틀 내에서 분석하고 평가토록 했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1990년은 이곳에 포함하여 분석함)에 있어 政治的 理念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등은 시대에 따라 용어상의 변화는 외면적으로 보여 지지만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대적 적응을 위한 언어적 유의에 불과하며 정치적 속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흐르면서) 정치적 구호나 선동적 용어가 초기에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완화되어지는 변화의 일맥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선 용어의 선택이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변화적응의 한 징후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60년대에는 김일성우상화, 강고한 사회주의 건설, 반미반제투쟁, 자위적 국방력 강화, 민족해방, 대남비방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70년대에는 주체사상(60년대 후반에도 나옴), 미제 및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항거, 반제공동전선, 통일,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정립, 조선혁명, 3대 기술혁명 등이 주류를 이루며 80년대엔 주체사상, 주체혁명 혈통 계승, 김정일 우상화,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우리식 사회주의 등이 주류를 이루어 년대별로 커다란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변화는 상당히 담보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經濟的 變化에 대해 밝혀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어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를 앞지르고 있다. 우선 연대가 지날수록 각 잡지에서 경제관련기사가 정치관련기사와의 대비비율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색 일변도의 선동적 잡지에서 現實性을 고려하는 잡지로 바뀌고 있고 정치적 이상정보다는 경제적 현실성에 점차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비교적 1961년부터 실행된 7개년계획의 완료(계획기간보다 3년 연장하여 70년에 종료)와 이후 실행된 6개년 계획(1971-76)의 어느 정도의 성공에 힘입은 탓인지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적 자립과 성공,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독전등이 많이 게재되나 80년대에 들어선 경제적 독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북한경제의 70년대 후반부터의 낙후상과 연계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 주택,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원자재, 動力問題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 싶다. 셋째, 60년대엔 천리마식 농촌경제창출, 농업협동화운동실현, 남조선식민지예속경제, 사회주의식 농촌경리제도, 경제선동강화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70년대엔 기술혁명,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강화, 인민경제의 주체화,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주체공업, 해외경제침략, 지방공업의 발전,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80년대에 들어선 우리식의 경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주체 농법, 경제선동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경제적 변화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社會的 變化에 대해 밝혀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어 사회적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80년대 들어와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로 사회변화의 대상이 되는 영역마다 주체니 우리식이니 사회주의적…… 운운하는 용어를 대부분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결된 관계로 커다란 변화상은 60년대와 70년대에선 발견키 어렵다. 의상이나 주택등의 변화도 크지 못하고 스포츠, 소설류, 방송 및 기타 문화적 영역의 변화도 70년대까진 별반 진전이 없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의상이나 주택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스포츠 등의 문화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80년대 들어선 의상, 주택등에 있어 현격한 변화의 바람을 읽을 수 있으며 스포츠등의 문화영역이 나뉠대로 변화를 맞고 있고 전에 비해 다양한 문화행사나 일반 교양적인 내용이 실려 기존의 정치학습의 분위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거의 미진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선 잡지인들 예외가 없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므로 판에 박힌듯 찍혀 나와서 그랬겠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정치변화의 템포는 너무나 늦었다. 경제변화는 그래도 정치변화보다 나왔으며 사회변화는 특히 80년대 들어(90년대 가까워지면서) 나뉠대로의 변화양상이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文獻分析에선 북한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연적일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內容分析에선 그정도까지의 변화는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너무 낙관해선 안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북한의 일말의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북한사회는 다른 여타 공산권국가들과 동일하게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이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폐쇄적 성향에 변화의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해빙의 분위기는 한반도에선 아직 시기상조인 감이 있고 따라서 구태의연한 냉전의 틀도 아직 종식시키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대치라는 엄연한 현실과 그러한 필연적 귀결로 결과되는 남북의 첨예한 대립에서 생존키 위해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 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급하고 긴요한 당면과제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폐쇄화된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분석,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추세를 추론, 예측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공식언론 매체에서 발간, 유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중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추세와 관련성을 지닌 잡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북한사회변화추세에 관해 인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적실성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한 단순한 현상규명만이 아닌 보다 객관

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적실성있는 미래예측을 추론해 내려는데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북한잡지를 통한 북한사회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예측키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설정과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사회학, 정치학분야에서 발전된 기존해 있는 사회변화의 개념(사회변동의 개념으로 이해 하기도 함)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 체계화하고 이의 공산권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헤치고, 이의 해소방안 등을 강구하여 북한사회변화 추세분석의 분석준거를 설정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토록 한다.

둘째, 관련분야의 문헌분석을 통해 북한사회변화추세에 대한 현상적 규명과 미래예측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문헌분석이 내용분석을 위한 이론적 준거설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실증적 검증을 위한 가설적 전제(혹은 가설)를 설정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리, 체계화한다.

셋째, 양적 분석에선 북한잡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사회변화의 실상과 추세를 실증적으로 예측하고, 앞의 문헌분석에서 설정한 가설적 전제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한다.

넷째, 이상의 질적(문헌분석), 양적분석(내용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사회의 최종적인 변화추세에 대한 현상규명과 미래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진단결과와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토록 한다.

## II. 社會變化的 概念과 理論的 變遷

### 1. 古典主義的 視角에서 본 社會變化的 概念과 理論

사회변화의 속도가 아주 느렸던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모든 사물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태양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할 현 사회를 찬양했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로 넘어가는 한세기 동안 인류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일련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가 이전의 2000년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온 사회조직의 형태를 해체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변모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은 이미 서구의 계몽주의가 싹트던 시절부터 존재했었다.<sup>2)</sup> 계몽주의자들은 진보, 이성, 과학, 개인적 자유를 숭상했으며 그랬기에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 삶의 조건을 혁파하고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계몽주의

1)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양대혁명을 들 수 있는데 첫번째 혁명은 정치적 변동의 상징인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고 두번째 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19세기 이후 기타 유럽과 미국에 확산된 산업혁명이다.

안토니 기든스(저), 박영신, 한상진(역), 「비판사회학 : 쟁점과 문제점」 (서울 : 현상과 인식, 1983), 제1장 참고.

2) R.A. Nisbet, The Sociological Tradition (London : Heineman, 1967) 참고.

I.M. 짜이틀린(저), 이경용·김동노(역), 「사회학이론의 발달사 : 사회사상의 변증법적 과정」 (서울 : 한울, 1985) 참고.

자들은 변혁을 통해 오늘의 삶보다는 내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사회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전통과 전통적 사회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낭만적인 사상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전통적 요소를 근대성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보기 보단 안정된 가치와 사회적 통합을 낳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안전에 대한 해결책을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의 회복에서 찾고자 하였다.<sup>3)</sup>

이러한 양면적 시각은 사회변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발상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들이 사회변화의 실상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적 시각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의 차이는 그만큼 사회변화에 대한 임의적 개념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일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sup>4)</sup>

따라서 여기에선 논의의 간단명료화를 위해 사회변화의 개념정의와 이론변천에 대표적인 족적을 남긴 콩트(A. Comte : 1778-1857)와 스펜서(H. Spencer : 1820-1903)의 견해를 간단히 고찰토록 한다.<sup>5)</sup>

3) 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나누고 이익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퇴니스가 이 부류에 속한다.

4) E. Etzioni - Halery, Social Change : The Advent and Maturation of Modern Society (London : RKP, 1981), p.1.

5) 콩트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 Comte, Positive Philosophy (London :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mpany) 참고.

A. Comte, "General Appendix : Early Essays," A. Etzioni, E. Etzioni, Halery (eds.), Social Change (N.Y. : Basic Books, 1973) 참고.

공트는 사회적 현상의 학문적 규명을 위해 사회학을 사회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정학과 사회변동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동학으로 분류하고 사회변동의 문제를 진화론의 영향아래 사회발전의 단계론으로 설명해 나갔다.<sup>6)</sup>

따라서 그는 사회현상의 흐름을 질서와 진보(정학과 동학)라는 두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으면서도 진보는 질서의 발전이라고 볼만큼 사회의 변동을 순탄한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스펜서는 인간사회의 진보를 토대로 해 사회의 진화를 논의한 공트와는 달리 생물학적 조직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진화를 성장, 분화, 재통합으로 파악했다. 스펜서에 따르면 사회의 진화는 유기체의 진화처럼 우선 크기가 증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 증가로 분화, 곧 부분의 독특성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의 분화는 기능의 전문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들은 독특하고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화된 구조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화된 구조들은 점차로 서로 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공트나 스펜서의 변동론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사회학에서는 진보를 향해 가는 진화의 원리가 내적으로 작동해 모든 문명이 일정불변의 단

---

스펜서의 이론에 대해선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H. Spencer, *Sociology* (N.Y. : D. Appleton, 1892) 참고.

- 6) 공트는 인류의 문명이 똑같은 발전단계를 밟아 진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첫번째단계는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것과 이어서 생각하는 신학적 단계로 보고 두번째 단계는 앞의 경험을 초월한 환상이 지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모든 현상을 추상적 이념을 통해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실증적 단계로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험적 관찰을 통해 확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곧 단순하게 짜여져 있던 전통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산업화된 근대사회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변동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 2. 古典主義에 대한 批判視角：共產圈에의 適用限界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콩트나 스펜서의 사회변동적 시각은 맑스(K. Marx)의 비판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1917년의 러시아혁명을 통해 레닌(V. Lenin)이 맑스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여 정치적 실현을 시킴으로써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에 있어서 사회변동에 대한 기존의 사고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케 된다.

맑스의 사회변동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의 구조적 짜임새를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의 틀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발전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sup>7)</sup>

전자는 사회를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의 모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생산을 의미)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회의 기본토대(생산양식 또는 하부구조라 함)를 이룬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양식은 기술, 노동, 생산수단에 의해 짜여진 생산력과 다시 생산력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관계(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이 맺는 관계, 곧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의 신념, 가치, 의식, 법

7) 칼 맑스(저), 김호균(역·편저), "정치경제학 비판서문", 「경제학 노트」, (서울 : 이론과 실천, 1988), 11면.

를, 정치제도 등 모든 비경제적 요인은 상부구조로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조가 결정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맑스의 사회구성체이론이다. 즉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고 사회의 경제구조가 실제적 기초인 바, 이 기초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한 이 기초에 대응하여 일정한 사회의식의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가 볼 때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곧 사회구성체가 변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체가 변한다는 것은 곧 생산양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다른 고전적 사회학자들과 달리 생산관계를 중시하고 생산관계에서의 대립을 강조한다. 그는 원시공산사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유계급과 실제로 생산하고 소유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두 계급사이의 투쟁에 의해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그의 사회구성체론에 따르면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양자관계가 항상 조화로운 것은 아니며 또한 생산력은 일정하게 발달하지만 생산관계는 때때로 정체하게 된다고 보고 이때 정체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달을 억제하게 되며 이러한 양자사이의 모순이 혁명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사회변혁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논거로는 이러한 모순이 계급구조와 계급갈등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변동의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동인 혁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질서, 곧 새로운 생산양식과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새로운 상부구조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맑스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 맑스는 물질적 상황을 중심으로 벌여 온 긴 역사적 변동을 일정한 축에 따라 단계화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부르조아 사회도 생산양식의 변동을 거쳐온 긴 역사적 발전과정의 산물이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고 인류역사는 소유계급과 노동계급사이의 갈등관계 곧 특정생산양식에 따라 나타난 계급투쟁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도 이러한 계급적 갈등에 의해 종국에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맑스의 사회변화에 대한 주요관심은 근대자본주의의 등장과 역동성 그리고 필연적인 멸망이다. 물론 맑스도 공트처럼 진화의 보편적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사회가 결국 동일한 진화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맑스는 이러한 틀 속에서 사회변화의 동인을 다원적인 요인중에서 계급갈등(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되는 갈등)의 일원적 가치로만 국한시켰다. 그리고 변화의 템포나 양태도 엄밀한 입장에서 보자면 진화적 입장이 아니라 계급투쟁과 같은 급격한 혁명적 양태(물론 이점은 후계자인 레닌 등에 의해 더욱 개발됨)를 택하고 있다. 맑스의 시각이 이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기존의 고전주의자들의 사회변화적 시각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이 서구자본주의진영의 시각과 같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8)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 대해선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K. Marx, *Capital* (Harmondsworth : Penguin, 1976) 참고.

K. Marx & F. Engels, "The Class Struggle", A. Etzioni, E. Etzioni - Halery (eds.), *op. cit.*, 참고.

### 3. 社會變化理論의 收斂化 : 問題點의 解消的 接近

맑스의 이러한 시각이 지니는 한계를 보전키 위해 뒤르캥(E. Durkheim)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맑스처럼 계급투쟁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업의 증대와 그에 따르는 집합적인 도덕적 양심의 점진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sup>9)</sup> 그는 리바이어던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사회질서가 가능하다는 홉스식의 접근, 각 개인의 이익추구행위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회질서가 성립된다고 보는 공리주의적 접근, 계급투쟁이 사회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회주의적 접근 모두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로서의 연대(Solidarity)에 의해 최소한도의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질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따라서 그에 있어서 사회란 이념, 관념, 도덕, 종교의 공동체를 의미한다.<sup>11)</sup> 뒤르캥은 사회성원들을 강력한 공통된 집단의식으로<sup>12)</sup> 지배하는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개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계약의 평등에

9) I.M. 짜이틀린, 「전계서」, 338면.

10)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 Simpson 옮김) (N.Y. : The Free Press, 1933) 참고.

E. Durkheim, Suicide (J. A. Spanlding, G. Simpson 옮김) (London : RKP, 1963), p. 302.

11) 테르본은 이를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라고 부른다.

G. Therbon, Science Class and Society (London : Verso, 1976), pp. 415-424.

12) 집합적 가치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현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 신념, 표상의 총체로서 그 말속에는 그것들의 도덕적 성격, 가치의식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 일지사, 1978), 232면.

대한 생각이 지배하는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의 변화과정을 사회변화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과정이 지나치게 급격할 경우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규제하는 사회통합의 끈(규범에 바탕을 둔 결속)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이를 그는 두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아노미(Anomie)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주의의 팽배상태이다. 이것이 그가 파악하는 사회 변화과정에서 겪게되는 근대사회의 기본적 문제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 변화상의 문제를 해결키위해 분업에 기반한 유기적 연대의 올바른 회복을 통해 개개인이 경쟁적인 이기심으로만 타락치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사회질서를 통합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면서<sup>13)</sup> 실제적으로 개인이 아노미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해결책은 개인에게 충분한 제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 큰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작업집단의 회복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14)</sup>

13) 그는 이러한 도덕적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엘, 코저(저), 신영하·박영규(역), 「사회사상사」 (서울 : 일지사, 1978), 210면.

토크빌(A. de Tocqueville)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기독교가 사회나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개인의 정신의 자유를 위한 가장 좋은 보장책이라고 믿었다.

A.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N.Y. : Rondon House, 1954) 참고.

14)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op. cit., pp.4-5.

E. Durkheim,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London : RKP, 1957) 참고.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도덕적 위기 : 에밀 뒤르캥의 현대 사회인식”,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 일지사, 1978) 참고.

인문홍, “에밀 뒤르캥의 정치사회학연구”, 「현상과 인식」, 6권 1호 (1982)참고.

이와같은 맥락에서 맑스의 한계를 극복키 위한 시도를 한 사회학자가 베버(Max Weber)이다. 그는 맑스의 사적 유물론이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의 일면성에도 불구하고 발견적 원리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sup>15)</sup> 사회현상이란 하나의 자만 가지고는 짚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그는 사회변화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가치나 이념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보았다.<sup>17)</sup>

그래서 베버는 맑스와 같이 자본축적이 자본주의발달에 필요조건인 점은 인정하나 맑스와는 달리 자본축적을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본가의 자기부정과 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의 산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부정과 일의 헌신을 낳게하는 원인을 개신교의 윤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캘빈의 예정설에 의하면 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징표를 부여했는데 바로 그것이 곧 현재적인 성공 또는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이질만이 내세에서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징표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캘빈주의는 금욕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베버는 자본주의는 곧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적이고

15) I. M. 짜이틀린, 「전개서」, 168면.

G. Gurvitch, W. E. Moore, Twentieth - Century Sociology (N. Y. : Philosophical Library Inc., 1945), p. 596.

16) 막스 베버(저), 박종선(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 세계, 1987), 248면.

17) 물론 베버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은 것은 아니다.

M. Weber, General Economic History (F. H. Knight 옮김) (N. Y. : Collier Books, 1961) 참고.

물질적인 효율성(효과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합리성이<sup>18)</sup>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고 있다.

어찌되었건 뒤르캥이나 베버나 모두 사회변화에 대한 고전적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이를 수정하려 한 맑스의 시각에 일응 동조를 하면서도 계급갈등의 모순과 이에 기인된 계급투쟁에 의해 결과되는 급격한 혁명의 변혁논리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의 요인을 경제적 결정론만으로 이해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맑스의 한계를 도덕적 규범성의 회복과 공유를 통해 또는 사회변화를 낳게하는 동인으로써의 가치와 이념의 재조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해결책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콩트, 스펜서, 맑스, 뒤르캥, 베버 등이 제시한 사회변화의 개념과 이론들은 변동현상을 탐구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특정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영원불변한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볼 때 이러한 모든 사상과 이론의 무대가 서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의 변동과정이 다른 사회의 변동과정과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 못지않게 차이점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겪어온 우리 특유의 변동상황과 이에 따른 경험은 서양이론에 의해 그대로 복재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사회변화를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남, 북이라는 보다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나 시각, 견해도 상이하

18) M. Weber, Economy and Society III (G. Roth, C. Wittich 역음) (N.Y. : Bedminster press, 1968), pp.956-1005.

리라 믿는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사회변화의 여러 이론들의 내용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부가해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경험을 첨가하여 북한사회변화의 실재를 규명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실정에 부합되는 사회현상의 모형설정을 위해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이다.

### Ⅲ. 北韓社會變化에 대한 質的 分析

#### : 文獻分析을 中心으로

세상은 분명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화하리라고 기대도 하지 못했던 동서진영간의 이념적 냉전구조의 견고한 틀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미 공산진영의 종주국인 소련이 정치적으로 금과옥조와 같이 섬기고 받들던 맑스 레닌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나섰고 경제적으로 계획통제경제체계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권역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던 동구의 많은 나라들도 종주국인 소련과 거의 같은 변혁의 궤도를 달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동구권에서 가장 우등생이며 선두주자로 손꼽혔던 동독도 독일 통일로 인해 이미 서독에 흡수통합되어 버렸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도 변혁의 거센 진통을 겪으면서 변모의 길로 들어섰으며, 알바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강한 교조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국가들 역시 조심스럽게 변혁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시아, 중미권에선 중국이 천안문사태라는 일시적인 반동적이고 복고주의적인 변혁에의 제동을 걸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소 동구권보단 변혁의 템포가 느리긴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개혁에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교조적 입장을 강력히 고수해 온 쿠바나 베트남 역시 내·외적인 압력에 의해 변혁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혁의 분위기는 분명 북한에 대해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지속적이고 강고하게 체제를 폐쇄화하여 이러한 외부적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 하는 체제수

호적 차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하겠지만 그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보다 북한의 변화(나아가선 예기치 못한 급변상황으로 까지 내몰 수 있는 최악의 변화까지)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부도 냉철한 계산에 입각해 감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개방화로 나갈 때 야기될 수 있는 계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개방의 당위성과 체제수호의 현실성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에선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로인해 야기되는 변화의 양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다각적 변화추세분석을 관련문헌분석을 통해 고찰할 것이며 접근방식은 북한사회변화를 광의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사회변화를 북한의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별례적으로 접근(Idiographic Approach)하여 북한사회변화의 실체를 보다 깊이 있게 추론해 보고자 한다.

### 1. 政治的 變化趨勢分析

1948년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적 정치체제가 김일성의 주도하에 생성된 이래 근자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남조선 해방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나온 것이 남조선 혁명을 통해(물론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고)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여야 된다는 남조선혁명론이고 이것은 김일성이 자신의 체제를 지탱키 위한 체제안보논리로 늘상사용해 온 것이다. 또한 이 논리를 통해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아들인 김정일에게 세습하려 하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남조선혁명론을 변형, 개발시킨 영구혁명론이란 새로운 개념을 자작하여 아직 남조선이 해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의 당위성을 당과 인민에게 주지시키려 하는 것이다.<sup>19)</sup> 전도의 보가처럼 김일성의 체제유지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이 논리는 최근에 들어 —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변혁시기 — 중대한 도전에 직면케 되었다. 이유는 동구권의 변혁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sup>20)</sup> 체제내적인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나 김일성은 아직까지 분명한 변혁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순 없다. 왜냐하면 변혁의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 — 예를 들면 유엔가입, 핵사찰수용, 남북고위급회담재개, 일북수교교섭, 미북수교모색 등 — 을 고려해 볼 때 북한체제내외의 마지못한 변화의

19) 이동복(李東馥), “북한급변은 전민족의 재앙”, 「월간조선」(서울 : 조선일보사, 1991. 8. 134면.

20) 김일성은 1991년 7월 24일 일조(日朝) 우호축진의원연맹방문단과의 회견 중 “북한은 사회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세계민주화의 흐름에 발맞춰 현실적인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며 …… 일련의 동구민주화를 인정한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변혁을 시인하고 있다.

한국일보사, “김일성, 동구민주화인정”, 「한국일보」, 1991. 7. 25. 1면.

동아일보사, “김일성, 동구민주화인정”, 「동아일보」, 1991. 7. 25. 1면.

21) 북한은 당·정간부 등 위로부터의 의도된 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에서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가 합쳐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변화로는 통제정책의 완화, 지도층의 서방제품 선호, 지도층부조리성행, 대남인식변화등이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주민의식의 변화, 자유개방풍조유입, 사회일탈행위만연, 유학생들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일보사, “북한 : 위 아래 동시 개혁압력”, 「한국일보」, 1991. 7. 30. 14면.

압력에 밀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식의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제스처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논거를 차례차례 살펴보면 우선 유엔가입도 국제적 압력과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공 등으로 더 이상 반대하거나 미룰 명분이나 능력이 전무한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핵사찰역시 국제압력에 밀려 사찰수용쪽으로 선회는 했으나 사찰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 얼마나 적실성있는 결실을 거두려는지 북의 진의를 파악키 어려운 여러가지 정황적 논리가 산재되어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역시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주도가 되어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별로 변함이 없이 남측의 입장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도 북한의 체제 내적 불만의 근원인경제문제 등을 해결키 위한 필요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안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 왔던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침용땅굴을 파왔다던가 최근의 유엔가입을 하면서 철저하게 한국을 따돌렸다. 물론 현재 북한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하나의 조선의 논리를 버리고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공존과 실질적인 교류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점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sup>22)</sup>

22)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된 제3차 북일수교교섭에서 북한측은 처음으로 “관할권이 한반도 절반에 미친다”고 표현했으며 올해의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지난 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중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시켜 나가는 방향을 토의해 볼 수 있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기존논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된 대남 선전 및 전략과 관련된 일련의 여러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이중적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지도층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흐름과 주변열강의 압력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진부한 시대착오적 산물인 주체사상을 92년 김일성이 80회생일을 맞는 때에 맞춰 김일성주의로 명칭을 바꾸어 권위의 재부각과 복고적 회귀를 꾀하려는 움직임이나<sup>22</sup> 중국을 핵으로 하여 북한, 쿠바, 베트남들의 교조적 공산주의국가들이 공산주의체제 몰락추세에 대항하고 사회주의체제의 고립을 막기위해 신사회주의연맹의 결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시사와 중국은 북한이 독일식으로 한국에 의해 흡수통합되는 것을 막기위해 김일성부자의 권력과 세습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원조도 증액시키고 있다는 보도들은<sup>23</sup> 북한의 정치변화에 대한 걸림돌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정치변화의 향방은 기존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는 보수적 세력과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북한체제내부의 모순 — 경제난 해소, 권력구조의 다원화, 이양화 등 — 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

---

다”고 밝혀 89년 우리측이 제의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중 남북연합과 비슷한 형태의 과도체제로 수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한국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일보사, “북한 4-5년대 급속개방소지”, 「한국일보」, 1991. 7. 10. 5면.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유엔가입상정안제출도 법적으로도 2분화된 체제를 세계만방에 공포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동아일보사, “2국체제 법적분단 공식화”, 「동아일보」, 1991. 8. 8. 3면.

23) 세계일보사, “김일성주의 공식화가가능성”, 「세계일보」, 1991. 8. 7. 4면.

24) 한국일보사, “신사회주의연맹추진”, 「한국일보」, 1991. 8. 8. 4면.

혁세력과 소련을 위시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북한 개방화 노력 등으로 표현되는 외생적 변화력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정치체제가 변혁의 길로 들어선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제 개혁의 문을 두드린 이상 그 변화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체제도 결국 변화될 수 밖에 없으며 그 변화의 물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 2. 經濟的 變化趨勢分析

북한은 1958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완수하고 1957년부터 실행된 5개년계획과 1961년부터 실행된 7개년계획(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 종료)을 통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 실행된 6개년계획(1971-1976년)기간에도 이러한 공업발전의 템포는 여타공산진영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발전지향적인 것이었다.<sup>25)</sup> 농업분야도 1964년의 농업문제체제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이후 이를 실현키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성장내용을 보면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진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25) 동아일보사, "개방으로 내몰린 북한경제력", 「신동아」(서울 : 동아일보사, 1991. 8), 382-383면.

26) 「전개서」, 383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둔화 및 불안정화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심각한 정도의 부진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1978년부터 착수된 제 2차 7개년계획과 1987년부터 실시된 제 3차 7개년 계획의 조정, 부진은 이러한 국면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경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각도와 시각에서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지배적인 견해는 북한의 경제가 주체경제를 강조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원시적인 자급자족경제체제입장을 추종해 옴으로써 경제구조와 과정이 경직화되어 더 이상 발전을 위한 모멘트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거기 에다 과중한 군사비부담, 대남사업비용과 막대한 체제유지비용의 지출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켰으며 70년대 초반의 오일쇼크 이후 제기되었어야 할 무역의 확대, 에너지 및 자원절약기술의 도입,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 등의 대응이 저지기 지체되었으며 정치적 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민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체현상으로 한국과의 경제역량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sup>27)</sup>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정도의 식량난과<sup>28)</sup>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노후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자본 및 외환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27)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 1988년」 참고할 것.

28) 북한의 전체주민이 굶지않고 웬만큼 먹고살려면 쌀과 잡곡 모두 합쳐 연간 약 580만톤~600만톤의 곡물이 필요로 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500만톤으로 최소한 100만톤~15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아일보사, “북한급변대책” 「신동아」 (서울 : 동아일보사, 1991. 8.), 123면.

동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1990년의 북한의 성장률은 -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말았다.<sup>29)</sup>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을 해결키 위한 궁여지책으로 85년부터 해외자본유치와 외화획득, 경제개발을 위해 합영법인란 활로를 터 놓았으나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특이성과 경제구조를 둘러싼 환경적 특수성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와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일본 조총련계열에 의한 합작투자정도로 자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제난의 악화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일북수교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엔 한국에게도 직접 교류를 제의하는 강한 메시지를 간접경로를 통해 시사하고 있고 최근엔 두만강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sup>30)</sup>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변화의 성격과 양태를 볼 때 경제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수해 온 주체경제에 입각한 폐쇄적이며 원시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입장을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개방화의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빙분위기를 십분활용해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과중한 군사비지출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맥락에서 대남사업 비용이나 체제유지비용도 상당량 감액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관료(테크노크라트)들의 자율성을 보다 더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경제계획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며 교역량의 증대, 에너지 및 자원절약

29) 이동복, 「전계서」, 133면.

30) 동아일보사, “북한경제추구적극참여”, 「동아일보」, 1991. 8. 9. 1면.

기술의 도입, 첨단산업기술육성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선 교조적인 주체사상을 수정해서라도 인민들의 정치발전에 대한 기대를 미력하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 볼 수 있으며 인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키 위해 의, 식, 주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제분야와 관련된 개방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고수를 위해 내면적으로 보다 세련화된 통치방식을 개발해 인민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개칭한다거나 신사회주의 동맹결성움직임, 중국의 대북한 원조중액, 김일성의 개혁은 인정하나 사회주의의 기치는 고수하겠다는 발언, 근본적인 대남전략의 변화의 불가시성,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적 차원에서 핵무기개발들을 위시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포기과 같은 명료한 평화체제인정 등의 가시적 표명의 부재, 모호성시사 및 거부 등은 이러한 심증을 더욱 강하게 제기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긍정적 방향으로 개방화될 것이나 그것이 북한지도부 스스로의 자성에 의한 변화가 아닌 내·외적 압력에 의해 기인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정치적 변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결국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도 득이되는 변화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3. 社會的 變化趨勢分析

북한은 스포츠, 종교, 문학, 예술, 방송 등에서 전에 보지 못한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를 보면(물론 북한에선 순수한 의미의 스포츠라기 보단 정치성이 강하게 반영된 의미에서의 스포츠를 뜻함) 북한은 한국과 단일축구팀, 탁구팀을 결성하였으며<sup>31)</sup> 바로셀로나 하계올림픽에 단일팀구성문제추진 등의 남북체육교류 뿐 아니라 미국, 서구 등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도 아마추어 차원의 스포츠방문, 초청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체육교류를 통한 스포츠외교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첫째, 지난 4월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의 청소년축구에서의 단일팀이라는 명분을 유엔가입에서 단일의석과 연계시키려는 전략, 둘째, 소련, 동구의 민주화로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들의 전력이 약화되어 각종 국제대회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어 대내외 선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셋째, 주민들의 국방체육강화와 스포츠를 통한 외교목적의 저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다음, 종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종교를 인정치 않으려는 입장에서 일보 후퇴하여 종교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

31) 물론 이러한 단일팀구성은 유엔가입에 있어 북한이 주장한 단일의석으로의 남북한가입이란 목적을 쟁취키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구사되어진 전략적 복안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보는 논거는 남북이 2정부체제로 올해 안보리의 권고를 통해 동시가입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 현 시점에 선 한국과의 단일팀구성에 대해 종전에 보여주던 열의와는 달리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도 그들의 속셈의 일면을 읽어볼 수 있다.

32) 한국일보사, “미수교국과 스포츠외교강화”, 『한국일보』, 1991. 8. 6. 14면.

다. 사실상 1945년 이후 1970년까지 종교를 철저히 탄압하였으며 종교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했고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종교를 북한정권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8년에 들어서면서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88년 개신교 봉수교회와 카톨릭 장충성당을 건립하고 89년 1월 15일 불교 성도절(成道節) 기념법회 등을 시행해 나름대로 종교에 있어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감지케 한다.<sup>33)</sup>

그러나 이것도 세태의 변화압력에 밀려 취해진 일련의 변화조치들이지 북한정권의 정책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학에 있어서도 인민성, 당성, 비판적 사실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기준에 의거해 서술되고 있으며 문학사에 있어서 시대구분도 왕조사나 문학사조에 따르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역사발전단계에 조응한 사회구성체의 이행에 따르고 있다.<sup>34)</sup> 그리고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선 인민성과 애국주의의 강조,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 대한 조선문학사의 소극적 평가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치이념에 침식된 북한문학은 이념적 당위에 의해 자료의 객관성이 위협받게될 처지에 까지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우상화에 까지 문학이 공여하는 상태로까지 발전되었다.<sup>35)</sup> 다른 사회분야보다도 문학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33) 윤이훈(尹以勳), "종교가 북한사회에 끼치는 영향", 「한국종교연구」, 제 3권 (서울 : 집문당, 1991), 「세계일보」, 1991. 7. 21. 11면 재인용.

34)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인식」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1), 한국일보사, "북한문학사 종합연구 첫결실", 「한국일보」, 1991. 7. 30. 15면 재인용.

35) 한국일보사, "김부자이름 반드시 고딕표기", 「한국일보」, 1991. 6. 25. 16면.

대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별로 압력을 받지 않고있고 또한 체제유지세력들의 변혁의지가 미흡한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예술분야는 영화나 연극 그리고 미술, 가요, 가곡(음악) 등 모두가 김일성, 김정일 가계 우상화, 혁명의 당위성선전, 체제선전, 한국 및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대한 악의에 찬 모함선전 등을 주요주제로 하여 제작되고 있고 최근까지 그러한 흐름에는 별반 변화의 조짐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고 개방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짐으로 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혁명논리와 김일성 가계 우상화선전으로 정형화된 북한예술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김일성보다 사랑을 주제로 한 유행가를 더 좋아하고<sup>36)</sup> 영화도 사랑사랑 내사랑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종의 팝그룹인 보천보전자악단까지 등장하고 록음악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sup>37)</sup> 이런점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이 부문에도 변화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면 한국이 북한측에 방송교류를 82년에 제의한 바 있으나 10여년이 지니도록 북한측의 무성의로 이렇다할 성과를 못 얻고 있다. 북한은 동독이 붕괴된 이유중 하나가 동서독과의 방송교류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방송의 전면교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sup>38)</sup>

36) 사랑을 주제로 한 휘파람이란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한다.

세계일보, 1991. 8. 7. 10면 참고.

37) 한국일보사, “청소년 서구풍조만연 대책부심”, 「한국일보」, 1991. 7. 23. 14면.

38) 동아일보사, “말만 앞선 남북 방송교류”, 「동아일보」, 1991. 7. 16. 5면.

이상의 사회적 변화상을 종합해 볼 때 체제기득권세력의 의지와는 달리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에 유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물결이 북한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나 재미교포들을 통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제한된 개방화물결이 유입됨으로써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제수호세력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 사상무장교육 등을 강화하는 일방 관제적인 시각에서 의도되고 계산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역기능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외부사조의 유입과 이를 막아보려는 북한정권의 자충수에 의해 부랑아속출, 록음악바람, 주패놀이, 성범죄 등으로 표현되는 청소년의 사회일탈적 비행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sup>39)</sup> 또한 이러한 젊은이들의 개방화물결이 기성세대에 까지 파급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이라해도 제반사회변화의 붓물은 이미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에서 보아 제반사회변화가 정치, 경제적 분야보다 다소 느린 템포도 변화를 맞이 하고 있지만 변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변화의 발전양태는 체제수호세력의 보수적 반동노력과 개방화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일반인민들의 현실적 요구의 역학관계에 의해 도출되어질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도 결정되리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39) 한국일보사, “청소년 서구풍조만연 대책부심”, 「한국일보」, 1991. 7. 23. 14면.

#### IV. 北韓社會變化에 대한 量的 分析

##### :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1. 內容分析의 意義 및 節次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한편으로는 사실연구, 다른면으로는 질문에 있어 그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의 문서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연구대상에 대한 필요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이며 계량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하는 양적 분석기법이라고 하겠다.<sup>40)</sup>

종래에는 내용분석을 주로 대중통신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내용분석을 커뮤니케이션의 표면적인 내용(Manifest Content)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 또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sup>41)</sup> 그러나 내용분석의 적용범위(Scope)는 지금에와서는 대단히 확대되어 있어 인간의 심리상태, 가치, 사회 및 정치 집단의 목적 또는 형태의 파악 등 여러가지의 연구목적을 위해 모든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찰 및 측정기법이며, 특히 비자극관찰 및 측정방법(Unobtrusive Measures)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42)</sup>

40) J.L. Simon, Basic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 (N.Y. : Random House, 1969), p.278.

41) C. Sellitz, et, als.,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335.

42) E. J. Webb, et, als., Unobtrusive Measures : Nonreactiv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Chicago : Rand McNally & Company, 1966), Ch.3.

내용분석의 연구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연구문제와 그의 밑받침이 되는 이론 그리고 가설을 형성하고 표본을 추출하여<sup>43)</sup> 표출된 자료에 따른 카테고리들<sup>44)</sup> 선정한다.

다음으로 수집 또는 표출된 문서들을 읽고 코딩(Coding)을 하며<sup>45)</sup> 적절한 내용을 마련된 자료표(data sheet)에 기호 또는 숫자 등으로 이기(移記)한다. 코딩이 된 다음에는 각기 분류된 카테고리에 소속되는 제 항목을 척도화하며<sup>46)</sup> 각 항목에 따른 빈도라든가 또는 가중치를 밝혀낸다. 끝으로 발표

43) R.C. North, et. als., Content Analysis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p.38.

44) 연구대상을 실제로 연구가능한 규모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그 분석단위의 모집단을 규정한 다음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 분석단위들을 표출한다. 분석단위는 연구목적이나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대개 단어(words), 주제 또는 명제(theme), 인물(character), 항목(items), 시·공간의 측정(space-and-time measure) 등 다섯가지로 나눈다.

B. Berelson, "Content Analysi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 (ed), G. Lindzey (Cambridge, MA. : Addison Wesley, 1954), pp.508-509.

F.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 of Research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548.

45) 카테고리화는 수집된 자료를 선정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A. Zigenhagen, et als., Techniques for Polotical Analysis : A Laboratory Manual (Boston, Mass. : Holbrook press, 1972), p.77.

R.C. North, et als., op. cit., p.41.

46) 수집된 자료의 카테고리화와 만들어진 각 카테고리에 배분된 여러속성에 대한 척도화를 위한 코딩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중요시된다.

코딩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주로 코딩을 하는 코더(coder)들과 연구문제의 기본방향 또는 개념에 따른 그들의 훈련 및 코딩과 상당한 관계를 갖는다. 신뢰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각 연구가 갖는 자료의 형태 또는

된 사항을 기준이론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sup>47)</sup>

## 2. 內容分析의 研究分析 體系設定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이므로 정보의 유통이 자유진영만큼 자유롭지 못하

코더들의 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만일 두 사람의 코더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뢰도를 검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다음과 같다.

$$R = \frac{2(C_{1,2})}{C_1 + C_2}$$

이것은 두 코더들의 코딩이 일치하는 카테고리배분(Category assignments)의 수를 그 두 코더들인 경우는 평가자간 상관(inter-judge correlation) 또는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등을 산출하면 된다.<sup>1)</sup>

i) 평가자간 상관관계의 계산방식은  $r = \frac{\sum d^2 i_1}{K}$  이고, 복합신뢰도의 계산방식은  $\text{Composite} = \frac{N[\text{av. inter-judge correlation}]}{1 + [(N-1)\text{av. inter-judge correlation}]}$  이다.

R.C. North, *op. cit.*, pp.62-63.

47) 계량화의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분류된 카테고리에 대한 계량화단위의 정밀성에 따라 세가지로 그 계량화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sup>

첫째, 명목척도에 해당하는 계량화이다. 이것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 명목척도와 같이 각 카테고리별로 일정수를 부여하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내의 속성의 수를 단순히 헤아려 봄으로써 계량화 하는 것이다. 둘째, 서열척도에 해당하는 계량화이다.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대상에 대하여 일정순위(상, 중, 하)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양적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등급의 차를 나타내는 계량화를 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의 순위결정을 위해 몇사람의 코더 또는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평가척도에 해당하는 계량화로서 대상의 특수성을 몇가지로 평가하여 그 평가된 각 항에 따라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몇명의 코더나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i) F. Kelinger, *op. cit.*, pp.550-551.

다. 그런 연유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변화를 파악키 위한 원초적 자료나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왜곡되어져 있다. 그래서 북한사회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정보매체(당이 이러한 모든 매체를 장악하고 있음)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도 역시 그 현실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면과는 거리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장차의 변화양태까지를 예측해야 되는 일을 자료의 제한과 선별적이란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남북대치라는 현상에서 야기되는 절박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키 위한 방법이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내용분석방법이다. 이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위적인 정권의 정책방향이나 변화의 실마리를 파악키 위해, 그들이 유포하는 공식적인 정보 문건들을 수집하여 이를 발신자의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의미(Semantic Value)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애매한 인상적 판단보다는 수적 용어(Numerical Terms)를 사용하여 객관화함으로써 간명하게 그들이 제시하려는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 현재화(manifestation) 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왜곡화되거나 잠재화된 권위적 정부의 숨겨진 정책의도나 변화의 실마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이에 근거한 대응정책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는 데서 이 방법의 방법론적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48) 홀스티(Ole R. Holsti)는 “내용분석이란 메시지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진의를 추론하는 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le R. Hols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ading, Mass : Addison Wesley, 1969)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선 내용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광의적인 사회변화(정치변화, 경제변화, 협의적인 사회변화)가 담긴 정기간행물(잡지류를 중심)을 개괄적으로 분석토록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1990년은 여기에 포함)로 크게 3대분하여 잡지류를 수집했다. 1940년대와 50년대가 생략된 이유는 이 시대에 발간된 잡지류를 구하기 어려웠고(40-50여년간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자연소멸과 한국에서의 구독의 난점 등으로) 40, 50년대가 거의 6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유추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40, 50년대를 60, 70, 80년대와 일원적으로 수평비교하는데 있어 측정수준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잡지로는 천리마(조선문예출판사 간, 64년 2월호부터 90년 12월호까지), 근로자(근로자사간, 62년부터 91년까지), 조선사회민주당(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간, 83년부터 91년까지), 철학연구(사회과학출판사 간, 87년부터 91년까지), 경제연구(사회과학출판사 간, 87년부터 91년까지)가 주종을 이루었고 분석분야에 따라 보완적으로 분석이 된 잡지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표 1〉 분석대상이 된 잡지

잡 지 명	출 판 사	비 고
조 선 월간 조선 자료	조 선 화 보 사 조선문제연구소	64년부터 91년까지
력 사 과 학 조 선 어 문 조 선 문 학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문 예 출 판 사	
조 선 녀 성 조 선 영 화 조 선 예 술 청 년 문 학 아 동 문 학	근로단체출판사 문 예 출 판 사 문 예 출 판 사 문 예 출 판 사 문 예 출 판 사	

둘째, 1980년대의 잡지류가 60년대나 70년대보다 많기 때문에 분석할 잡지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취사선택이 불가피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방만한 양의 80년대의 잡지를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또한 60년대와 70년대와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연구분야와 연구대상의 한계에 근거해 시기를 대별하고 성격상 대표성을 지니는 것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의 자료와 수평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Weight Loading)하였다. 예를들면 페이지의 양들을 고려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자료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절대빈도(Absolute Frequency)가 아닌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로서 자료들을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단순한 양적 차이에 의한 대표성의 왜곡을 최소화시켰다.

셋째, 이렇게 수집된 잡지들을 하나씩 문헌의 내용분석(목차분석과 내용의 심층분석)을 하면서 번번히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들을 정밀측정변수(Coding Unit)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이러한 정밀측정변수들 중 유사한 집군끼리 분류해(Clustering) 유사집군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는데 이것이 기본측정변수(Measuring Unit)가 된다. 이렇게 측정변수를 만드는 이유는 각 변수에 수치를 부여하여 계량적(정책)변수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측정변수들을 확보(Variable Identification)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논리적 확인방법(Logical Identification Process)과 실증적 확인방법(Empirical Identification Process)이 사용된다.<sup>4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기본측정변수와 정밀측정변수는 다음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 측정변수가 담긴 내용분석 준거들에 따라 북한잡지의 내용별 계량분석이 시도된다.

49) 최평길, “공산권 연구방법론 : 북한을 중심으로 - 내용별계량분석”, 『정경연구』, 152호 (1977. 10.), 310-325면. 그리고 153호(1977. 11.), 348-357에서 재인용.

Luther W. Sauder, “A Content Analysis of President Kennedy's First Six press Conference”, Journalism Quarterly, vol. 42, No.1, (Winter, 1965), p.114.

〈표 2〉 기본측정변수와 정밀측정변수

기본 측정 변수	정밀 측정 변수
1.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1. 김일성 우상화 2. 김정일 우상화 3. 대를 이어 혁명계승
2. 사회주의 건설	1.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2. 사회주의 혁명의 전통계승 및 발전 3.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쟁취 4.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5. 당강령의 철저준수
3. 주체 사상	1. 주체사상구현(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 2.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확립 3. 자주적 우리식 사회주의 4. 자주 혁명주체 강화 5.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 붉은기 쟁취운동(기술혁명) 6. 자위적 국방건설
4. 민족 해방	1. 민족 해방 2. 조선 혁명 3.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고려연방제)
5. 반미, 반제 투쟁 강화	1. 반미투쟁 2. 일제에 대한 항거 3. 반제공동전선
6. 대남비방	1. 남조선의 미제식민지 예속화 2. 남조선 군사파쇼독재 3. 남조선의 핍박화 4. 반유신운동 5. 남조선 부르주아 인도주의의 반동성

기본 측정 변수	정밀 측정 변수
7. 인민경제의 주체화	1.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2. 우리식의 경제(주체경제) 3. 천리마운동(주체적,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운동) 부쟁화
8. 사회주의 경제발전	1. 사회주의 경제건설 2. 사회주의 농촌경제 창출 3.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4. 동력공업, 지방공업의 발전 5.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 강화
9. 남조선 경제비방	1. 남조선 식민지 예속경제 2. 남조선 경제의 핍박상
10. 미·일경제침탈	1. 미·일의 해외경제침탈 2. 현 제국주의의 신 식민주의적 약탈 3. 미·일의 경제의 군사화
11. 주민생활상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12. 청소년 생활상	1. 보수성 2. 진보성
13. 교 육	1. 사회주의 교육 2. 주체 교육 3. 남조선 교육 비방
14. 사회범죄	1. 강, 절도 2. 살인 3. 기타범죄

기본 측정 변수	정밀 측정 변수
15. 예술	1. 주체예술 2. 문학(소설) 3. 음악 4. 미술 5. 영화 6. 체육(스포츠)
16. 여가생활	1. 스포츠관람 2. 영화, 연극관람 3. 여행 4. 기타 여가활동
17. 교통 / 건축	1. 교통 2. 건축
18. 종교 / 문화	1. 종교 2. 문화

### 3. 一般分析

이곳에서는 앞에 이미 설정된 연구분석체계에 따라 수집된 잡지들을 내용별 분석체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여기에서 결과되어 도출된 최종적 자료들을 가지고 북한 사회변화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실증적 검증을 하도록 한다. 우선 기본측정변수를 심층화시킨 정밀측정변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政治的 變化趨勢分析

### (1) 金日成·金正日 偶像化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김일성 우상화는 60년대(100%), 70년대(57.3%), 80년대(39.8%) 공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기할 점은 70년대 이후 김정일의 우상화가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표 3 참고>. 그리고 권력세습을 암시하는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해가자는 내용도 70년대 이후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70년대 이후 김정일에 의한 권력세습이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社會主義 建設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전사회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가 시대와 차이없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60년대 : 35.1%, 70년대 : 37.5%, 80년대 : 48.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정권은 지속적으로 체제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60년대 : 12.3%, 70년대 : 18.8%, 80년대 : 22.2%)<표 4 참고>.

### (3) 主體思想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60년대 이후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으로 상징화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는 움직임은 60년대엔 53.5%, 70년대엔 62.7%, 80년대엔 54.9%로 80년대에 약간 수그러든 감이 있으나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확립(60년대 : 17.8%, 70년대 : 10.7%, 80년대 : 94.9%), 자주적 우리식 사회주의(60년대 : 8.9%, 70년대 : 4.5%, 80년대 : 11.5%)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표 5 참고>.

#### (4) 民族解放

민족해방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60년대(69.6%)에 많이 사용되던 민족해방이란 용어는 70년대(30.6%), 80년대(15.3%)로 접어들면서 점차로 사용되지 않고 대신 조선혁명이나 남조선혁명이니 하는 용어나 조국의 자주, 평화적 통일 또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북한도 통일에 대한 강도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고>.

#### (5) 反美, 反帝 鬭爭強化

반미, 반제 투쟁강화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반미투쟁의 경우 60년대(72%)와 70년대(74.4%)에 극에 달했다가 80년대(56%) 들어서면서 약간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도 70년대(58.1%)에 가장 강하게 대두되나 80년대(14%)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참고>. 이것은 80년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 (6) 對南秘方

대남비방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남조선을 군사파쇼독재가 지배하는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60년대(36.2%), 70년대(38.2%), 80년대

(37.7%) 공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조선의 핍박상을 날조하여 공개하는 것이나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예속화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시대의 흐름과는 별차이 없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표 8 참고>.

이상의 내용분석결과를 집약하면 첫째, 시대에 차이없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는 지속되고 있고 70년대 이후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북한체제를 유지, 강화키 위해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셋째, 주체사상이 60년대 이후 온 북한사회를 다 뒤덮고 있으며 특히 80년대에 와서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이론단계를 넘어 실생활화하고 있고 넷째, 통일은 지속적으로 북한정권의 관심사(겉과 속은 다르지만)인 듯하고 다섯째, 반미, 반제투쟁은 80년대 들어 다소 약화되었으나(국제정세영향) 아직은 강하며 여섯째, 대남비방은 6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2) 經濟的 變化趨勢分析

### (1) 人民經濟의 主體化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주체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60년대이래 계속 강화되고 있고 우리식의 경제(주체경제) 역시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천리마라고 이름 붙여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운동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약화되고 있다. 용어의 사용에 따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표 9 참고>.

## (2) 社會主義 經濟發展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60년대(36.4%), 70년대(22.1%), 80년대(30%)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경제의 창출이나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등도 시대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점은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강화와 같은 개방적 요소가 70년대(16.8%)와 80년대(14.6%)에 들어서 다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국제정세와 북한내부변화에 기인한 미흡한 변화의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참고>.

## (3) 南朝鮮 經濟 秘方

남조선경제비방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남조선 식민지예속경제라는 비방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강화되는 반면(60년대 : 33.3%, 70년대 : 42.2%, 80년대 : 56.4%) 남조선 경제의 핍박상을 비방하는 내용은 시대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60년대 : 66.6%, 70년대 : 57.8%, 80년대 : 43.6%).

이것은 한국의 발전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시기로 사실을 왜곡 유포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1 참고>.

## (4) 美·日 經濟 侵奪

미·일 경제침탈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미·일을 신제국주의로 보고 이들이 신식민지를 약탈한다고 보는 내용이 어느 시대나 강조되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미·일의 해외경제침탈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12 참고>.

이상의 내용분석결과를 집약하면 첫째, 주체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60년대 이래 계속강화되고 주체경제(우리식의 경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60년대 이후 계속 강화되고 있고 사회주의 농촌경제의 창출이나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70년대 이후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강화와 같은 개방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조선경비비방에 있어서 남조선식민지예속경제라는 비방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고 있으나 남조선경제핍박상을 비방하는 내용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넷째, 미·일 경제침탈은 어느 시대나 강조되고 있다.

### 3) 社會的 變化趨勢 分析

#### (1) 住民生活相

주민생활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식량문제와 같은 식생활분야에 대한 언급이 시대와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60년대 : 47.1%, 70년대 : 4.8%, 80년대 : 41.1%) 의생활부문이나 주택건설 및 주택개량과 관련을 갖고 있는 주생활부문도 시대구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표 13 참고?>.

#### (2) 靑少年 生活相

청소년생활상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이 일정한 틀로 굳어져 있고, 이 틀만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로 키우기위한 노력이 엿보

이며 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해 이분야는 거의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 청소년들의 행동이 진보화하는 일면이 비추어지긴하나(80년대 : 13.6%) 변화상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표 14 참고>.

### (3) 教 育

교육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이것역시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북한사회체제유지를 위해 주체교육과 사회주의교육을 시대가 흐름수록 강조하고 있으며 남조선교육에 대해서도 비방을 강화하고 있다<표 15 참고>.

### (4) 社 會 犯 罪

사회범죄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철저한 언론통제덕인지 거의 표면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부패부조리일소에 대한 암시적 내용은 있으나 명확한 게재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민주국가와는 이점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표 16 참고>.

### (5) 藝 術

예술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적인 차이가 별로 없이 거의 모든 부문(문학,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이 일정한 관심속에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80년대에 오면서 다른 부문보다 영화나 스포츠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기미를 포착할 수 있다. 시대적 조류와 국제적 흐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표 17 참조>.

### (6) 餘暇生活

여가생활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관람(60년대 : 21.1%, 70년대 : 27.5%, 80년대 : 25%)과 영화, 연극관람(60년대 : 26.3%, 70년대 : 35.3%, 80년대 : 35.5%)이 여가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시대흐름에 따라 약간씩 관심이 제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8 참고>.

### (7) 交通, 建築

교통, 건축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교통부문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 건축은 60년대 이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60년대의 정치적 상징물의 건축과 주민주택건설, 개량 등이 이루어졌으나 80년대부터 이러한 건축보단 에너지개발과 교통문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19 참고>.

### (8) 宗教, 文化

종교, 문화에 대한 내용별 흐름을 살펴보면 종교적 관심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60년대엔 주로 종교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논점을 제기하고 있고 70년대와 80년대는 종교를 북한사회체제의 외교적 선전도구로 활용키위한 논조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부문도 어느정도 관심이 시대적 흐름과는 관계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0 참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집약하면 첫째, 의·식·주와 관련지은 주민생활상이

시대구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두어지고 있고 둘째,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청소년상의 정립이 시대구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 80년대에 후반에와선 약간의 변화조짐이 보이기는 한다. 교육도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북한사회체제를 고수키 위해 주체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철저한 언론통제탓인지 사회범죄는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예술과 여가생활에선 영화나 스포츠 또는 스포츠 관람부문이 8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다른 부문보다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듯 하며 다섯째, 교통, 건축, 종교, 문화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관심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제고되는 감이 있으나 건축은 그렇지 않고 종교도 일정한 비율로 게재되고 있으나 그 성격은 북한의 대외정책방향에 따라 다르며 문화부문은 시대적 흐름과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상의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변화추세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다음엔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구별없이 제시된 모든 기본측정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체사상이 시대별로 볼 때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그러하다<표 21 참고>. 그 다음 각 변화부문간의 시대적 추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공히 정치적 부문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시대가 흐름수록 비교우위율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경제부문과 사회적 부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념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의 템포나 양은 미흡하고 보잘것 없다해도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표 22 참고>.

〈표 3〉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28	82	83
김일성, 김정일 우 상 화	김일성 우상화		28(100%)	47(53.3%)	33(39.8%)
	김정일 우상화		0	21(25.6%)	29(34.9%)
	대틀이어 혁명계승		0	14(17.1%)	21(25.3%)

〈표 4〉 사회주의건설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57	48	54
사회주의 건설	전사회의 혁명화/노동 계 급 화		20(35.1%)	18(37.5%)	26(48.1%)
	사회주의혁명전통계승 발 전		18(31.6%)	13(27.1%)	9(16.6%)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쟁 취		7(12.3%)	9(18.8%)	12(22.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3( 5.3%)	2( 4.2%)	4( 7.4%)
	당강령의 철저준수		9(15.8%)	6(12.5%)	3( 5.6%)

〈표 5〉 주체사상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45	117	253
주 체 사 상	주체사상구현(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		24(53.3%)	111(62.7%)	139(54.9%)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립		8(17.8%)	19(10.7%)	24(9.4%)
	자주적우리식사회주의		4( 8.9%)	8( 4.5%)	29(11.5%)
	자주혁명주체강화		6(13.3%)	11( 6.2%)	14( 5.5%)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 붉은기쟁취운동 (기술혁명)		0	21(11.9%)	29(11.5%)
	자위적 국방건설		3( 6.7%)	7( 3.9%)	18( 7.1%)

〈표 6〉 민족해방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23	36	59
민 족 해 방	민 족 해 방		16(69.6%)	11(30.6%)	9(15.3%)
	조 선 혁 명		4(17.4%)	9(25.0%)	21(35.6%)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고려연방제)		3(13.0%)	16(44.4%)	29(49.2%)

〈표 7〉 반미, 반제 투쟁강화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100	86	50
반미반제투쟁 강화	반미투쟁		72(72.0%)	64(74.4%)	28(56.0%)
	일제에 대한 항거		6( 6.0%)	5(58.1%)	7(14.0%)
	반제공동전선		22(22.0%)	17(19.8%)	15(30.0%)

〈표 8〉 대남비방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58	102	77
대 남 비 방	남조선의 미제식민지 예속화		18(31.0%)	16(15.7%)	13(16.9%)
	남조선군사파쇼독제		21(36.2%)	39(38.2%)	29(37.7%)
	남조선의 핍박화		19(32.8%)	24(23.5%)	21(27.3%)
	반유신운동		0	16(15.7%)	0
	남조선부르쥬아 인도 주의의 반동성		0	7( 6.9%)	14(18.2%)

〈표 9〉 인민경제의 주체화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23	120	126
인민경제의 주체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6(26.1%)	49(40.8%)	67(53.2%)
	우리식의 경제 (주체경제)		3(13.0%)	37(30.8%)	54(42.9%)
	천리마운동(주체적, 자 립적 민족경제건설운 동)의 투쟁화		14(60.9%)	34(28.3%)	5( 3.9%)

〈표 10〉 사회주의 경제발전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33	95	157
사회주의 경제 발전	사회주의경제건설		12(36.4%)	21(22.1%)	47(30.0%)
	사회주의농촌경제창출		8(24.2%)	16(16.8%)	31(19.7%)
	농업의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6(18.2%)	23(24.2%)	29(18.5%)
	동력/지방공업발전		4(12.1%)	19(20.0%)	27(17.2%)
	대외무역과 국제 경쟁력 강화		3( 9.1%)	16(16.8%)	23(14.6%)

〈표 11〉 남조선 경제비방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12	45	39
남조선경제비방	남조선식민지예속경제		4(33.3%)	19(42.2%)	22(56.4%)
	남조선경제의 핍박상		8(66.6%)	26(57.8%)	17(43.6%)

〈표 12〉 미·일 경제침탈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7	44	57
미, 일 경제침탈	미, 일의 해외경제침탈		3(42.9%)	19(43.2%)	17(29.8%)
	현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약탈		4(57.1%)	16(36.4%)	29(50.9%)
	미, 일의 경제의군사화		0	9(20.5%)	11(19.3%)

〈표 13〉 주민생활상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17	48	56
주민생활상	의 생 활		4(23.5%)	13(27.1%)	16(28.6%)
	식 생 활		8(47.5%)	21(43.8%)	23(41.1%)
	주 생 활		5(29.4%)	14(29.2%)	17(30.4%)

〈표 14〉 청소년생활상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8	27	22
청소년생활상	보 수 성		8(100%)	27(100%)	19(86.4%)
	진 보 성		0	0	3(13.6%)

〈표 15〉 교 육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30	69	79
교 육	사회주의교육		14(46.7%)	27(39.1%)	31(39.2%)
	주 체 교 육		9(30.0%)	34(49.3%)	37(46.8%)
	남조선교육비방		7(23.3%)	8(11.6%)	11(13.9%)

〈표 16〉 사회범죄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0	0	0
사 회 범 죄	강, 절도		0	0	0
	살 인		0	0	0
	기타범죄		0	0	0

〈표 17〉 예 술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24	94	127
예 술	주체예술		5(20.8%)	13(13.8%)	15(11.8%)
	문학(소설)		4(16.7%)	17(18.1%)	21(16.5%)
	음 악		3(12.5%)	15(15.9%)	19(14.9%)
	미 술		3(12.5%)	16(17.0%)	20(15.7%)
	영 화		5(20.8%)	21(22.3%)	29(22.8%)
	체육(스포츠)		4(16.7%)	12(12.8%)	23(18.1%)

〈표 18〉 여가생활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19	51	76
여 가 생 활	스포츠관람		4(21.1%)	14(27.5%)	19(25.0%)
	영화, 연극관람		5(26.3%)	18(35.3%)	27(35.5%)
	여 행		3(15.8%)	6(11.8%)	9(11.8%)
	기타 여가활동		7(36.8%)	13(25.5%)	21(27.6%)

〈표 19〉 교통건축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11	32	56
교통 / 건축	교 통		4(36.4%)	13(40.6%)	25(44.6%)
	건 축		7(63.6%)	19(59.4%)	31(55.4%)

〈표 20〉 종교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본측정변수	정 밀 측 정 변 수		6	18	28
종교 / 문화	종 교		2(33.3%)	11(61.1%)	13(46.4%)
	문 화		4(66.6%)	7(38.9%)	15(53.6%)

〈표 21〉 총 합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김일성·김정일우상화		28( 5.6%)	82( 7.0%)	83( 5.9%)
사회주의 건설		57(11.4%)	48( 4.1%)	54( 3.9%)
주체사상		45( 9.0%)	177(15.1%)	253(18.1%)
민족해방		23( 4.6%)	36( 3.1%)	59( 4.2%)
반미반제투쟁강화		100(20.0%)	86( 7.3%)	50( 3.6%)
대남비방		58(11.6%)	102( 8.7%)	77( 5.5%)
인민경제의 주체화		23( 4.6%)	120(10.2%)	126( 9.0%)
사회주의경제발전		33( 6.6%)	95( 8.1%)	157(11.2%)
남조선경제비방		12( 2.4%)	45( 3.8%)	39( 2.8%)
미·일 경제침탈		7( 1.4%)	44( 3.7%)	57( 4.1%)
주민생활상		17( 3.4%)	48( 4.1%)	56( 4.0%)
청소년생활상		8( 1.6%)	27( 2.3%)	22( 1.6%)
교육		30( 6.0%)	69( 5.9%)	79( 5.6%)
사회범죄		0	0	0
예술		24( 4.8%)	94( 8.0%)	127( 9.1%)
여가생활		19( 3.8%)	51( 4.3%)	76( 5.4%)
교통 / 건축		11( 2.2%)	32( 2.7%)	56( 4.0%)
종교 / 문화		6( 1.2%)	18( 1.5%)	28( 2.0%)
계		501(100.2%)	1174(99.9%)	1399(100%)

〈표 22〉 각 변화부문단의 비교분석

항 목	년 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적 부문		311(62.1%)	531(45.2%)	576(41.2%)
경제적 부문		75(15.0%)	304(25.9%)	379(27.1%)
사회적 부문		115(22.9%)	339(28.9%)	444(31.7%)
계		501(100%)	1174(100%)	1399(100%)

#### 4. 深層分析

앞에서 내용별계량분석의 분석단위를 문자(사회적 변화는 화보의 컬럼크기나 사진크기 등을 병행)로 하여 북한의 사회변화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문자의 빈도에 가중치를 부가하여 나타나나 수치로 연구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북한사회변화의 중요쟁점과 그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런 연구분석의 결과를 심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북한잡지를 선택하여(앞의 연구는 여러가지 잡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각 잡지의 양과 기사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적 빈도를 구하려고 했음) 비교적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기, 예를 들면 1964년의 농업문제태제를 통해 농업분야의 기본원칙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농업분야의 괄목할 발전의 계기 마련, 1968년의 푸에블로호납치사건, 1. 21 무장공비남파사건,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1974년 유신체제 선포 등을 선정해 보다 깊이있게 정밀측정 변수들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여 기본측정변수들로 합산하여 상대적 빈도를 측

정해 내 이를 통해 북한사회변화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된 기본측정변수가 18개가 되므로 심층적인 내용별계량분석을 하기엔 변수의 과다측정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기본측정변수를 더욱 유사집군화시키면 18개를 6개로 집약시킬 수 있다. 즉 주체사회주의, 반미·반제투쟁, 주체사회주의경제, 미·일경제침탈, 사회생활상, 문화이다. 이의 세부측정변수로는 주체사회주의일 경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사회주의건설, 주체사상, 민족해방이며 반미·반제투쟁은 반미·반제투쟁, 대남비방을 포함하고 주체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사회주의경제건설이고 미·일 경제침탈은 남조선 경제비방, 미·일 경제침탈이고 사회생활상은 주민생활상, 청소년생활상, 사회범죄, 여가생활이 문화는 교육, 예술, 종교, 문화, 교통, 건축이다.

내용분석의 분석체계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된 잡지는 “천리마” 1964년, 1968, 1972, 1974년, 1980년, 1987년, 89·90년의 각 월간호들이다.

이들 잡지들을 연대별로 분석하여 특정년대의 사회변화적 특성을 간파하였다. 1964년도 분석에는 반미, 반제투쟁이 제일 높은 비율인 33.8%로 나왔고 다음이 주체사회주의로 33.1%가 나왔다. 그 다음이 주체사회주의경제로 17.3%였다. 이것을 볼 때 60년대 초반은 사회주의건설과 반미, 반제투쟁 그러면서 자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게한다<표 23 참고>.

이런식으로 본 1968년도 6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표 24 참고> 변화의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게하며 1970년대 들어서선 60년대 보단 정치적 체제유지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분야의 발전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게하며<표 25, 26참고>, 80년대에 들어선 이런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에는 주체사회주의가 64.8%로 압도적으로 강조가 되고 상대적으로 반미, 반제투쟁(10.9%), 주체사회주의경제(13%) 등이 밀려서 70년대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표 27참고> 1987년부터 주체사회주의경제가 42.4%이고 주체사회주의가 38.7%로 역전이 되고<표 28 참고> 1989년에도 주체사회주의경제가 47.1%이고 주체사회주의가 37.5%로 역전이 되어 87년과 동일한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9 참고>. 그러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하는 시기인 1990년에는 다시 경직적인 옛 북한체제로 되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즉 주체사회주의가 52%이고 주체사회주의경제가 36.5%로 80년대 후반의 경향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다<표 30 참고>. 이상의 각 연도별로 분석된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표 31, 32>를 작성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 1) 政治的 變化趨勢分析

우선 주체사회주의를 분석하면 60년대는 40%이하정도로 유지되다가 70년대 초반에 55.7%까지 상승한다. 이것은 남북간의 직접교섭이 시작된 시기이므로 상호체제강화를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그 다음 낮아지다가 1980년에 다시 높아진다. 이것은 한국이 1979년 10. 26을 맞이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맞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북한은 이 시기에 상대적인 체제우월감과 위기관리상 내적 체제강화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 이후 다시 하강하다가 1990년에 다시 상승하는데 이것은 동구권의 몰락에 대한 체제강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반미, 반제투쟁은 60년대에 가장 강하다가(64년엔 33.8%, 68년엔 38.8%) 74년(37%)을 기점으로 하여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엔 3~5% 정도의 아주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적 변화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정치변화는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정치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변모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내적으로서 우리식의 사회주의라는 모토아래 체제단속을 서서히 강화하면서 외적으로 반미, 반제투쟁 등을 약화시켜 실리적 정치적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내적으로서 별반 움직임이 찾아 볼 수 없으나 외적으로 어느정도 가시화된 변혁의 움직임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 2) 經濟的 變化趨勢分析

우선 사회주의경제를 분석하면 1964년의 농업문제태제를 통해 농업분야도 기본원칙을 설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괄목할만한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됨으로 1964년의 경제부문강화가 1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후 70년대에는 정치적 요인에 계속 밀리다가 1987년 들어서면서(42.4%) 다시 경제부문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85년 합영법 등을 통해 북한이 처한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에 경제부문이 강조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1990년 들어서 경제부문의 상대적

약화(36.5%)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치권의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미 정치적 변화에서 그 이유에 대해선 논급하였다.

북한의 경제변화는 60년대와 70년대의 자발적 발전시기와는 달리 80년대는 인위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할만큼 증중에 걸려 있기 때문에 80년대에는 언론매체에도 이에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한 희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다음 미·일의 경제침탈을 분석해 보면 60년대나 70년대는 2%내외로 관심이 표시되었으나 80년대 들어선 최고 8%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적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정치적인 면에 관심이 집중된 60, 70년대엔 이러한 미·일 경제침탈에 대한 비난비율이 낮았음이 이를 반증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보다 집약해 놓은 것이 <표 32>이다. 주체사회주의경제의 관심이 크게 클로즈업된 시기가 80년대임을 알 수 있으며, 미·일 경제침탈도 80년대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변화는 정치적 변화보단 더 가시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적 관심과 80년대의 경제적 관심이 다르다는 점도 간파했다. 즉 60, 70년대의 경제적 관심은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땐 긍정적 발전의 시각이나 80년대의 시각은 부정적 의미의 시각이라는 차이점이다.

### 3) 社會的 變化趨勢分析

먼저 사회생활상을 분석하면 정치경제면보다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이 하강되고 있다. 60년대에는 4~8%로 이던 것이 70년대에는 4~5%로 다소 낮아지고 80년대 들어선 1~4% 수준으로 아주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강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상의 반영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표 32>에 따라 해석하면 60년대의 평균비율이 6.2%이고 70년대의 비율이 4.7%이고 80년대의 비율이 2.7%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사회변화가 생각한 것만치 변모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문화부문을 보게되면 이것도 사회생활상과 유사한 양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의 비율이 3~6%, 70년대의 비율이 3~4%, 80년대의 비율이 1~4% 수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강하고 있다. <표 32>를 보면 이것이 보다 명백해 진다. 즉 60년대엔 평균비율이 4.5%이고 70년대엔 3.8%이고 80년대엔 2.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강되는 것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변화도 침체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사회적 변화는 침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폐쇄체제가 내부적으로 체제유지상 절대로 필요한 북한정권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추이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3〉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64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133)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41	-3	44	33.1%
2. 반미, 반제 투쟁	43	-2	45	33.8%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22	-1	23	17.3%
4. 미, 일경제침탈	2	0	2	1.5%
5. 사회생활상	8	-3	11	8.3%
6. 문화	6	-2	8	6.0%

〈표 24〉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68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268)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105	-4	109	40.7%
2. 반미, 반제 투쟁	101	-3	104	38.8%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28	-2	30	11.2%
4. 미, 일경제침탈	5	-1	6	2.2%
5. 사회생활상	9	-2	11	4.1%
6. 문화	7	-1	8	3.0%

<표 25>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72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246)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133	-4	137	55.7%
2. 반미, 반제 투쟁	62	-3	65	26.4%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19	-2	21	8.5%
4. 미, 일경제침탈	3	-1	4	1.6%
5. 사회생활상	8	-2	10	4.1%
6. 문화	7	-2	9	3.7%

<표 26>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74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154)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56	-5	61	39.6%
2. 반미, 반제 투쟁	51	-6	57	37.0%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15	-3	18	11.7%
4. 미, 일경제침탈	3	-1	4	2.6%
5. 사회생활상	6	-2	8	5.2%
6. 문화	5	-1	6	3.9%

〈표 27〉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80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230)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143	-6	149	64.8%
2. 반미, 반제 투쟁	23	-2	25	10.9%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27	-3	30	13.0%
4. 미, 일경제침탈	6	-1	7	3.0%
5. 사회생활상	7	-2	9	3.9%
6. 문화	8	-2	10	4.3%

〈표 28〉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87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486)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181	-7	188	38.7%
2. 반미, 반제 투쟁	17	-2	19	3.9%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198	-8	206	42.4%
4. 미, 일경제침탈	35	-4	39	8.0%
5. 사회생활상	12	-3	15	3.0%
6. 문화	16	-3	19	3.9%

〈표 29〉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89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603)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217	-9	226	37.5%
2. 반미, 반제 투쟁	27	-2	29	4.8%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273	-11	284	47.1%
4. 미, 일경제침탈	39	-3	42	7.0%
5. 사회생활상	13	-2	15	2.5%
6. 문화	6	-1	7	1.7%

〈표 30〉 내용별 계량분석에 의한 “천리마 : 1990년도” 분석

기 본 변 수	빈 도 수		합(706)	비 율
	+	-		
1. 주체사회주의	351	-16	367	52.0%
2. 반미, 반제 투쟁	37	-3	40	5.7%
3. 주체 사회주의 경제	249	-9	258	36.5%
4. 미, 일경제침탈	20	-2	22	3.1%
5. 사회생활상	9	-1	10	1.4%
6. 문화	8	-1	9	1.3%

〈표 31〉 북한잡지 “천리마”에 나타난 주요쟁점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도별 빈도(%)

연도 정밀측정변수	주 체 사회주의	반미, 반제 투 쟁	주체사회 주의경제	미, 일 경제침탈	사 회 생활상	문 화
1 9 6 4	33.1	33.8	17.3	1.5	8.3	6.0
1 9 6 8	40.7	38.8	11.2	2.2	4.1	3.0
1 9 7 2	55.7	26.4	8.5	1.6	4.1	3.7
1 9 7 4	39.6	37.0	11.7	2.6	5.2	3.9
1 9 8 0	64.8	10.9	13.0	3.0	3.9	4.3
1 9 8 7	38.7	3.9	42.4	8.0	3.0	3.9
1 9 8 9	37.5	4.8	47.1	7.0	2.5	1.7
1 9 9 0	52.0	5.7	36.5	3.1	1.4	1.3

〈표 32〉 북한잡지 “천리마”에 나타난 주요쟁점의  
7개 정밀측정변수의 연대별 백분율(%)

연도 정밀측정변수	주 체 사회주의	반미, 반제 투 쟁	주체사회 주의경제	미, 일 경제침탈	사 회 생활상	문 화
1964-1969	36.9	36.3	14.3	1.9	6.2	4.5
1970-1979	47.7	31.7	10.1	2.1	4.7	3.8
1980-1990	48.3	6.3	34.8	5.3	2.7	2.8

## 5. 分析結果 및 評價

내용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는 지속되고 있고 70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화하고 있고 주체사상이 60년대 이후 북한사회를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80년대에 와서 개방화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북한인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반미, 반제투쟁은 80년대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 탓으로 다소 수그러든감이 있으며 조국통일에 대해선 체제유지의 차원과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남비방 역시 60년대 이후 강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위에 제시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북한은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정치상황에 따라 자기입장에 유리하도록 예민하게 정치변화를 시도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내적으로선 우리식의 사회주의라는 모토 아래 체제단속을 서서히 강화하면서 외적으로선 반미, 반제투쟁 등을 약화시켜 실리적 정치적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내적으로선 별반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외적으로선 어느정도 가시화된 변혁의 움직임을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변화가 북한의 지도부의 자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국제적 압력과 북한의 생존과 결부된 정세변화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인민경제의 주

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고 우리식의 경제(주체경제) 역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60년대 이후 계속 강화되고 있고 사회주의 농촌경제의 창출이나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방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조선경제비방에 있어서 남조선을 신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경제라고 비방하고 있으며 미·일의 경제침탈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난하고 있고 다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감소는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적 핍박상을 과대포장하여 왜곡 유포시키고 있다.

위에 제시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자면 북한은 정치적 이념인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경제적 운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80년대에 들어선 발전의 한계를 스스로 노정시키는 국면에 부닥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60년대, 70년대의 농업 및 공업을 주축으로 한 발전이 한계에 달하자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강화와 같은 개방화의 몸짓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미·일의 식민지 또는 예속경제, 체국주의의 꼭두각시라는 식으로 비방을 서슴치 않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경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주체경제의 모순과 이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북한내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북한은 의·식·주와 관련지은 주민생활에 시대에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경주하고 있고 청소년층에 대한 사회주의체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선 이에 대한 약

간의 변화가 보여지는 일면도 있어 주목이 된다. 교육 역시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북한사회체제를 고수키 위해 주체교육과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범죄도 언론통제탓인지 별로 관찰되지 않고 있고 예술과 여가생활에는 영화나 스포츠, 스포츠관람부문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다른 부문보다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종교는 북한의 대외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문화부문은 시대적 흐름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미약하나마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사회변화는 경제변화보단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비중이 다소 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강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상의 반영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부문 역시 영화나 스포츠 또는 스포츠관람과 같은 부문을 제외하곤 시대적인 변화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혁명적 과업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의 의도적인 발전과 비교해 볼 때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기할 점은 80년대 후반의 동구권몰락에 따른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의 개방화를 재촉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변화도 젊은세대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적 절박성에 의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 V. 結論 및 政策提言

우선 사회변화의 개념과 이론적 변천에 있어 18~19세기에 나타났던 고전주의적 사회변화의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 시대의 사회변화이론을 대표했던 콩트와 스펜서는 진보를 향해가는 진화의 원리가 내적으로 작동해 모든 문명이 일정불변의 단계를 밟어간다고 보았다. 즉, 단순하게 짜여져 있던 전통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회되고 산업화된 근대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을 사회변화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콩트나 스펜서의 사회변화적 시각은 맑스의 비판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맑스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사회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 물질적 상황을 중심으로 벌여 온 긴 역사적 변동을 일정한 축에 따라 단계화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부르조아사회도 생산양식의 변동을 거쳐온 긴 역사적 발전과정의 산물이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고 인류역사는 소유계급과 노동계급사이의 갈등관계 즉 특정생산양식에 따라 나타난 계급투쟁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맑스의 사회변화에 대한 주요관심은 근대자본주의의 등장과 역동성 그리고 필연적인 멸망이다. 맑스의 이러한 시각이 기존의 고전주의 자들과의 사회변화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하였으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국가들이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을 서구 자본주의와 다른 각도에서 투영케 한 이유가 된다. 맑스의 이러한 시각이 지니는 한계를 보전키 위해 뒤르켐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맑스처럼 계급투쟁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업의 증대와 그에 따르는 집합적인 도덕적 양심의 점진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베버도 맑스의 사적 유물론이 발견적 원리로써의 통찰력은 갖고 있으나 사회현상이란 그와 같이 하나의 자만 가지고는 짚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는 사회 변화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치나 이념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어찌되었건 뒤르켐이나 베버는 사회변화에 대한 고전적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이를 수정하려는 맑스의 시각에 일용 동조하면서도 계급 갈등과 이에 기인한 계급투쟁에 의해 결과되는 급격한 혁명의 변혁논리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기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이론들이 서구를 무대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변동 과정이 다른 사회의 변동과정과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 못지않게 차이점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사회변화를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남, 북이라는 두 실체가 다르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변화의 실체를 그저 서구적 시각에 입각해 규명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선 우리실정에 부합되는 사회변화상의 모형설정의 추구도 시도되어지고 있다.

다음,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을 고찰토록 한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대격변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혁의 분위기는 분명 북한에 대해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지속적이고 강고하게 체제를 폐쇄화하여 이러한 외부적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는 체제수호적 차원에서의 자구책을 강구하려 하겠지만 그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보다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도 어느정도 감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개방으로 나갈 때 야기될 수 있는 계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개방의 당위성과 체제수호의 현실성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특성을 보다 광의적으로 이해키 위해 북한의 사회변화를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우선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기존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는 보수적 세력과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북한체제내부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혁세력과 소련을 위시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북한 개방화 노력 등으로 표현되는 외생적 변화력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정치적 변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혁의 길로 들어선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제 개혁의 문을 두드린 이상 변화의 물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어찌되었건 긍정적 방향으로 개방화될 것이나 그것이 북한 지도부 스스로의 자성에 의한 변화가 아닌 내·외적 압력에 의해 기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치적 변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결국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흐름의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도 득이 되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사회적 변화를 보면 체제기득권세력의 의지와는 달리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해서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에 유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자유화물결이 북한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나 재미교포를 통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제한된 개방화 물결이 유입됨으로써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체제수호세력

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제동을 걸기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 사상무장교육을 강화하는 일방 관제적인 시각에서 의도되고 계산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역기능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이라해도 제반 사회변화의 붓물은 이미 터졌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현시점에서 제반사회변화가 정치, 경제적 분야보다 다소 느린 템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변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변화의 발전양태는 체제수호세력의 보수적 반동노력과 개방화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일반인민들의 현실적 요구의 역학관계에 의해 도출되어질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도 결정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다음 내용분석을 통한 북한사회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접근방법은 문헌분석과 같이 세가지 차원 즉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분석틀 내에서 분석하고 평가토록 했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1990년은 이곳에 포함하여 분석함)에 있어 정치적 이념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등은 시대에 따라 용어상의 변화는 외면적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대적 적응을 위한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며 정치적 속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흐르면서) 정치적 구호나 선동적 용어가 초기에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완화되어지는 변화의 일맥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선 용어의 선택이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변화적응의 한 징후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60년대에는 김일성 우상화, 강고한 사회주의 건설, 반미반제투쟁, 자위적 국방력강화, 민족해방, 대남비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70년대에는 주체사상(60년대 후반에도 나옴), 미제 및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항거, 반제공동전선, 통일,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정립, 조선혁명, 3대 기술혁명 등이 주류를 이루며 80년대엔 주체사상, 주체혁명혈통 계승, 김정일 우상화,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우리식 사회주의 등이 주류를 이루어 년대별로 커다란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변화는 상당히 담보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經濟的 변화에 대해 밝혀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어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를 앞지르고 있다. 우선 연대가 지날수록 각 잡지에서 경제관련기사가 정치관련기사와의 대비비율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색 일변도의 선동적 잡지에서 현실성을 고려하는 잡지로 바뀌고 있고 정치적 이상성보단 경제적 현실성에 점차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비교적 1961년부터 실행된 7개년 계획의 완료(계획기간보다 3년 연장하여 70년에 종료)와 이후 실행된 6개년 계획(1971-76)의 어느 정도의 성공에 힘입은 탓인지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적 자립과 성공,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독전등이 많이 게재되나 80

년대에 들어선 경제적 독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북한경제의 70년대후반부터의 낙후상과 연계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 주택,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원자재, 동력문제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치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 싶다.

셋째, 60년대엔 천리마식 농촌경제창출, 농업협동화운동실현, 남조선식민지에속경제, 사회주의식 농촌경리제도, 경제선동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70년대엔 기술혁명, 대외무역과 국제경쟁력강화, 인민경제의 주체화,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주체공업, 해외경제침략, 지방공업의 발전,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80년대에 들어선 우리식의 경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주체농법, 경제선동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경제적 변화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社會的 변화에 대해 밝혀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어 사회적 변화는 어느정도 이루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80년대 들어와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로 사회변화의 대상이 되는 영역마다 주체니 우리식이니 사회주의적 ..... 운운하는 용어를 대부분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결된 관계로 커다란 변화상은 60년대와 70년대에선 발견키

어렵다. 의상이나 주택등의 변화도 크지 못하고 스포츠, 소설류, 방송 및 기타 문화적 영역의 변화도 70년대까진 별 반 진전이 없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의상이나 주택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스포츠 등의 문화영역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80년대 들어선 의상, 주택 등에 있어 현격한 변화의 바람을 읽을 수 있으며 스포츠 등의 문화영역이 나름대로 변화를 맞고 있고 전에 비해 다양한 문화행사나 일반 교양적인 내용이 실려 기존의 정치학습의 분위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거의 미진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선 잡지인들 예외가 없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므로 판에 박힌듯 찍혀 나와서 그랬겠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정치변화의 템포는 너무나 늦었다. 경제변화는 그래도 정치변화보다 나았으며 사회변화는 특히 80년대 들어(90년대 가까워지면서) 나름대로의 변화양상이 어느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헌분석에선 북한의 변화가 어느정도 필연적일 것으로 결론지워졌으나 내용분석에선 그 정도까지의 변화는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너무 낙관해선 안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북한의 일말의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정책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변화와 연관지워볼 때, 동구권 변혁과 소련공산주의 와해와 같은 국제정세의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그 이

전과 비교해 볼 때 표면상으로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산당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보도매체인 잡지(정기간행물)들을 내용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면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키는 어렵겠지만 외견상은 분명 그러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현실적 적용논리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일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변화양태를 우리 정책당국은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구권의 변혁과 소련의 불발 쿠데타에 의해 감성적으로 고무되는 것은 이해하나 북한의 정치변화를 지나치게 장미빛으로 낙관하는 것도 금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균형된 시각이 절실히 필요로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변화 역시 내면적으로 중중에 걸쳐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과의 수교 등을 모색하고 중국에 보다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면적으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강하게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느 부문보다 경제부문이 변화할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중 이부분이 제일 먼저 개혁과 개방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변화는 철저히 중국식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치·경제는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교조주의적 정치형태를 지속하면서 경제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책당국은 북한의 의중을 잘 헤아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해야 되

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수교에서 빚어질 수 있는 장·단기적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활력을 얻게 되고 미·일과의 수교후의 경협자금, 배상금 등을 통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등을 통해 얻은 역량을 대남전략전술에 쏟아붓게 된다면(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식의 개방을 하는 한 항상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음) 그것은 북한이 고립됨으로써 한국에 끼칠 비용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변화도 정치나 경제보단 외연적으로 많이 진전된 것처럼 보이는 일면도 있으나 내용분석결과는 그러한 시각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나타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사회적 변화가 의·식·주 그리고 주거환경, 영화, 연극, 스포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나 북한이 절대적인 정치우위를 지닌 국가란 점을 생각할 때 그러한 변화가 북한변화의 전조인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북한지도부가 정작 사회적 변화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김일성, 김정일 부자체제를 유지키 위한 적응의 한 수단으로 또는 한 방편으로 사회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허용 내지는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책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물꼬를 되돌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모멘트가 북한

지도층 내부나 북한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변화와 압력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인내를 가지고 냉정하게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외교역량 등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변화를 끄집어내기 위한 국제적 압력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체제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보완, 수정하여 국력신장에 만반을 가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변화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힘에 있어서의 비교우위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는 것이다.

## 参 考 文 献

### 〈國內版〉

- 경제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 1991.
- 근로자, 평양 : 근로자사, 1962 - 1991.
- 동아일보사, “김일성, 동구민주화인정”, 동아일보, 1991. 7. 25.
- \_\_\_\_\_, “2국체제 법적분단 공식화”, 동아일보, 1991. 8. 8.
- \_\_\_\_\_, “개방으로 내몰린 북한경제력”, 신동아, 서울 : 동아일보사, 1991. 8.
- \_\_\_\_\_, “북한경제특구 적극참여”, 동아일보, 1991. 8. 9.
- \_\_\_\_\_, “북한금변대책”, 신동아, 서울 : 동아일보사, 1991. 8.
- \_\_\_\_\_, “말만 앞선 남북 방송교류”, 동아일보, 1991. 7. 16.
- 막스 베버(저), 박종선(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서울 : 세계, 1987.
- 민족문화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화사인식,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1.
-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도덕적 위기 : 에밀 뒤르캥의 현대사회 인식”,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 일지사, 1978.
-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 일지사, 1978.
- 세계일보사, “김일성주의의 공식화 가능성”, 세계일보, 1991. 8. 7.
- 안토니 기든스(저), 박영신·한상진 역, 비판사회학 : 쟁점과 문제점, 서울 : 현상과 인식, 1983.
- 엘, 코저(저), 신영하·박영규(역), 사회사상사, 서울 : 일지사, 1978.

윤이흠, “종교가 북한사회에 끼치는 영향”, 한국종교연구, 제3권, 서울 : 집문당, 1991.

이동복, “북한급변은 전민족의 재앙”, 월간조선, 서울 : 조선일보사, 1991.

8.

이상우, “로동신문사설에 나타난 북한정책관심의 변천 : 1967-1973” 성곡논총, 제6집, 1975.

인문홍, “에밀 뒤르캥의 정치사회학 연구”, 현상과 인식, 6권 1호, 1982.

조선, 평양 : 조선회보사, 1964 - 1991.

조선사회민주당, 평양 : 조선사회민주당 출판사, 1983 - 1991.

짜이틀린(저), 이경용, 김동노(역), 사회학이론의 발달사 : 사회사상의 변증법적 과정, 서울 : 한울, 1985.

천리마, 평양 : 조선문예출판사, 1964. 2. - 1990. 12.

철학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 1991.

최평길, “공산권연구방법론 : 북한을 중심으로 - 내용별계량분석”, 정경연구, 152호(1977. 10), 153호(1977. 11)

최평길, “북한정치행정론”, 북한, 12, 1975, 2, 3, 1976.

칼 맑스(저), 김호균(역·편저), “정치경제학 비판서문”, 경제학노트, 서울 : 이론과 실천, 1988.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 1988, 서울 : 통일원, 1989.

한국일보사, “김일성, 동구민주화인정”, 한국일보, 1991. 7. 25.

\_\_\_\_\_, “김부자이름 반드시 고덕표기”, 한국일보, 1991. 6. 25.

\_\_\_\_\_, “미수교국과 스포츠 외교강화”, 한국일보, 1991. 8. 6.

\_\_\_\_\_, “북한 4~5년내 급속 개방소지”, 한국일보, 1991. 7. 10.

- \_\_\_\_\_, “북한 : 위 아래 동시 개혁압력”, 한국일보, 1991. 7. 30.
- \_\_\_\_\_, “북한문학시 종합연구 첫결실”, 한국일보, 1991. 7. 30.
- \_\_\_\_\_, “신사회주의연맹추진”, 한국일보, 1991. 8. 8.
- \_\_\_\_\_, “청소년 서구풍조만연 대책부심”, 한국일보, 1991. 7. 23.

이외에 월간조선자료(조선문제연구소 간), 역사과학(사회과학출판사 간), 조선어문(사회과학출판사 간), 조선문학(문예출판사 간), 조선 여성(근로단체출판사 간), 조선영화(문예출판사 간), 조선예술(문예출판사 간), 청년문학(문예출판사 간), 아동문학(문예출판사 간) 등이 참고되었음.

### <國 外 版>

- Berlson, Bernard,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Y. : The Free Press, 1952.
- Bingham, Richard D. & Marcus E. Ethridge (eds.) Reaching Decision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 Methods and Applications, N.Y. : Longman, Inc., 1982.
- Chay Pyung Gil, The Nation Building Process, Syracuse, N.Y. : Syracuse University Dissertation, 1975.
- Gordon, Theodore J., & Olaf Helmer, Social Technology, N.Y. : Basic Books, 1966.
- Hoaglin, David C., Richard J. Light et als., Data for Decision :

- Information Strategies for Policy Makers, Cambridge, Mass. :  
Abt Books, 1982.
- Holsti, Ole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ading, Mass. : Addison Wesley, 1969.
- Jones, Thomas E., Options for the Future :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Oriented Forecasts, N.Y. : Praeger Publishers, 1980.
- Kaplan, Abraham and J.M. Goldsen, "The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Categories," in H. D. Lasswell(ed.) The Language of Politics  
Studies in Quantitative Semantics, N.Y. : George Stewart,  
1949.
- Krippendorff, Klau,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 London : Sage Publications Inc.,  
1980.
- North, Robert C. et als., Content Analysis : A Handbook with  
Application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risis,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Osgood, Charles E., "The Representational Model and Relevant Research  
Methods," in I. de S. Pool(ed.) Trends in Content Analysis,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9.
- Prothro, J.W., "Verbal Shifts in the American Presidency : A Conten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 1956.
- Sanders, Luther W., "A Content Analysis of President Kennedy's First  
Six Press Conferences," Journalism Quarterly," 42, 1, 1965.

Scott, W.A.,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 the Case of Nominal Scale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19, 1955.

Shepard, D.W., "Henry J. Radio Talks : A Content Analysis," Journalism Quarterly, 33, 1956.

Taeuber, Irene B., "Changes in the Content and Presentation of Reading Material in Minnesota Weekly Newspapers, 1860-1929," Journalism Quarterly, 9, 1932.

## ◆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社會 變化趨勢 研究

吳有錫(梨花女大)

### 〈 要 約 文 〉

現在 동구나 소련에서와 같은 급격한 變動없이 여전히 社會主義를 指向하거나 固守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北韓, 베트남 지역 등 동아시아권과 쿠바 그리고 아프리카 社會主義 정도이다. 이들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각국이 처한 특수 상황과 自主的인 社會主義 建設의 經驗, 그리고 獨自的인 社會主義 路線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社會主義만을 固守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은 歷史의 미지수일 뿐이다. 이미 이들 국가 역시 社會主義圈의 改革물결과 국제자본의 압력에 의해, 거역할 수 없는 ‘變化’의 거센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變化가 소련과 동구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 각국이 처한 ‘具體的’이고 ‘歷史的’인 ‘현실조건’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目的은, 과연 동구와 소련, 더 나아가 아시아권인 몽고에까지 뻗어 있는 現存社會主義(Existing Socialism)<sup>1)</sup> 국가들에서의 改革, 개방 바람이 ‘北韓’에 까지 파급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北韓에서는 무슨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한정된 北韓의 雜誌—그 내용을 통해서—실제로 北韓인민사회내부에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變化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北韓 지도층의 정책으로 일관된 거의 劃一的인, 어조에 있어서도 거의 統一的이다시피 한 北韓의 雜誌—를 통해서였지만 그 속에서도 ‘北韓이 變化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變化는 南韓을 포함한 서방측에서 기대하는(한편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호기심으로) 동구와 같은 變化가 아니라 거센 變化의 흐름에 대처해 가는 北韓지도층의 새로운 의식을 엿

1) Lowy, Michael, "Twelve Theses on the Crisis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Monthly Review, May, 1991."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北韓의 政治 指導部와 朝鮮勞動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現體制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식 社會主義로 대표되는 北韓의 자기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쪽으로 變化하고 있고 또 變化했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北韓社會의 變化에 대한 대응과 인식은 北韓社會가 우리와 달리 ‘歷史的’으로 성립된, (정치중심으로)정치, 경제,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사회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北韓社會 변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는 그 내부에서 이러한 정치 중심의 통합을 흔들 정치균열의 양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北韓 雜誌가 갖는 본래적인 限界(선전성, 폐쇄성)로 인해 雜誌만을 통해서는 北韓政治 및 社會內部的 葛藤을 거의 推測해 볼 수 없다는 크나큰 難點이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일단 變化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이상 그것을 시도한 지도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조선노동당 내부 및 北韓대중들 속에서 조금씩 싹틀 수 있는 變化의 조짐이 지금으로서는 무척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北韓 대중의 自發性 發揮와 黨統制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間隙을 영원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北韓社會의 變化를 새로운 方向으로 이끌어 갈 추동력이며 중요한 變數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社會主義 국가들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사실이기도 하며 北韓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며 실질적으로 인민 대중의 요구에 대해 北韓 지도층의 融通性있고 伸縮性있는 對應도 엿보인다.

## I. 序 論

###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현재 소련 및 동구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변혁에 따르는 혼란과 體制轉換의 몸부림은 원래 그 의도와는 달리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 40여년의 모든 경험과 투쟁에서 얻은 성과들을 벗어던지고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새로운 운명에 도전은 現實적으로 자본주의 市場體制와 부르조아적 정치질서로의 회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현단계 社會主義 卷의 改革은 지금까지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에 대한 根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다양한 논쟁과 과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이러한 논의의 窮極적인 귀결점은 社會主義의 歷史的 位相과 性格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社會體制로서의 社會主義를 이념 속의 社會主義와 歷史的 현실 속의 社會主義 사회로 구분<sup>2)</sup>하여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現存 社會主義권의 혁명적變化와 (일정정도)무관하게 이념 社會主義를 지향하거나 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北韓 등 동 아시아지역과 쿠바 그리고 아프리카 社會主義 정도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급격한 變動 없이 社會主義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社會主義건설의 歷史的 經驗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나라들은 社會主義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러시아의 계급혁명과는 달리 반외세라는 民族解放鬪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社會主義 정권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

2) 여기에서 전자를 이념사회주의라는 용어로 후자를 현존(Existing)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한다. 이념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및 생산조건에 대한 사회적 소유 내지 공유적 소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와 이 생산관계에 조응하는 또는 필연적인 내적연관을 맺는 모든 경제, 정치, 문화적 제관계의 총체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로부터 이러한, 이념사회주의로의 이행기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나 이것이 실질적인 사회화과정의 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념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아직 거기에 다가서지 못한 소련 및 동구 등 현실사회주의를 이념사회주의와 구분하여 현존(현실)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구와 달리 자체의 主體的인 혁명역량이 형성된 후 여타의 진보적인 민주세력까지 포용하는 입장에서 社會主義 제도와 改革을 통해 자주적인 社會主義 국가를 건설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은 소련 동구의 변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통적으로 社會主義 건지와 黨의 領導性 保障을 주장하면서 소련, 동구의 變化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의 現實的 상황은 社會主義體制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더욱 막강해진 자본주의 體制에 대항하여 고립되지 않기 위한 힘겨운 抵抗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점점 더 社會主義권의 改革물결과 국제자본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고 거역할 수 없는 요구에 의해 이들 국가에서도 불가피한 變化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의 變化가 소련 및 동구와 같은 방향으로 變化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며 그것은 각 국이 처한 具體的이고 歷史的인 現實的 조건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소련, 중국(천안문 사태), 동유럽 등 社會主義 사회의 정치 變動이라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과연 '우리의 반쪽'인 北韓의 정치, 경제, 社會體制가 變化하고 있는가, 빠른 시일내에 變化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즉 현재 北韓은 여전히 우리식 社會主義를 고수하고 있지만 결코 다른 社會主義권의 變化로 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北韓에 미치는 영향은 소련 및 동구와는 달리 北韓으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식 社會主義를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信念을 갖도록 思想敎養을 강화하고 首領, 黨, 인민의 三位一體를 社會主義 건설의 주체로서 首領과 黨의 영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社會主義건설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존 社會主義권의 변혁이 北韓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北韓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變化를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北韓이 갖고 있는 變化의 적응력과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研究의 對象과 方法

본 研究는 北韓에서 발행되는 雜誌를 대상으로 그 (질적)내용분석방법을 통해 현재 北韓사회가 그간 어떠한 變化과정을 거쳐 지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變化되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한다.

### 1) 研究범위 및 研究대상

北韓에서의 雜誌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고 社會主義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등을 소개, 일반화하여...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고 雜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적출판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공산주의 혁명에 있어서 "사상적 무기"로서의 雜誌의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北韓의 雜誌들은 각 雜誌마다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며 같은 종류의 雜誌가 2개 또는 그 이상 발행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北韓사회의 變化추세를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사회분야에만 국한된 雜誌만으로는 본질적인 해명이 불가능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北韓에서 발행되는 모든 雜誌를 포괄해서 분석함으로써 만이 본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할 수 있다. 물론 이점은 北韓사회가 우리와 달리 (정치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사회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 대상으로하는 雜誌의 개념은 정치이론雜誌, 종합雜誌, 문학예술雜誌,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청소년 및 여성雜誌, 과학기술전문지 및 교육전문 그리고 영문 雜誌등을 망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雜誌를 무작위적으로 무제한 研究대상으로 하기에는 자료수집상의 어려움 및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研究대상과 研究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우선 北韓에서 발행되는 모든 雜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일차적인 검토를 한 후 같은 부류에 속하는 雜誌에서 가장 北韓사회의 일반성과 대중성을 대표한다고 보이는 雜誌를 5개정도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에 기초하여 北韓사회의 變化추세를 뚜렷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시점을 페레스트로이카를 정점으로하는 소련, 동구의 改革이 급진전되고 동서독 통일이 급속도로 진행된 1989-91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雜誌를 비교분석함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 2) 研究방법

이 研究에서는 일차적으로 歷史的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점으로 해서 歷史的 흐름( 동구및 소련의 改革, 동서독 통일 등)에 따라 北韓 사회의 대응양식과 내부變化과정을 분석한다.

歷史的 접근법은 갈포퍼(K. Popper)가 주장하는 역사주의( historicism)나 전

통적 역사주의(historism)와 구분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歷史的 性格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의 설명에는 역사에 의한 설명과 평가를 시도하는 방법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포괄적인 역사주의 입장에 기반한 방법론적 경향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으로만이 지나친 현재성의 강조(강요)로 인한 목적론적 설명(北韓은 이래야한다라는)과 이데올로기적 설명에서 벗어나 北韓 사회가 갖는 과거의 歷史的 경험이 오늘날 주체사상의 형성이나 확산, 반미 및 제국주의 사상, 일본과의 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김정일 승계의 문제 등등 현재의 여러 사회(역사)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러한 歷史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北韓社會의 變化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에 의한 내용분석과 그를 바탕으로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비교분석에서는 주로 일치법(동구 및 소련 改革과의 變化 내용상의 일치)과 차이법(동구 및 소련 改革과의 變化 내용의 차이)을 이용하여 동구나 소련의 變化 추세와는 다른 北韓社會의 變化추세를 찾아내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보고자한다. 즉 社會主義권의 改革 바람이 불던 초기에(1985년 전후) 北韓의 대응방식과 1990년 이후 北韓社會의 대응과 그에 따른 變化, 발전 추세를 사회학적인 비교분석방법으로 고찰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교분석은 社會主義를 지향하면서도 사회구조의 특이성이나 목적 지향 및 외적 조건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게되는 北韓의 대안적 선택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글의 구성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社會主義 北韓社會의 雜誌를 이해하기 위하여 北韓社會의 體制적 性格과 관련하여 北韓雜誌의 현황과 性格을 살펴본다.

3장 1절에서는 선정된 雜誌의 시계열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北韓社會에서 보여지는 變化의 개괄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1절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北韓社會變化趨勢의 내용을 분류하여 1991년의 시점에서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고자한다.

4장은 결론 부분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나타나는 北韓社會 變化추세의 특징과 앞으로 北韓社會의 變化趨勢를 전망해보고자한다.

## II.北韓雜誌의 性格과 現況

：北韓社會의 體制的 性格과 關聯하여－

### 1.北韓雜誌의 性格과 機能<sup>3)</sup>

北韓의 백과사전은 雜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雜誌들은 위대한 首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들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社會主義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 일반화하며 근로자들의 정치리론 수준과 기술실무수준, 일반 상식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편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北韓의 雜誌는 「혁명적 출판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인민성과 대중성을 중시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北韓은 공산주의 혁명에 있어서 雜誌의 역할에 대해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통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北韓의 雜誌는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각 雜誌마다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며 같은 종류의 雜誌가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발행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같은 종류의 雜誌들이 둘 이상 발행되지는 않지만 雜誌의 유형에 따라 하나의 출판사가 여러 종류의 雜誌를 발간하고 있다. 인쇄는 평양종합인쇄공장이 대부분 맡고 있다. 사회과학원 출판사가 내는 雜誌들만은 사회과학원 인쇄 공장에서 인쇄한다. 그리고 모든 雜誌는 출판에 앞서 정무원<sup>4)</sup>직속인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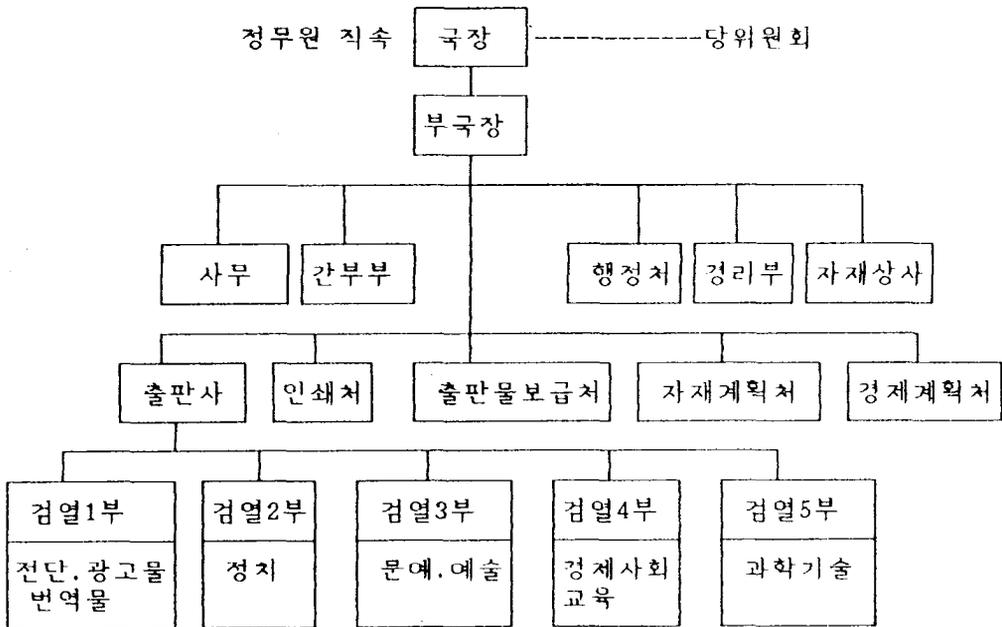
3) 북한의 언론, 출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설명이 될 수 있는 글은 최근에 많이 나와 있다. 유재천 외,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1990), 김영주, 이범수, 「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나남, 1991), 국토통일원, 「북한의 언론 출판분야 사업총화집: 1949 - 1970」, (구토통일원, 1974), 등

4) 정무원 출판 총국에는 기본부서인 출판처와 그 밑에 제1부(전단, 광고물, 레테르, 번역물), 제2부(정치), 제3부(문예, 예술), 제4부(경제, 사회, 교육), 제5부(과학, 기술)가 있으며 각 부에는 책임 검열원, 검열원, 교정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밖에 후방부서로서 인쇄관리부, 재정관리부, 기요문서부, 간부부 등이 있다.

판 총국의 검열을 받아야한다. 출판총국은 형식상 정무원에 직속된 기관으로서 출판총국장은 내용적으로 중앙당에 직속된 기관으로서 출판총국장은 중앙당 선전부 부부장급이다. 출판물에 관한한 출판총국의 검열관들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행사가 노동당에 의해 적극 보장되어 있다.

이렇듯 北韓의 雜誌는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기본적인 性格으로 하여 社會主義 혁명을 침투시키고 대중을 社會主義 건설에 조직, 동원하는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적 지향적이고 중심편집물을 내세워 그에 맞게 집중, 반복, 연속편집하는 중점성과 기획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北韓雜誌가 보여줄 수 있는 北韓社會變化趨勢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出版 總局 機構表



출처 : 북한 연구소, 「北韓 總覽」, (1985).

## 2. 北韓雜誌의 類型別 分類 및 主要雜誌 現況

### 1) 유형별 분류

현재 北韓은 당이론 雜誌로서 근로자, 학술부문잡지로서 철학연구, 사회과학 등, 계층별 잡지로서 청년생활, 조선여성,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조선문학, 청년문학 등의 문학 예술잡지와 대학생, 세세대 등의 학생 소년 잡지 그리고 대중잡지로서 천리마 외에 대외선전잡지로서 오늘의 우리 조선, 등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잡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이론 잡지: 근로자(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 국제생활(월)/ 남조선문제(월)/조선사회민주당(계) 등
- 2) 종합잡지 : 천리마(월)
- 3) 문학예술잡지 : 아동문학(월)/조선문학(월)/ 청년문학(월), 이상의 새잡지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조선영화(월)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예술(월) 조선연극인 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 조선미술(월), 조선미술가 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음악(월)조선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등
- 4) 사회, 인문과학 학술지 : 력사과학(계)/ 사회과학(계)/ 철학연구(계)/ 경제연구(계)/ 조선어문(계)/ 문화어 학습(계), 조선고고연구(계) 등
- 5) 청소년 및 여성잡지 : 청년생활(월), 조선社會主義 로동청년중앙위원회 기관지/ 대학생(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 여성(계)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 등  
이밖에 세세대/ 새희망/우리동무/소년과학/소년지도원/체육/사로청사업/조선청년학생 등
- 6) 과학 기술전문지 : 건설(월)/ 광업석탄(월)/ 금속(월)/ 농업(월)/수산(월)/ 방직(월)/ 식료(월)/ 일용품(월)/ 전력(월)/ 육군해군(월)/ 전자공학(월)/ 지질(월)/ 철도(월)/ 화학(월)/ 의료주체의학(격) 등
- 7) 교육전문잡지: 인문교육(월)
- 8) 영문잡지및 대외선전잡지 : Korea Today(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월)/ The Korea Social Democratic Party(월) 등다수.

이러한 北韓雜誌 유형을 볼때 특이한 점은 첫째, 대부분 기관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정치이론부문과 대외선전부문 雜誌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sup>5)</sup>이것은 北韓의 雜誌가 社會主義 혁명을 위한 '사상적 무기'이자 선전

5) 정진석, "북한의 잡지", 「북한의 언론」(을유문화사, 1990), pp. 206-7

의 도구<sup>6)</sup>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주요雜誌현황

1989년 조선 중앙년감은 北韓의 주요 잡지로서 「근로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경제연구」, 「경제관리」, 「조선문학」, 「청년문학」, 「조선예술」, 「조선영화」, 「천리마」, 「로동자」, 「농업근로자」, 「청년생활」, 「대학생」, 「새세대」, 「새희망」, 「국제생활」을 들고 있는데 지난 86년 이래로 北韓당국이 선정한 주요잡지 현황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북한<sup>7)</sup>의 주요 잡지 현황

1986년	근로자, 사회주의 경제, 조선문학, 청년문학, 조선예술, 조선영화, 천리마, 로동자, 농업근로자, 청년생활, 대학생, 새세대, 새희망
1987년	變化없음
1988년	근로자, 경제연구, 조선문학, 청년문학, 조선예술, 조선영화, 천리마, 로동자, 농업근로자, 청년생활, 대학생, 새세대, 새희망, 국제생활, 경제관리
1989년	變化없음

\* 출처, 「조선중앙년감」

1988년 부터 경제연구 와 국제생활 등 경제관련분야와 대외 관련분야의 잡지가 중요한 雜誌로 선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에서의 改革원인을 진단하고 經濟와 국제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北韓社會의 변화를 일부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雜誌를 선정하고자 한다. 1) 정치이론잡지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근로자」 2) 정치교양 잡지 「국제생활」 3) 북한의 유일한 대중잡지로서 계층에 관계없이 북한 인민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천리마」, 4) 학술지이면서 동시에 북한당국의 經濟정책을 엿 볼 수 있는 「경제연구」 5) 문학지이면서도 청년들의 정치적 입장 및 북한당국의 청년정책을 엿 볼 수 있

6) 이 가운데서 특히 조선로동당 기관지이며 정치이론 잡지인 근로자는 당의 정책 수행자 및 전달자로서 중요시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을 그 구현인 당의 조직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고 그 독창성과 정당성 위대한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일반화하며 당원들의 정치이론 수준은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높임으로써 ....” 당원으로서 누구나 필독해야 된다고 하는 근로자는 중공당기관지 홍기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는 「청년문학」<sup>7)</sup>.

5개의 雜誌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주요雜誌로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雜誌가 북한雜誌의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雜誌들만이 국내 통일원자료 센터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적지식의 부족으로 과학기술전문지를 살펴보지 못한것이 무엇보다도 아쉽다.

다음은 선정된 5종의 雜誌에 관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 근로자 : 北韓의 대표적인 정치이론 잡지이다. 1946년 10월 25일 당의 리론잡지로서 <근로자>첫호가 창간되어 현재 까지 반월간 또는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1991.9월 현재 593호가 나와 있다. 근로자는 항상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적 교양자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주위에 그들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은 거의 논설, 해설, 지시 등으로 채워져 있다.

2. 국제생활<sup>8)</sup>: 국제생활은 간부 (군당 지도급 이상)들에게 국제생활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정치 교양 잡지이다. 그 임무와 기능은 1) 君黨지도원급 이상 간부들에게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정세를 알려줄 것 2) 공산권과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의 北韓의 대외 활동을 간부들에게 알려 줄 것 3) 반제 민족해방투쟁 소식을 전달하거나 해설하여 호전적 의식을 고취할 것. 4) 자유진영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선전하며 비방, 중상할 것,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반항심과 적개심을 품도록 교양할 것 등으로 되어있다.<sup>9)</sup>

7) 북한의 청소년 및 대학생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래는 「청년생활」과 「대학생」을 선정하여 분석하려고 했으나 자료 부족으로 포기되었다. 현재 통일원 자료센터에는 1979. 1 - 1981. 10까지의 「청년생활」과 1981. 1 - 12까지의 「대학생」만이 구비되어 있다. 「청년생활」은 북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잡지이다. 노동청년출판사에서 발행하며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된다. 그 임무와 기능은 1) 사로청원들과 청소년들에게 북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고무하고 2) 청소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하며 3) 청년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고무하고 4) 청년들이 생산 계획 수행과정에서 발휘한 모범을 일반화해줄 것 5) 북한 노동당과 사로청을 정책 선전자 및 전달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생은 1973년 새로 발간되었다. 주로 대학생들의 학습활동과 학교활동을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국제생활(월), 1989년 4 (41호), 국제생활사, 47., 50전( 평양 종합인쇄 발행).

9)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p. 1201 - 1203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 청년 문학 (문학 예술 잡지) : 월간 문예지 「청년문학」은 北韓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청년문학은 北韓 문예총출판사<sup>10)</sup>에서 발행하며 평양 종합 인쇄공장에서 인쇄된다. 청년문학에는 기상 작가들의 단편 소설, 시, 희곡, 평론 등과 신인들의 시, 소설, 희곡, 평론들을 게재한다. 그 임무와 기능은 1) 北韓 노동당의 문예정책과 수시로 제기되는 문예시책을 청년문학도들에게 선전하며 그의 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고무할 것 2) 문학부문 신인들의 창작활동의 방향을 인도하며 문단진출의 길을 터 줄것. 3) 北韓이 요구하는 문학 작품들을 게재하여 청년들의 교육교양에 기여할 것 4) 청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할 것 등이다. 청년문학은 신인문학도들의 문단등용문이며 청년들 속에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문학 예술전문지이면서도 정치색 짙은 내용이 많으며 당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서 발행되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뛰어난 작품이더라도 그 글이 실어지지 못하는 수가 많다.

4. 경제연구 : 격월간,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기관잡지( 사회과학원 출판사<sup>11)</sup> 발행).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의 自主性和 창조성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당의 지도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5. 천리마 :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종합잡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북한이 1958년 말 천리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다음인 1960년초에 창간되었다. 천리마운동에 근로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군중문화 출판사에서 발행되다가 현재는 문예출판사가 발행한다. 「천리마」는 1)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 · 기술자 · 사무원과 협동농장의 농민들 속에 천리마 운동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선전 · 선동할 것 2) 북한 로

10) 1961년 3월2일 문학예술총동맹이 조직되면서 文藝總 出版社가 설치되었다. 1961년 이전까지는 작가동맹출판사, 국립문학예술 서적 출판사, 조선음악사, 미술사 등이 독립되어 있었으나 이 출판사들이 모두 통합되어 문예총출판사로 개편된 것이다. 고전, 현대문학, 음악, 미술도서 등을 출판하고 있다.

11) 과학원 각 연구소들의 연구성과들에 기초한 이론서적과 민족고전(영인 복각, 번역편찬)을 출판한다. 한동안 김정일의 지시로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잡지들을 독점발행했었다. 그러나 1988년 3월부터는 다시 사회과학 출판사가 인문, 사회과학잡지를 발행하고 자연과학과 기술전문지는 중앙과학 기술통보사가 맡아서 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잡지가 평양 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되는데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만은 모두 사회과학원 인쇄공장에서 인쇄한다.

동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수시로 제기되는 시책을 선전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들을 고무할 것 3) 대상들에게 '청산리 정신과 방법' 그리고 '대만의 사업체계 관철'과 확립에 기여 할 것 4) 천리마 운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작업반, 직장, 공장 들의 모범을 일반화 할 것 5) 대상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할 것 6) 대상들을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노력 혁신을 일으키도록 충동할 것 등의 임무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천리마에는 천리마운동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장의 방문기 및 혁명적 인민들의 활동이 실리고 지방의 歷史, 傳說, 民俗, 隨筆, 生活에 필요한 지시 등도 실는다.

1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p.1201.

### Ⅲ. 北韓雜誌를 통해 본 北韓 社會의 變化 趨勢

#### 1. 雜誌의 統計分析－目次構成을 中心으로

본 절에서는 「근로자」, 「국제생활」, 「경제연구」의 雜誌의 목차와 편집구성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구성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1985년 이후 北韓社會의 變化趨勢를 개략적으로 分析해보고자 한다.

##### 1) 근로자

도표 2) 근로자의 목차구성 : 1980년 부터 1991년 6월 까지

년도	目次構成 變更 內容
1980- 1985년 編輯內容 (目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집국 론설 혁명전통 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 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론설
1982년 新編輯 (첨가목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1984년 新編輯	형제당들에게(7)°
1985년 新編輯	과학문화론설 경험론설 자료 및 반동 이론 비판 론설 남조선및 국제론설이 --> 조국통일과 남조선론설 그리고 국제론설로 분리 방문기(1)°
1988년 新編輯	형제당 문헌 출판소식(3)°
1991년 目次變更	조국통일과 남조선론설 --> 남조선문제 혹은조국통일문제로 국제론설 --> 국제문제로 자료 및 반동리론비판론설 --> 부르코아리론 비판으로

\* 자료 구성 : 근로자 목차 정리 (통일원 자료센터)  
 ° 의 괄호안의 숫자는 처음 목차에 편입되는 月을 말함.

도표 3) 근로자 논설 비중의 變化 ( 편집내용분석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85-9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5	3	2	3	1	2	2	1	2	1	4	1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1	1	3	1	1	1	3	2	1	9
편집국론설	16	16	18	17	15	15	14	12	12	11	13	77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	8 14	12 18	21	21	31	13	10 23	13 17	7 23	13 22	12 34	68 146
정치사상론설	39	28	47	42	31	25	49	60	48	44	38	264
경제건설론설	19	26	14	16	33	45	31	30	35	36	37	214
남조선및국제론설	16	19	15	17	28							
조국통일및 남조선논설						13	13	15	15	20	13	89
국제론설 (국제문제)						13	11	13	12	13	12	74
과학문화론설						21	15	14	13	15	13	91
경험론설						10	16	10	10	4	4	54
반동리론론설						6	3	1	1		1	12
방문기						3	4	2			1	10
형제당들에게					1	2	8		2			12
부르쵸아리론비판	1991년 신설											

도표1)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페레스트로이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85년 의 시정에서 근로자의 차례구성이 대폭 수정, 강화되고 있다. 과학, 기술 및 문화와 관련된 별도로 분리되었고 대외관계에 관한 항목이 신설되고 있다. 특히 사상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위기를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이념의 침투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여 (부르조아)반동 이론을 벌써부터 비판하여 선전하고 있으며 1991년에 들어서는 아예 부르조아리론 비판이라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의 改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르조아적 政治體制<sup>13)</sup>도입( 최근 사회주의권에서의 다당제 도입을 해악적인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및 시장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여전히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노동계급의 당이 항도적 역량으로서 유일적 령도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될 수 있다.<sup>14)</sup>

그리고 경험론설을 통해서 3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87년을 전후로 하여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조직정치사업을 역설함으로서 당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일군들의 역할을 독려하고 있다.<sup>15)</sup>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89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형제당들에 관한 보도가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은 國內體制를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추구해온 사회주의형제들간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의 노선을 계속 강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985년 이후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론설기준)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體制의 우수성을 계속하여 홍보하면서 정치사상론설(정치 사상의식의

13) 박주룡, "다당제는 부르조아 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 「근로자」, 1991.2.

최철용, "부르조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 「근로자」, 1991.3.

14) 고갑종,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중요원칙", 「근로자」, 1991. 2.

박주룡, 위의 글, p.95. 그외 " 당 생활은 당 조직과 당원들의 생명 활동"(90.9),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새형의 혁명정당"(90.10), "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당의 불패성의 담보(90.12)", 「근로자」.

15) 최인덕,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근로자」, 1991.3. 그외도 "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당 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우리나라 사회주의의우월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군당 위원회의 정치조직사업" 등. 다수.

강화)과 經濟건설론설( 이러한 사상의식을 강조 한 후 과학기술 및 기능 기술수준의 강조)의 비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北韓식 社會主義體制의 고수를 천명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北韓體制를 수호하고 社會主義 건설에 앞장설 것을 촉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 2) 국제생활

아래의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국제적 연대성강화의 내용은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기행, 인상기, 나라 소개 등을 통해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고수 국가들을 우호적일 선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1985년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1990년 1월 국제생활에 실린 문건, 「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처럼 北韓은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국가들에서의 위기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공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표3)에서 보듯이 정치 시사란의 대폭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反社會主義 공세책동을 폭로하는 한편 社會主義권의 自主的인 鬪爭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생활」 그 어느 곳에서도 동구나 소련에서의 '탈社會主義적' 변혁 내용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北韓은 國內體制를 국제정세의 變化의 영향으로 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아직 소련 및 동구변화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변화의 요구가 솟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16) 부언하자면, 현존 社會主義권의 개혁이 시작 된 후 北韓의 기본 논설 논조는 社會主義 개혁에 대한 부분적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의 단결과 사상사업에 대한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론설 기사를 통한 이러한 사상의식의 강조는 北韓이 정치 사상교육의 강화를 기본축으로 하여 대내외의 개혁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국제생활 1986 - 1990년 차례목록과 편집내용 분석

	'86	'87	'88	'89	'90	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문헌	8	6	7	6	4	2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1	2	1	4
정치론설	8			33		41
국제적 현대성	5					5
국제회의	10	14	8		1	33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13					13
정세자료 (정치시사문제)	36	82	77	92	75	362
력사고발 (력사자료)	9	12	9	4	4	38
사회경제문제	19	32	24	16	22	113
기행, 인상기, 나라소개	5	6	6	8	3	28
국제기구, 상식자료	11	14	26	18	10	79
편집국론설		3	3	2		8
외국당 및 국가수반 연설		2	3		2	7
미제와 남조선문제	2	6	16	33	31	88

\* 김일성동지의 문헌에는 1)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은 단결하여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4) 2)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6) 3)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승리의 기본 담보(11) 라는 글을 실고 있다.

3) 경제연구

표 5) 경제연구 년도별 차례 구성

년도/호수	차례 내용 정리*
1987년1호	<p>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혁명적 기치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 강령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기문제 해결의 근본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기업소는 우리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 형태</li> <li>- 집약적 생산방법은 생산확대의 기본 방법</li> <li>- 개발 리용</li> <li>- 상품운동의 합리적인 조직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li> </ul>
2호	<p>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                      적 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적 면모와 그 역사적 지위</li> <li>-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한데서 나서는 기본문제</li> <li>-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은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li> <li>-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li> <li>- 원료 리용</li> </ul> <p>일본독점자본의 팽창과 자본수출을 통한 해외경제침략</p>
3호	<p>제3차 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관계발전에서 사상의식의 작용</li> <li>-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li> <li>- 농사제일주의</li> <li>- 지방공업의 발전</li> <li>-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사회적 노동조직의 기능과 역할</li> <li>- 기업적 지도는 사회주의 농업지도관리개선외 기본 방향</li> <li>- 자립적 민족경제발전과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교류</li> <li>-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생산의 자동화가 노동계급에게 주는 영향</li> </ul>
4호	<p>집단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                      월한 관리방법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그 실현 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리용</li> <li>- 분조관리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집단주의 방법으로 관리 운                      영하는 우월한 관리운영방법</li> <li>- 남조선 경제는 미일 2중 종속구조의 경제</li> </ul>

1988년1호	<p>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과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성 시대의 정치경제학의 방법</li> <li>- 농촌태세의 완전한 실현과 사회주의 완전승리</li> <li>- 주체의 원리에 기초한 경제이론의 기본문제</li> </ul> <p>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조는 현시기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p> <p>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위한 역사적 위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시기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군사화</li> </ul>
2호	<p>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확고한 담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의 선차적 과업</li> <li>- 농촌기술혁명</li> <li>- 경제발전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그 결정적 역할</li> <li>- 사회적 생산구조의 형태와 경제발전에 대한 그의 작용</li> </ul>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공업화 실현을 위한 자금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li> <li>- 과학기술진보에 의한 부문구조의 변화 발전</li> <li>- 합리적 리용</li> <li>- 기본 건설투자 계획화의 경제적 내용</li> <li>-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과 소유전환의 시기문제</li> <li>- 수송은 곧 생산이며 건설</li> </ul>
4호	<p>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로작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현대제국주의의 멸망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위대한 강령적 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진보와 사회생산의 발전</li> <li>-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추동적 역할</li> <li>- 기간공업의 현대화와 그 경제적 효과</li> <li>- 기계품생산의 전문화는 기계공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li> <li>-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문제</li> <li>- 남조선 경제의 파국</li> </ul>
1989년 1호- 4호	<p>김정일문건: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우월성 사회주의 하에서 공업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연계의 강화 사회주의하에서 농민경제의 향상이론의 심화 발전</p> <p>공업발전 :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의 전망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 위의 창발성의 옳은 결합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옳은 결합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유 일적 지휘의 옳은 결합 기업관리개선(대안의 사업체계와 독립재산제의 바른 실 시)</p> <p>근중동원: 대중운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대한 추동력 경제건설의 성과적 수행과 근중동원</p>

	<p>기술개조 - 전면적인 자동화          - 경제, 과학기술 및 정보공학          -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제고          - 분배 및 교환의 합리적 조직          - 기업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 전기화 실현</p> <p>경공업 혁명 -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공급          현대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적 략탈          가일층군사화되는 미국의 경제          철도 운수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p>
<p>1990.1- 4</p>	<p>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영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을 결합한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결정적 담보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과업          경공업혁명 -----          바다가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우리 사회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절실한 요구          주체적인 축산업 건설 및 집짐승기르기 운동          집단주의적 원칙 -----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합리적 조직의 본질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p>

\* 「경제연구」는 「국제생활」과 「근로자」처럼 북한당국이 직접 한 ‘묶음편집’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될까봐 산만하지만 차례구성을 거의 그대로 실는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은 經濟管理에서 社會主義적 原則과 方法을 固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세가 복잡하고 반동화가 강화될 수록 ‘집단주적 방법에 입각한 우리식 社會主義經濟의 지도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정치적 지도와 經濟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토대 구축과 지도를 중심으로 당의 혁명적 군중노선인 대안의 사업체계<sup>17)</sup>를 강조

17)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 전까지 북한에서의 공업관 관리 운영은 부문별 중앙기관의 지도하에 공장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지배인 단독책임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공업관리 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자 북한에서는 1961년 12월 大安의 전기공장에서 행한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공업관리 체계의 모델이 창출되고 공업의 관리 운영에서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형성되었다.  
 이정빈,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인 사업체계”, 「근로자」, 1991.2.

하면서 '증산절약투쟁'을 관철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北韓社會 變化의 主된 內容과 그 性格

앞서 1절에서 보았 듯이 1985년 이후부터 최근 소련, 동구 變化에 대해서 北韓은 나름대로의 대응을 모색해 왔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대응양태를 1991년의 시점에서 다시 재구성해 보고 오늘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北韓의 대응양식이 갖고 있는 내용과 性格을 첫째, 대내정치 및 권력의 측면(首領의 유일적 영도體制와 김정일 승계 문제 및 사상, 의식 포함) 둘째, 대외 외교정책 측면(동구 및 소련 變化 보도, 외국언론의 北韓보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등) 셋째, 經濟 및 社會 전반의 측면(소비재강화, 농업문제 등) 넷째,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내 정치 및 권력 (首領, 계승, 사상, )

北韓은 이미 지난해 5월 소련 및 동구 變化에 대한 1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 9기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김일성을 首領으로 하는 유일적 領導體制를 재확인하고 김정일에 의한 首領承繼體制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sup>18)</sup>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社會主義의 몰락과 관련하여 이를 '제국주의자들의 反社會主義적 책동'<sup>19)</sup>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反社會主義적 공세는 '힘의 정책을 견지하는 것'과 社會主義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sup>20)</sup>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이행전략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經濟적으로 매수하여 反社會主義분자들을 부추켜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으로 社會主義나라들을 자본주의로 되돌리려고 책동하는 것'을 말한다 하 하면서 이와 함께 계속해서 「제국주의자들의 <援助>와

18)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1990.6.p.3.

19) 박동진, "미제의 반사회주의 전략", 「천리마」, 1991. 7. p. 68.

20)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990.11.p.85.

〈協助〉는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sup>21)</sup>라고 주장하며 社會主義 건설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결함은 자본주의식 모델에 의해 시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 原理原則에 의해서 극복해 나갈 때만이 社會主義體制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社會主義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식 社會主義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이를 고수해 나가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식 社會主義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서<sup>22)</sup> 1) 首領의 유일적 영도體制의 강화 2) 당의 영도보장 3) 생산수단의 社會主義적 소유의 견지 4) 社會主義적 민주주의중앙집권적 體制로의 강화 5) 계획經濟의 실시와 市場經濟의 반대 6) 社會主義 건설에서의 인간개조의 선행 7) 당의 관료적 작풍의 철저한 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8월 소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의 기치 아래 社會主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다」<sup>23)</sup>라는 로동신문의 논설을 통해 우리식 社會主義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社會主義가 인류역사발전에서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법칙이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대내정치적측면의 강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변화의 무풍지대인 김정일의 後繼體制확립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그간 北韓에서는 社會主義건설은 보다 장기적인 歷史的 로정을 거쳐야 하는

21) 김수용,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는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 (근로자 1991.5), p. 91.

22)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6.

23) 주홍택,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 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과업”, 「근로자」, 199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이간 책동을 짓부수고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합니다>>”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p.32)

리영실, “반제 자주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공산당들”, 「국제생활」, 1991.1.

24) 이미 국제생활 1990. 3월 p.6.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라는 글에서도 사회주의가 인류역사발전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피델 카스트로 루쓰, “사회주의는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이다”, 「국제생활」, 1990.9.

것으로 보고 首領승계를 일찍 부터 서둘러 추진해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 김정일  
에 의한 승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首領의 유일적 領導體制와 首領의 승계문제가 北韓에서는  
확고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련사태와 같은 일은 北韓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보  
는 것이며 따라서 더욱 首領의 유일적 領導體制와 김정일의 後繼 體制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식 社會主義를 건설해 나가는 기본적인 문제로 강조되고 그에 대  
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상의식 강화작업 중에  
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청년당원들에 대한 사상의식 강화이다. ㉔ 지난 1월 16일  
北韓의 청소년 조직인 社會主義 노동청년동맹 창립 45주년 기념대회에서 최용해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김정일 동지 따라 배우기 운동'을 역설하면서 '당의 청  
년 전위로 청년들이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㉕ 그리고 8월 26일에는 제1회 청  
년절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이때 김정일은 「청년들은 당과 首領에게 끊임 없  
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는 제하의 서한은 발송하여 “오늘 우리의 새세대 청  
년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나라 社會主義를 튼  
튼히 옹호,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는 것  
을 제1차적 과제로 강조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北韓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變化해 갈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여전히 대내정치면에서 首領의 유일적 영도體制와 김정일에  
의한 首領승계의 확실한 보장을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그간 社會主義건설을 완  
성시켜나감에 있어서 首領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매우 중시해 왔다. 특히 소련  
스탈린 사후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社會主義가 우여곡절을 겪게되었  
으며 오늘날 고르바초프의 등장후 전개된 소련의 모든 사태는 지도자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계속 首領, 당, 인민 이라는  
3위일체가 社會主義 건설의 주체가 되며 首領이라는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北韓 주민들에게 보다 철저한 首領중심  
의 단결을 호소할 것이다.

25) 최종열,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천리  
마」, (1990.5.)p. 31.

조용설,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온 청년운동", 「천리마」, (1991.1.)

26) 리영복, "청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 투사로 키우기 위한 강령적  
지침", 「근로자」, (1991. 7)p. 33.

## 2) 대외 외교정책

외교정책면에서 본래 北韓은 社會主義진영의 단결강화를 중요한 전책목표로 설정하여 그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구와 소련의 급격한 變化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외교정책노선에 대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주변정세의 급격한 냉각과 어려운 經濟狀況의 타개가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sup>27)</sup>

이렇게 北韓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고 미국의 압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에는 여러방면에서 北韓의 외교적 대응이 나타났다. IPU총회의 평양개최, 리평의 방북, 조일회담의 개최 등이 그것이다.

北韓은 IPU총회의 평양개최를 통해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의 타파에 기대했다. 또한 총회 안건이 핵무기 및 군축에 관한 문제여서 北韓은 자국에 호의적인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군사문제에 걸린 南北關係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일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일본이 南韓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여유를 보인 반면 北韓은 양보를 통한 빠른 수교를 추진하는 인상을 주었다.

리평의 방북에서 北韓은 대대적인 환영을 보여주었고 중국 역시 北韓과의 형제적 친선을 강조하면서 北韓의 통일정책( 하나의 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리평의 방북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사찰 문제나 남한의 단독가입문제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안이 되고 있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측되며 게다가 중국이 소련에 이어 北韓에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北韓經濟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北韓으로 하여금 양보를 통한 현실에의 적응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일성 주석이 조.일 의원연맹北韓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세계정세 變化에 맞춰 現實的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27) 예를들면 조일수교의 적극적인 추진, 초청과 방문을 결합한 동남아와 아프리카 및 중동외교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협력과 외교역량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北韓은 社會主義권의 改革 이후 '北韓식 社會主義'의 기초 위에 나름대로 탄력적 대응을 해 온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北韓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미국과 남한정부의 공세 속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수세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식 社會主義의 고수와 變化하는 國際政勢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 變化의 폭과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北韓 지도 집단의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주석의 발언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1) 최근 北韓의 입장을 최고 결정자인 주석의 목소리로 대내외에 천명하였다는 政治的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北韓의 政策的 變化 可能性에 대해서는 단편적 정보만이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김주석의 발언은 北韓사회에서의 김주석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北韓 내부의 입장을 김주석 스스로가 能動的, 積極的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시기적으로 北韓의 유엔 가입 경정,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안전협정 가입 서명 등 대외 정책에서 전향적 자세전환(발상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일 수교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과도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에서 具體的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sup>28)</sup>

그렇지만 이번 김주석의 대남, 대외 정책에서의 現實的 정책전환 발언이 곧바로 北韓 내부의 變化로 연결된다거나 또는 '탈社會主義'를 천명하고 있는 소련 및 동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에 대한 北韓의 태도 여전히 양대진영론에 입각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책략때문에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세계평화와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다."<sup>29)</sup>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의 소련 사태(구데타의 실패) 이후 점점 社會主義의 고립된 섬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社會主義體制의 고수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상되는 體制改革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해 오히려 內部體制의 공고화를 통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北韓의 대외정책이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엔 다

28) 정동규, "김일성 주석의 '현실적 정책 전환'의 천명 의미", 「월간 동향」, 1991.8.p. 13.

29) 장동욱, "미제의 세계제패전략과 교활한 량면 전술", 「근로자」, 1991.7.

소 무리인 것 같고 앞으로는 北韓 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北韓에서 반미감정<sup>30</sup> 또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sup>31</sup> 대한 우려 등을 둔화시키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그 變化는 소련 및 동구 여러나라와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악화를 피하면서 상호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에서 상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김주석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중국 社會主義와는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sup>32</sup> 중국을 중심으로한 아시아지역 외교<sup>33</sup>를 여전히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社會主義를 고수하기 위해 쿠바<sup>34</sup>, 아프리카 社會主義와도 강한 유대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3) 경제 및 사회

北韓은 최근 소련 및 동구의 經濟改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經濟원리에서 社會主義적 원칙과 방법<sup>35</sup>을 구현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속에는 北韓 經濟가 처한 위기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개인주의적 방법, 자본주의적 自由市場經濟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여 '주체의 經濟관리 방법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끌어들이려는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것을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經濟지도일군의 책임성<sup>36</sup>과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 北韓의 經濟는 '自主性'에 입각한 대내지향적 성장만

30) 박동진, "미제는 민족 분렬의 장본인," 「천리마」, 1991.5.

"미제의 핵전략과 대조선 정책", 「천리마」, 1991. 1.p.65.

31) 리행호,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 「근로자」, 1988. 5. pp. 90-6.

32) 류영문,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국제생활」, 1991. 제1호.p.28.

최광,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조종친선", 「국제생활」, 1991.10.

33) 조규일, "아세아 나라들은 단결하고 협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자", 「국제생활」, 1991.2.p.27.

34) 한학언,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쿠바", 「천리마」, 1991.1.p.64.

35) 김철식,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방법의 구현문제", 「근로자」, 1990.11.p.53.

36) 김재률, "일군들의 경제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1991.6.

으로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자원부족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술낙후를 낳아 성장이 둔화되고 經濟建設의 총노선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sup>37)</sup>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北韓이 80년대 이르러 해결하고자 한 당면 과제는 具體的인 經濟현실의 향상이었다. 이것이 최고인민회의 8기2차회의(1987.4)에서 확정된 3차 7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 과학기술을 발리발전시켜 人民經濟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려 社會主義 經濟건설의 10대 전망목표<sup>38)</sup>를 실현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의 생활수준을 한단계높이 올려세우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과학기술 항목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고 무역 및 對外經濟에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고 의식주문제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經濟계획의 주요목표는 北韓經濟의 위기와 관련된 개발과 改革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구체화된것이 바로 北韓經濟의 구조적 조정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한 科學技術革新, 자본과 기술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대외무역 확대, 그리고 인민의 經濟불만을 타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輕工業발전<sup>39)</sup> 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經濟管理方式에 있어서 부분적이지만 지속적인 改革을 추진해 왔는데 연합기업소<sup>40)</sup>가 창설되었고 1984년 말에 독립채산제가 새롭게 주목을 끌었다.<sup>41)</sup> 제6차당대회 제 19차 전원회의에서 經濟의 효율성증대와 중앙의 재정부

37) 즉 2차 2차 7개년 계획(1978 - 1984)이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서둘러 마감하고 10大 展望目標와 4대 自然改造事業을 내세워 주민의 衣食住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키로 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인 구조개혁이나 발전의 측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對應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원, 「북한사회의 變化趨勢와 展望」, (1990).p.7.

38) 연간 1천억 Kw/h 의전력, 1억2천만톤의 석탄, 1천5백만톤의 강철, 1백50만톤의 유색금속, 2천만톤의 시멘트, 7백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타의 천, 5백만톤의 수산물, 1천500만톤의 알곡고지점령,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 등,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10대전망 목표이다.

39) 輕工業발전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주력한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89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輕工業의 해'로 만들자는 강조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래서 89년에 「輕工業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에는 전국 輕工業대회를 열기도 했다. 본 글의 p. 18 -20 표5) 경제연구 년도별 차례구성 참조.

40) 서권혁, " 연합기업소와 독립채산제", 「천리마」, 1991. 1.

박영근, "연합기업소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과 대규모 공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열한 기업관리체계", 「근로자」, 1991.4.

41) 그외에도 합영법, 상금지활용,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담 경감을 위하여 이 방식을 확대할 것이 주장되었다. 1985년 半독립체산제 가 비생산단위들에 까지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2가지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공장과 기업과 가계에 있는 예비자재를 동원함으로써 소비재의 종류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운동은 1984년 처음 시작되어 계속되어 왔으며 시와 군단위에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주로 김정일의 책임하에 있으며 기간건설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원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른 운동은 200일전투이다. 이운동은 1988년 2월 北韓건국 4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까지의 운동이다. 이운동이 기본적으로 지향한 것은 3차7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고 그초점은 기간건설부문에 두어졌다.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과학과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1993까지 研究開發에 GNP의 3-4%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 7개년 계획- 1993년 마감) 1989년에는 「과학기술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 6월 에는 經濟와 관련하여 2개의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變化는 주로 수송, 에너지, 기계제작, 경공업과 같은 주요 정책관심과 문제영역에서 관련된 經濟기구들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은 그동안 비록 작은 變化의 모습이라 해도 經濟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北韓의 經濟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991년 현재 소련의 경화결제 요구로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지난 3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식량난까지 겹쳐 經濟危機가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 1월 29 - 2월 7일 까지 있었던 연형묵 정무원 총리의 동남아 순방은 이러한 經濟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經濟交流擴大를 위한 經濟外交의 強化가 그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内部經濟문제는 農業問題와 원료 및 연료<sup>42)</sup> 문제인 것 같다. 최근의 어려운 농업 상황을 고려하여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중심으로 농업문제를 제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2) 지태화, 「전력공업발전 선행의 경제적 본질과 그 실현방도」, 「경제연구」, 1991. 제2호.

농촌기술혁명에서 北韓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계화와 화학화문제의 해결이다.<sup>43)</sup> 석탄 및 광물생산의 증대를 중심으로한 채취공업에 대한 강조<sup>44)</sup>와 수송문제의 해결 역시 北韓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체 물동량의 86%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수송능력의 제고가 반복적으로 강조<sup>45)</sup>되고 있다.

이러한 北韓經濟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經濟的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北韓은 기존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과 교류<sup>46)</sup>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이 社會主義 經濟體制 하에서의 市場經濟 시스템을 병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자극을 통한 생산의욕 또는 창발성 자극이라는 원리<sup>47)</sup> 활용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위해 여전히 사상의식 강조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즉 “생산력 발전에서도 사람들의 창조적 역할이 얼마나 높이 발양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사상과 열의는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 추동력이다”<sup>48)</sup>하여 사상의식을 강조 한후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상교양사업을 통한 社會主義 제도의 우월성<sup>49)</sup>을 經濟改革의 추진과 병행하여 나갈 것이다.<sup>50)</sup> 그리고 (社會主義) 經濟管理<sup>51)</sup>

43) 김원진,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 「근로자」, 1991.3.

44) 김필환,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 것은 유색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중요과업”, 「근로자」, 1991.6.

45) 박초극, “철도운수와 인민경제 발전”, 석기암, “철도 중량화와 철길”, 「천리마」, 1991.5.

46) 한수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경제연구) 1991.4.

47) 박규홍,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일꾼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사업기풍”, 「근로자」, 1991.4.

48) 승정표,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우월한 제도”, 「로동신문」(1991.8.4)

리봉길,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근로자」, 1991.7.

49) 김창덕,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천리마」, 1991.3.

50) 김경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 방도”, 「근로자」, 1991.6.

51) 이것은 당의 성취에 대한 기준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짜여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인민들의 사상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원칙의 고수, 당의 뜻을 따르는 대중들 속에서 일함으로써 방법들을 찾아내려는 노력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에 대한 당의 개입 역시 대중교화에서의 당의 역할과 함께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 4) 남북관계 (통일정책)

현재 남북관계는 그 어떠한 시기 보다도 變化의 정도와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동서독의 통일은 南北韓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특히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이 北韓에게 있어서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北韓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영향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보여주던 北韓은 최근에 이르러 점점 온건한 자세로 變化하고 있다. 즉 통일정책면에서 北韓은 지난 5월 27일 南北韓 유엔 분리(동시)가입을 천명했는데 이는 종래의 단일의식에 의한 유엔가입이라는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이러한 입장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이며 이것은 다만 유엔 분리가입이 현국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길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흡수통합에 대한 경계와 방어적인 태도에서 일민족, 一國家, 二體制, 二制度라는 연방제통일방안의 고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조선정책에 變化가 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sup>52)</sup> 그렇지만 北의 體制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南韓과의 '대화과 교류 그리고 공존'의 방향으로 통일및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여겨지며 ( 물론 이것은 국제정세에 대한 現實的인 대응이겠지만) 그 방향은 우선적으로 정치 군사적 긴장해소라는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교류 즉 범민련과 같은 조직의 확대와 민족대회 등의 비 당국간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여진다.<sup>53)</sup>

52) 림동옥, "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국가 창설방안은 가장 정당한 우리식의 통일방안", 「근로자」, 1991.1.

53) 전금철, " 조국통일 범민족련합은 조국통일 위업을 더욱 앞당겨 나가기 위한 전민족적 통일운동체", 「근로자」, 1991.7.

#### IV. 結 論

##### —北韓社會 變化가 南·北韓 同質性 回復과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北韓雜誌를 통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北韓社會의 變化趨勢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구와 소련에서의 改革이 北韓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北韓의 歷史的인 社會主義 건설의 경험으로 인해 동구와는 달리 결정적인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1990년 부터 본격적으로 취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北韓은 소련과 동구의 사태와 무관하게 더욱더 우리식 社會主義를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① 사상의식의 강조 ② 당의 혁명성의 강조 ③ 首領에의 충성 강조 ④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의 變化(국제주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포함하여) ⑤ 의식주를 위시한 주민생활 전반의 變化 ⑥ 군중노선의 집행 강화 ⑦ 통일정책의 變化 ⑧ 관료주의에 대한 내부 노력의 강화 등 정치, 사회, 經濟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대응양식과 變化의 방향에서 社會主義 건설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變化와 개방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北韓에서의 變化趨勢는 주로 '위로부터' 하달되는 외관을 띠고 있고 밑으로부터의 變化 가능성을 찾아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지도층의 계산에 의한 變化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北韓社會 내부도 變化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2차회의에서 人民經濟비에 대한 높은 국가예산의 책정은 人民經濟의 전반적인 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여 社會主義권의 變化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민복지를 증대시켜야 할 내부적인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經濟정책의 變化와 국제정세에 따른 외교정책의 變化( 13차 청년학생축전의 개최, IPU의 유치, 초청과 방문, 관광허용을 통한 經濟협력과 외교역량 강화 등)는 분명 사상과 정치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는

54) 북한에서 군중운동이란 하향식 대중운동의 조직을 가리키며 변화에 대한 적응도 당 주도하에 대중을 선동선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생적인 대중운동의 형성과 성장은 억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사회에서 자발적인 대중조직이나 운동이 존재하고 있는가하는 점은 무척 회의적이다.

經濟 및 社會分野에서 놀라운 變化를 유도하고 있다.<sup>55)</sup> 주택공급의 확대와 의생활의 다양화<sup>56)</sup>, 종교의식의 허용, 요쿠르트 생산 등 식생활의 다양화, 평양주민 행동의 유연화 등이 대표적인 變化 양상이다.<sup>57)</sup>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형태든지 일단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이상 그것을 시도한 지도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조선노동당 내부 및 北韓 대중들 속에서 조금씩 싹틀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지금으로서는 무척 약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北韓 대중의 자발성 발휘와 당통제 사이에 적절한 조정이 앞으로 北韓 사회의 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추동력이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社會主義 국가들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變化들이 南北韓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南北韓 經濟發展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北韓의 자주적 성취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北韓이 남한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발전되고 역동적으로 變化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 저발전의 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北韓에게 '통일'은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國際的政勢變化로 인해 얻어진 상대적인 우위속에서 남한은 국내정치적 變化와 함께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확대할 것이고 北韓에 대해 정상회담, 불가침 선언, 군사회담과 같은 北韓의 제의를 포함하여 北韓에 대한 접근에서 대담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 모든 變化가 페레스트로이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世界的 水準과 南韓에서의 이러한 對應들은

55) 예를 들어 거대한 정치축전이었던 평양축전을 전후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활보하고 평양당국은 당국대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현대적시설과 현대적 도시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주민들이 점점 외부의 소식과 외부의 변화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세련된 복장등은 초기에는 당국이 증용한 것이지만 「평축」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세련된 복장과 색다른 음식을 찾으며 유희와 오락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찬삼, “다시 가본 북한”, 「중앙일보, 1990.9.1 -10.10」

56) “양복과 와이샤쯔, 넥타이의 색이울림”, 「천리마」, 1991.4.

57) 북한은 衣食住를 둘러싼 住民日常生活수준이 오랫동안 향상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 중앙위 16차 전원회의를 통해 수산가 공발전을 결정하고 평양에 부분적인 外食産業의 개설, 유가공품의 生産始作 등의 可觀的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원(1990), 앞의책 참조.

이길주, “북한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사회와 사상」, (1991.어름호), pp.362 -78.

北韓으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측 대응을 소극적이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北韓社會의 變化는 主體路線이 갖고 있는 內在的 限界와 現實的 상황을 고려 할때 1) 대외관계 2) 남북관계 3) 내부經濟문제 4) 내부정치문제 순으로 變化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의 핵심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首領, 당, 인민론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서 고수할 것이며 자급자족(autarky)의 經濟路線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방향에서 과감하게 改革하여 어떻게든 남한과의 폭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국제관계 개선에 지대한 노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상호공존의 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예정한 바 있는 90년대를 통일의 시대, 95년을 통일의 해로 정한 바와 같이 그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이러한 雜誌를 통한 北韓社會분석의 결과가 북한을 좀더 具體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북한 雜誌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 - 당 통제에 획일성과 반복성 - 로 인해 北韓社會의 한측면만을 과도하게 이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해 두고자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야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雜誌뿐 아니라 신문과 북한 기행문 등을 병행하여 비교분석하여 최대한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參 考 文 獻

## \* 單行本 및 論文

강정구,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자” (1986년 시정연설)

北韓 경제 일지 (1945 - 1982) : 통일원 (1983)

北韓문제연구소, 「北韓총람」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 개혁사」,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이상민, “北韓의 당 국가 관료제의 제특성과 變化” 「통일문제 연구」, (1990, 여름)

이영일, “사회주의체제변동에 관한 연구방법론 소고, 「정치학의 전통과한국정치」, (인산 김영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0)

정진석,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1990)

조선 인민 공화국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통계국 「조선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통계집 (45-60)」, 국립출판사, 1961

조선중앙년감, 1985- 1990.

책임편집 최명(외), 「北韓개론」, 을유문화사 (1990.2)

통일원, 「北韓 및 주변동향 일지(1991.1 - 1991.6)」, (1991.7)

-----, 「북한사회의 변화추세와 전망」, (1990)

## \* 雜 誌 言 志

경제연구 '85 - '91. 8

근로자 '85-'91. 8

국제생활 '85 -'91. 8

로동신문 ' 1991.1- 8.

사회과학 '85 - '91. 8

조선녀성 '85 - '91. 8

조선사회민주당 '85 -'91. 8

천리마 '85 - '91. 8

철학연구 '85 - '91. 8

청년문학 '85 - '91. 8

#### 外國文獻

Frank, Andre gunder,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 lessons for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socialists ?)," *Third World Quarterly*, April, 1990.

Ko, Jae-Nam,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form Communism," 「중소연구」, (1990, 여름)

Loud, Oliver S., "Socialism in the 1990s: Where Do From Here?", *Monthly Review*, June, 1991.

Lowy, Michael, "Twelve Theses on the Crisis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Monthly Review*, May, 1991.

Shiryaev, Alexei E., " Transformations of the DPRK Foreign Economic Activities in the 1980s," 「중소연구」, ( 1991. 봄 )



## ◆ 집필자소개(게재순)

### ○ 최 성

- 고려대학교 강사(정치외교학과)
- 고려대 및 동 대학원 정외과(박사과정수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상임연구원
- 연구실적: 현대중국과 북한 40년(서진영편) 현대 사회주의 비교연구, 주체사상, 노동신문을 통해 본 사회주의권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입장, 중국인민의 유혈참극과 중국의 학생운동 등

### ○ 정 규 섭

- 연세대학교 강사
- 연세대 및 동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 홍익대·청주대 강사 및 현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실적: 태평양지역협력체에 대한 연구, 국제관계이론의 고전적 전통과 변화양상, 북한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연구 등

### ○ 허 문 영

- 강원대학교 강사
- 성균관대 및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 박사)
- 성균관대 강사 및 현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실적: 발전이론연구, 기독교 정치관 소고, 1980년대의 북한의 대중·소정책 및 대남정책 연구

### ○ 임 순 희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정외과)
- 숙명여대 및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 수료)
- 외교정책결정요인분석(미국-중국), 한국의 북방외교 등

## ○ 김 덕 중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서울대 외교학과, 외대 동구지역연구학과, 미 메릴랜드대 정치행정학과(정치학 박사)
- 통일원 연구보좌관, 메릴랜드대·서울대 강사
- 연구실적 : 남북한 외교정책비교, 남북한 군축논의와 통일, 한국의 북한법 연구현황, 탈냉전시대의 남북한 관계, 중·소관계 : 미국엘리트들의 인식과 대중공정정책등

## ○ 이 병 철

- 울산대학교 조교수(행정학과)
- 국민대,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경원대, 연세대, 한양대, 아주대, 국민대 강사
- 연구실적 : 한국대학생의 공산주의 인식실태분석(최평길 공동), 한반도의 통일접근법과 통일정책,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2000년대의 남북한관계전망－텔파이기법(최평길 공동), 구미행정학의 한국에서의 토착화과정과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 세계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계량적 연구, 공산권의 개혁·개방화에 따른 북한변화에측연구, 사회주의국가의 관료제 개혁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등

## ○ 오 유 석

- 이화여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이화여대 및 동 대학원 사회학과(박사과정)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
- 연구실적 : 해방3년간 남북한 청년단체 연구,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현 사회주의의 모순과 발전 등

# 北韓·統一 研究 論文集(Ⅳ)

— 北韓의 政策 및 社會變化 趨勢分野 —

---

1991년 12월 10일 인쇄

1991년 12월 13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쇄처 휘문인쇄(주)

---

